2026년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외 교 부 소관
통 일 부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재 외 동 포 청 소관

2025. 11.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5. 11.

외교통일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예산안

1. 외교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2. 통일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4. 재외동포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9. 3.

2. 회부일자 : 2025. 9. 4.

3.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가. 외교부 소관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11. 1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 11. 17.)

- 상정, 토론, 수정의결

❑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11. 19.)

- 수정의결

나. 통일부 소관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11. 1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 11. 18.)

- 상정, 토론, 수정의결

❑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11. 19.)

- 수정의결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11. 1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 11. 17.)

- 상정, 토론, 수정의결

❑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11. 19.)

- 수정의결

라. 재외동포청 소관

❑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11. 1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 11. 17.)

- 상정, 토론, 수정의결

❑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11. 19.)

- 수정의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외 교 부 소관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예산안 개요

가. 세 입

(단위 : 백만원)

관	항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비 고
합 계		**273,679**	**348,243**	**74,564**	**27.2**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396	396	-	-	외교타운 유상사용허가에 따른 건물사용료
재산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30	130	-	-	국고채무 및 국고보조금 등 이자수입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7,203	7,203	-	-	재외공관 반환수입금 및 국고보조금 반납금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160,745	215,819	55,074	34.3	영사세입 (사증 및 공증 발급 수수료)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잡수입	1,000	1,000	-	-	재외공관 수입금 및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면허료 및 수수료	104,205	123,695	19,490	18.7	여권세입 (여권발급 수수료)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482억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737억원 대비 27.2%에 해당하는 74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액편성 사유는 수입대체경비인 '면허료 및 수수료' 관련, 사증 및 여권발급량 증가 예측에 따른 것임[1)]

1) 정부의 총(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세입예산안은 674.2조원이 편성되어, 이 중 외교부 소관 4,173억원의 비중은 0.06%임.
* 외교부 총세입예산안 : 4,173억원
- 일반회계 : 3,482억원

나. 세 출

1) 기능별 분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221,776**	**3,550,101**	**△671,675**	**△15.9**
일반지출	**4,221,776**	**3,550,101**	**△671,675**	**△15.9**
인 건 비	405,923	417,481	11,558	2.8
기본경비	228,545	232,447	3,902	1.7
주요사업비	3,587,308	2,900,173	△687,135	△19.2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5,501억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액 4조 2,218억원 대비 6,717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감액 사유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조정 등 주요사업비 6,871억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임.[2)]

- 기금: 690억원 [국제교류기금(690억원)]

2) 정부의 총(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세출예산안은 728.0조원이 편성되어, 이 중 외교부 소관 3.6조원의 비중은 0.49%임.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정부 총 세출예산은 673.3조원이며, 외교부 4.2조원 비중은 0.62%임)
* 외교부 총 세출예산안:3조 6,028억원
- 일반회계 : 3조 5,501억원
- 기금 : 527억원 [국제교류기금(527억원)]

2) 본부 대(對) 재외공관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예산안	구 성 비			
		본 부	%	재외공관*	%
합 계	**3,550,101**	**2,722,512**	**76.7**	**827,589**	**23.3**
인 건 비	417,481	108,128	**25.9**	309,353	**74.1**
기본경비	232,447	59,094	**25.4**	173,353	**74.6**
주요사업비	2,900,173	2,555,290	**88.1**	344,883	**11.9**

* 프로그램명 : 재외공관운영

** 세부사업명 : (기본경비)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주요사업)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재외공관 시설정비 및 관리사업, 재외공관 안전강화, 재외공관 업무환경 개선

3) 원화 및 달러화 예산의 구성

(단위 : 백만원, 천$)

구 분	2025예산	%	2026예산안	%	증 감	%
합 계	4,221,776	100.0	3,550,101	100.0	△671,675	100.0
원 화	2,606,112	61.7	2,124,297	59.8	△481,815	71.7
달러화	1,615,664 ($1,170,771)	38.3	1,425,804 ($1,033,191)	40.2	△189,860 (△$137,580)	28.2

※ 기준환율(1$당) : ('25년) 1,380원 → ('26년) 1,380원

2. 예산안 부문별 내역

가. 세 입

(단위 : 백만원)

관	항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	비고
11 재산수입						
	541 관유물대여료	396	396	-	-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30	130	-	-	
12 경상이전수입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203	7,203	-	-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5 면허료 및 수수료	160,745	215,819	55,074	34.3	
	69 잡수입	1,000	1,000	-	-	
14 수입대체경비수입						
	65 면허료및수수료	104,205	123,695	19,490	18.7	
소관 합계		**273,679**	**348,243**	**74,564**	**27.2**	

나. 세 출

1) 성질별 · 사업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B-A)	
			금액	%
1. 인 건 비	405,923	417,481	11,558	2.8
2. 기본경비	228,545	232,447	3,902	1.7
3. 사 업 비	3,587,208	2,887,693	△699,515	△19.5
- 완료사업(1건)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100	-	△100	순감
- 신규사업(2건)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	11,630	11,630	순증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	850	850	순증
- 계속사업(107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988	919	△69	△7.0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647	574	△73	△11.3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834	792	△42	△5.0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1,609	1,496	△113	△7.0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5,133	7,500	2,367	46.1
동북·중앙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616	2,437	△179	△6.8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6,854	6,760	△94	△1.4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420	2,847	△573	△16.8
정상 및 총리외교	29,557	28,993	△564	△1.9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908	2,525	△383	△13.2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508	1,430	△78	△5.2
대러 전략외교 강화	264	319	55	20.8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337	3,579	242	7.3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515	6,727	3,212	91.4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4,649	4,420	△229	△4.9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ODA)	123,580	114,086	△9,494	△7.7
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ODA)	216,784	177,706	△39,078	△18.0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102,607	109,278	6,671	6.5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383,253	207,156	△176,097	△45.9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ODA)	-	75,216	75,216	순증

구 분	2025년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B-A)	
			금액	%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16,072	17,218	1,146	7.1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751	1,635	△2,116	△56.4
MIKTA 중견국 외교	244	232	△12	△4.9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451	428	△23	△5.1
유엔 행정예산 분야 제도 구축 및 운영 강화(정보화)	57	57	-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1,010	961	△49	△4.9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3,005	3,005	-	-
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1,843	1,843	-	-
베트남(ODA)	57,293	50,094	△7,199	△12.6
인도네시아(ODA)	17,114	18,566	1,452	8.5
캄보디아(ODA)	21,232	24,147	2,915	13.7
필리핀(ODA)	30,470	27,632	△2,838	△9.3
방글라데시(ODA)	14,044	10,125	△3,919	△27.9
몽골(ODA)	20,937	22,519	1,582	7.6
라오스(ODA)	27,290	25,256	△2,034	△7.5
스리랑카(ODA)	7,975	8,233	258	3.2
네팔(ODA)	14,653	16,850	2,197	15.0
파키스탄(ODA)	11,315	12,395	1,080	9.5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83,648	59,292	△24,356	△29.1
인도(ODA)	250	699	449	179.6
미얀마(ODA)	1,327	5,342	4,015	302.6
가나(ODA)	20,583	18,795	△1,788	△8.7
에티오피아(ODA)	28,644	23,478	△5,166	△18.0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78,966	131,620	△47,346	△26.5
르완다(ODA)	17,733	19,850	2,117	11.9
우간다(ODA)	17,547	19,697	2,150	12.3
탄자니아(ODA)	17,931	18,508	577	3.2
세네갈(ODA)	12,507	9,148	△3,359	△26.9
이집트(ODA)	8,176	8,786	610	7.5
콜롬비아(ODA)	11,229	9,720	△1,509	△13.4
페루(ODA)	9,497	17,747	8,250	86.9
볼리비아(ODA)	17,250	13,180	△4,070	△23.6
파라과이(ODA)	11,100	9,364	△1,736	△15.6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45,356	30,272	△15,084	△33.3
우즈베키스탄(ODA)	22,020	20,258	△1,762	△8.0

구 분	2025년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B-A)	
			금액	%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69,972	53,749	△16,223	△23.2
키르기스스탄(ODA)	12,653	11,636	△1,017	△8.0
타지키스탄(ODA)	5,439	2,500	△2,939	△54.0
우크라이나(ODA)	5,055	5,025	△30	△0.6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143,026	127,245	△15,781	△11.0
글로벌연수(ODA)	67,973	73,940	5,967	8.8
국제기구협력(ODA)	80,015	35,030	△44,985	△56.2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45,230	52,930	7,700	17.0
협력사업 지원(ODA)	61,390	91,576	30,186	49.2
전략적 협력 강화(ODA)	6,400	7,300	900	14.1
ODA 선진화(ODA)	1,271	1,066	△205	△16.1
인도적지원(ODA)	677,503	331,503	△346,000	△51.1
민관협력사업(ODA)	65,000	49,518	△15,482	△23.8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6,523	6,774	251	3.8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2,423	2,488	65	2.7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2,346	1,789	△557	△23.7
공공외교 역량강화	15,754	18,857	3,103	19.7
디지털 공공외교	1,952	2,427	475	24.3
재외국민 보호	13,959	13,920	△39	△0.3
영사서비스 지원	720	870	150	20.8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23,893	139,077	15,184	12.3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1,557	1,147	△410	△26.3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870	1,507	637	73.2
2025 APEC 의장국	100,830	322	△100,508	△99.7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6,549	6,982	433	6.6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2,760	3,236	476	17.2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2,698	2,721	23	0.9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304	3,271	△33	△1.0
국내외 교육훈련	7,132	7,231	99	1.4
외교역량 평가 및 개발교육	417	417	-	-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393	393	-	-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959	1,038	79	8.2
국민 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183	481	298	162.8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	1,067	949	△118	△11.1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1,390	1,332	△58	△4.2

구 분	2025년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B-A)	
			금액	%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224,367	234,582	10,215	4.5
재외공관 시설정비 및 관리사업	5,926	6,117	191	3.2
재외공관 안전강화	25,082	25,261	179	0.7
재외공관 업무환경 개선	75,511	78,923	3,412	4.5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22,049	21,876	△173	△0.8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9,916	11,644	1,728	17.4
재외공관 행정 정보화(정보화)	1,801	1,801	-	-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정보화)	13,254	13,962	708	5.3
정책연구개발	338	338	-	-
외교네트워크 구축	5,325	4,743	△582	△10.9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7,445	6,631	△814	△10.9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1,617	1,957	340	21.0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2,188	2,341	153	7.0
외교기록 개방 서비스 강화	286	286	-	-
외교타운 안전정비사업	500	505	5	1.0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4,373	4,373	-	-
외교홍보역량강화	2,041	2,041	-	-

2) 프로그램·단위사업별 분류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소관 합계	**4,221,676**	**3,537,621**	**△684,055**	**△16.2**
1100 한반도 평화 조성	**22,101**	**23,325**	**1,224**	**5.5**
1131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988	919	△69	△7.0
1132 (평화체제 구축지원)	3,090	2,862	△228	△7.4
1133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133	7,500	2,367	46.1
1134 (동북아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9,470	9,197	△273	△2.9
1135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3,420	2,847	△573	△16.8
1200 정상외교	**29,557**	**28,993**	**△564**	**△1.9**
1231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영접)	29,557	28,993	△564	△1.9
1300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680**	**4,274**	**△406**	**△8.7**
1331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908	2,525	△383	△13.2
1332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772	1,749	△23	△1.3
1400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1,501**	**14,726**	**3,225**	**28.0**
1431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337	3,579	242	7.3
1432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8,164	11,147	2,983	36.5
2100 국제기구분담금	**826,224**	**681,795**	**△144,429**	**△17.5**
2131 (국제기구분담금)	826,224	681,795	△144,429	△17.5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2200 다자관계 협력	**21,585**	**20,531**	**△1,054**	**△4.9**
2231 (국제기구 협력강화)	21,585	20,531	△1,054	△4.9
2300 국제 안보 협력 강화	**4,848**	**4,848**	**-**	**-**
2331 (사이버 및 군축·비확산 분야 양·다자 협력 강화)	4,848	4,848	-	-
2400 국제개발협력(한국국제협력단 출연 등)	**1,967,014**	**1,474,591**	**△492,423**	**△25.0**
2431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307,548	281,150	△26,398	△8.6
2432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302,087	249,882	△52,205	△17.3
243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94,432	80,283	△14,149	△15.0
2434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115,139	93,168	△21,971	△19.1
2435 (글로벌 프로그램)	336,244	289,145	△47,099	△14.0
2436 (협력사업 지원)	61,390	91,576	30,186	49.2
2437 (전략적협력강화)	6,400	7,300	900	14.1
2438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743,774	393,717	△350,057	△47.0
2500 국제법적 대응 강화	**6,523**	**6,774**	**251**	**3.8**
2531 (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	6,523	6,774	251	3.8
26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2,475**	**25,561**	**3,086**	**13.7**
2631 (공공문화외교 강화)	22,475	25,561	3,086	13.7
2700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4,679**	**14,790**	**111**	**0.8**
2731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4,679	14,790	111	0.8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2900 여권업무 선진화	**123,893**	**139,077**	**15,184**	**12.3**
2931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23,893	139,077	15,184	12.3
3000 경제외교	**112,566**	**13,194**	**△99,372**	**△88.3**
3031 (다자 경제외교 강화)	103,257	2,976	△100,281	△97.1
3032 (지역 경제외교 강화)	9,309	10,218	909	9.8
3100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2,698**	**2,721**	**23**	**0.9**
3131 (에너지외교 및 기후변화녹색성장국제협력강화)	2,698	2,721	23	0.9
3500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4,945**	**15,962**	**1,017**	**6.8**
3531 (외교전략 연구 및 교육훈련)	12,388	12,831	443	3.6
3532 (외교전략 수립)	2,557	3,131	574	22.4
4000 재외공관 운영	**801,182**	**827,589**	**26,407**	**3.3**
4001 (재외공관 인건비)	299,243	309,353	10,110	3.4
401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48,954	150,454	1,500	1.0
4012 (재외공관 운영)	22,099	22,899	800	3.6
402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224,367	234,582	10,215	4.5
4031 (재외공관 안전확보 및 시설개선)	106,519	110,301	3,782	3.6
7000 외교 행정지원	**235,305**	**239,720**	**4,415**	**1.9**
7001 (본부 인건비)	97,277	97,983	706	0.7
7002 (소속기관 인건비)	9,403	10,145	742	7.9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7011 (본부 기본경비)	50,261	51,671	1,410	2.8
7018 (소속기관 기본경비)	7,231	7,423	192	2.7
7031 (외교 정보화)	47,020	49,283	2,263	4.8
7032 (외교정책연구(R&D))	338	338	-	-
7033 (외교활동 업무지원)	21,734	20,836	△898	△4.1
7034 (외교정책 대내외 이해제고)	2,041	2,041	-	-

3) 국고보조금 사업

< 국고보조금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증감률 (%)	비 고
총 계	688,747	317,655	△371,092	△53.9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50,054	6,917	△43,137	△86.2	■ 국내 지자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제주포럼 개최비용 등) ■ 평택시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보조	638,693	310,738	△327,955	△51.3	■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인도적지원(ODA) ■ 한-러 대화 ■ 중동지역 외교지평 확대 사업 ■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로 구성되어 있는바, 2026년도 예산안 총액은 3,1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11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여권발급 업무의 운영비 보조,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최하는 제주포럼 비용 지원, 평택시의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APEC 지자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431억원 감액된 69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증감률 (%)	비 고
총 계	50,054	6,917	△43,137	△86.2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 개선(수입대체경비) (대행기관 국고보조)	5,610	5,610	-	-	국내 지자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원
■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지원	738	701	△37	△5.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개선 및 국방협력·민군관계 강화)	638	606	△32	△5.0	경기도(평택시) 지원
■ 2025 APEC 의장국 (APEC 지자체 지원)	43,068	0	△43,068	순감	경주시 지원

□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는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 및 개도국 긴급구호 지원사업 등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280억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인도적지원(ODA) 사업 내 해외긴급구호 감액(△3,281억원)에 따른 것임.

< 민간경상보조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전년대비(B-A)		비 고
			증감	%	
총 계	638,693	310,738	△327,955	△51.3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96	91	△5	△5.0	제주평화연구원 지원 (국제평화재단 교부)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한-러 상호이해 및 협력 증진)	269	269	-	-	한-러대화
아중동국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900	1,090	190	21.1	한국-아랍 소사이어티(KAS) 활동 지원 (한-중동 협력포럼 사업을 중동지역 외교지평 확대사업으로 이전)
글로벌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사무국 지원)	532	532	-	-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사무국 지원
인도적지원(ODA) (해외긴급구호)	636,896	308,756	△328,140	△51.5	해외긴급구호 (KOICA 교부)

3.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특징

가. 세 입

< 2026년도 외교부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관	항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비 고
합 계		**273,679**	**348,243**	**74,564**	**27.2**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396	396	-	-	외교타운 유상사용허가에 따른 건물사용료
재산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30	130	-	-	국고채무 및 국고보조금 등 이자수입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 이전수입	7,203	7,203	-	-	재외공관 반환수입금 및 국고보조금 반납금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160,745	215,819	55,074	34.3	영사세입(사증 및 공증 발급 수수료)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잡수입	1,000	1,000	-	-	재외공관 수입금 및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면허료 및 수수료	104,205	123,695	19,490	18.7	여권세입 (여권발급 수수료)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482억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737억원 대비 27.2%에 해당하는 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 출

1) 예산안 총괄

< 2026년도 외교부 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221,776**	**3,550,101**	**△671,675**	**△15.9**
일반지출	**4,221,776**	**3,550,101**	**△671,675**	**△15.9**
인 건 비	405,923	417,481	11,558	2.8
기본경비	228,545	232,447	3,902	1.7
주요사업비	3,587,308	2,900,173	△687,135	△19.2

외교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6,717원(△15.9%) 감액된 3조 5,501억원이 편성되었음.

2)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외교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의·교류 확대 ② 주요국 대상 경제외교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 지원 ③ 주요 협력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 다변화 ④ K-이니셔티브 실현 추진 및 국민 공공외교 확대 ⑤ AI 플랫폼 기반 구축 지속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따른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한미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 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 관계 강화 사업에 2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미국내 중요 입법사항 추진(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을 위해 미국 경제동향 대응 사업에 5억원 증액 편성,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에 6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국민주권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외교전략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사업에 9억원 신규 편성, 아프리카 국가와의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예산 32억원 신규 편성,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예산(68억원)을 편성하였음.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강화하고,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예산 31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지능형 외교안보 플랫폼 구축 2단계 사업 예산을 전년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하였음(106억원 → 107억원).

3) 세출예산안의 구성 및 특징

가) 개 요

세출 예산안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2.6% 증액된 4,175억원, 기본경비는 1.7% 증액된 2,324억원, 주요사업비는 19.2.% 감액된 2조 9,00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량적 편성이 어려운 인건비, 기본경비, ODA, 국제기구분담금 등은 전체예산의 79.9%에 해당하는 2조 8,352억원임.

외교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본부, 재외공관의 예산 비율은 전체 3조 5,501억원 예산 중 본부 예산 2조 7,223억원, 재외공관 예산은 8,2762억원으로 각각 76.7%, 23.3%임.

외교부 전체 예산에서 달러화표시 예산, 원화표시 예산 비율은 전체 3조 5,501억원 예산 중 원화예산 2조 1,243억원, 달러화표시 예산 1조 4,258억원(10억 3천만불)으로 각각 59.8%, 40.2%임.

나) 2026년도 프로그램별 예산안 변동내역

< 프로그램별 예산안 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소관 합계	**4,221,776**	**3,550,101**	**△671,675**	**△15.9**
한반도 평화 조성	22,101	23,325	1,224	5.5
정상외교	29,557	28,993	△564	△1.9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680	4,274	△406	△8.7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1,501	14,726	3,225	28.0
국제기구분담금	826,224	681,795	△144,429	△17.5
다자관계 협력	21,585	20,531	△1,054	△4.9
국제 안보협력 강화	4,848	4,848	-	-
국제개발협력(한국국제협력단 출연 등)	1,967,014	1,486,221	△480,793	△24.4
국제법적 대응 강화	6,523	6,774	251	3.8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2,475	25,561	3,086	13.7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4,679	14,790	111	0.8
여권업무 선진화	123,893	139,077	15,184	12.3
경제외교	112,566	13,194	△99,372	△88.3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2,698	2,721	23	0.9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4,945	15,962	1,017	6.8
재외공관운영	801,182	827,589	26,407	3.3
외교행정지원	235,305	239,720	4,415	1.9

2025년도 외교부 프로그램별 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6,717억원(△15.8%)이 감액되었음.

전년 대비 감액된 프로그램의 내역을 보면,

①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3.8억원(△8.7%), ② ‘국제기구분담금’은 1,444억원(△28.0%), ③ ‘다자관계 협력’은 10.5억원(△4.9%), ④ ‘국제개발협력’은 4,808억원(△24.4%), ⑤ ‘경제외교’는 994억원(△88.3%)이 각각 감액되었음.

프로그램별로 주요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아세안·동남아, 유럽지역 및 중앙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단년도 사업(‘한-싱가포르 수교기념 사업’(1억), ‘한-라오스 재수교기념 사업’(1억)) 종료 등에 따라 감액되었음.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은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및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분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25-’27년 우리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 하락 및 일부 PKO 임무단 철수·예산 감소로 유엔 PKO 예산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95억원, 유엔PKO예산분담금 39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우리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요 분야에 대해 전략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차원에서 국제기구사업분담금·신탁기금 1,025억원이 감액되었음.

‘다자관계 협력’ 프로그램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4-25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사업 종료

(△20억원)로 감액되었음.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전략적 개발원조 추진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사업 264억원,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사업 522억원,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사업 141억원, 중동 CIS 지역 국가원조 사업 220억원, 글로벌 프로그램 사업 471억원,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 3,500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경제외교’ 프로그램은 다자경제외교 및 주요국과의 지역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된 감액 사유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관련 예산 감액(△1,005억원)에 따른 것임.

전년 대비 증액된 프로그램을 보면,

① ‘한반도 평화 조성’이 전년 예산 대비 12억원(5.5%), 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32억원(28.0%), ④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가 31억원(13.7%) ④ ‘여권업무 선진화’가 152억원(12.3%), ⑤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이 10억원(6.8%) 증액되었음.

프로그램별로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한반도 평화 조성’ 프로그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이 23.6억원 증액되었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중남미·아중동지역 국가와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외교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 개최에 따라 아중동지역국가

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이 32억원 증액되었음.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지지를 증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22억원,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은 여권 발급 서비스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여권 예상 발급량 증가 등에 따라 152억원 증액되었음.

‘외교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은 외교전략과 정책 수립, 외교정보 역량 강화 및 외교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민 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사업 3억원, 지역전략수립 및 이행 사업(신규) 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Ⅱ.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 세입

가. 관유물대여료

관유물대여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3]에 따른 토지, 건물 등 정부 소유물에 대한 대여 수입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시 관유물대여료의 세입예산 계상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사항[4]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26년도 관유물대여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본예산(A)	2026예산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51 관유물대여료	45	396	41	396	-	-
토지대여료 (51-511)	35	-	-	-	-	-
건물대여료 (51-512)	10	396	41	396	-	-

외교부의 2026년도 관유물대여료 예산액은 3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3)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4)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2.8.

□ **토지대여료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외교부의 세외수입 중 토지대여료는 2024회계연도부터 발생하였음. 이는 2023년 외교부 소관 부지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수입금[5]과, 세종연구소 건물의 외교부 소관 국유재산(토지) 일부 점유에 따른 사용료 수입에 기인함.

2024년 2월 22일 지적측량 결과 세종연구소 건물이 외교부 소관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이에 외교부는 과거 5년간의 사용료를 소급하여 약 3,400만원을 수납하였음.

세종연구소 건물이 ㈜LIG넥스원에 매각됨에 따라 향후 동 부지에 대한 토지대여료는 ㈜LIG넥스원으로부터 징수할 예정이며, 연간 약 700만원 수준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외교부는 해당 금액이 소액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토지대여료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4	-	-	-	34	34	-	100	-	-
’25	-	-	-	7	7	-	100	-	-
’26(안)	-	-	-	7	7	-	100	-	-

(자료: 외교부)

5) 2024년 수납액 592,720원

그러나, 수입 규모가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예산 편성을 생략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세입예산은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자료이며,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실제로 2023년 외교부의 외청으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경우에도,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외교부의 토지대여료보다 규모가 더 작은 세입 항목들까지 모두 세입예산에 반영[6]하고 있음.

향후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대여료 수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교부는 세입예산의 투명성과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토지대여료 수입예상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2026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총 계	**8,802**	**1,026**	**1,026**	**1,011**	**1,015**	△11	△1.1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1**	**1**	**1**	**1**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1	1	1	1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798**	**1,000**	**1,000**	**1,000**	**1,000**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8,798	1,000	1,000	1,000	1,000	-	
65 면허 및 수수료	**4**	**20**	**20**	5	9	△11	△55.0
면허 및 수수료(65-651)	4	20	20	5	9	△11	△55.0
69 잡수입	-	**5**	**5**	**5**	**5**	-	-
기타잡수입(69-691)	-	5	5	5	5	-	-

□ 건물대여료 세입예산안 적정 추산을 통한 재편성 필요

1996년 이래 민간에 위탁 관리되던 외교센터를 2020년 외교부가 환수하여 국립외교원이 관리함에 따라, 동 센터 내 민간임대공간에서 건물대여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매우 저조한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4년간 건물대여료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	-	328	328	328	100	100	-	-
2023	390	390	390	206	206	52.8	100		
2024	429	429	429	9.6	9.6	2.2	100		
2025.7.	396	396	396	28.8	28.8	7.2	100	-	-
2026(안)	396	396	-	-	-	-	-	-	-

이는 재외동포청이 2023년 6월 신설되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광화문으로 이전함에 따라, 외교타운 내 사무실을 유상사용허가 중이던 3개 공증업체가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하여 중도에 철수하고, 1층 카페 업종 역시 2024년 1월 계약 종료 이후 민간임대 전 공간 모두 공실 상태가 길어진 데 기인한 것임.

최근 국립외교원은 민간임대 대상 6실 중 3실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장애인단체에 무상사용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유상임대를 위한 3실에 대하여 1실은 임대가 완료되었고, 2실은 온비드 입찰공고 개찰 결과 응찰 업체에 낙찰 및 사용허가를 완료한 상태임.

<외교센터 층별 사무실 및 입점업체 현황>

2025.11.6.

<table>
<tr><td rowspan="2">연결통로</td><td>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
시설지원팀
(301호) /
(207.00㎡)</td><td>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
(302호) /
(169.55㎡)</td><td>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
(303호) /
(146.40㎡)</td><td>최경주
복지회
(304호) /
(146.40㎡)</td><td>재외동포협력센터
(305~306호) /
(376.55㎡)</td><td>3층</td></tr>
<tr><td>아시아아너스
소사이어티협회
(201호) / (36㎡)</td><td>회계법인 세움
(202호) /
(220㎡)</td><td colspan="2" rowspan="2">로 비</td><td>국립외교원
시설지원팀
관리공간
(203~205호) /
(329.4㎡)</td><td>2층</td></tr>
<tr><td>여권과 발급팀
(101호) /
(281.85㎡)</td><td>장애인단체
카페
(102호)
/ (135.56㎡)</td><td>국립외교원
시설지원팀
관리공간
(103~105호) /
(197.37㎡)</td><td>1층</td></tr>
<tr><td colspan="5">주차장(3,650.18㎡), 중앙감시실(94.44㎡)</td><td>B1층</td></tr>
<tr><td colspan="5">주차장(3,650.18㎡), 기계실(842.14㎡), 전기실(645.70㎡)</td><td>B2층</td></tr>
</table>

(자료: 국립외교원)

<2025년 외교타운 입점업체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 (징수결정액)	비고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102호)	2025.01.01.~2027.12.31.	무상사용허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아시아아너스 소사이어티협회 (201호)	2025.11.07. ~2027.12.31.	5.9(유상)	10회차 공고 개찰 결과 낙찰 및 사용허가 완료
세움 회계법인(202호)	2024.11.07.~2027.12.31.	38.4(유상)	국유재산법 32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
최경주복지회 (304호)	2025.11.03. ~2027.12.31.	38.3(유상)	9회차 공고 개찰 결과 낙찰 및 사용허가 완료
재외동포협력센터 (305-306호)	2023.01.01.~2025.12.31.	무상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합 계		**82.6**	

(자료: 국립외교원)

이에 따라, 2026년도 실제 수납 가능 금액은 8,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나, 건물대여료의 2026년도 세입예산안이 3억 9,600만원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실제 수납 전망과 괴리가 있음.

이는 예산 편성 시 기존 민간임대 6실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부는 실제 수납 가능한 예산안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재편성할 필요가 있음.

2. 한반도 평화 조성

가. 프로그램 개요

「한반도 평화 조성」 프로그램은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등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원,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한반도 주변 동북아지역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5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반도 평화조성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00] 한반도 평화 조성			22,523	15,712	13,470	22,101	16,484	23,325
	[1131]북핵문제 협의지원		798	1,069	828	988	988	919
		[401]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798	1,069	828	988	988	919
	[1132] 평화체제 구축 지원		2,667	3,097	2,636	3,090	3,090	2,862
		[401]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513	647	517	647	647	574
		[402]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1,134	878	878	834	834	792
		[403]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1,020	1,572	1,241	1,609	1,609	1,496
	[1133]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175	5,298	5,188	5,133	5,133	7,500
		[401]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175	5,298	5,188	5,133	5,133	7,500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34] 동북·중앙아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1,900	3,560	2,813	9,470	2,853	9,197
		[401] 동북·중앙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900	3,560	2,813	2,616	2,616	2,437
		[402]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	-	-	6,854	237	6,760
	[1135]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전략적협력관계강화		11,983	2,688	2,005	3,420	4,420	2,847
		[401]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636	2,688	1,975	3,420	4,420	2,847
		[402]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581	-	-	-	-	-
		[404]제1차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8,767	-	30	-	-	-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21억 100만원) 대비 12억 2,400만원(5.5%) 증액된 233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사업 예산이 전년(51억 3,300만원) 대비 23억 6,700만원 증액되었고, 나머지 7개 세부사업은 모두 전년 대비 감액되었음.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사업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의 종료 등으로 전년도(34억 2,000만원) 대비 5억 7,300만원(△16.8%)이 감액된 28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는 한·미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지속적 강화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75억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3억 6,700만원(46.1%)이 증액됨. 이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고위급·실무급 교류에 6억 7,600만원, 한미동맹 기반 강화 및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12억 900만원, 한미 연합방위태세 지속 강화 등 안보 분야 협력 심화·확대에 2억 6,900만원 등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임.

< 2026년도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합계	**5,188**	**5,133**	**5,133**	**7,500**	**2,367**	**46.1**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516	581	581	1,257	676	116.4
동맹기반 강화	2,545	2,380	2,380	3,589	1,209	50.8
한미 안보협력 강화	511	653	653	922	269	41.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개선 및 국방협력·민군관계 강화	1400	1,225	1,225	1,438	213	17.4
한미동맹 미래 파트너십 공고화를 위한 대미 외교지평 확대	217	294	294	294	-	-

□ 신규 조직 신설 시 직제 외 공무직 채용을 통한 인력 증원 부적절

외교부는 ‘미국 정책변화 동향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세분석팀’ 신설에 2억 1,600만원, 州의 입법 동향 및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州 유력인사 발굴을 위한 ‘주정부·주의회 협력팀’ 신설에 1억 8,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미국 정책변화 동향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세분석팀’은 석사급 연구원 4인을 채용하여 미국의 정책과 정세 변화를 분석하여 각 분야별 모니터링과 자료 수집·분석 및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주정부·주의회 협력팀’은 석사급 연구원 2인을 채용하여 잠재력 있는 州 유력인사를 발굴해 州 주요 인사 관리 및 소관 州 인사 초청 사업을 지원하고, 州 현안 및 입법 동향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

<정세분석팀 및 주정부·주의회 협력팀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분	정세분석팀			주정부 · 주의회 협력팀		
내역사업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동맹기반 강화		
세부내역	연구원 4인 인건비	상용임금	161	연구원 2인 인건비	상용임금	67
		복리후생비	2		복리후생비	1
		고용부담금	33		고용부담금	14
	운영비 20	일반수용비	20	운영비 105	일반수용비	20
		-	-		국내여비	5
		-	-		국외여비	80
	합계		**216**	**합계**		**187**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정세분석팀 및 주정부·주의회 협력팀의 연구원을 모두 공무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나, 공무직의 제도적 한계나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적인 책임성을 지니기 어렵고, 정부조직법상 정규 직제에 포함되지 않아 직제 밖 인력 증원으로 인한 조직 팽창 우려가 있는바 이와 같은 조직 운영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채용 절차의 경우 공무원은 직렬 등에 따라 일부 상이하긴 하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에 따라 필기시험과 면접 등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공무직의 채용은 소속 기관의 행정규칙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 등 공무원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됨.[7]

또한 공무직은 복종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등의 규정[8]을 적용받지 않으며, 공무원과의 처우 불균형으로 인하여

---

7)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채용) ① 근로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채용하며, 채용예정인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유사직종의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3. 채용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해지, 선발취소 등에 대해 예비 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⑤ 근로자 채용시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심사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위촉하며, 보안유지, 제척사유에 대한 회피, 공정한 시험관리 등을 위해 별지7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8)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조직 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

미국 내 정책 변화와 주정부 동향에 대한 대응력 제고 측면에서 신규 조직 신설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공무직 채용을 통해 상시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이미 외교부 지역국 내 중국 정세분석팀(4인), 일본 정세 조사분석팀(3인), 러시아 정세분석팀(1인)을 운영 중인바, 이러한 방식의 공무직 채용이 직제 우회를 통한 사실상 정원 증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력 규모와 운영 방식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임[9].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9)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직제 개정에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시급한 업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초 공무직 채용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직제 개정을 통한 공무원 증원을 바탕으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제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함.

다.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은 우리 정부 최초 중앙아시아와의 정상급 국제회의인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전략적 중요성이 큰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은 당초 2025년 개최예정[10]이던 사업을 2026년으로 순연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합계	-	**6,854**	**237**	**6,760**	**△94**	**△1.4**
준비기획단 운영	-	746	-	755	9	1.2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	237	237	-	-	-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	-	5,871	-	6,005	134	2.3

□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예산 편성 재검토 필요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은 2025년도에 개최예정이던 사업을 2026년도로 순연[11]한 것으로, 준비기획단 운영에 7억 5,500만원, 정상회

10) 2024년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 계기 정상 간 공동성명 및 한국 최초의 對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발표

11) 외교부는 행사 순연의 사유로 우리측의 대안제시 및 다각적 설득 노력에도 불구, 우리측 국내사정(12.3) 및 일부 중앙아 국가들의 정상 외교 일정 등 사유로 개최 일자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의 및 부대행사 개최에 6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다만,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예산은 순연하지 않고 2025년도에 2억 3,700만원을 유지하였음.

<2025년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예산 비목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비목	예산액	산출내역
일반수용비(210-01)	60	• 회의·행사 관련 물품 구입 등: 7백만*5종 = 35백만원 • 수수료 및 자문료: 1백만*5회 = 5백만원 • 결과보고서 발간: 0.2백만*100부 = 20백만원
임차료(210-07)	24	• 회의·행사 관련 임차 : 6백만*4회 = 24백만원
국내여비(220-01)	3	• 국내출장 및 관계부처 업무협의: 15천원*5회*4명 = 3백만원
국외업무여비(220-02)	100	• 사전 업무협의 출장: 50백만*2회 = 100백만원
사업추진비(240-01)	50	• 전문가 간담회 및 협의회: 1.3백만*1회 = 20백만원 • 오만찬 및 선물: 3백만*10회 = 3백만원
합계	**237**	

(자료: 외교부)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예산에 대하여 외교부는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 및 성과사업 점검, 對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의 진행을 위하여 2025년 예산을 유지[12]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2026년 하반기(3-4분기)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하는바, 2025년도에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2025년도 동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에는 결과보고서 발간(2,000만원), 관계부처 업무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이 포함되어 있어, 2026년에도 일정 부분 집행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추진계획에 맞춰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12) 외교부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개최(9.23.) 등 고위급 교류 추진을 통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의제 및 성과사업 발굴을 추진 중이라고 함.

3.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 프로그램 개요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아세안(ASEAN[13]) 및 유럽 내 각국과의 협력 확대, 대화채널의 확충 및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하여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3개[14]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	2024년 결산	2024년 본예산	2025년	2026년 예산안
[1300]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964**	**5,334**	**4,397**	**4,680**	**4,680**	**4,274**
	[1331]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733	3,008	2,505	2,908	2,908	2,525
		[401]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733	3,008	2,505	2,908	2,908	2,525
	[1332]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231	2,326	1,892	1,772	1,772	1,749
		[401]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981	2,034	1,678	1,508	1,508	1,430
		[402] 대러 전략외교 강화	250	292	214	264	264	319

13)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4) 동 프로그램은 2025년 2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세부사업 중 「유라시아 협력 추진」이 2026년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세부사업 內 내역사업으로 편입되어 2026년에는 2개의 단위사업 및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46억 8,000만원) 대비 4억 600만원(△8.6%)이 감액된 42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세부사업은 내내역 사업 중 '한-싱가포르 수교기념 사업' 및 '한-라오스 수교기념 사업' 등 2025년도 단년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억원이 순감되었으며, 내역사업 구조개편 시행 및 일부 정책연구비 감조정에 따라 전년도(29억 800만원) 대비 3억 8,300만원 감액된 2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세부사업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의 내역사업 중 '유라시아 협력 추진' 사업의 예산이 전년도 (9,700만원) 대비 700만원 감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한-EU 인태전략 강화방안 모색' 사업의 예산이 전년도 (4억 2,000만원) 대비 7,100만원 감액됨에 따라, 동 세부사업은 전년도(15억 800만원) 대비 7,800만원이 감액된 1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또한, 「대러 전략외교 강화」 세부사업은 전년도(2억 6,400만원) 대비 5,500만원 증액되어 3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각급 양자대화 실시 및 지원을 통한 한-동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아세안 관련 각급 회의 개최 및 참석을 통한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역내 다자 및 안보협력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및 남방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한-아세안외교를 강화하려는 사업임.

< 2026년도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2,505**	**2,908**	**2,525**	**△383**	**△13.2**
한-해양동남아 협력	280	568	376	△192	△33.8
한-대륙동남아 협력	91	71	532	461	649.3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587	760	582	△178	△23.4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198	141	138	△3	△2.1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1,349	1,368	897	△471	△34.4

동 세부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9억 800만원) 대비 3억 8,300만원(△13.2%) 감액된 2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조정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성과 달성 필요**

동 사업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개별 국가의 외교적 중요성 및 별도 사업 편성의 외교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업 편성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15]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부터 사업 구조를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음.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구조 개편 현황>

2025년 사업명	2026년 사업명
1. 한-동남아 국가 교류 협력 강화	1. 한-해양동남아 협력
• 해양 동남아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 해양동남아 국가와의 양자외교
• 대륙 동남아와의 교류 협력 강화	• 인도네시아 교류협력 강화
• 동남아 지역 명예영사 활동 지원	• 한-해양동남아 협력 증진 사업
• 해양 및 대륙 동남아 중소국가 관계유지 관리	• 지방 네트워크 구축 지원
2. 베트남과의 협력 기반 강화	• 중소국가 관계 유지 관리
3.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 동남아지역 명예영사 활동 지원
• 한-아세안 전략사업	2. 한-대륙동남아 협력
• 역내 소지역 협력 증진 사업	• 대륙동남아 국가와의 양자외교
• 주아세안대표부활용 네트워크 강화 사업	• 한-베트남 교류협력 강화
4.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 한-메콩 협력증진사업
• 동아시아 다자협력 증진	3.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 역내 트랙Ⅱ 다자협력 증진	• 한-아세안 전략사업
• 동아시아 다자포럼	• 한-아세안 네트워크 강화
5. 한-아세안 상생연대 기반 강화	4.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 인태지역 내 다자협력체제 강화	• 동아시아 다자협력 증진
• 한-아세안 전문가 네트워크 및 대외홍보 강화	• 역내 트랙Ⅱ 협력 증진
• 한-메콩 협력강화 사업	• 동아시아 포럼
• 한-해양동남아 협력 플랫폼 구축	5.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 한-아세안 금융협력 강화	• 아세안 관련 다자협력체제 강화
• 인태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 한-아세안 전문가 네트워크 및 대외홍보 강화
	• 하-아세안 금융협력 강화

(자료: 외교부)

15)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외교통일위원회, 2025.8.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각각 해양동남아와 대륙동남아에서 외교적 중요성이 큰 국가로서 타 국가와 달리 별도 내내역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2026년도 예산안 편성시 인도네시아는 작년 집행액 대비 18% 감액, 베트남은 작년 편성액 대비 15.5% 감액되었음.

<인도네시아, 베트남 관련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5개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인도네시아 16)	-	15	-	17	-	16	-	61	50
베트남	70	46	70	67	121	91	71	41	60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남아시아 내 유일한 우리나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만큼 정부·의회 각급 협의 및 외빈 초청 사업을 통해 양국 실질 협력 확대·심화가 필요하여 2026년부터 별도 내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며,

베트남의 경우 지난 8월 또 럼 당서기장 방한 이후 우리 정상의 방베가 유력하며 내년 초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국가지도부 편성 시 고위급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최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202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4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16) '22-'25의 경우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교류협력을 위한 별도 예산이 미편성되어, '해양 동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내내역사업에서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교류협력으로 예산을 집행함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발전 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아세안 내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대한 지속적 교류 확대가 필요함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에 대한 교류협력 강화 예산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한편, 아세안국은 동 사업 예산에 대해 2024년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및 일반수용비 등에 대해 비목에 부적합한 예산 집행이 있었음이 지적된 바 있고, 2025년 예산 집행에서도 유사한 건[17]이 발견되어 과목 정정을 한 바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동 사업에 대해 2026년부터 내역사업에 대한 전면 조정이 있던 만큼 사업계획을 면밀히 하고 그에 맞는 자금계획을 철저히 관리하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의 교류협력 강화라는 성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17) 국 워크샵 개최 시 관서업무추진비로 집행했어야 하는 금액을 일반수용비로 오집행한 사례 등

다.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유럽·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적극적인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여 실질협력관계 증진 및 포괄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외교 외연을 확장하고 범유럽지역 회의체 및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이슈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다층적 외교를 심화하려는 사업임.

< 2026년도 유럽지역국가과의 교류협력강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678**	**1,508**	**1,430**	**△78**	**△5.1**
한-러 상호이해 및 협력 증진	253	301	301	-	-
유라시아 협력 증진	171	97	90	△7	△7.2
EU주요회원국 및 확대가입대상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49	340	340	-	-
남동유럽흑해경제권과의 실질협력 강화	25	46	46	-	-
한-EU 갈등예방 및 현안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23	232	232	-	-
명예영사 보조금	87	72	72	-	-
한-EU 인태전략 강화방안 모색	361	420	349	△71	△16.9
한-중앙아 협력 포험	309	-	-	-	-

동 세부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5억 800만원) 대비 7,800만원(△5.1%) 감액된 1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남동유럽 · 흑해연안국 인사교류 사업의 연례적 불용에 따른 사업 재검토 필요

‘남동유럽 · 흑해연안국 인사교류’ 사업은 「남동유럽 · 흑해경제권과의 실질 협력 강화」사업 내 내내역사업으로, 이들 국가와의 실질 협력강화를 위한 각급 인사교류에 대한 국외업무여비와 사업추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집행 실적이 전무함.

<남동유럽 · 흑해연안국 인사교류 사업의 최근 5개년 집행 현황[18]>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19]
본예산 (A)	7	7	7	7	7
집행액 (B)	0	0	0	0	0
집행률 (B/A)	0	0	0	0	0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등의 이유로 인해 해당 사업에 대해 집행이 저조했다는 입장이나, 같은 내역사업 내 다른 내내역사업인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협력사업’의 경우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함에도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18) 매년 외교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및 기금 예산안 및 결산 사업설명자료 내 본예산 대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함.
19) 2025년 10월 15일 기준

<남동유럽·흑해경제권과의 실질협력 강화 사업의 2025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본예산(A)	집행액(B)	집행률(B/A)
남동유럽·흑해경제권과의 실질협력 강화	46	35.73	77.7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협력사업	39	35.73	91.6
·남동유럽·흑해연안국 인사교류	7	0	0

(자료: 외교부)

남동유럽 · 흑해연안국과의 인사교류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5년 연속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업의 방향성이나 집행 의지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향후 외교부는 사업 여건의 면밀한 검토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게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가. 프로그램 개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종전의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과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프로그램 사업은 중남미지역 및 아중동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관계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진출지원,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확보, 대 중남미 및 아중동 지역협력파트너로서의 위상 확대 및 국가 인지도 제고, 외교정책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400]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4,157	46,147	44,945	11,501	11,501	14,726
	[1431]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694	3,695	3,471	3,337	3,337	3,579
		[401]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694	3,695	3,471	3,337	3,337	3,579
	[1432] 아중동지역국가와의교류협력강화		10,463	42,452	41,474	8,164	8,164	11,147
		[401]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669	3,288	3,139	3,515	3,515	6,727
		[402] 한-아프리카 재단 출연	4,771	4,425	4,425	4,649	4,649	4,420
		[403]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3,023	34,739	33,910	-	-	-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15억 100만원) 대비 32억 2,500만원(28.0%) 증액된 147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운영(2025년 1억 8,600만원)」 및 「FEALAC 협력 강화 및 사무국 운영(2025년 5억 1,600만원)」 사업 예산이 각각 전년도 대비 1억 1,400만원, 1억 2,800만원 증액되어, 세부사업 예산이 전년도(33억 3,700만원) 대비 2억 4,200만원 증액되었고,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아프리카지역국가와의교류협력강화」사업이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42억 3,700만원으로 편성(2025년 10억 3,500만원)되는 등, 동 세부사업은 전년도(2025년 35억 1,500만원) 대비 3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사업은 중남미지역 국가 및 지역기구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남미 간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을 지원하며,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대중남미 외교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33억 3,700만원) 대비 2억 4,200만원(7.3%)이 증액된 35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합계	**3,471**	**3,337**	**3,337**	**3,579**	**242**	**7.3**
대중남미지역 전략적 진출지원	1,169	1,142	1,142	1,142	-	-
중남미 권역별 전략적 협력 확대	476	459	459	459	-	-
명예영사	52	54	54	54	-	-
청년 중남미 진출 확대	385	390	390	390	-	-
중미카리브 지역과의 연대강화	553	496	496	496	-	-
FEALAC 협력강화 및 사무국 운영	546	516	516	644	128	24.8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증진	90	94	94	94	-	-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운영	200	186	186	300	114	61.3

□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증액 검토 필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은 「청년 중남미 진출 확대[20]」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미주기구(OAS),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등 중남미 지역기구에 우리 대학(원)생들을 파견하여 중남미 국제기구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중남미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동 사업은 매년 25명 내외의 인원을 6개월간 파견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3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사업 최근 5년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파견 인원(명)	지역기구 수
2021*	420	0	420	0	0
2022	417	188	229	13	10
2023	411	411	-	25	16
2024	359	351	8	21	14
2025	359	340	19	20	1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1년 미파견
(자료: 외교부)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사업 파견 지역기구(2025년)>

기구명	본부 소재지	인턴 파견 국가	기능(설립 목적)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스위스	페루 (중남미 지역본부)	노동기준 제정, 고용·사회보호 촉진, 노동권 보장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대한민국	멕시코 (사무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프로젝트 지원

20) 내역사업명 변경 : 구「차세대 중남미 진출 인력 양성」→「청년 중남미 진출 확대」

기구명	본부 소재지	인턴 파견 국가	기능(설립 목적)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 (CAF: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사무소)	안데스 지역 국가 공공·민간 부문 필요 재원 확보 및 지속 개발 지원, 산업 현대화를 위한 차관 제공
라틴아메리카의회 (PARLATINO: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Parliament)	파나마	파나마	중남미·카리브 지역 의회 간 협력 및 입법 교류 촉진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 (ALADI: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우루과이	우루과이	회원국 간 양·다자 협정을 통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라틴아메리카 공동 시장 달성 추진
미주기구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국	미국	미주지역의 민주주의·지속가능한 개발·자유무역 증진, 역내 사회문제 해소 노력
세계식량기구 (WFP: World Food Programme)	이탈리아	베네수엘라	전 세계 식량지원, 기아 및 영양실조 퇴치, 인도적 구호 활동 수행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UN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칠레	칠레	유엔 산하 지역경제위원회로, 중남미 지역 경제발전·사회 개발 증진 및 관련 활동 조정, 역내·외 국가와의 경제관계
이베로아메리카교육과학문화기구 (OEI: Organization of Ibero-American States for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스페인	온두라스 (사무소)	종합개발, 민주주의, 지역통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문화 등 분야에서 이베로아메리카 지역 국가간 협력 증진
이베로아메리카사무국 (SEGIB: Ibero-American General Secretariat)	스페인	스페인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조정
중미통합체제 (SICA: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한 중미 지역의 자유·평화·민주주의·경제발전 달성
카리브국가연합 (ACS: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트리니다드 토바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카리브해 지역 역내 경제권 창설, 카리브 국가의 환경·지속가능한 발전 등 협력 증진

※ 일부 기구 약칭은 스페인어 공식 명칭의 약자임.
(자료: 외교부)

2025년 예산안 기준 파견 인턴 1인당 평균 소요 금액은 약 1,604만원으로, 동 금액은 인턴에게 지급하는 정착비·체재비[21] 및 인턴 파견 MOU에 따라 일부 지역기구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지원비를 포함함.

21) 정착비 : 미국 $3,000, 중남미·스페인 $3,400 / 월 체재비 : 미국·스페인 $1,407, 중남미 $1,250

그런데, 외교부에 따르면 동 사업 예산은 2009년 최초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17년째 1인당 지원금액이 동결된 상태로, 2009년 대비 현재 인턴 파견 지역의 항공운임 상승률, 물가상승률[22] 및 현지 치안 수준을 고려할 때 1인당 지원금액을 확대[23]할 필요가 있음.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 연도별 예산액, 파견인원 및 지원액>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상
예산액	-	255	254	237	284	436	363	387	384	408	408	425	417	403	359	359
인원	17	17	18	20	21	31	26	25	24	27	27	15**	13	25	21	10
1인당 지원액***	ㅇ (항공운임 등 정착비) 미국 $3,000, 중남미·스페인 $3,400 ㅇ (월 체재비) 미국·스페인 $1,407, 중남미 $1,250															

* '09년 최초 파견 시 각 국제기구 협력기금(사업분담금) 예산 활용
** 중남미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미파견
*** 사업 시작 이래 17년째 항공운임 및 체재비 기준 금액 동결
(자료: 외교부)

실제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은 1인당 약 1,820만원, 한-아프리카재단에서 운영 중인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파견의 경우에도 1인당 약 1,800만원 수준이라고 함.

한편,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홈페이지에 소개된 4개의 정부지원 국제기구 인턴 파견사업의 경우에도 1인당 지원금액은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음.

---

22) 중남미 85.2%, 스페인 31.5%, 미국 43.9%(2010년 대비 2024년 물가지수 상승률 고려('24년 인턴 파견 11개국 평균 및 미국, 스페인 / 출처 : World Bank))

23) 외교부는 1인당 지원 금액을 '26년 2,375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총 3억 6,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함.
- 정착비: 항공운임 상승 등 고려, 미국 $3,600, 스페인 $4,080, 중남미 $4,150로 인상
- 월 체재비: 물가상승률 등 고려, 미국 $2,040, 스페인 $1,829, 중남미 $2,188로 인상

<정부지원 국제기구 인턴 파견사업>[24]

사업명	주관기관	내용	지원금액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인턴 파견사업	외교부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가 소재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UAE 등 국가에 파견	항공료(실비, 최대 200만원) 및 체재비(매월 150~180만원, 최대 6개월)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GELP)	환경부	환경 관련 국제기구가 소재한 이탈리아, 태국, 베트남, 독일, 일본 등 국가 및 국내에 파견	항공료(실비), 보험료(실비, 최대 50만원), 비자발급비 및 체재비(매월 120~140만원, 최대 6개월)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원자력 분야 국제기구가 소재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미국 등 국가에 파견	항공료(250만원), 비자발급비(50만원), 체재비(6개월) 등을 포함하여 연수 도시별 정액 지원금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OASIS 프로그램	농림 축산식품부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가 소재한 미국, 이탈리아, 헝가리, 스위스, 오스트리아, 태국, 베트남 등 국가 및 국내 소재 사무소에 파견	항공료(실비), 비자발급 등을 위한 준비비(30만원), 및 체재비(매월 120~150만원, 최대 5개월)를 지원

(자료: 외교부)

첫째, 국제기구인사센터에 소개된 인턴파견사업의 경우 파견 대상지가 주로 유럽, 미국, 중동 등 인천발 직항 항공편이 있는 지역으로, 생활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들임.

둘째, 중남미 지역의 경우 멕시코를 제외한 32개국 대부분이 직항 노선이 없고, 현지 치안 상황 또한 불안정한 편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주거비·보험료 등 생활비 지원이 요구됨.

따라서 단순히 1인당 지원금액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4)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부지원 인턴 파견 사업으로, 타 부처 사업의 경우 기관 웹사이트 및 최신 공고문을 통해 안내하는 지원 내역 등을 통해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하였으며, 우리 정부 지원 금액 외 기구 측의 인턴 지원 사항은 미파악.

실례로 2023년 온두라스(OEI) 파견 인턴의 경우, 강도가 잦아 시내버스 이용이 불가해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경비원이 있는 주거단지에 거주해야 함에 따라 교통비 및 월세 등 지출 과다로 체재비 부족을 호소한 바 있음.

<'24년 인턴 파견 중남미 지역 국가 소비자 물가지수 및 범죄율>

국가	소비자 물가지수*	범죄율**
멕시코	184.4	28.2
브라질	223.2	22.4
엘살바도르	129	18.2
온두라스	197.8	38.3
우루과이	290.6	8.9
칠레	178	3.6
콜롬비아	196.3	27.5
트리니다드토바고	163.6	29.4
파나마	128.4	12.7
파라과이	182.9	7.8
페루	163	5.7
평균	185.20	18.43
한국	132.2	0.5

* 2010년 물가지수가 100일 때 2024년 물가지수(출처: World Bank)
** 2021년 인구 10만명 당 살인율(브라질, 페루는 2020년 통계 / 출처: World Bank)
(자료: 외교부)

이에,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파견 인턴 1인당 지원단가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남미 지역 특유의 물가·치안·교통 여건 등을 반영한 차등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아울러, 청년층의 중남미 진출 확대라는 사업 목적을 감안하여 파견 인원 확대 및 예산 증액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중남미 국제기구 현장에서 실질적 역량을 축적하고, 향후 중남미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 심포지엄 개최비용 일반용역비 전환 신중 검토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는 우리 기업·국민의 중남미지역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개소하였으며, 중남미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자원·인프라·신산업 분야 심포지엄 개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음.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 심포지엄은 우리 국민과 기업에 중남미 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산·학·연·관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임. 매회 중남미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협력 분야를 대주제로 선정하여 2~3개의 세션으로 구성하고, 각 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함.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개최 현황>

일시	주 제
2010.11.24	재생에너지 및 농업
2011.12.01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2012.12.14	대중남미 자원개발 동향 및 진출방안
2013.12.10	대중남미 자원개발 동향 및 진출방안
2013.12.19	대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 방안
2014.12.14	대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 방안
2015.12.11	대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 방안
2016.12.16	대중남미 인프라·플랜트·환경 시장 진출 확대 방안

2017.12.13	대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 방안
2018.12.17	대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 방안
2019.11.27	중남미 지역개발은행 활용을 통한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진출 방안
2020.11.19	2020년 대중남미 진출 환경 변화 및 유망 분야
2021.12.16	중남미 정세 전망 전문가 토크
2022.12.06	2023년 중남미 정세 전망 및 진출 유망 분야
2023.12.06	2024년 대중남미 진출 환경 변화 및 유망 분야
2024.12.12	2025년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중남미 협력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동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일반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2025년까지 연 1회 개최되던 심포지엄을 2026년부터 연 2회로 확대하고, 직접 수행하던 업무방식을 전문업체에 대행하도록 변경한 데 따른 것임.

외교부는 그간 행사대행업체 없이 센터 근무 연구원 3인이 심포지엄 준비를 직접 수행해 왔으나, 연구·조사 등 본연의 업무와 병행함에 따라 업무 과중 및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였다고 밝히며, 심포지엄의 내실 있는 진행을 도모하고, 연구원들이 본연의 연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사 기획 및 운영을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일반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대행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동 심포지엄의 경우 3시간 남짓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 행사 규모 및 전문성이 반드시 외부 전문업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연 2회로 행사 횟수를 확대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접수행에 비해 일반용역비 예산액이 크게 증대되어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 심포지엄 연도별 경비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항목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수용비	5	3	5	-	1
임차료	4	5	8	10	12
업무추진비	3	4	6	14	9
일반용역비	7	-	6	-	-
계	**19**	**12**	**25**	**24**	**22**

(자료: 외교부)

<2024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 심포지엄 프로그램>

일시: 2024. 12. 12. 목. 09:00 - 12:20
장소: 포시즌스 호텔 서울, 누리볼룸(6F)

순서	주제	발언자
개회사		외교부 중남미국장
세션 1	**미국 대선 이후 중남미 정세 전망**	**국립외교원 조교수**
세션 2	**한-중남미 협력 1:기회 및 성장 분야**	
발표 1	중남미 항공우주산업 동향과 협력 기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협력실장
발표 2	중남미 방위산업 동향과 협력 기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3	중남미 의약품 시장 동향과 협력 기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본부장
세션 3	**한-중남미 협력 2: 주요 투자 및 진출분야**	
발표 1	중남미 핵심광물 진출 현황과 전망	한국광해광업공단 해외협력팀장
발표 2	중남미 인프라 진출 현황과 전망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인프라사업실장
발표 3	중남미 FTA 활용 전략과 공급망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팀장
질의응답		
폐회		

(자료: 외교부)

특히,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의 경우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중남미 관련 연구·조사, 자료 발간, 홈페이지 운영, 심포지엄·기업 간담회 개최 등을 주요업무로 적시하고 있는바, 심포지엄의 수행을 전문업체에 맡김으로써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외교부의 설명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겠음.

이에, 외교부는 2026년도 동 심포지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반용역비로 편성한 데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은 아중동지역국가와의 인적 교류 활성화 및 제반 분야의 실질협력 확대를 통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아중동 지역 정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외교정책의 수립·이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2026년도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합계	**3,139**	**3,515**	**3,515**	**6,727**	**3,212**	**91.4**
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686	2,186	2,186	2,196	10	0.5
아프리카지역국가와의교류협력강화	1,297	1,035	982	4,237	3,202	309.4
아중동 외교정책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156	294	347	294	-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35억 1,500만원) 대비 32억 1,200만원(91.4%)이 증액된 67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내실 있는 준비 필요

외교부는 내역사업 「아프리카지역국가와의교류협력강화」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도(10억 3,500만원) 대비 309.4% 증액된 4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 및 후속조치 이행의 일환으로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의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32억 200만원을 증액한 데 기인함.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예산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상세내역
일용임금(110-05)	61	사무보조 및 에디터 임금
일반수용비(210-01)	80	각 공관홍보비(40), 결과보고서 제작(30), 각종 사례비(5), 행사물품 구입(5)
특근매식비(210-05)	3	사무보조 및 에디터 특근 시 지원
임차료(210-07)	340	외교장관회의 행사장 임차(180), 부대행사 행사장 임차(160)
일반용역비(210-14)	2,369	행사 대행 및 관리 용역
국내여비(220-01)	2	기관협의
국외여비(220-02)	294	출장 항공료 및 체재비
사업추진비(240-01	47	업무협의(20), 오만찬·선물(10), 주한공관 협의(17)
고용부담금(320-09)	6	사무보조 및 에디터 4대보험료 등
합계	**3,202**	

(자료: 외교부)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결과문서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한-아프리카 양측이 2026년 외교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경제 분야 및 국제무대 협력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사업임.

외교부는 금년 11월 4일(화)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고위관리회의(SOM)를 개최하여, 동 계기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관련 시기, 개최지, 의제 등 주요 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의할 예정으로,

별도의 준비기획단 신설 없이 행사대행용역을 이용해 동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안)	
기간 및 장소	2026년 2-3분기, 한국 서울	
참석대상	아프리카 50여 개국 및 국제기구(AU, AfCFTA 등) 장관급 인사 약 60여 명, 주요 및 실무 수행원, 기업인 및 기자단 등 300여 명	
주요 프로그램	1일차	▲ 고위관리회의(SOM) ▲ 환영 리셉션
	2일차	▲ 개회식 ▲ 외교장관회의 ▲ 공식 만찬
	3일차	▲ 한-아프리카 비즈니스포럼/설명회 ▲ 문화·산업시찰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동 사업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광물·자원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미래산업 협력 토대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對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고, 1국 1표 원칙의 국제무대에서 54개국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소재한 아프리카 대륙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임.

다만, 대규모 국제행사의 특성상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행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부 일정·장소 확정, 참여국 조율, 운영비 절감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국제기구분담금

가. 프로그램 개요

「국제기구분담금」프로그램은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및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분담금을 납부하여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 재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격에 걸맞은 사업분담금 지원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세부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ⅰ) 유엔정규예산을 총회에서 결정하는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25], ⅱ) 유엔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유엔 PKO(Peacekeeping Operations) 분담금 납부[26], ⅲ)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의무이행 차원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타의무분담금 납부, ⅳ)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회원국으로서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및 ⅴ) 우리나라가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단독으로 기여하는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8,262억 2,400만원) 대비 1,444억 2,900만원(17.5%)이 감액된 6,817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5) 각국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은 [유엔 정규예산 총액 × 각국의 분담률- 직원공제액* 평균(약 0.08억불)]로 결정되고 있음.

26) 각국의 유엔 PKO예산 분담금은 [유엔 PKO예산 총액 × 각국의 분담률]로 결정되고 있는바, 유엔 PKO예산 총액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여 매년 6월 중 결정되고 있으며, 각국의 분담률은 유엔의 정규예산 분담률과 같이 3년 주기로 국민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음.

<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100] 국제기구분담금			660,365	718,311	707,172	826,224	798,335	681,795
	[2131] 국제기구분담금		660,365	718,311	707,172	826,224	798,335	681,795
		[401]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	97,134	107,284	105,435	123,580	114,191	114,086
		[402] 유엔PKO예산분담금 납부	203,096	212,377	203,709	216,784	198,284	177,706
		[403] 기타의무분담금 납부	84,876	97,036	96,783	102,607	102,607	109,278
		[404]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275,259	301,614	301,245	383,253	383,253	207,156
		[405]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	-	-	-	-	73,569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의무분담금 납부」 사업은 전년도(1,026억 700만원) 대비 66억 7,100만원(6.5%) 증액된 1,092억 7,800만원으로, 국제기구 회원국 · 당사국으로서의 재정적 의무 이행 및 이를 통해 국제기구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한편,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은 전년도(3,832억 5,300만원) 대비 1,760억 9,700만원(45.9%) 감액되어 2,07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사업은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기여하고 있는 분담금을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에서 분리하여 편성한 것으로, 735억 6,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마지막으로,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 및 「유엔 PKO 예산 분담금 납부」는 2026년 유엔 정규예산 예상액 39.26억불 및 2025/26년 유엔

PKO 예산 53.9억불과 2025-27년 우리나라 분담률(2.349%)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음.

□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최근 5년간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다 2026년에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2026년의 감소세로 인하여 2026년의 국제기구분담금 예산 규모가 2024년 이전으로 회귀하였음.

전 부처 기준으로 2026년 국제기구 분담금은 전년 대비 14.4% 감소한 1조 3,919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외교부의 2026년 분담금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18.3% 감소한 8,529억원이 편성되었음.

< 최근 5년간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안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전 부처	9,146	10,216	15,070	16,253	13,919
(증감률)	-	(11.7)	(47.5)	(7.9)	(△14.4)
외교부	5.213	6,618	10,252	10,441	8,529
사업 분담금	1,686	2,767	3,016	3,833	2,807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2,072 ·국제기구 신탁기금 735
(증감률)	-	(64.1%)	(9.0%)	(27.1%)	(△26.8)

(자료: 연도별 국제기구분담금 종합보고서)

이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2025.8.)」에서 국제기구 분담금 감액은 일시적으로 확대된 사업을 정

상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우리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요 분야에 대하여 실용적이고 전략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차원에서 분담금을 재조정하였다는 의견임.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의 급격한 감소는 2024년 정부가 '우리의 분담금 기여순위가 경제 규모 대비 낮은 수준으로, 우리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분담금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27]에 배치되는 것임.

이는 국제사회에 일관성이 결여된 외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국제기구로의 한국인 진출에도 타격을 입히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방향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분담금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및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은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UNICEF, UNDP, UNHCR 등)[28]의 사업운영 및 지역 국제기구(ASEAN, AU, OAS 등)[29]와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분담금을 자발적으로 납부

27)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P.28
28) UNICEF: UN Children's Fund, 유엔 아동기금
UNDP: UN Development Programme, 유엔 개발계획
UNHCR: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난민 기구
29) AU: 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2026년에 신규 편성된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사업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에 편성하고 있던 분담금 중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기여하고 있는 분담금을 분리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임. 동 사업에는 한-ESCAP 협력기금 등 10개의 분담금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예산안은 2,071억 5,600만원이고,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예산안은 735억 6,900만원으로, 이를 고려 시 재량적 성격의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은 2025년 3,832억 5,300만원에서 2,807억 2,500만원으로 1,025억 2,800만원(26.8%) 감액되었음.

< 2026년도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및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301,245	383,253	207,156	△176,097	△45.9
국제기구 신탁기금	-	-	73,569	73,569	순증
계	301,245	383,253	280,725	△102,528	△26.8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와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사업의 세부 편성 내역은 아래와 같음.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2026년도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세부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납부대상	24년 예산	25년 예산	26년 정부안	증감액	증감률
1	유엔개발계획(UNDP) 정규재원기여금	23,400	22,626	10,350	△12,276	△54.3
2	세계식량계획(WFP) 정규재원기여금	26,000	24,885	10,695	△14,190	△57.0
3	유엔아동기금(UNICEF)	19,500	18,663	7,314	△11,349	△60.8
4	유엔난민기구(UNHCR)	23,266	23,149	12,240	△10,909	△47.1
5	한-UNDP 지속가능개발(SDG) 신탁기금	10,400	10,056	9,936	△120	△1.2
6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6,500	5,850	3,226	△2,624	△44.9
7	유엔인구기금(UNFPA)	1,300	2,760	2,208	△552	△20.0
8	유엔자원봉사단(UNV)	5,832	5,829	5,165	△664	△11.4
9	유네스코세계시민교육 기여	1,300	1,199	1,380	181	15.1
10	유엔개발시스템선진화기금	1,927	1,864	1,863	△1	△0.1
11	한-아세안센터	7,600	7,600	7,600	-	-
12	APEC 미래번영기금	-	1,347	1,250	△97	△7.2
13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911	966	476	△490	△50.7
14	APEC 정책지원부서 분담금	229	472	350	△122	△25.8
15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지원	17,550	17,980	15,298	△2,682	△14.9
16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자발적 기여금	1,554	2,664	1,554	△1,110	△41.7
17	글로벌 보건기여	-	48,151	55,200	7,049	14.6
18	OECD 자발적 기여금	2,576	3,073	3,073	0	-
19	OECD DAC 자발적 기여금	368	377	414	37	9.8
20	WTO 대개도국 협력사업 기여금(GTF)	650	547	200	△347	△63.4
21	NATO신탁기금	15,600	33,120	23,132	△9,988	△30.2
22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111	118	117	△1	△0.8
23	유엔평화구축기금(PBF)	10,408	9,881	4,364	△5,517	△55.8
24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10,408	5,204	2,174	△3,030	△58.2
25	유엔 군축 사업분담금	1,601	1,387	2,208	821	59.2
26	군축분야 인도적 지원 신탁기금	883	883	828	△55	△6.2
27	유엔마약범죄 사무소(UNODC)	260	253	138	△115	△45.5
28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분쟁예방기금	4,544	4,427	3,123	△1,304	△29.5
29	유엔 평화유지신탁기금	3,900	3,955	3,147	△808	△20.4
30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42	145	319	174	120
31	IAEA 비확산 핵안보기금	3,612	3,497	2,240	△1,257	△35.9
32	ICAO PKD (국제민간항공기구 공개키 디렉토리)	42	43	31	△12	△27.9
33	국제형사재판소(ICC) 피해자 신탁기금	65	63	24	△39	△61.9

연번	납부대상	24년 예산	25년 예산	26년 정부안	증감액	증감률
34	시나이정전감시단(MFO) 기여금	325	315	215	△100	△31.7
35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ECCC)	390	126	74	△52	△41.3
36	해적퇴치 관련 IMO 사업분담금	260	254	220	△34	△13.4
37	테러리즘 대응 및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사업지원	781	763	483	△280	△36.7
38	아프리카연합(AU)평화기금	6,500	4,918	-	-	폐지
39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자발적 신탁기금	26	27	10	△17	△63.0
40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자발적 기여금	426	421	370	△51	△12.1
41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법 펠로우십 신탁기금	40	39	41	2	5.1
42	동북아환경협력 계획(NEASPEC)	146	142	123	△19	△13.4
43	글로벌파트너십	911	996	921	△75	△7.5
44	UNIDO 서울투자기술 진흥사무소(ITPO)	468	995	552	△443	△44.5
45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기금	2,600	2,587	1,733	△854	△33.0
46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국제기금(GSF)	2,838	2,824	2,120	△704	△24.9
47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신탁기금	4,879	5,176	1,380	△3,796	△73.3
48	메콩강위원회(MRC)	1,300	1,380	1,380	-	-
49	아시아·유럽재단(ASEF)	261	261	276	15	5.7
50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65	63	51	△12	△19.0
51	엘시(Elsie)기금	650	666	351	△315	△47.3
52	한-중미통합체제(SICA)협력기금	1,165	1,075	736	△339	△31.5
53	카리브공동체(CARICOM) 협력기금사업	3,900	3,681	1,761	△1,920	△52.2
54	한-미주기구(OAS) 협력기금사업	232	225	201	△24	△10.7
55	비세그라드펀드(IVF)	650	645	368	△277	△42.9
56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파트너십기금	91	91	111	20	22.0
57	중동담수화연구소 협력기금	58	58	38	△20	△34.5
58	아이티 다국적 안보지원단 지원	-	13,470	-	-	-
59	민주주의 증진 협력 기여금	397	357	221	△136	△38.1
6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도 기여	-	-	659	-	신규
61	한-인도양위원회(IOC) 협력기금	-	-	306	-	신규
62	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태평양복원력기금(PRF) 지원	-	-	718	-	신규
63	유엔 나이로비 사무소- 나이로비 UN Complex 확장 및 노후시설 리노베이션	-	-	100	-	신규
64	OECD 민주주의분담금('25년 종료)	-	674	-	-	종료
합 계		231,798	305,263	207,156		

< 2026년도 국제기구 신탁기금 세부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납부대상	24년 예산	25년 예산	26년 정부안	증감액	증감률
1	한-ESCAP 협력기금(KECF)	390	378	279	△99	△26.2
2	한-아세안 협력기금	36,400	38,640	38,640	-	-
3	UNIDO 공업개발기금(IDF)	434	652	552	△100	△15.3
4	한-인도양 협력기금	-	539	468	△71	△13.2
5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사업	5,200	5,388	5,388	-	-
6	한-태평양도서국(PIF) 협력기금	3,900	6,209	4,464	△1,746	△28.1
7	한-메콩 협력기금	10,400	11,040	11,040	-	-
8	한-유엔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 협력기금	663	626	530	△96	△15.3
9	한-아프리카연합(AU) 협력기금	9,758	8,018	8,018	-	-
10	한-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력기금	-	6,500	4,190	△2,310	△35.5
합 계		**67,145**	**77,990**	**73,569**	**△4,421**	**△5.7**

(자료: 외교부)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예산의 감액 사유 검토

재량분담금의 성격을 갖는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와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사업 예산안이 전년 대비 26.8% 규모로 대폭 감액된바, 개별 분담금 예산의 감액 사유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별 국제기구분담금의 감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에 비하여 20% 이상 감액된 분담금은 총 41개 사업임. 그런데 대부분의 분담금이 매년 시행되는 분담금 자체평가 중 정량평가에서 전체 계속분담금의 평균인 91.56점을 상회하고 있어, 평가 결과와 감액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 주요 감액 분담금 현황 >

연번	분담금명	25 예산	26 정부안	분담금별 감액 사유 및 감액 규모 결정 근거	평가 결과
1	대인지뢰금지협약	28	14	2024년 평가회의 개최로 회의 일수 증가에 따라 2025년 증가한 분담금 예산을 2026년 예년 수준으로 조정	93
2	불어권국제기구(OIF)	52	37	우리 국회 예산 책정 후에 OIF 분담금이 상승하여 발생되었던 2024년도 미납금을 2025년에 완납 (2025년 일시 증가)	87
3	유엔개발계획(UNDP) 정규재원기여금	22,626	10,350	사업 우선순위 조정	95
4	세계식량계획(WFP) 정규재원기여금	24,885	10,695	사업 우선순위 조정	98
5	유엔아동기금 (UNICEF)	18,663	7,314	사업 우선순위 조정	100
6	유엔난민기구 (UNHCR)	23,149	12,240	사업 우선순위 조정	88
7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5,850	3,226	사업 우선순위 조정	100
8	유엔인구기금 (UNFPA)	2,760	2,208	사업 우선순위 조정	93
9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966	476	2025년 의장국으로서 주도한 '미래세대번영' 이니셔티브 지속 및 정착을 위해서는 2025년 의장국 수임 계기 신설한 'APEC 미래번영기금'의 기여수준을 100만불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 우선순위를 감안, 동 분담금 감액	97
10	APEC 정책지원부서 분담금	472	350		97
11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자발적 기여금	2,664	1,554	사업 우선순위 조정	93
12	WTO 대개도국 협력사업 기여금 (GTF)	547	200	일시적 감액을 통해 WTO 내 한국인 진출 등 우리 관심사안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2026년 APEC 트로이카 의장국으로서 APEC 사업분담금 부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 분담금 감액	97
13	NATO 신탁기금	33,120	23,132	사업 우선순위 조정	97
14	유엔평화구축기금 (PBF)	9,881	4,364	사업 우선순위 조정	98
15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UNRWA)	5,204	2,174	사업 우선순위 조정	97
16	유엔마약범죄 사무소 (UNODC)	253	138	사업 우선순위 조정	93
17	유엔정무평화구축국(DPPA) 분쟁예방기금	4,427	3,123	사업 우선순위 조정	93
18	유엔 평화유지신탁기금	3,955	3,147	사업 우선순위 조정	97
19	IAEA 비확산 핵안보기금	3,497	2,240	사업 우선순위 조정	95

연번	분담금명	25 예산	26 정부안	분담금별 감액 사유 및 감액 규모 결정 근거	평가 결과
20	ICAO PKD (국제민간항공기구 공개키 디렉토리)	43	31	PKD 연회비 인하에 따른 초과 예상분 감액	91
21	국제형사재판소(ICC) 피해자 신탁기금	63	24	사업 우선순위 조정	94
22	시나이정전감시단(MFO) 기여금	315	215	사업 우선순위 조정	93
23	크메르루즈 전범 재판소(ECCC)	126	74	사업 우선순위 조정 / 재판 기능 종료 및 잔여 업무로 전환	98
24	테러리즘 대응 및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사업지원	763	483	사업 우선순위 조정	100
25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자발적 신탁기금	27	10	사업 우선순위 조정	98
26	UNIDO 서울투자기술 진흥사무소(ITPO)	995	552	사업 우선순위 조정	93
27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기금	2,587	1,733	사업 우선순위 조정	96
28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국제기금 (GSF)	2,824	2,120	사업 우선순위 조정	97
29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신탁기금	5,176	1,380	'21-'25년 재정주기 동안 우리 공약사항(1,500만불 이상 기여 공약) 이행을 위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한 바 있으나, 사업 우선순위 조정 감안 감액	97
30	엘시(Elsie)기금	666	351	사업 우선순위 조정	93
31	한-중미 통합체제 (SICA)협력기금	1,075	736	사업 우선순위 조정	81
32	카리브공동체(CARICOM) 협력기금사업	3,681	1,761	여타 기여금 간 우선순위 조정	88
33	비세그라드펀드(IVF)	645	368	사업 우선순위 조정	88
34	중동담수화연구소 협력기금	58	38	사업 우선순위 조정	97
35	민주주의 증진 협력 기여금	357	221	사업 우선순위 조정	96-97
36	한-ESCAP 협력기금(KECF)	378	279	사업 우선순위 조정	94
37	한-태평양도서국포럼 (PIF) 협력기금	6,210	4,464	사업 우선순위 조정	94
38	한-아프리카대륙자유 무역지대 (AfCFTA) 협력기금	6,500	4,190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으나 증액 검토 필요	87
39	아프리카연합(AU) 평화기금	4,918	-	국별 칸막이 개선 필요성 감안, 한-AU 협력기금으로 통합	97
40	OECD 민주주의 분담금	674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24.3월) 후속조치로서 2025년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	74
41	아이티 다국적 안보지원단 지원	13,470	-	MSS 기금은 자발적·비연속적 기여로서 우리 정부는 '25년 상당 규모의 지원 시행	81

또한, 감액 사유 또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 대부분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감액 규모 결정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번 재량분담금의 감액이 개별 분담금 예산의 효과성, 국익 달성도, 외교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다자관계 협력

가. 프로그램 개요

「다자관계 협력」 프로그램은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 등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을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및 위상 강화, 2025-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수임 활동, 믹타 소다자 협력을 통한 우리의 외교 지평 확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전략적 원자력 외교 추진 등 국제기구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개의 단위사업 및 6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215억 8,500만원) 대비 10억 5,400만원(4.9%)이 감액된 205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다자관계 협력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200] 다자관계 협력			16,148	24,046	24,853	21,585	21,585	20,531
	[2231] 국제기구 협력강화		16,148	24,046	24,853	21,585	21,585	20,531
		[401]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9,284	14,115	14,048	16,072	16,072	17,218
		[403]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148	3,844	3,489	3,751	3,751	1,635
		[405] MIKTA 중견국 외교	147	160	137	244	244	232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406]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409	475	425	451	451	428
		[408] 유엔 행정예산 분야 제도 구축 및 운영 강화	64	63	62	57	57	57
		[411]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2,180	-	-	-	-	-
		[41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916	1,013	877	1,010	1,010	961
		[421]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	4,377	5,815	-	-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 사업이 JPO 파견 인원 확대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11억 4,600만원(7.1%) 증액되었고,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사업이 2024-25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활동 지원 사업 종료 등에 따라 21억 1,600만원, 「MIKTA 중견국 외교」1,200만원,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증진」사업 2,300만원,「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사업 4,900만원이 전년도 대비 각각 삭감되었으며, 「유엔 행정예산 분야 제도 구축 및 운영 강화」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은 종료되었음.

나.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사업은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등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인적 기여 제고 및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172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1억 4,600만원(7.1%) 증액됨.

<2026년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합계	**14,048**	**16,072**	**16,072**	**17,218**	**1,146**	**7.1**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13,908	15,896	15,896	17,034	1,138	7.2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개최	55	62	62	58	△4	△6.5
국제기구 인사센터	85	114	114	126	12	10

□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국제기구 다변화 및 비유엔기구 진출 노력 필요

JPO 파견 사업은 우리나라 청년을 국제기구에 일정기간 수습직원으로 파견하고 국제기구에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는 선발 인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계약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하는 등 사업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사업 예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7.		2026(안)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7,708	7,436	9,528	9,284	14,115	14,048	16,072	211	17,218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홈페이지에서 JPO 파견기구로 유엔/산하 기구, 유엔 사업 및 기금, 유엔 전문 및 독립 기구, 유엔 협력 및 기타 기구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 JPO 파견 국제기구 현황은 다음과 같음.

<JPO 파견 국제기구 현황표 (2025년 기준)>

구분	기구명(영문)	한글명칭	주요업무	본부 소재지	jpo 근무지
유엔/산하 기구	United Nations Secretariat (UN)	유엔 사무국	유엔의 행정·정책 집행 중심기구로, 국제평화·안보 유지, 인권, 개발 등 총괄	미국 뉴욕	미국 뉴욕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유엔 인도지원 조정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활동 조정 등	미국 뉴욕 및 스위스 제네바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인권 보호 및 증진 등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태국 방콕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유엔 아태경제사회 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사회 분야 개발 및 협력 등	태국 방콕	태국 방콕
	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	유엔 재난위험경감 사무국	국제 재난 경감 등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벨기에 브뤼셀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약물 규제 및 마약 범죄 예방 등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빈, 세네갈 다카
	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UNOOSA)	유엔 우주사무국	평화적 우주 이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빈

구분	기구명(영문)	한글명칭	주요업무	본부 소재지	jpo 근무지
	UN Mine Action Service (UNMAS)	유엔 지뢰행동 조정국	지뢰 제거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인도적 지뢰행동 등	미국 뉴욕	미국 뉴욕
	UN Joint Staff Pension Fund (UNJSPF)	유엔합동직원 연금기금	유엔 직원 연금 관리 및 지급 등	미국 뉴욕	미국 뉴욕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국제사법 재판소	국가 간 분쟁 해결 등	네덜란드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
유엔 사업 및 기금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개발계획	지속가능한 개발 등	미국 뉴욕	미국 뉴욕, 요르단 암만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유엔환경계획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케냐 나이로비	케냐 나이로비, 스위스 제네바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유엔난민기구	난민 보호 및 정착 지원 등	스위스 제네바	태국 방콕,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요르단 암만
	UN World Food Programme (WFP)	유엔세계 식량계획	식량 지원 및 기아 퇴치 등	이탈리아 로마	기니 코나크리
	UN Population Fund (UNFPA)	유엔인구기금	인구 문제 및 정책 지원	미국 뉴욕	미국 뉴욕
	UN Children's Fund (UNICEF)	유엔아동기금	아동 권리·보호·교육 지원 등	미국 뉴욕	미국 뉴욕, 케냐 나이로비
	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유엔인간 정주계획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케냐 나이로비	케냐 나이로비
	UN Captial Development Fund (UNCDF)	유엔자본 개발기금	자본원조를 통핸 경제발전 도모 등	미국 뉴욕	미국 뉴욕
유엔 전문 및 독립 기구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국제농업 개발기금	국제 농업 개발 및 식량 안보 등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로마
	UN Educational, Sco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유엔교육과학 문화기구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등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유엔공업 개발기구	공업 개발 및 기술 협력 등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빈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보건기구	국제 공중보건 및 질병 대응 등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세계지식재산 기구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협력 등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구분	기구명(영문)	한글명칭	주요업무	본부 소재지	jpo 근무지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세계기상기구	대기과학·기후학에 대한 국제 협력 촉진 등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유엔식량 농업기구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등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로마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국제노동기구	노동기준 수립 및 고용·노동권 보호 등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유엔 협력 및 기타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국제이주기구	인도적 이주 관리 및 난민 지원 등	스위스 제네바	독일 베를린, 케냐 나이로비, 카메룬 야운데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	경제정책 협의 및 연구 등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국제 형사재판소	전쟁범죄·인도범죄와 같은 국제범죄 재판 등	네덜란드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유엔기후변화 협약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체제 이행 등	독일 본	독일 본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화학무기 금지기구	화학무기 폐기 및 비확산 이행 감독 등	네덜란드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
	Joint Inspection Unit (JIU)	유엔합동 감사기구	유엔 주요 국제 현장 감사 및 점검 등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JPO 파견 국제기구를 선정할 때 국제기구의 중요도, 우리의 정책적 우선순위, 파견 종료 후 국제기구 진출 가능성 등[30]을 종합 고려하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직위를 선정한다고 함.

그런데, 현재 JPO 파견은 유엔 사무국(뉴욕) 및 유엔 산하기구가 밀집된 유럽 지역(제네바, 빈, 파리, 로마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 지역 소재 국제기구로의 파견은 제한적인 실정임. 2025년 기준, 현재 파견 중인 JPO 전체 80명 중 유럽과 북미 지역 파견이 80% 이

30) ▲3년차 연장 가능성 ▲전년도 미선정 기구 ▲현장사무소 직위 등도 고려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은 파견자가 없음.

<2025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지역별 파견 현황>

파견지역	파견인원 (명)	파견기구 수(개)	주요 파견 국제기구	비고
유럽	37	22	UNESCO, WHO, ICC, OECD 등	
북미 (미국·캐나다 등)	29	8	유엔사무국, UNFPA, UNICEF 등	
중남미 (중남미·카리브 등)	-	-		
아시아	5	3	UNESCAP, UNHCR, OHCHR	
아프리카	7	6	IOM, UNEP, UNODC, WFP 등	
중동	2	2	UNHCR, UNDP	
기타	-	-		
합계	**80**	**41**		

(자료: 외교부)

이러한 편중 현상은 외교부의 정책 선택이라기보다 JPO 제도가 본질적으로 유엔 및 그 산하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31]이기 때문에, 파견 지역이 유럽과 북미에 집중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유엔 전문기구의 본부 대부분이 제네바·빈·파리·뉴욕 등에 소재하고,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에 위치한 국제기구는 수가 제한적인 실정임.

그럼에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와 지역외교 다변화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파견 국제기구 선정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소재 기구 및 사무소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필요가

31)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정의) JPO라 함은 국가의 비용부담하에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수습직원으로 파견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있음.

아울러 외교부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상 파견대상 기관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등 비유엔·지역기구로의 진출을 적극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

7. 국제 안보 협력 강화

가. 프로그램 개요

「국제 안보 협력 강화」 프로그램[32]은 사이버·신기술 등 신흥안보 위협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및 협력에 참여하고, 주요 다자안보기구와의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를 구축하며, 국제사회의 의무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외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제 안보 협력 강화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300] 국제 안보 협력 강화			3,565	6,206	5,675	4,848	4,848	4,848
	[2331] 사이버 및 군축·비확산 분야 양·다자 협력 강화		3,565	6,206	5,675	4,848	4,848	4,848
		[401]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1,742	1,115	1,088	3,005	3,005	3,005
		[402]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	3,112	2,830	-	-	-
		[403] 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1,823	1,979	1,757	1,843	1,843	1,843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48억 4,800만원) 대비 동일한 48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32) 2024년 외교부의 직제개편으로 인해 종전의 원자력 비확산 외교 강화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 협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개편되었음.

나.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사업은 대량살상무기(WMD)와 신형 군축·비확산 레짐 논의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주요 군축·비확산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주요 국제 논의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며,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제재 관련 국제 공조 등을 통한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합계	1,088	3,005	3,005	3,005	-	-
국제 군축·비확산체제 강화	529	541	541	541	-	-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 이행	104	103	103	103	-	-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455	2,361	2,361	2,361	-	-

□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운영에 대한 성과 중심 예산 집행 필요

지난 15년간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임무를 수행해온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33]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년 4월 해체된 이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우

33)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상임이사국 + 한 + 일 + 1 : 총 8인)
- 안보리결의 1874호(2009)에 근거하여 설립, 매년 임무 연장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불법 해상활동, △불법 무기수출,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 정보 수집·분석→연 2회 보고서 발간(권고사항 포함)

리 정부의 주도로 11개국[34]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2024년 10월 출범하였음.

외교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 이를 위한 내내역사업인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메커니즘 운영'을 신설하고, 일반용역비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내역	'24 예산	'25 예산안	'26 예산안
○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 체제 강화	399	2,361	2,361
- 반확산 분야 양다자 외교	296	265	538
- 국제 수출통제체제 관련 외교활동	103	96	57
-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메커니즘 운영	-	2,000	1,266
-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홈페이지 운영·관리	-	-	499

그런데, 외교부는 동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당초 일반용역비만 편성된 20억원에 대하여, 다양한 비목으로 세분화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메커니즘 운영 사업 집행내역>

(2025.9. 기준, 단위: 백만원)

비목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2026 예산안
일반수용비(210-01)	-	189	189	252
임차료(210-07)	-	-	-	10
유류비(210-08)	-	-	-	-
일반용역비(210-14)	2,000	441	99	150
국내여비(220-01)	-	-	-	-
국외업무여비(220-02)	-	70	70	35
사업추진비(240-01)	-	-	-	16
정책연구비(260-02)	-	1,300	577	800
합 계		2,000	935	1,263

(자료: 외교부)

34) (MSMT 참여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국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25년도 정부안 편성 당시에는 MSMT 보고서 발간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025년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에 보다 적합한 정책연구비로 13억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그 외 보고서 발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업무협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등을 집행하였다고 함.

한편, 외교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내내역사업으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신설하고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메커니즘 운영 비목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2025년	2026년	상세내역(용도)
일반수용비(210-01)	-	252	대북제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독
임차료(210-07)	-	10	MSMT 관련 회의 개최
일반용역비(210-14)	2,000	150	MSMT 홈페이지 관리
국외업무여비(220-02)	-	35	MSMT 운영위 참석 등 관련 국외출장 추진
사업추진비(240-01)	-	16	MSMT 관련 업무 협의
정책연구비(260-02)	-	800	MSMT 관련 연구용역 추진
자산취득비(430-01)	-	499	MSMT 홈페이지 관리 관련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
합계	**2,000**	**1,762**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2025년에는 일반용역비로 MSMT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으나, 2026년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전용 내내역사업인 'MSMT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신설하고, 자산취득비로 예산 비목을 변경하였음.

외교부는 MSMT 홈페이지 관리 비용만 공동 업무 수행을 위해 우리측이 단독으로 부담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동향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은 모든 참여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각 참여국이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함.

그런데, MSMT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대체 메커니즘으로서 사무국이 없는 다국적 협의체의 임시 협력체에 불과하고 공식 국제기구나 법적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홈페이지 구축·관리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데다, 그 외 12억 6,3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동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성과 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음.

MSMT가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새로운 감시기구인 만큼, UN의 공식 틀 밖에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동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외교부는 보다 면밀히 계획을 세워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8. 국제개발협력

가. 프로그램 개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중 ⅰ)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ⅱ)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ⅲ)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ⅳ) 「중동 CIS지역 국가원조」, ⅴ) 「글로벌 프로그램」, ⅵ) 「협력사업 지원」, ⅶ) 「전략적협력 강화」, ⅷ)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일부(「인도적지원」 일부[35] 및 「민관협력사업」[36]), 이상 8개 단위사업 예산은 외교부가 KOICA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 예산임.

외교부는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단위사업 중 「ODA 선진화」 세부사업과 「인도적지원(ODA)」 세부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2026년도 동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감액이 이루어진 가운데, 전년도 본예산 1조 9,670억 1,400만원 대비 4,807억 9,300만원 감액(△24.4%)된 1조 4,862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에는 2025.1.1.부로 폐지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후속조치로서 출국납부금 환불 등을 위한 사업비 116억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국별협력사업을 포함한 보다 상세한 출연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18.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검토하기로 함.

35) 2438-402 중 민관협력사업 인도적지원
36) 2438-403

< 국제개발협력(한국국제협력단 출연 등) 프로그램 예산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400] 국제개발협력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등)			1,247,771	1,968,035	1,893,806	1,967,014	1,933,644	1,486,221
	[2431]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219,944	275,641	249,975	307,548	296,178	281,150
		[401] 베트남(ODA)	32,381	49,646	41,869	57,293	52,293	50,094
		[402] 인도네시아(ODA)	15,448	20,971	15,016	17,114	17,114	18,566
		[403] 캄보디아(ODA)	22,636	22,864	22,339	21,232	21,232	24,147
		[404] 필리핀(ODA)	18,137	31,043	21,613	30,470	30,470	27,632
		[405] 방글라데시(ODA)	14,122	13,790	9,410	14,044	14,044	10,125
		[406] 몽골(ODA)	14,848	17,122	16,706	20,937	20,937	22,519
		[407] 라오스(ODA)	25,698	24,652	26,752	27,290	27,290	25,256
		[408] 스리랑카(ODA)	11,044	12,232	18,842	7,975	7,975	8,233
		[409] 네팔(ODA)	7,971	9,438	10,101	14,653	14,653	16,850
		[410] 파키스탄(ODA)	7,337	9,239	8,869	11,315	11,315	12,395
		[411] 아시아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49,742	62,841	57,955	83,648	77,278	59,292
		[412] 인도(ODA)	415	853	190	250	250	699
		[413] 미얀마(ODA)	165	950	314	1,327	1,327	5,342
	[2432]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224,943	306,614	289,238	302,087	289,087	249,882
		[401] 가나(ODA)	9,548	15,943	15,943	20,583	20,583	18,795
		[402] 에티오피아(ODA)	31,109	30,643	28,804	28,644	28,644	23,478
		[403]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24,029	187,826	177,451	178,966	173,966	131,620
		[404] 르완다(ODA)	15,640	15,714	15,714	17,733	17,733	19,850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405] 우간다(ODA)	14,554	14,501	13,620	17,547	17,547	19,697
		[406] 탄자니아(ODA)	14,678	18,927	16,981	17,931	9,931	18,508
		[407] 세네갈(ODA)	8,620	12,853	12,367	12,507	12,507	9,148
		[408] 이집트	6,765	10,207	8,358	8,176	8,176	8,786
	[243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87,242	73,671	72,784	94,432	94,432	80,283
		[401] 콜롬비아(ODA)	9,861	7,306	8,306	11,229	11,229	9,720
		[402] 페루(ODA)	6,917	9,964	7,101	9,497	9,497	17,747
		[403] 볼리비아(ODA)	8,408	8,024	9,224	17,250	17,250	13,180
		[404] 파라과이(ODA)	10,892	15,701	15,038	11,100	11,100	9,364
		[405]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1,164	32,676	33,115	45,356	45,356	30,272
	[2434] 중동 CIS지역 국가원조		78,072	133,274	119,449	115,139	111,139	93,168
		[401] 우즈베키스탄 (ODA)	11,928	23,767	19,274	22,020	22,020	20,258
		[402]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7,482	88,688	80,027	69,972	65,972	53,749
		[403]키르기스스탄	8,661	12,950	17,566	12,653	12,653	11,636
		[404]타지키스탄(ODA)	1	7,169	1,882	5,439	5,439	2,500
		[405]우크라이나(ODA)	-	700	700	5,055	5,055	5,025
	[2435] 글로벌 프로그램		228,796	313,652	306,090	336,244	331,244	289,145
		[401]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100,858	128,756	123,805	143,026	143,026	127,245
		[402] 글로벌연수(ODA)	51,917	67,378	66,962	67,973	62,973	73,940
		[403] 국제기구협력 (ODA)	51,725	81,915	80,207	80,015	80,015	35,030
		[404]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24,296	35,603	35,116	45,230	45,230	52,930
	[2436] 협력사업 지원		48,397	59,260	54,450	61,390	61,390	91,576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401]협력사업지원(ODA)	48,397	59,260	54,450	61,390	61,390	91,576
	[2437] 전략적협력강화		3,925	8,000	5,661	6,400	6,400	7,300
		[401] 전략적 협력 강화(ODA)	3,925	8,000	5,661	6,400	6,400	7,300
	[2438]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356,452	797,923	796,159	743,774	743,774	393,717
		[401] ODA선진화	1,149	812	714	1,271	1,271	1,066
		[402] 인도적지원(ODA)	307,774	740,111	740,079	677,503	677,503	331,503
		[403] 민관협력사업(ODA)	47,530	57,000	55,365	65,000	65,000	49,518
		[404]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	-	-	-	-	11,630

나. ODA 선진화

「ODA 선진화」 사업은 ODA 정책 관련 각종 회의 개최·참여 및 ODA 현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억 6,6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ODA 선진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714	1,271	1,066	△205	△16.1
·ODA 정책·집행·평가체제 선진화	366	444	426	△18	△4.1
·국제개발협력 리더십 강화	166	491	169	△322	△65
·현지 ODA 역량강화	182	336	471	135	40.2

내역사업 중 「현지 ODA 역량강화」는 재외공관이 현지 ODA 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민관이 합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4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재외공관의 ODA 모니터링 확대·강화 필요

외교부는 「현지 ODA 역량강화」 내역사업에서 재외공관이 현지 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출장비, 차량 임차료 및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있음.

< 현지 ODA 역량강화 예산안 산출 근거 >

■ ODA 현지 모니터링 및 겸임국 ODA 추진 471백만원
- 현장방문 차량 임차 30백만원(75개국x0.2백만원x2회) (임차료)
- 현장방문 출장 220백만원(75개국x0.97백만원x3회) (국외업무여비)
- 관계기관 업무협의 21백만원(75개국x0.14백만원x2회) (사업추진비)
- 모니터링 용역 200백만원(1지역x50백만원x4회) (일반연구비)

재외공관은 ODA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3조제1항,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3조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모니터링 대상 사업은 재외공관이 관계 부처를 통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입각하여 선정하며, 대상 사업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모니터링 결과는 차년도 무상원조 사업 심의 시에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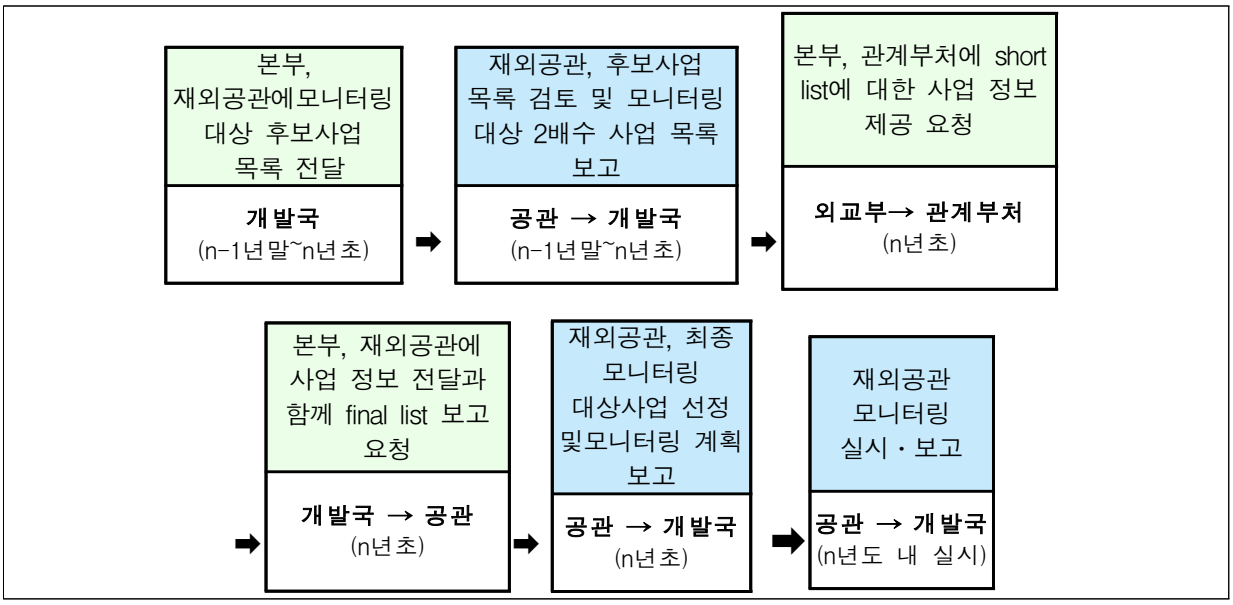
< 재외공관 현지 모니터링 근거 규정 〉

구 분	조 문
국제개발 협력기본법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3조(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또는 외교부가 이행점검을 요청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현지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현지 이행점검은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의 관계기관 및 수혜자 면담, 사업 현장 방문, 재외공관 자체 평가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외교부는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외교부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외교부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사업의 이행 점검을 위해 외교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출장단을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⑥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외교부에 보고한다. ⑦ 외교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 받은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무상원조 사업 중 30% 이상 진행된 계속사업과 종료 7년 이내의 종료사업 중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는데, 본부가 재외공관에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후보사업 목록과 관련 정보를 재외공관에 제공하면, 재외공관에서 최종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됨. ODA 중점협력국은 최소 7개 이상, 기타 협력국은 5개 이상 사업을 선정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사업이 선정되면 재외공관은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재외공관 모니터링 시행 절차 >



2024년에는 302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344개 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 2025년 재외공관 모니터링 수행 현황 >

지역	국가명	수행 사업 수	지역	국가명	수행 사업 수
아시아·태평양	네팔	7	아프리카	우간다	7
	동티모르	5		이집트	8
	라오스	7		잠비아(짐바브웨)	2
	마셜제도(피지)	1		중앙아프리카공화국(카메룬)	1
	말레이시아	2		짐바브웨	1
	몽골	7		차드	1
	미얀마	7		카메룬	3
	방글라데시	7		케냐	5
	베트남	7		코트디부아르	5
	부탄(방글라데시)	5		탄자니아	7
	베트남	7		튀니지	3
	사모아(뉴질랜드)	1	중동	벨라루스	1
	솔로몬제도(PNG)	1		북마케도니아(불가리아)	2

지역	국가명	수행 사업 수	지역	국가명	수행 사업 수
	스리랑카	7	유럽 · CIS	세르비아	5
	아프가니스탄	1		아르메니아(러시아)	1
	인도	1		아제르바이잔	5
	인도네시아	7		요르단	5
	캄보디아	7		우즈베키스탄	7
	태국	5		이라크	4
	투발루(피지)	1		이란	1
	파키스탄	7		조지아	4
	파푸아뉴기니	1		카자흐스탄	3
	피지	3		키르기스스탄	7
	필리핀	7		타지키스탄	8
아프리카	가나	7		투르크메니스탄	1
	가봉	1		튀르키예	1
	나이지리아	5		팔레스타인	5
	남아공	3	중남미	가이아나(트리니다드토바고)	1
	르완다	7		과테말라	5
	마다가스카르	2		니카라과	1
	말라위(짐바브웨)	2		도미니카공화국	5
	모로코	3		멕시코	3
	모리타니아(모로코)	2		볼리비아	7
	모잠비크	5		브라질	2
	민주콩고	5		에콰도르	5
	보츠와나(남아공)	2		엘살바도르	5
	부룬디(르완다)	1		온두라스	5
	세네갈	7		자메이카	3
	수단	1		코스타리카	5
	알제리	3		콜롬비아	8
	앙골라	1		파나마	1
	에티오피아	7	**계**		**344**

현지 ODA 역량강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모니터링 대상 사업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재외공관의 ODA 모니터링 양적 지표를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사업의 수가 후보사업의 12% 수준으로, 전체 후보사업 2,484개 중 302개만이 선정되었음.

< 재외공관 ODA 모니터링 현황 >

(단위: 개, %)

구분	2024			2025		
	후보사업 수(a)	수행 사업 수(b)	b/a	후보사업 수(c)	수행 사업 수(d)	d/c
사업 수	2,484	302	12.2	2,772	344(예정)	12.4

2026년의 경우 2025년 예산에 비하여 관련 예산이 1억 3,500만원 증액되어 보다 내실화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에도 인력과 예산 등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많은 사업에서 모니터링이 수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유상원조에 대한 재외공관의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외공관의 모니터링에 관한 현행법령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원조의 경우 재외공관이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대신,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유상원조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있음.

그러나 유상원조 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 장기·복합형 사업이 많아,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적 연계 등을 위해 재외공관의 현장 관찰과 외교적 지원이 필수적임.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재정적·기술적 관리 기능과 더불어, 재외공관이 현장에서 사업의 추진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다. 인도적지원(ODA)

「인도적지원(ODA)」사업은 해외재난 관련 피해국의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재난구호를 실시하고,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민관파트너십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1.1% 감액된 3,460억원임.

< 2026년도 인도적 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740,111	677,503	331,503	△346,000	△51.1
·해외긴급구호	694,900	628,396	303,156	△325,240	△51.8
·재난대응 시스템강화	8,500	8,500	5,600	△2,900	△34.1
·국제부담금	31,200	33,120	16,560	△16,560	△50.0
·선진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	187	187	187	-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5,300	7,300	6,000	△1,300	△17.8

동 사업은 「해외긴급구호」, 「재난대응 시스템강화」, 「국제부담금」, 「선진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해외긴급구호 내역사업 예산이 세부사업 예산의 9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① 「해외긴급구호」 사업은 긴급재난 및 만성재난에 직·간접적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이고, ② 「재난대응 시스템강화」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사무국·구조팀·의료팀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이며, ③ 「국제부담금」은 UN인도지원조정실(OCHA)와 UN중앙긴급대응기금(CERF)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는 사업임.

□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안과의 불일치

외교부가 제출한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ODA)」 사업의 2026년도 예산은 7,590억~8,960억 규모로 계획되었음.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은 3,315억원으로, 중기재정계획 상 예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인도적 지원 사업 예산의 중기재정계획과의 비교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중기 재정계획	2024~2028	740,111	677,503	896,144	986,084	1,035,388	
	2025~2029		677,503	759,253	819,778	901,756	991,932
2026 예산안		-	-	331,503	-	-	-

(자료: 외교부)

이처럼 중기재정계획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긴급구호」, 「재난대응 시스템강화」, 「국제부담금」 내역사업의 예산안이 대폭 감액된 데에 기인한 것임. 구체적으로, 2025년도 예산에 각각 1억불 규모로 편성된 ACT-A[37] 예산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인도적지원 관련 국제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었음.

37)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 코로나19 대응 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2020.4월 출범한 민관협력체제로 세계보건기구(WHO), Gavi, UNICEF, Unitaid,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

< 해외긴급구호 사업의 2025년 예산과 2026년도 예산안 비교 >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해외긴급구호		628,396백만원	303,156백만원
	ACT-A	138,000백만원 = 1억불 x 1,380원/달러	-
	우크라이나 지원	138,000백만원 = 1억불 x 1,380원/달러	-
	긴급재난·만성위기 등 대응	352,396백만원	303,156백만원
재난대응 시스템강화		8,500백만원	5,600백만원
국제부담금		33,120백만원	16,560백만원
	OCHA 기여금	8,280백만원 = 600만불 x 1,380원/달러	1,200만불 x 1,380원/달러
	CERF 기여금	24,840백만원 = 1,800만불 x 1,380원/달러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ACT-A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감액은 글로벌 보건 협력 및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정상 공약이 종료된 데에 따른 결과이며, OCHA 및 CERF 기여금 감액은 내년도 인도적 지원 예산 및 전체적인 ODA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정상공약의 종료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기구와 수혜국, INCO 등이 우리의 인도적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감액 사유의 합리성 및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과의 과도한 괴리 문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글로벌 보건기구 지원 예산 일원화 필요

글로벌 보건기구에 관한 지원은 ①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글로벌 질병퇴치기금」 사업 ② 일반회계의 「인도적 지원」 사업 ③ 일반회계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을 통하여 실시되어 왔음. 지원 대상 국제기

구는 UNITAID, GAVI, Global Fund, CEPI, GPEI 등임.

2025년 1월 1일부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를 통하여서만 지원하게 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인도적 지원」 사업 내에 4,500만불(약 621억원),「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내에 4,000만불(552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인도적 지원」의 재난지원 예산은 본래 긴급재난과 만성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2022년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2022.5.12.) 계기로 우리나라가 ACT-A에 3년간 3억불 기여 공약을 함에 따라 동 사업에서 ACT-A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어 왔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ACT-A는 종료되었으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글로벌 공중 보건위기 대응·강화' 목적으로 4,500만불이 편성되었음.

< 글로벌 보건기구 지원 현황 >

<table>
<tr><th></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
예산</th><th>2026
예산안</th></tr>
<tr><td>기금 지원(백만원)</td><td>48,682</td><td>23,270</td><td>74,400</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일반회계(인도적 지원)</td><td rowspan="2">-</td><td>1억불</td><td>1억불</td><td>1억불</td><td rowspan="2">4,500만불</td></tr>
<tr><td colspan="3">(ACT-A)</td></tr>
<tr><td>일반회계(백만원)
(국제기구 사업분담금)</td><td>-</td><td>100,000</td><td>-</td><td>48,151</td><td>55,200</td></tr>
</table>

주: 2022~2024년은 결산, 2025년은 예산, 2026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외교부)

글로벌 보건기구로의 상세 지원 내역을 보면, 3개의 사업에서 Gavi, Global Fund, UNICEF, Unitaid, CEPI 등 동일한 기구에 대하여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음.

동일한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예산이 별개의 사업에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원 규모 파악이나 성과 관리의 어려움, 국제기구와의 협의 창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2022~2025 글로벌 보건기구 지원 내역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인도적지원 (ODA) (해외긴급구호) -일반회계	-	(ACT-A 연간 1억불) ○ Gavi 7,000만불 ○ UNICEF 2,000만불 ○ Unitaid 1,000만불	○ Gavi 5,000만불 ○ UNICEF 3,000만불 ○ Unitaid 1,700만불 ○ WHO 300만불	○ Gavi 5,000만불 ○ UNICEF 2,000만불 ○ Unitaid 1,500만불 ○ CEPI 1,000만불 ○ WHO 300만불 ○ MMV 100만불 ○ Stop-TB 100만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글로벌 보건기여) -일반회계	-	○ 글로벌펀드 5,000만불 ○ CEPI 2,400만불 ○ GPEI 350만불	-	○ 글로벌펀드 2,500만불 ○ CEPI 889만불 ○ GPEI 100만불
글로벌 (국제질병 퇴치사업) -질병퇴치 기금(폐지)	○ Gavi 1,032만불 ○ 글로벌펀드 824만불 ○ Unitaid 1,000만불 ○ CEPI 600만불	○ Gavi 498만불 ○ 글로벌펀드 800만불 ○ Unitaid 500만불	○ Gavi 118만불 ○ 글로벌펀드 2,500만불 ○ Unitaid 469만불 ○ CEPI 1,800만불 ○ GPEI 273만불	-
합계	질퇴기금 3,456만불	해외긴급구호 1억불 글로벌 보건기여 7,750만불 질퇴기금 1,798만불	해외긴급구호1억불 질퇴기금 5,160만불	해외긴급구호 1억불 글로벌 보건기여 3,489만불

(자료: 외교부)

따라서 2025년까지는 'ACT-A'라는 특수 소요에 따라 「인도적 지원」 사업에 글로벌 보건기구 지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글로벌 보건기구 지원 관련 사항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으로 편성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9. 국제법적 대응 강화

가. 프로그램 개요

「국제법적 대응 강화」 프로그램은 국제규범 수립, 국제법 법전화 등 국제규범질서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해양·남극·항공 관련 국제법적 대응 지속·강화를 통해 국제법 발전 및 국제규범질서 형성에 기여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국제법적 대응 강화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500] 국제법적 대응 강화			5,993	6,673	6,310	6,523	6,523	6,774
	[2531] 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		5,993	6,673	6,310	6,523	6,523	6,774
		[401]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5,993	6,673	6,310	6,523	6,523	6,774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65억 2,300만원) 대비 2억 5,100만원(3.8%)이 증액된 67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액 사유는 국제법률기구 진출 관련 내내역사업 신설로서, 향후 우리 인사의 국제법률기구 및 국제재판소 진출 확대를 위해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예산이 전년도 대비 2억 4,000만원 증액되었음.

나.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사업은 독도 관련 제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여 우리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국제법 관련 이슈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국격을 제고하며, 해양 및 남극 활동, 한일청구권 협정 대응, 한반도 주변수역 관리, 국제법률기구 진출, 조약 체결 지원 및 검독 강화를 함께 추진하려는 것임.

< 2026년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합 계	**6,310**	**6,523**	**6,774**	**251**	**3.8**
영토주권 수호	4,554	5,142	5,144	2	0.04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1,039	978	1,218	240	24.5
조약 체결 지원 및 검독 강화	716	403	412	9	2.2

□ 국제법률기구 진출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신규 추진되는 '국제법률기구 진출' 사업은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우리나라 법률전문가의 국제법 관련 기구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026년도 관련 예산안은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제법률기구 진출 사업 소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 (내내역사업) 국제법률기구 진출	240	210
- 국외업무여비(220-02)	210	170
- 사업추진비(240-01)	30	30
- 일반수용비(210-01)	-	10

동 사업은 분야별 국제법률기구 및 국제재판소에 우리 인사의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법적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을 확대하여 국제사회 내에서의 외교적 기반과 국익 반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외교부는 2026년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38] 재판관 선거 및 국제해저기구(ISA)[39] 이사국 진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7년도에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선거 및 국제해저기구(ISA) 법률기술위원회(LTC) 위원 선거를 위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임.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권위 있는 유엔 기구·기관 중 우리나라가 아직 진출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기관으로, 재판관의 배출은 국제적 위상

38)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45년 설립된 UN의 핵심 사법기관으로 UN 회원국 193개국이 당사국이며, 국가 간 법적 분쟁 해결(쟁송 사건) 및 유엔 기관과 여타 국제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자문 제공(권고적 의견) 역할을 수행함. 재판소는 총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이 관행적으로 각 1석을 확보하고, 나머지 의석은 지역별 안배 원칙에 따라 배분됨((임기 9년, 연임 가능, 3년마다 유엔총회·안보리에서 5명씩 선출).

39) 국제해저기구(ISA)는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심해저 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칙·규정·절차의 제정 및 채택을 담당함. ISA의 총회는 회원국 전체로 구성되며, 이사회 구성 시 총 5개 그룹(A~E)의 국가 명단을 작성하여 각 지역과 이해관계를 대표하도록 함(각 그룹별 회원국들은 공석 수만큼의 후보국을 지명하고, 총회가 이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이사국 확정).

제고와 국익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있음. 또한, 국제해저기구(ISA)의 이사회는 동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핵심기구로, 우리나라는 현재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며 2026년 임기 만료에 맞추어 연임을 추진함으로써 투표권 행사를 통한 국익 증대와 해양자원 관련 국제정책 참여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액은 기존에 외교부가 동일 세부사업에서 추진해 온 지지교섭 사업의 예산 수준을 참고하여 산정한 것으로, 2023년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 지지교섭 사업,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 지지교섭 사업 등의 전례를 고려하여 편성한 것임.

< 국제재판소 및 국제법기구 진출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임차료	총계
2023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 지지교섭	218	38	44	-	-	300
2023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 지지교섭	147	26	44	23	1	240
2022년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위원 선거 지지교섭	74	19	4	16	-	113
2021년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선거 지지교섭	117	9	-	-	-	126

(자료: 외교부)

동 사업은 과거 국제재판소 선거 교섭의 실질적 성과[40]와 국제법적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과거와 같은 단

40) 2023년 ITLOS 재판관 당선(1996년 ITLOS 설립 이래 3회 연속 우리나라 국적 재판관 진출), 2023년 ICC 재판관 당선(2003년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우리나라 국적 재판관 진출), 2021년 ILC 위원 당선(우리나라 3번째 위원 배출)

순한 선거 교섭 지원 성격을 넘어설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단기적 교섭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 구조에서 벗어나, 진출 인사의 역할과 활동 성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제법·외교정책과의 연계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국제법률기구 진출은 국가 위상과 외교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과제인 만큼, 국회(의장단·상임위원회·의원친선협회 등)의 의원외교 및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전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1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가. 프로그램 개요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프로그램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산하며 외국과의 우호친선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24억 7,500만원) 대비 30억 8,600만원(13.7%) 증액된 255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631]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6,111	23,110	20,812	22,475	22,475	25,561
	[2631] 공공문화외교 강화		26,111	23,110	20,812	22,475	22,475	25,561
		[401]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2,517	2,693	2,254	2,423	2,423	2,488
		[402]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5,272	2,470	2,338	2,346	2,346	1,789
		[403] 공공외교 역량강화	14,189	16,103	14,429	15,754	15,754	18,857
		[404] 국민외교추진 기반구축	614	-	-	-	-	-
		[405] 디지털 공공외교	3,519	1,844	1,791	1,952	1,952	2,427

먼저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지식·정책을 활용한 재외공관 중심의 맞춤형 공공외교,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증진 및 국

민들의 공공외교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공공외교 역량강화」 예산이 31억 300만원 증액되었음.

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 「KOREAZ」 운영 및 전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참여형·쌍방향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전개를 통해, 전세계인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K-이니셔티브 실현에 기여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예산이 4억 7,500만원 증액되었고,

유네스코를 통한 문화 · 교육·과학 분야의 국제 협력체제 구축 및 재외공관을 예술품 전시 등 국가브랜드 거점으로 활용하는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예산이 6,500만원 증액되었음.

주된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외교관계 수립 매 10주년 · 25주년 등 양국간 수교 및 특별한 계기를 맞이하는 국가들과 종합적인 외교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예산이 5억 5,700만원 감액되었음.

나. 공공외교 역량강화

「공공외교 역량강화」사업은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정책·지식 분야별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며 우리 국가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지식·정책 등 3개 분야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해외 여론 주도층과 일반 대중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범부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공외교 전략과 수행체제를 수립하며, 해외 친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외교 인프라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일반국민·지자체·재외동포·전문가그룹·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공공외교 참여 지원,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등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공공외교 역량을 개발하며 차세대 공공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민 공공외교」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57억 5,400만원) 대비 31억 300만원(19.7%) 증액된 188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공공외교 역량강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합 계	**16,103**	**-**	**16,103**	**14,429**	**15,754**	**18,857**	**3,103**	**19.7**
1.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13,521	-	13,521	12,109	12,285	13,809	1,524	12.4
2.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1,353	-	1,353	1,200	1,134	1,103	△31	△2.7
3. 국민 공공외교	1,229	-	1,229	1,121	2,335	3,945	1,610	69.0

「공공외교 역량강화」각 내역사업별 주요사업 최근 3년간 예산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예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내역 사업	구분		예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문화 공공외교	한국주간	6,133	5,598	6,618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 대화 (구 K-business포럼)	420	300	300
	지식 공공외교	외국교과서 개선을 통한 차세대 대상 한국 지식 확산	487	438	438
		퀴즈온코리아	424	382	486
	정책 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 기반 구축	3,995	3,611	4,011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	2,062	1,956	1,956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통합적 공공외교 매커니즘 운영		240	248	248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구 정책공공외교 협의체 운영)		640	460	455
	친한 외국인 기반구축		473	426	400
국민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1,162	1,935	2,845

공공외교(舊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외교부2030자문단 운영[41]	67	(이관)	-
	우호증진국 대상 공공외교 미래네트워크 사업[42]	-	400	400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신규)	-	-	**700**
합 계		16,103	15,754	18,857

(자료 : 외교부)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신설에 대한 타당성·중복성 및 기존 사업(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과의 통합 필요성 검토

외교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100명을 파견하는 것과 별도로 지방청년인재 50명을 선발하여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관련 예산으로 9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41) '외교부 2030자문단 운영'사업은 외교부 조직 개편(2024.5.)에 따라 2025년부터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이관됨. 청년들이 외교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활동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42) 2025년도 신규 사업인 '우호증진국 대상 공공외교 미래네트워크 사업'은 공공문화외교국과 지역국 간 협의를 통해 우호증진 대상국을 매년 선정하고, 한국과 상대국 청년 각 20명을 「청년 드림 서포터즈」로 선발하여 양국 협력 정책 제안, 대국민 홍보 등 상호 우호 증진 활동을 통해 미래지향적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2025년 예산과 2026년 예산안 비교>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국민공공외교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1,935	2,845 (910 증)
		○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 1,935 ▪파견비용 1,820 - 체재비 1,620 (270만*6개월*100명) - 항공료 등 국외여비 200 (2백만원*100명) ▪파견 준비 15 (오리엔테이션, 네트워킹 등) ▪선발 및 관리용역 등 100	○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 1,935 (좌 동)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 910** ▪파견비용 910 - 체재비 810 (270만*6개월*50명) - 항공료 등 국외여비 100 (2백만원*50명)

(자료 : 외교부)

동 사업은 지방 청년에게 외교업무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교류·협력 역량을 배양하고, 재외공관 내 지자체 민생외교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는 목적을 지님. 특히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가 설치된 6개국[43] 등 지자체 국제교류 요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6개월간 50명을 파견하는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음. 예산 항목은 체재비 및 항공료 등 국외여비로 구성되며, 1인당 지원단가는 기존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과 동일함.

43) 호주,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또한, 동 사업은 본래 「행정효율성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7031-403)」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지방민생외교 네트워크 구축」의 하위 내내역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공공문화외교국 소관 사업인 「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의 하위사업으로 편성되었음.

한편, 외교부는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을 통해 매년 약 100명의 실습생을 재외공관에 파견하고 있음. 두 사업은 모두 청년 인재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외교 실무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업무범위·선발방식·운영부서 등이 상이함.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은 비수도권 청년을 중심으로 지자체 외교·국제협력 현장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방점을 두는 반면,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은 공공외교 및 국제업무 전반에 관심있는 전국 단위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서류심사 시 비수도권 인재에게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수준임.

<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VS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비교 >

구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13년~)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설)
사업목적	· 청년들에게 해외 공공외교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지방 청년들에게 지자체 외교활동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자체 외교활동 활성화 · 지방청년의 지역인재로의 성장을 도와 지역 소멸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업무범위	·문화 공공외교(▲한국주간 ▲K-Pop World Festival, ▲공관장배 태권도 대회 등) ·지식 공공외교(▲퀴즈온코리아, ▲한국어·한국학 사업 등) ·정책 공공외교(▲공공외교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지원 등) ·디지털 공공외교 (▲공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등)	·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 의전 및 행사지원 · 지자체 국제교류 협조 업무(사증발급, 홍보, 간담회 등) 지원 · 지방경제 활성화 사례 조사 : 실습기간 내 지방경제·지방외교 관련 분야 보고서 또는 정책 제언 1건 이상 제출→지자체와 교차 검토하여 정책 반영 등에 참고
선발인원	· 100명 내외	· 50명 내외(신규)
활동기간	파견일로부터 6개월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 · 19세 이상 **34세** 이하 · 비자취득 및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자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는 자(졸업자 포함) · 비자취득 및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파견대상 공관	· 재외공관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 (기본)재외공관 수요조사 · (우선 순위) 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 소재 공관(6개), 지자체 교류 업무 다발 국가
선발기준	< 서류 > · 어학 성적 · **가점부여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기회균등대상자, 사회다양성 대상자**(비수도권인재 포함)** · 공관 요청사항(컴퓨터 활용 능력, 현지어 구사 등), 자기소개서 등 고려 < 면접 > · 공공외교 이해도, 인성 및 기초소양, 업무능력, 어학 능력, 현지 적응력 등 평가	**지자체별 추천 인재 우선 선발(안)** ㅇ 지자체별 지역 인재 양성 사업(RISE, 무역인재 양성 등)과 연계하여 **우수수료자 대상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추진 - 참여·수료 청년 중 성적 우수자 등 추천 (14개 지자체별 3~5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신 인재 기준 등 공통기준은 외교부에서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마련
지원내역	왕복항공료, 체재비,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의료지원비,'국·영문 수료증'(장관명의)	(좌동)

(자료 : 외교부)

외교부는 두 사업이 파견 목적, 업무 범위, 선발 방식 등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함. 즉,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사업이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전 세계 공관에 청년 인재를 파견하는 반면, 지방청년 인재 파견사업은 '지방외교 활성화 및 지자체 국제교류 지원'을 중점 목표로 하여 지방 청년이 지자체 관련 외교활동 현장을 체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선발 시 1차 서류심사 단계에서 비수도권 인재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균형 차원의 보완 조치일 뿐, 지원 자격을 지역으로 한정하지는 않음. 반면 지방청년인재 파견 사업은 지원 대상을 지방 청년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방 인재의 해외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별도 취지를 가진다고 강조함. 따라서 두 사업은 대상과 목적, 운영체계 측면에서 구분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구조를 비교해보면, 재외공관의 업무 특성상 공공외교·정무·경제·영사 등 기능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공공외교 외의 분야'만을 실습 대상으로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비효율적임.

따라서 외교부가 제시한 '공공외교를 제외한 여타 분야 경험 제공'이라는 구분은 실질적인 차별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됨.

또한 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동일한 재외공관 내에 '공공외교 실습원'과 '지방청년 실습생'이 병존하게 되어, 파견인력의 관리·지원 업무가

이중화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행정과 조직 운영 전반에서 통합적 사고와 업무 간 유기적 연계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실습기회를 사업별로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식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지방청년인재라 해서 지역외교 분야로만 한정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 기회의 폭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임. 오히려 관련 실습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다양한 외교분야(공공외교, 경제외교, 지역외교 등)를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자 입장에서도, 행정효율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결국 지방청년에게 외교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외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이러한 이원적 운영은 단순히 관리상의 비효율을 넘어, 실습제도의 목적 자체를 분절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신규사업, 기존 사업과의 연계 등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외교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신규사업으로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음.

<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2026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내역 사업	내내역 사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국민 공공 외교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	**700 (700 순증)**	
			○ 국민 공공외교 포럼 개최 2회	200
			○ 공모형 국민 공공외교 사업 2회	300
			○ 국민 공공외교 온라인 플랫폼 구축	200

‘국민 공공외교 포럼’은 K-이니셔티브 실현과 K-컬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국민의 외교 참여를 촉진하는 신규사업으로, 2026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억원이 편성됨. 국내외 전문가, NGO,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공공외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한 지역 순회 및 (신설될) 국민 공공외교 플랫폼 연계를 통해 참여와 성과 확산을 도모할 계획임.

‘공모형 국민 공공외교 사업’은 국민이 직접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026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억원이 편성됨. 글로벌 의제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행사·캠페인·공동연구 등을 공모·시행하고, 결과를 (신설될) 국민 공공외교 플랫폼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를 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외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국민 공공외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외교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26~2027년 개념 설계 및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억원이 편성되었음. 가칭 ‘위디플(Wediplomacy) 플

랫폼'을 통해 공공외교 정보 제공, 사업 관리 및 민관 협업 지원, 역량 강화 콘텐츠 제공, 소통 기능 등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공공외교 참여 기반을 온라인상에 구축하려는 것임.

한편, 외교부는 「공공외교법」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의 공공외교 기반 강화를 위해 세부사업 「공공외교 역량강화」의 내역사업으로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하위 내역사업으로 '통합적 공공외교 매커니즘 운영'을 시행 중임.

이 사업에는 공공외교 기본·시행계획 수립, 공공외교위원회 개최,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공공외교 관계기관 협의, 정책연구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중앙정부/지자체/재외공관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44]'과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은 민·관의 자발적 공공외교 활동을 발굴·시상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2026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내역 사업	내내역 사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통합적 공공외교 매커니즘 운영 中	○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140	○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중앙정부/지자체/재외공관 공공외교 우수 사례 발굴 (1회 × 40백만원)	40	(좌 동)
		-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1회 × 100백만원)	100	

(자료 : 외교부)

44) 「공공외교법」에 따라, 외교부는 2019년부터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 지자체, 재외공관 등 부문별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대외홍보와 기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와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의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지자체/재외공관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굴’ 최근 3년간 집행내역 >

연도	내용	금액(원)
2022	심사위원 사례비	1,200,000
	우수사례 동영상 제작	20,000,000
2023	심사위원 사례비	1,600,000
	우수사례 동영상 제작	20,000,000
2024	상장 및 위촉장 인쇄	399,300
	동영상 영문 감수	1,500,000
	심사위원 사례비	1,200,000
	우수사례 사례집 제작	15,000,000
2025	(4분기 집행 예정)	

(자료 : 외교부)

<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45] 최근 3년간 집행내역 >

연도	내용	금액(원)
2022	해당 없음(2023년부터 실시)	-
2023	공모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사례비	750,000
	공모전 용역계약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30,000
	공모전 용역비	70,906,000
	공모전 광고용역	23,622,300
	합계	**95,308,300**
2024	공모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사례비	1,000,000
	용역 제안서 평가회의 다과 및 음료 구입	314,930
	공모전 용역계약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30,000
	공모전 용역비	72,534,000
	공모전 광고용역	30,308,910
	합계	**104,187,840**

45) 민간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외교 사례를 접수, 우수작을 선정,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공공외교 주체의 외연 확장 및 시너지 효과 창출/ 2회차부터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으로 명칭 변경

2025	공모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사례비	1,000,000
	공모전 용역계약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30,000
	공모전 광고용역	15,192,000
	공모전 용역비	4분기 집행 예정

(자료 : 외교부)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은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확산함으로써 민간 공공외교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공모형 국민 공공외교 사업’과 국민을 주체로 한 공공외교 활동을 공모·선정·홍보하는 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외교부는 신규 편성된 사업은 국민들이 공공외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을 참여시키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국민들의 공공외교 활동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으므로,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과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점과 한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사업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민공공외교 온라인 플랫폼(가칭 '위디플') 구축, 기존 인프라 개선·활용 방안 검토 필요

외교부는 국민의 직접 참여형 공공외교 기반 조성과 관련 정보·사업의 통합 관리를 위해 '국민공공외교 온라인 플랫폼(가칭 '위디플', Wediplomacy Platform)' 구축비용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2억원을 편성하였음.

동 플랫폼은 국가·지역별 공공외교 정보 제공(지도형 인터페이스), 국민공공외교 사업 목록 및 진행과정 확인(공모사업 대시보드), 민관 협업 창구 운영, 역량강화 콘텐츠 제공 등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라고 함.

한편, 최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공공외교를 추진하면서, 관련 정보와 자원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국민의 접근성과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와 함께, 기관 단위로 개별 플랫폼을 중복 구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이용자 분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공공외교는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분야이므로, 분절된 다수 플랫폼보다 통합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이 효율성·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외교부가 신규 구축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시스템[46]과의 목적·이용대상·성격 차이로 통합이 어려운 경우, 신규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46) 기존 공공외교 관련 플랫폼

기존에 구축한 사이트의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경우, 동일 플랫폼 내에서 '수요기관 관리자용'과 '업체·일반회원용' 인터페이스를 분리·병존시키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플랫폼 역시 이러한 구조를 벤치마킹하여,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능을 추가·확장하고 '기관 전용 포털'과 '대국민 참여 포털'을 분리·연동하는 구조로 설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를 통해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고, 이용자 분산을 방지하며,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플랫폼 개발·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디지털 공공외교

「디지털 공공외교」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대중과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K-이니셔티브 실현 등 주요 외교 방향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세부사업은 KOREAZ 채널 중심의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운영'과 재외공관 협업형 캠페인인 '디지

운영주체	시스템명	내용	비고
외교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정부기관 간 공공외교 관련 정보 공유	2020년 구축 일반인 접속 불가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	국민 대상 공공외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2021년 구축 대국민용

털 글로벌 캠페인 공공외교'로 구성됨.

KOREAZ 채널에 소개되는 다양한 영문 콘텐츠 및 전 재외공관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9억 5,200만원) 대비 4억 7,500만원(24.3%) 증액된 24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디지털 공공외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A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합 계	**1,844**	**1,844**	**1,791**	**1,952**	**2,427**	**475**	**24.3**
1.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운영*	1,239	1,239	1,200	1,439	1,737	298	20.7
2.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공공외교	605	605	591	513	690	177	34.5

* (구)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 「KOREAZ」 채널의 구독자 증가세 지속 및 콘텐츠 생산성 강화 필요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운영」사업은 외교부의 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인 「KOREAZ」[47] 운영을 통해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정책·지식·문화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확산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작년 대비 2억 9,800만원 증액된 17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증액 사유는 콘텐츠 품질 향상과 물가상승 등에 따른 단가상승, 4개 플랫폼 특성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의 주기적 생산 필요, 그리고 중·러 등 SNS 환경이 다른 주요국 대상 현지 맞춤형 콘텐츠 제작 확대 필요에 따른 것임.

동 사업 수행을 위해 외교부는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임.

<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운영* 전문용역업체[48]계약 현황 >

연도	계약업체명	수행인력
2021	컨소시움(피알원, 씨제이이엔엠, 니트커뮤니케이션즈) ㈜문화방송 ㈜인터즈 ㈜디노마드 연세대학교	38명
2022	㈜디지틀조선일보 ㈜한국교육방송공사 ㈜인터즈 ㈜더에스엠씨그룹	34명

47) '21년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4개 플랫폼에서 운영 중이며, '한국에 대한 모든 것(All about Korea A to Z)'을 의미함. 2025.8.21.기준 구독자 수는 100.1만임.

48)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운영 일반용역(210-14)은 2023년까지 프로젝트별로 5~6개 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예산 대폭 삭감과 채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1개 업체와 단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임.

	㈜매일방송 ㈜브랜뉴뮤직	
2023	㈜디지틀조선일보 ㈜제이레퍼토리 ㈜해긴 ㈜매일방송 ㈜클레온	40명
2024	㈜문화방송	12명
2025	㈜문화방송	12명

*(구)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자료 : 외교부)

외교부는 공공외교의 주요 홍보 창구로서 영문 SNS 채널 「KOREAZ」를 운영하고 있으며, 플랫폼별 구독자 수와 콘텐츠 제작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 「KOREAZ」 운영 현황 >

채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9월말 기준	
	구독자수	콘텐츠수	구독자수	콘텐츠수	구독자수	콘텐츠수	구독자수	콘텐츠수	구독자수	콘텐츠수
유튜브	19,244	248	47,085	306	136,773	312	290,119	183	507,873	220
페이스북	215,919	475	302,828	584	352,173	368	394,364	245	499,642	257
인스타그램	17,126	458	33,401	561	52,813	334	61,031	200	71,709	263
X	14,442	612	19,802	542	28,228	366	23,951	233	23,132	257

(자료 : 외교부)

이처럼 구독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채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콘텐츠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

적으로 확대하여 구독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채널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가. 프로그램 개요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 및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 영사조력 역량강화, 해외위난상황 대비 재외공관 영사조력 제공,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 운영, 각종 매체를 통한 최신 해외안전정보 전달 등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음.

< 2026년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700]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2,955	15,744	12,711	14,679	14,679	14,790
	[2731]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2,468	15,744	12,711	14,679	14,679	14,790
		[401] 재외국민 보호	12,468	15,510	12,117	13,959	13,959	13,920
		[402] 영사서비스 지원	487	234	594	720	720	870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146억 7,900만원) 대비 1억 1,100만원(0.75%) 증액된 147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영사협력원 운영 사업(4억 1,500만원),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사업(3,700만원), 영사서비스 물품(사증업무용 여권판독기)

구매·보급 사업(3억 8,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무자력자 긴급 지원 사업(1억원),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 사업(1억 4,700만원), 재외공관 영사민원 처리 전자결제 수수료 지원 및 확대 사업(2억원) 등이 감액되었음.

나. 재외국민 보호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사업으로, 재외공관의 영사조력 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지원하는 「재외공관 영사조력 역량 강화」 외에 「해외위난상황 대비 역량 강화」,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 운영」, 「영사조력 및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등 총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도 예산안은 전년도(139억 5,900만원) 대비 3,900만원(△0.3%)이 감액된 139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재외국민 보호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합 계	**12,117**	**13,959**	**13,920**	**△39**	**△0.3**
재외공관 영사조력 역량 강화	3,884	4,216	4,407	191	4.5
해외위난상황 대비 역량 강화	1,806	2,546	2,492	△54	△2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 운영	4,500	5,680	5,651	△29	△0.5
영사조력 및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	1,926	1,517	1,370	△147	△9

□ 심리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해외안전 담당인력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재외공관 영사조력 역량 강화」사업 내 내내역사업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본부 및 재외공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심리상담, 온라인 심리진단 수행 및 분석, 영사회의 방문특강, 해외공관 방문 상담을 통한 고위험군 케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2022년부터 재외공관의 해외안전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심리적 소진 예방과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1,500만원(△10%)이 감액된 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22년 2억원 대비 약 32.5%가 감소한 수준임.

< 해외안전 담당인력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해외안전 담당인력 심리상담 지원	200	200	200	150	135

(자료: 외교부)

2024년도 사업 위탁 수행기관의 최종 운영보고서[49]에 따르면, 재외공관 해외안전 담당 직원 상당수가 가족과의 원거리 거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현지 근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갈등, 트라우마성 사건

49) 외교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복지 마음센터 전문기관인 ㈜이지앤웰니스에서 작성함.

경험 후 심리적 후유증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담 수요가 개인을 넘어 가족 단위·조직 단위의 심리케어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트라우마 발현 사고가 발생한 공관의 경우 전 직원이 심리적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현재의 상담 인력 및 방문 횟수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가족 동반 상담 지원, 고위험군 공관 중심의 장기 파견상담 프로그램, 조직단위 집단상담 및 특강 프로그램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상담 지원을 넘어 조직 전체의 심리안전망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외공관 근무 인력이 겪는 업무적·심리적 부담이 심화되고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의 예산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해외안전 담당인력 심리상담 지원사업 실적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문가 심리상담 케어	47명(151회)	56명(212회)	52명(252회)
지역별 영사담당 회의 계기 상담 및 특강 프로그램	49명	116명	44명
고위험군 케어	267명(91회)	155명(69회)	221명(95회)
공관 맞춤형 상담 /강의 프로그램	-	-	74명(10회)

※2025년의 경우, 10월말 기준 52명(202회)에 대해 전문가 심리상담 케어를 시행
(자료: 외교부)

따라서, 외교부는 전문기관이 제시한 종합적 지원방향을 반영하여 사업 범위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외공관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해외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발생 시 외교 인력의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모전 시상금 집행의 비목 적정성 확보 필요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은 「영사조력 및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 사업 내 내내역사업인 '해외안전여행 대국민 홍보'의 세부 추진과제로, 해외여행 중 사건·사고를 경험한 국민의 사례를 공유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취지와 영사조력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음.

동 사업은 외교부·경찰청·소방청이 공동 주관하며, 공모전 홍보, 접수 및 심사, 시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5년도 해당 공모전 예산은 일반용역비 2,200만원으로 배정되어 이 중 약 820만원이 우수작품 시상금으로 집행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안도 2,2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어 시상금 규모 역시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2025년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시상 내역 >

구 분	대상 (1명)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2명)	장려상 (각 2명)
상금 (응모분야) ※총 820만원	200만원 (수기)	100만원(동영상) 100만원(인스타툰) 50만원(수기)	50만원(동영상) 50만원(인스타툰) 25만원(수기)	25만원(동영상) 25만원(인스타툰) 10만원(수기)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상금 또는 격려금은 '포상금(310-03목)' 항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 사업의 시상금은 일반용역비 내에서 지급되고 있어 예산 비목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외교부 또한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포상금 1,000만 원을 별도 편성 요구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외교부는 향후 포상금 항목으로의 전환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금전 포상 외에도 항공권 또는 부상 지급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이와 같이 공모전의 시상금이 일반용역비로 집행되는 것은 회계 처리의 명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고, 공모전의 본래 목적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해외안전 인식 제고에 있는 만큼, 공익적 행위에 대한 포상 성격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포상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포상금 항목 신설을 통해 예산 비목을 정비하고, 금전 포상 외에도 수상작의 홍보 활용, 체험공유 프로그램 연계 등 비재정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2. 여권업무 선진화

가. 프로그램 개요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은 우리 여권의 품질 제고 및 보안성 강화로 국제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대국민 여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1,238억 9,300만원) 대비 151억 8,400만원(12.3%)이 증액된 1,390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여권 예상발급량('25년 398만권→'26년 438만권)에 따른 여권 제조 및 발급비용 증가(151억 3,000만원), 실무관 인건비 증가(5,400만원)를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151억 8,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900] 여권업무 선진화			109,482	141,030	158,899	123,893	123,893	139,077
	[1931]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09,482	141,030	158,899	123,893	123,893	139,077
		[651]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09,482	141,030	158,899	123,893	123,893	139,077

나.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은 여권제조·발급업무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50]) 운영, 국내 24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16개 출장소 및 국외 187개 재외공관 여권민원실 운영, 여권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1,238억 9,300만원) 대비 151억 8,400만원(12.3%)이 증액된 1,390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합계	**158,899**	**123,893**	**123,893**	**139,077**	**15,184**	**12.3**
여권 제조 및 발급	150,639	115,549	115,549	130,679	15,130	13.1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	7,478	7,612	7,612	7,666	54	0.7
전자여권 품질 및 서비스 개선	782	732	732	732	-	-

□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설 예산 증액 검토 필요

외교부는 대국민 여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내 24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16개 출장소 및 국외 187개 재외공관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역사업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0.7% 증액된 76억 6,600만원임.

50)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Passport Information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ystem)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액
실무관 인건비	731	785	54
대행기관 국고보조	5,610	5,610	-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운영	559	559	-
대행기관 출장소 설치	23	23	-
국내외 여권업무 행정지원	689	689	-
합 계	**7,612**	**7,666**	**54**

(자료: 외교부)

김해공항은 영남권의 주요 관문공항으로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김해공항 내 긴급여권 발급 등을 위한 여권민원센터 신설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전국 주요 공항 이용객 수*(국제선 기준)>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인천공항	11,955,756	3,189,589	17,823,783	55,763,768	70,669,246	48,855,539
김해공항	**1,153,504**	**20,142**	**1,161,872**	**6,521,513**	**9,005,803**	**6,718,916**
김포공항	543,863	14,890	375,676	3,215,907	3,937,089	2,865,349
제주공항	282,798	4,781	93,912	1,195,005	2,447,610	2,008,895
청주공항	48,111	0	2,550	522,033	1,468,685	1,131,934
대구공항	229,061	6,244	92,680	1,115,003	1,406,122	990,693
양양공항	14,718	0	28,507	55,587	17,910	10,060
무안공항	87,884	0	29,394	233,337	356,403	0

* 출처: 한국공항·인천공항공사 항공통계
(자료: 외교부)

인천공항의 경우 여권 분실·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여권민원센터[51]를 통해 신속하게 긴급여권 등을 발급할 수 있는 반면, 김해공항에는 여권민원센터가 부재하여 민원인이 긴급여권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제선 청사로부터 각각 18km, 7.6km 떨어진 부산광역시청이나 강서구청을 방문해야 함. 게다가 이들 기관은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아, 여행객이 집중되는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는 사실상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실정임.

<주요 발급장소별 긴급여권 발급량 연도별 추이 >

(단위 : 건)

순위	발급장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1	인천공항	3,331	382	3,728	13,339	14,738	9,818
2	**부산광역시청**	**15**	**14**	**352**	**2,129**	**1,478**	**1,004**
3	인천광역시청	1	12	225	2,084	1,520	822
4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0**	**9**	**186**	**1,429**	**1,317**	**858**
5	대구광역시청	5	16	200	1,629	1,019	650

(자료: 외교부)

긴급여권 발급 사유는 주로 기간만료, 분실·도난, 미소지 등으로, 공항 이용객 수 증가에 비례하여 긴급여권 발급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부산광역시청과 강서구청의 긴급여권 발급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최근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방

51)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 현황

구분	위치	근무인원	업무	업무시간
제1터미널	3층 G체크인카운터 근처	무기계약직 4인	긴급여권 발급,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 여권 습득 및 분실신고	9시~18시 (토·일 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제2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무기계약직 5인		9시~18시 (연중무휴)

거주자들의 긴급여권 관련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설은 영남권 공항 이용객의 긴급여권 발급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말·공휴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 효과가 기대되므로, 외교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의 증액 편성[52]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52) 외교부는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설을 위해 3억 7,300만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산출근거)
- 공무직 4인 인건비 1억 7,700만원(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 임차료 7,000만원
- 자산취득비 6,000만원
- 운영비 3,000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3,600만원
※ 참고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은 총 6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13. 경제외교

가. 프로그램 개요

「경제외교」 프로그램은 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강화하고, 다자경제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 홍보 및 정책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양자 경제외교 진흥 및 해외진출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이익 제고와 안정적인 경제외교 활동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125억 6,600만원) 대비 993억 7,200만원이 감액(88.3%)된 131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경제외교 프로그램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000] 경제외교			10,463	12,860	11,171	112,566	129,841	13,194
	[3031] 다자 경제외교 강화		1,612	4,562	3,875	103,257	120,532	2,976
		[401]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1,166	1,395	1,293	1,557	1,557	1,147
		[402]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446	707	518	870	870	1,507
		[403] 2025 APEC 의장국	-	2,460	2,064	100,830	118,105	322
	[3032] 지역 경제외교 강화		8,851	8,298	7,296	9,309	9,309	10,218
		[401]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6,763	5,381	4,515	6,549	6,549	6,982
		[402]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2,088	2,917	2,781	2,760	2,760	3,236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사업 중 「주오이시디대표부 사업」 예산이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7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사업 중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 예산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5억 8,100만원,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사업 중 「미국 경제동향대응」 사업 예산이 미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모니터링과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한 대미 아웃리치 강화를 위해 4억 7,600만원 증액되었음.

한편,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사업 중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사업 예산이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실 해체 및 APEC 성과물 관련 일반용역비 및 정책연구비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6,200만원 감액되었고, 「2025 APEC 의장국」 사업 예산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행사 종료에 따라 1,005억 800만원 감액되었음.

나.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양자 경제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경제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65억 4,900만원) 대비 4억 3,300만원(6.6%)이 증액된 69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예산안[53]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합계	**4,515**	**6,549**	**6,549**	**6,982**	**433**	**6.61**
유럽경제동향대응	576	524	524	524	0	0.00
경제협력사절단 파견	18	12	12	8	△4	△33.33
재외공관 법률자문 서비스	437	411	411	380	△31	△7.54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450	509	509	1,090	581	114.15
전략국가와의 경제외교강화	112	204	204	204	0	0.00
중국 경제동향대응	292	346	346	346	0	0.00
동아시아 지역 공급망회복력 강화 협력	132	154	154	104	△50	△32.47
수입규제 대응체제	354	375	372	365	△10	△2.67
북미 경제외교 강화	273.5	333	333	318	△15	△4.50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	1,870	1,985	1,988	1,985	0	0.00
공관 에너지협력 외교활동	-	1,398	1,398	1,310	△88	△6.29
에너지 및 광물분야 국제협력 강화	-	297	298	348	51	17.17

53) 2025년도 신규 편성된 내역사업 중 '공관 에너지협력 외교활동' 및 '에너지 및 광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사업은 외교부 조직개편(`24.5.28.)으로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에너지과학외교과가 폐지되고 양자경제외교국 경제안보외교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에너지과학외교과 내역사업 중 일부 내내역사업을 양자경제외교국으로 이관한 것이 반영된 사업임.

□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의 우회적 증액 지양 필요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은 중국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중국 지방정부와 정례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양국 간 우호 친선 및 경제 협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억 8,100만원(114.15%)이 증액된 10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509**	**509**	**1,090**
-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351	351 =35.1백만원x10개공관	1,090 =109백만원x10개공관
- 한중 우호주간 행사	158	158 =79백만원x2회	-
○ **비목합계**	**509**	**509**	**1,090**
- 일용임금(110-04)	6	6	-
- 일반수용비(210-01)	158	158	302.5
- 임차료(210-07)	133	133	304
- 국외업무여비(220-02)	106	106	172
- 업무추진비(240-01)	106	106	311.5

(자료: 외교부)

동 내역사업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과 '한중 우호주간 행사' 두 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 외교부는 2026년도에 '한중 우호주간 행

사’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7억 3,900만원(210.5%) 증액하여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외교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와 한중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우호주간 행사가 중국 정부 결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지 여건을 고려해, 향후 재개시 ‘내수시장’ 항목에서 집행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런데, 세부사업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은 2022년 및 2023년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54]에서 내역사업 간 중복성이 지적되어 예산이 감액된 이력이 있음.

즉,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한중 기업교류 강화」와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나아가 타 세부사업의 내역사업[55]과의 중복성도 지적되어, 2024년도에 「한중 기업교류 강화」사업을 폐지한 바 있음.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고 하나, 동일한 대상 공관에 공관별 예산액이 3배 가까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감액사업을 우회적으로 증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54)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2.10., 148면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3.8. 137면
55)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3032-402)-재외공관 기업지원 활동강화

다.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사업은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및 우리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 및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27억 6,000만원) 대비 4억 7,600만원(17.25%)이 증액된 32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합계	**2,781**	**2,760**	**2,760**	**3,236**	**476**	**17.25**
재외공관 기업지원활동 강화	1,497	1,500	1,500	1,517	17	1.13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지원	271	309	309	292	△17	△5.50
미국 경제동향 대응	1,013	951	951	1,427	476	50.05

□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한 예산 운용의 실효성 강화 필요

「미국 경제동향 대응」 사업은 미국 내 경제안보 관련 입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문회사를 통해 미국의 경제입법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통해 한국인 전문직 인력의 해외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9억

5,100만원) 대비 4억 7,600만원(50.05%)이 증액된 14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정부는 2012년 이래 우리 국민에 대한 전문직 비자(E-4) 쿼터 15,000개 확보를 목표로 미 의회 내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의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단독법안 발의[56]와 함께 美 통합이민법안, 국방수권법(NDAA) 등 주요 법안에 포함하여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Partner with Korea Act 법안 지지의원 확보 관련 예산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지출액	회사명	활동 내용
2020	654	650	Cornerstone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하원 법사위 양당) 자문
			Squire Patton Boggs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2021	724	682	Cornerstone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하원 법사위 양당) 자문
			Squire Patton Boggs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및 우리 전문 인력의 對美 진출 현황 추가조사
2022	724	747	Cornerstone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하원 법사위 양당) 자문
			Squire Patton Boggs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2023	724	712	Cornerstone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하원 법사위 양당) 자문
			Squire Patton Boggs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2024	1,014	1,013	Cornerstone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하원 법사위 양당) 자문
			Squire Patton Boggs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DGA Group	차기 행정부 주요 인사 대상 아웃리치
			Mercury	차기 행정부 주요 인사 대상 아웃리치
2025	952	943	Squire Patton Boggs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의회 (공화당계) 자문
			BGR Group	관세 등 한미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 및 자문

(자료: 외교부)

56) 우리전문인력에 대한 연 최대 15,000개 취업비자 부여가 골자

정부는 미 의회 회기마다 한국계 또는 친한(親韓) 의원과 협력하여 동 법안을 지속하여 발의 중이나, 법안 발의 서명에 동참하는 의원의 수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에는 미국 내 反이민 정서 강화 및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비자 관련 사안이 가장 민감한 이슈인 이민 문제로 분류되면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Partner with Korea Act 법안 발의의원 현황>

구 분	발의 의원수		
113대 (2013-14)	118명	하원	112명 (공화 58, 민주 54)
		상원	6명 (공화 4, 민주 2)
114대 (2015-16)	87명	하원	81명 (공화 33, 민주 48)
		상원	6명 (공화 3, 민주 3)
115대 (2017-18)	84명	하원	81명 (공화 37, 민주 44)
		상원	3명 (공화 2, 민주 1)
116대 (2019-2020)	55명	하원	53명 (공화 21, 민주 32)
		상원	2명 (공화1, 민주 1)
117대 (2021~2022)	54명	하원	42명(공화1, 민주2)
		상원	3명(공화1, 민주2)
118대 (2013-2024)	45명	하원	42명(공화11, 민주31)
		상원	3명(공화2, 민주1)
119대 (2024-2025)	6명*	하원	6명(공화3, 민주3)
		상원	상금(10.15.) 미발의

* 하원에서 7월 23일에 공동발의(Young kim의원, Sydney Dove 의원) 된 후 현재 공동발의자 추가 모집 중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전방위적으로 대미 아웃리치를 지속하고, 미국 정부와 다양한 방안을 유연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나, 실제로 「미국 경제동향 대응」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14억 2,700만원은 모두 자문회사 용역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저조한 성과가 외교부 예·결산 심의 과정 및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번 지적되었음에도, 예산 증액분을 여전히 로비·자문에 반복투입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최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고율 관세 부과, 이민 규제 강화, 자국 내 제조업 유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환경에서는 외교적 설득만으로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는 기존의 로비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정부 간 협의, 주정부·의회 네트워크, 한미 산업계 및 교민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경로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단기적 예산 투입의 반복보다는, 변화된 미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한 다층적·입체적 접근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전문인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57]

57)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자문 예산 비중 축소 시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정책 및 입법 모니터링 및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되므로, 현재 신규 내부사업으로 국회 증액을 추진 중이라고 함.
-(내역사업명) 미국진출우리기업활동지원
-(상세내용) ▲한-미 비자 워킹그룹 협력, ▲우리기업 대상 비자 설명회, ▲비자 안내자료 발간, ▲미국 의회 대상 설명회 개최, ▲미측 주요인사 및 현지진출 우리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14.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가. 프로그램 개요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프로그램은 미국, EU 등 주요 과학기술 선도국과 신흥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국제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AI, 우주, 퀀텀[58],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임.

또한 우리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Post-2020 신기후체제 이행 협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양자 및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며, 녹색성장 및 저탄소경제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녹색·환경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다자 환경이슈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59]과 1개의 세부사업[60]으로 구성됨.

2026년도에는 전년도(26억 9,800만원)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27억 2,100만원(0.9%)이 편성되었음.

<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9,806	-	11,187	10,386	2,698	2,721	23	0.9

58) 양자(Quantum)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 분야
59) 에너지 외교 및 기후변화 녹색성장 국제협력 강화
60)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나.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는 첨단·핵심·신흥기술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여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녹색성장 등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또한,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 강화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정립·확산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우리 기업의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증감	
	결산	본예산 (A)	예산안 (B)	(B-A)	증감률 (B-A)/A
합 계	**9,806**	**2,698**	**2,721**	**23**	**0.9**
공관 에너지협력 외교활동[61]	1,355	(이관)		-	-
에너지 및 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62]	494	(이관)		-	-
과학기술외교강화	909	1,317	1,307	△10	0.7
기후변화외교강화	416	855	922	67	7.8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55	145	108	△37	25.5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63]	7,053	270	270	-	-
북극 국제협력 강화	104	110	114	4	3.6

(자료 : 외교부)

61) 외교부 조직 개편(2024.5.)에 따라, 공관 에너지협력 외교활동사업 중 원전수출 지원공관 업무는 국제기구·원자력국으로, 에너지·자원 공급망 관련 업무는 양자경제외교국으로 이관됨.

62) 양자경제외교국으로 이관

63) 2024년 단년도 사업인 '유엔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11월 부산에서 개최되었음. 이 협상위원회는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에 따라 '국제 플라스틱 오염방지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부산 회의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로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함.

□ 기후·에너지·과학기술 분야 외교의 집행률 제고를 통한 사업 실효성 강화 필요

기후·에너지·과학기술 외교 분야는 외교부 내에서 점차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전략 분야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전환과 과학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점임.

이에 외교부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를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에서 낮은 집행률이 반복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의 각 내역사업별 집행률은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의 각 내역사업별 집행률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2022		2023		2024		2025 (9월말 기준)		26년 예산안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과학기술 외교강화	367	57.5	1,059	60.8	909	82.4	714	54.2	1,307
기후변화 외교강화	603	87.1	876	83.2	416	91.6	609	71.2	922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108	77.1	131	86.2	55	76.4	67	45.9	108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289	79.6	291	71.1	7,053	96.6	172	67.7	270
북극 국제협력 강화	73	59.8	123	74.5	104	81.9	77	70.0	114
연도별 평균 집행률		72.22		75.16		85.78			

(자료: 외교부)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각 내역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77.3%이며, 특히 「과학기술 외교강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북극 국제협력 강화」 사업에서 불용이 크게 발생함.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전문관 채용 절차 지연이나 국제행사 일정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집행공백이 발생하였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사업 역시 국제회의의 화상 개최로 집행액이 줄었으며, 「북극 국제협력 강화」 사업은 러시아의 의장국 역할 중단으로 관련 다자외교가 위축되면서 실적 확보가 어려웠음.

또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사례에서도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계획의 불충분으로 인한 집행 한계가 확인됨. 2023년 기준 회의는 14회 개최되었으나, 예산 집행률은 6%에 불과함. 이는 회의 일정·운영 범위·소요 예산 등이 사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집행률 및 세부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개최 횟수(회)	
				전체회의	분과회의[64]
2023	83	5.9	7	2	14
2024	10	9.8	98	-	10
2025. 9월 말	42	2.7	6	-	7
2026 예산안	12			3(계획)	

(자료: 외교부)

64) 과기외교정책, 인공지능·빅데이터·정보통신, 기후변화·탄소중립, 우주, 바이오, 원자력, 사이버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연도별 예산액을 보면 연도마다 변동폭이 크며, 이는 집행률에도 영향을 미침. 2026년도 예산안 또한 전년 대비 급감하였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동일 내역사업인 「과학기술 외교강화」 의 '전략국·국제기구와의 정책 공조' 내내역사업 증액[65]으로 인해 내내역사업 간 조정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함.

이러한 변동은 세부 내역사업 간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는 있으나,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 수립 시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차원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따라서 기후·에너지·과학기술 외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성과'간의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외교부는 각 내역사업의 예산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성을 높이고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률 제고 방안 수립하는 등 집행률 개선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후에너지협력센터'의 운영 내실화 및 기능 강화 필요

기후에너지협력센터(Climate Energy Cooperation Center, CECC)는 2024년 5월 조직 개편 이후 기후변화외교과에 신규 편입된 기관으로, 현재 연구원 4명만을 두고 있으며 별도의 추가 인력은 없음. 동 센터는 당초 '글로

65) AI, 우주, 퀀텀, 바이오 등 신흥·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규범 논의 선도와 국제협력 주도, 우리 기업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략국/국제기구와의 정책공조' 내내역사업이 증액됨.

벌에너지협력센터’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외교 강화 기조에 부응하고자 개편된 조직임.

기후·에너지 연계협력의 외교적 플랫폼으로 기능 확대를 도모한 것으로 보이나, 공식 홈페이지의 센터 소개 및 주요활동 문구[66]는 여전히 과거 ‘에너지외교·기업지원 중심’의 내용에 머물러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녹색전환’ 등 개편 취지를 반영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상황임.

또한 최근 몇 년간 발간된 주요 간행물[67]이 ‘글로벌에너지협력 외교저널’,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등 에너지 중심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2024년 9월 이후 매월 ‘기후·에너지 포커스’를 발간(총 15건)해 왔으나, 향후 정책뉴스레터 형태 외 공식 정기간행물 발간 등 기후분야 연구

66) [센터 소개]

기후에너지협력센터(CECC)는
- **재외공관과 에너지 기업간의 가교역할 수행** : 재외공관의 축적된 에너지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에너지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해외사업진출을 지원합니다.
- **기업을 찾아가는 쌍방향 에너지협력외교 구현** : 기업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합니다.

[기후에너지협력센터 주요활동]

1. 재외공관으로부터 접수한 입찰정보,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원전동향 등을 관련 협회와 기업, 유관부처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쌍방향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재외공관으로부터 입수한 에너지 인맥정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의 에너지 관련 유력인사 또는 재외동포인사 정보를 포함한 에너지 전문가 DB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 및 협회와 공유합니다.
3. 재외공관으로부터 수집한 최신 정보를 '국제에너지자원동향'으로 제공하고 국가별 에너지정보책자 등을 발간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67) 정기간행물 발간 실적(2025. 9월 말 기준)

2022	2023	2024
ㅇ 제15호 글로벌 에너지협력외교 저널 ㅇ 2022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	ㅇ 제16호 글로벌 에너지협력외교 저널	ㅇ 2024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및 정책 협력 확장 검토가 필요함.

향후 센터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연계한 외교 의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정책 발굴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조직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외 홍보 및 협력 플랫폼으로서 가시적 성과 창출에도 주력해야 할 것임.

15.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가. 프로그램 개요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대응전략과 중장기 외교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회의를 통해 외교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사업 「외교전략 연구 및 교육훈련」은 국립외교원 소관 사업이며, 「외교전략 수립」은 외교부 조직 개편(2024.5.28.)[68]으로 신설된 외교전략정보본부 내 '외교전략기획국'과 '외교정보기획국' 소관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49억 4,500만원) 대비 10억 1,700만원(6.8%) 증액된 159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500]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2,641	15,964	13,057	14,945	14,945	15,962
	[3531] 외교전략 연구 및 교육훈련		11,456	13,051	11,102	12,388	12,388	12,831
		[401]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2,793	3,498	2,880	3,304	3,304	3,271
		[402] 국내외 교육훈련	6,723	7,433	6,252	7,132	7,132	7,231
		[403] 외교역량 평가 및 개발교육	394	463	427	417	417	417

68)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024.5.28.)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외교전략정보본부
	본부장, 본부장 밑에 정책관 등 2명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404]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387	414	400	393	393	393
		[405]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904	1,059	970	959	959	1,038
		[407]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255	184	173	183	183	481
	[3532] 외교전략 수립		1,185	2,913	1,955	2,557	2,557	3,131
		[401]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	1,185	1,067	780	1,067	1,067	949
		[402]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	846	389	100	100	-
		[403]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	1,000	786	1,390	1,390	1,332
		[405] 지역전략수립 및 이행(**신규**)	-	-	-	-	-	**850**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사업의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반영으로 2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외 교육훈련」사업은 국외연수 체재비, 현지어학습비 등 9,900만원,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사업은 교육생 재외공관 현장실습 경비 등 7,900만원 증액됨.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사업은 외교안보연구센터 운영비 등 3,300만원이 감액됨.

또한, 「외교전략 수립」단위사업 내에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 총론 수립」사업은 1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26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전략수립 및 이행」사업은 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아울러,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사업은 전년 대비 5,800만원 감액된 1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은 우리 국민들의 외교 소양 함양을 목표로 하는 정부 주도 외교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 외교 정책 및 정세에 관한 강의와 실제 외교 사례 체험 등을 포함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임.

2021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억 8,300만원) 대비 2억 9,800만원(162.8%) 증액된 4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결산					2026년 예산안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		
[3531-403]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255	184	-	173	183	481
· 국민외교아카데미교육과정 운영[69]	56	20	-	20	19	19
· 국민외교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지원[70]	199	164	-	153	164	164
· 국민외교아카데미 학사관리시스템 개발(신규)	-				-	298

□ 국민외교아카데미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외교 역량 강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 학사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필요

국립외교원은 2020년 '국민외교타운' 출범에 이어 2021년 '국민외교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이 과정은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축적한 외교 지식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국민의 외교 정책에 대한 관심과

69) 강사비, 교육자재 구입비 등
70) 국민외교아카데미 운영지원 용역비, 국민외교아카데미 서포터스 활동비, 전담 기간제 연구원 인건비 등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국립외교원만의 특색 있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임.

동 사업은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석·박사연구자 및 외교안보 관련 분야 종사자),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며, 각 과정별 추진 실적은 아래와 같음.

< 국민외교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

교육 과정	교육 대상 (자격 요건)	신청자 수(명)		수강생 71) 수(명)	비고 (과정)
청소년 외교 배움터	고등학생	2021	281	165	총 8회
		2022	213	133	
		2023	205	165	
		2024	151	100	
		2025.9월말 기준	167	105	
대학생 외교 연수과정	대학생	2021	354	111	총 10회
		2022	228	87	
		2023	182	94	
		2024	136	50	
		2025.9월말 기준	168	50	
미래 지도자 과정*	대학원생 (석·박사 연구자 및 외교안보 관련 분야 종사자)	2021	-	-	총 10회
		2022	-	-	
		2023	-	-	
		2024	68	49	
		2025.9월말 기준	46	39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2021	-	-	2회차 과정 (상·하반기 반복운영)
		2022	-	-	
		2023	-	-	
		2024	231	229	
		2025.9월말 기준 ※ 하반기과정 준비중	66	58	
대국민 특강	국민 전체	2021	91	70	비정기
		2022	94	94	
		2023	297	103	
		2024	227	150	
		2025.9월말 기준	109	108	

* <미래지도자 과정> 및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은 2024년부터 신설

(자료: 국립외교원)

71) 수강생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기소개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구비 성실성, △과정 참여에의 열의 및 이해도, △발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발함.

국립외교원은 국립외교원 공식 홈페이지,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 외교부 및 재외공관 직원용 교육훈련관리시스템(e-KNDA, 일반인 접근 불가) 및 국민외교아카데미 홈페이지 등 총 4개의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이 중 국민외교아카데미 홈페이지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외교아카데미 관련 소개와 교육 프로그램 안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로, 외교부 및 재외공관 직원용 교육훈련관리시스템(e-KNDA)과는 구분됨.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및 집행액은 국립외교원 공식 홈페이지,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 e-KNDA 등 3개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에 해당하였음.

국민외교아카데미 사업은 2021년에 시작되어 2022년 국민외교아카데미 홈페이지가 신규 개설되었으며, 1년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유료 유지보수로 전환되면서 관련 예산도 증가하였음. 동시에 2023년부터는 유지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국립외교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가 외교부의 '외교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에 포함되었음.

< 국립외교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예산액 및 집행액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20	162	160	
2021	150	147	
2022	150	148	국민외교아카데미 홈페이지 구축, 1년간 무료 유지보수
2023	220	202	외교부 외교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에 포함됨. 통합유지보수사업 전체 예산 중 국립외교원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유지보수요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국민외교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보수대상 포함에 따라 유지보수 총액 증가
2024	276	207	

(자료 : 국립외교원)

한편, 국립외교원은 2013년부터 외교부 내 역량평가, 국외연수, 외국어능력 검정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시스템(e-KNDA)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은 구축 이후 한 번도 개편되지 않아 심각한 노후화 상태[72]임.

< 국립외교원 학사관리시스템(e-KNDA) 연혁 >

연도	추진 경위
2012	국립외교원 출범
2013	학사관리시스템 e-KNDA* 구축 (국립외교원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예산 약 15억 원) * ①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등의 학사관리 ② 외교부 직원 국외 연수 및 외국어 검정 ③ 역량 개발 교육 및 평가 등을 위한 학사 통합 관리 시스템
202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노후 교체 대상 시스템' 분류

(자료 : 국립외교원)

72) 국립외교원 학사관리시스템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정부의 주요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은 해당 시스템 장비의 내용연수(7년)가 이미 경과했으며, 시스템 노후화로 인하여 불안정, 용량 과부하, 외부 바이러스 공격 취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2020년 이후 매년 노후장비 교체를 권고하고 있음.

또한, 기존 학사관리시스템(e-KNDA)의 용량이 부족하여 국민외교아카데미 과정을 포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국민외교아카데미 과정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엑셀을 활용한 수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73].

이에 따라 국립외교원은 2026년도 예산안에 '국민외교아카데미 학사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을 일반연구비(260-01) 항목으로 2억 9,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국민외교아카데미 강의 전반의 효율·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학사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립외교원 학사관리시스템(e-KNDA)'을 활용하여 국민외교아카데미 학사관리시스템을 추가하고 전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함.

당초 국립외교원은 시스템 구축 소요액을 약 4억원으로 산출[74]하여 정부안에 편성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2억 9,800만원으로 삭감된바,

수강생 종합평가, 개인정보 보호 등 일부 핵심 기능의 미탑재로 시스템 효율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수강생의 학습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나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미비할 경우, 수기 업무 지속 및 개인정보 보호 취약 등 운영상 비

73) 연간 약 6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수강생 및 강사 관리, 출석관리, 교육이력(참가확인서, 수료증, 상장 등) 관리 등 학사관리 전반을 모두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74)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 소프트웨어 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 개발용역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로 구성

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국립외교원은 핵심 기능을 우선 구현하고 시스템 설계의 확장성을 확보하여 국민외교아카데미의 교육 운영의 체계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라.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사업은 '한미 외교정보 협력 MOU'[75]를 기반으로,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선진 우방국의 외교정보기관과 유사한 외교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공관 등으로부터 외교정보를 보다 신속·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배포·활용하는 등 외교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3억 9,000만원) 대비 5,800만원(△58%) 감액된 13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한미 외교정보 동맹 체계 구축」이 전년도 대비 2천 700만원 감액된 3억 6,400만원, 「선진 우방국가와의 외교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이 전년도 대비 3천 700만원 감액된 2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글로벌 정책 사례 조사·분석」이 전년도 대비 600만원 증액된 7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75) 美 국무부 정보조사국(INR)과의 「한미 외교정보 협력 MOU」 체결(2024.6.24.)로 한미간 보다 폭넓고 신속한 외교정보 공유 체계 마련

< 2026년도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1,000**	**-**	**1,005**	**786**	**1,390**	**1,332**	**△58**	**△4.2%**
· 한미 외교정보 동맹체계 구축	391	-	381	323	391	364	△27	△7%
· 글로벌 정책 사례 조사·분석	333	-	338	245	723	729	6	1%
· 선진 우방국가와의 외교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276	-	286	218	276	239	△37	△13%

□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성과 강화 필요

외교부는 외교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직 개편(2024.5.)을 통해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에 '외교정보기획국'을 신설하고, '외교정보1과'와 '외교정보2과'를 구성하여 해외정보 수집·분석·공유를 전담하도록 함.

이러한 조직 개편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도 예산 또한 이 같은 필요성을 반영[76]하여 편성되었음.

76) 2024년 5월 말 신설된 외교정보기획국은 예산 수요 및 집행 소요기간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2024년도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였음. 그러나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정보 수집·분석·공유 전담 부서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은 약 3억 9천만원 증액되었음.

연도	2024	2025.9월말 기준
사업비 (예산현액 기준)	1,005	1,390
집행액	786	731.5
집행률	**78.6**	**52.6**

특히 2024년도 예산 대비 증액분(3억 9,000만원)은 국 신설에 따른 인사 이동(동북아국→외교정보기획국)으로 인한 인건비(동북아 정세분석 연구원 4명) 이관 및 신시장 정세분석에 특화된 전문 연구인력 2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었음.

그러나 현재 외교정보기획국의 신시장 정세분석 연구원 1명은 아직 미채용 상태임.

< 외교정보기획국 인력 현황 >

(단위 : 명, 2025.9월 말 기준)

외교정보기획국	외교정보1과	외교정보 2과	비고
공무원 (일반임기제 포함)	7	8	현원 기준, 부서별 정원은 비공개[77]
공무직 (연구원)	3	2	
공무직 (행정)	1	0	

(자료: 외교부)

이에 따라 향후에는 미충원 연구인력의 조속한 보강을 통해 외교정보 분석 역량을 한층 선진화하고, 사업의 집행률 또한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외교부는 사업의 보안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실적 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성과 관리체계와 집행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정책 파급효과를 동시에 높여야 할 것임.

7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마.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은 2026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안은 8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 인도 · 태평양 전략 이행(폐지)	846	-	846	389	100	-	-	-
·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신규)	-	-	-	-	-	850	850	순증

동 사업은 신남방·신북방 정책 계승·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유망 글로벌 사우스[78] 국가로의 외교 지평 확대, 유럽, 인도·태평양 지역 유사입장국 및 중동과의 실질협력 강화 등 지역별 맞춤형 외교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역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지역별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관리·심화하기 위한 외교부의 새로운 지역전략 틀로 이해됨.

한편, 2024년 5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024.5.28.)을 통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되고, 그 산하에 외교전략

78)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 미·중 전략경쟁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단일체가 아닌 다양한 국가 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원래 미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러시아·한국·일본 등 선진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와 대비해 주로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일컫는 용어로 통칭돼 왔음.(출처 : '변환하는 세계, 왜 글로벌 사우스인가?', 「글로벌 이슈 브리프」 2025년 4월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국을 두었음. 외교전략기획국은 외교정책의 수립·조정,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등 외교전략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사업의 주관부서임.

즉, 인도·태평양 중심의 단일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별 전략을 포괄적으로 설계·운영하는 체계로 외교전략기획 기능이 확장·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전략 수립·이행의 체계적 추진 및 내실화 필요

2026년 신규 편성된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은 「지역전략 글로벌 포럼」, 「지역전략 아웃리치 및 협력 강화」 및 「지역전략 수립·보완 연구」임.

<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사업의 내역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증감률 (B-A)/A
합계						**850**	**850**	**순증**
· 지역전략 글로벌 포럼	-	-	-	-		250	250	순증
· 지역전략 아웃리치 및 협력 강화	-	-	-	-	-	500	850	순증
· 지역전략 수립 · 보완 연구						100	100	순증

동 사업은 지역전략 관련 협의체 및 국제회의 참여·개최, 주요국과의 재외공관 차원의 협력 강화, 정책 자료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외교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외교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역 안보 환경 불안정성 속에서도 주요 지역별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관리·심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동 사업은 2024년에 신규로 추진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지역적 접근을 강화한 발전·확대형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당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사업은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외교적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그런데,「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사업 중 2024년 12월 13일 개최 예정이었던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은 본래 인태 전략 관련 범정부·범국가 차원의 외교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 다자간 고위급 회의로 기획되었으나,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계획대로 개최되지 못하고 잠정 연기되었다가,

이후 '해양안보 심포지엄'을 개최[79]로 대체된 바 있음.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이 정책결정자 간 전략적 논의를 촉진하는 고

79) 외교부는 2025.5.27. 해양안보 분야의 해외 주요 전문가와 국내 유관부처 및 기관의 참여하에 「해양안보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음.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는 아이작 카든(Isaac Kardon)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아닐 쿠마르 초울라(Anil Kumar Chawla) 인도 국방전략연구소 명예연구원(前 해군제독),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호주 퍼스 미국-아시아센터 소장, 마크 쥘리엔(Marc Julienne)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센터 연구부장 등 해양안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해양안보 관련 우리 정부 유관 부처와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음.(「해양안보 심포지움」 개최, 외교부 보도자료, 2025.5.27.)

위급 다자외교 플랫폼으로 기획된 것과 달리, 해양안보 심포지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질서와 미·중 전략 경쟁을 주제로 한 전문가 중심의 세미나 성격이 강하며,

규모와 참여 수준, 정치적 위상 면에서 본래 사업 목표였던 '인도·태평양 지역의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 강화'라는 성과 달성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신규 사업인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기획 단계부터 세부사업별 목표와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목적 외 전용이나 단순 행사성 집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16. 재외공관운영

가. 프로그램 개요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은 재외공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노후화된 재외공관의 개선 및 유지·관리와 대테러 보안시설 설치 및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5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8,011억 8,200만원) 대비 264억 700만원(3.3%) 증액된 8,275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4000] 재외공관운영			712,023	776,394	744,765	801,182	801,182	827,589
	[4001] 재외공관 인건비		264,524	284,188	274,222	299,243	299,243	309,353
		[101] 재외공관 인건비	264,524	284,188	274,222	299,243	299,243	309,353
	[401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94,135	144,805	141,154	148,954	148,954	150,454
		[25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94,135	144,805	141,154	148,954	148,954	150,454
	[4012] 재외공관 운영		21,409	21,000	20,524	22,099	22,099	22,899
		[251]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17,151	17,063	16,663	18,042	18,042	18,842
		[252]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4,258	3,937	3,861	4,057	4,057	4,057
	[402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84,858	208,655	192,743	224,367	224,367	234,582
		[40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84,858	208,655	192,743	224,367	224,367	234,582
	[4031] 재외공관 안전확보 및 시설개선		47,097	117,746	116,122	106,519	106,519	110,301
		[401] 재외공관 시설정비 및 관리사업	27,244	28,180	24,706	5,926	5,926	6,117
		[402] 재외공관 안전강화	19,853	23,466	22,930	25,082	25,082	25,261
		[405] 재외공관 업무환경 개선	-	66,100	68,486	75,511	75,511	78,923

2026년도 재외공관운영 관련 예산은 재외공관 인건비 3.4%,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5억원(1%),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8억원(4.4%),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02억 1,500만원(4.5%), 재외공관 업무환경 개선 34억 1,200만원(4.5%) 등으로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음.

나.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은 노후화된 재외공관 공용 차량의 적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과 동일한 40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3,861	4,057	4,057	-	-

(자료: 외교부)

□ 재외공관 차량 교체·구입 예산의 면밀한 편성 필요

재외공관의 차량은 용도에 따라 공관장의 외교활동을 위한 공관장용 차량(이하 “공관장 차량”), 공관의 외교·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용 차량(이하 “행정용 차량”) 및 공사 등의 외교업무 지원과 공관 외빈 업무 지원을 위한 의전업무용 차량(이하 “의전용 차량”)으로 구분됨.[80] 2024년 말 기준으

80)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3조(용도구분) ① 공관용 차량은 공관장의 외교활동을 위한 공관장용 차량(이하"공관장차량"이라 한다), 공관의 외교·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용 차량(이하"행정차량"이라 한다) 및 공사 등의 외교업무 지원과 공관 외빈 업무 지원을 위한 의전업무용 차량(이하 "의전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로, 공관장 차량은 173대, 의전용 차량은 91대, 행정용 차량은 412대임.

< 재외공관 차량 현황 >

(단위: 대)

구분	공관장 차량	의전용 차량	행정용 차량	계
대 수	173	91	412	676

(자료: 외교부)

그런데 최근의 교체·구입 실적을 보면 공관장 차량은 예산 편성 시의 계획 대비 매년 초과 교체·구입되고, 행정용 차량은 계획에 미달하여 교체·구입되었음.

< 용도별 차량 교체·구입 현황 >

(단위: 대)

구분	2023			2024			2025			2026		
	공관장	의전용	행정용	공관장	의전용	행정용	공관장	의전용	행정용	공관장	의전용	행정용
계획	16	11	53	11	10	51	8	8	47	15	10	30
집행	11	18	43	20	6	28	13	8	29	-	-	-

주: 2025년 집행 실적은 2025. 8. 31.까지의 현황임

(자료: 외교부)

예산과 실제 집행 사이에 편차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외교부는 신규 공관 개설 및 사전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공관장 차량 교체·구입이 증가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공관장 차량의 단가가 행정용 차량 단가의 2배에 달하여 공관장 차량 교체·구입 건수가 계획을 초과할 경우 그만큼 행정용 차량 교체·구입의 제약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노후화 수준이 낮은 공관장 차량의 경우 교체를 차년도로 연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공관장 차량과 행정용 차량의 교체·

구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행정용 차량의 교체 예상 건수가 30대로, 2023년도 계획인 53대에 비하여 70% 수준에 불과함. 행정용 차량은 영사 업무를 비롯한 공관의 각종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차량으로, 매년 90대 이상의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용 차량 교체 계획 축소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외교부는 재외공관 차량 교체·구입 예산을 수요에 기반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7. 외교 행정지원

가. 프로그램 개요

「외교 행정지원」프로그램은 외교부 및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운용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외교 정보화, 정책연구개발, 본부 및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업무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8개의 단위사업과 7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외교 행정지원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7000] 외교 행정지원			213,322	217,268	212,727	235,305	235,305	239,720
	[7001] 본부인건비		87,730	94,669	90,218	97,277	97,277	97,983
		[101] 본부 인건비	87,730	94,669	90,218	97,277	97,277	97,983
	[7002] 소속기관 인건비		8,573	9,064	9,258	9,403	9,403	10,145
		[101] 국립외교원 인건비	8,573	9,064	9,258	9,403	9,403	10,145
	[7011] 본부 기본경비		44,620	44,704	45,217	50,261	50,261	51,671
		[20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9,520	10,072	9,364	10,757	10,757	11,565
		[202] 국가외교통신 운영(총액)	17	19	21	19	19	20
		[203] 의전장실 기본경비(총액)	31	32	21	33	33	33
		[204] 국제기구원자력국 기본경비(총액)	31	32	36	31	31	31
		[205] 외교전략기획국 기본경비(총액)	17	20	17	19	19	20
		[206] 동북중앙아시아국 기본경비(총액)	23	35	18	35	35	35
		[207] 북미국 기본경비(총액)	30	41	34	43	43	43
		[208] 한반도정책국 기본경비(총액)	47	48	40	35	35	35
		[209] 중남미국 기본경비(총액)	18	24	14	24	24	24
		[210] 유럽국 기본경비(총액)	29	28	30	25	25	25
		[211]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총액)	34	41	31	34	34	34

		[212] 국제법률국 기본경비(총액)	21	24	20	24	24	24
		[213]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총액)	27	32	25	32	32	32
		[215] 영사안전국 기본경비(총액)	26	35	32	34	34	35
		[216] 여권발급 기본경비(총액)	154	173	172	173	173	189
		[217] 국제경제국 기본경비(총액)	18	18	18	18	18	18
		[218]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총액)	34	29	22	33	33	33
		[219]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총액)	24	27	26	25	25	25
		[220] 개발협력국 기본경비(총액)	40	39	29	39	39	39
		[221] 아세안국 기본경비(총액)	28	30	28	30	30	30
		[223] 국제안보국 기본경비(총액)	18	24	21	25	25	25
		[224]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총액)	34	33	29	33	33	33
		[225] 외교정보기획국 기본경비(총액)	-	-	6	18	18	18
		[251] 기관운영 기본경비	24,458	22,303	23,186	27,266	27,266	27,339
		[252] 국가외교통신 운영	3,003	3,980	3,815	4,047	4,047	4,507
		[253] 의전장실 기본경비	460	329	2,205	325	325	350
		[254] 인천공항연락실 운영	72	74	77	74	74	81
		[255] 국제기구원자력국 기본경비	433	508	380	415	415	414
		[256] 외교전략기획국 기본경비	598	503	454	518	518	525
		[257]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	215	234	188	230	230	235
		[258] 북미국 기본경비	169	242	154	279	279	274
		[259] 한반도정책국 기본경비	223	298	162	210	210	210
		[260] 중남미국 기본경비	208	254	181	290	290	303
		[261] 유럽국 기본경비	437	427	317	411	411	409
		[262]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	321	347	311	375	375	394
		[263]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578	712	623	261	261	271
		[264]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	429	502	356	485	485	485
		[266] 영사안전국 기본경비	313	336	259	398	398	345
		[267] 여권발급 기본경비	858	915	912	902	902	902
		[268] 국제경제국 기본경비	203	202	179	206	206	214
		[269]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	400	440	308	486	486	508
		[270]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	244	276	215	274	274	290
		[271] 개발협력국 기본경비	310	318	280	344	344	357
		[272] 아세안국 기본경비	166	272	170	265	265	240
		[274] 국제안보국 기본경비	132	166	150	251	251	258
		[275]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	169	210	199	216	216	206

		[276] 외교정보기획국 기본경비	-	-	82	194	194	188
	[7018] 소속기관 기본경비		6,666	7,043	6,562	7,231	7,231	7,423
		[201] 국립외교원 기본경비(총액)	2,381	2,588	2,437	2,653	2,653	2,873
		[251]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4,285	4,455	4,126	4,578	4,578	4,550
	[7031] 외교 정보화		44,111	36,662	36,582	47,020	47,020	49,283
		[501]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20,225	20,882	19,739	22,049	22,049	21,876
		[502]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10,684	10,989	12,151	9,916	9,916	11,644
		[503]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450	-	-	-	-	-
		[504] 재외공관 회계 및 행정업무 고도화(정보화)	7,131	2,125	2,124	1,801	1,801	1,801
		[505]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정보화)	4,313	2,666	2,569	13,254	13,254	13,962
		[506] 해외 주요 인사 대상 E-Diplomacy 강화(정보화)	307	-	-	-	-	-
	[7032] 외교정책연구(R&D)		401	356	355	338	338	338
		[401] 정책연구개발	401	356	355	338	338	338
	[7033] 외교활동 업무지원		19,718	22,502	22,468	21,734	21,734	20,836
		[401] 외교네트워크 구축	4,628	5,472	6,611	5,325	5,325	4,743
		[402]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6,770	7,649	6,894	7,445	7,445	6,631
		[403]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379	1,802	1,139	1,617	1,617	1,957
		[404]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 대응	2,807	2,303	2,914	2,188	2,188	2,341
		[405] 외교기록 개방 서비스 강화	317	301	294	286	286	286
		[406] 외교타운 안전정비사업	884	900	655	500	500	505
		[408]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3,933	4,075	3,962	4,373	4,373	4,373
	[7034] 외교정책 대내외 이해제고		1,503	2,268	2,066	2,041	2,041	2,041
		[401] 외교홍보역량강화	1,503	2,268	2,066	2,041	2,041	2,041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예산은 윈도우10 지원종료에 따른 행정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업무환경 정보보안 강화 소요 등을 반영하여 17억 2,900만원(17.4%)이 증액되었으며,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정보화)」은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2단계) 사업 및 재외공관 클라우드 기반의 해외정보 범정부 활용 체계 운영 소요 등을 반영하여 7억 800만원(5.3%)이 증액되었음.

나.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동 사업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유통되고 있는 외교 정보의 보안과 기밀성을 확보하고, 국가 주요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외교정보전용망 및 외교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2026년도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2,151	9,916	11,644	1,729	17.4

주요 증액내역은 행정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17억 9,800만원, 업무환경 정보보안 강화 사업 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은 대도청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1억 7,800만원, 재외공관 노후 비상위성통신 장비 교체 사업 4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외교부 정보시스템 재해복구(DR) 구축 예산 확보 필요

외교부는 2025년 9월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화재로 정부 주요 정보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 이후, 전 부처 대상 보안·안전시설 전수점검 지시에 따라 본부 및 재외공관의 정보보안·안전 관리체계를 점검하였음.

점검 결과, 외교부 본부 청사 14층 내 외교통신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DR)[81]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외교부 및 타 부처와 재외공관 간 문서유통이 단절되어 외교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데이터 백업 시스템 역시 하드웨어 장애에만 대비한 동일 장소 내 백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해·재난 발생 시 외교자료의 대규모 소실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외교부는 '외교정보자원 관리·안전 강화 TF'를 구성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단기적으로는 2026년도에 외교타운(서울 서초 소재) 내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산실을 구축하여 백업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원격 자동백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해·재난 발생 시 최소한의 복구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 이후를 목표로 물리적·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전용 재해복구시스템(DR센터)을 구축하여, 재해 상황 발생 시에도 실시간으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무중단(Zero-Downtime) 전환체계를 마련하고,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외교정보 인프라의 업무연속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81) DR(Disaster Recovery)은 재해·재난시 원격지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이중화시스템를 말함.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외교부는 단기적으로 백업 및 재해복구 전산실 시설공사에 60억원, 백업시스템 구축 등에 60억원이 소요되고, 중·장기적으로 전용 DR센터 구축에 약 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 우선적으로 최소 복구능력 확보에 필요한 120억원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최소 복구능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안 >

항목	세부내용	예산(억원)
재해복구 전산실 구축 (외교타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기반시설 건축 공사 전기, 기계 통신, 구조, 소방 등 공사 CCTV / 접근통제 등 물리적 보안 공사 감리비 / 시설부대비	60
백업용 전용회선 구축	네트워크장비 / 보안장비 전용회선 회선비용	10
백업시스템 구축 (일반/비밀 분리)	통합 백업 스토리지 데이터 백업 솔루션 백업검증 시스템	45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5
계		120

※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인력 예산 제외
(자료: 외교부)

외교부의 정보시스템은 국가 외교문서, 조약, 외교전문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루고 있어, 재난이나 사이버공격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외교 안전의 최후 보루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외교정보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단순 정보화사업이 아닌 외교안보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서의 국가적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예산을 확보하여 백업데이터 분산 및 자동복구체계 구축을 선행하고, 향후 DR센터 건립을 포함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국가 외교정보의 안전성과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정보화)

동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핵심기술(데이터-스마트업무환경-인공지능)을 업무에 적용하여 외교환경의 변화와 업무영역의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2026년도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분류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합 계	**2,569**	**13,254**	**13,962**	**13,962**	**708**	**5.3**
재외공관 클라우드 기반의 해외정보 범정부 활용체계 운영	448	1,632	2,204	2,204	572	35.0
재외공관 스마트업무환경 구축 후 운영관리	235	-	-	-	-	-
스마트 업무 환경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1,017	1,017	1,017	-	-
지능형 외교 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	10,605	10,741	10,741	136	1.3
5G정부망 운영	600	-	-	-	-	-
5G정부망 통신료	300	-	-	-	-	-
외교정보단 DB 구축	986	-	-	-	-	-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재외공관 클라우드 기반의 해외정보 범정부 활용체계 운영 사업이 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스마트 업무환경 시스템 운영 및 지능성 외교 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2단계) 사업 예산 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2단계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필요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외교안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교수행 체제 및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동 사업은 2025년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319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026년도는 2단계인 전략 AI 구축을 통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 단계에 해당하며, 관련 예산으로 107억 4,100만원이 편성됨.

<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1차 구축)	2026년 (2차 구축)	2027년 (3차 구축)	총사업비
합 계	10,605	10,741	10,632	31,978
일반수용비 (210-01목)	59	45	40	144
일반연구비 (260-01목)	4,405	4,710	4,506	13,621
자산취득비 (430-01목)	6,141	5,986	6,086	18,213

2025년도 1단계에서는 인프라 구축 및 실무업무 효율화 과제 중심 중점을 두었으며, 2026년도 2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전략 AI 구축을 목표로 외교인물 관계 분석, 외교이슈 동향 감지, 허위정

보 탐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GPU(고성능 연산장비) 증설 및 기술변화에 따른 솔루션 반영 등 AI 서비스 확장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외교 핵심데이터를 유통하는 외교통신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재구축 사업이 병행되고, 재외공관 AI 서비스 확산을 위해 2026년도에는 아주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산출 세부내역 비교 >

(단위 : 백만원)

사업 내역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ㅇ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10,605	10,741
- 정보보안 강화 및 인프라 구축	3,349 - H/W 2,219, S/W 1,130	5,986 - H/W 2,713, S/W 3,273
- 시스템 구축 및 개발	6,003 - S/W 2,792, 개발비 3,211	3,829 - 시스템 구축 및 개발
- 사업관리 및 수행	1,194 - PMO 용역비, 감리용역비	881 - 사업관리 및 수행 등
- 조달수수료 및 평가수당	59	45

(자료: 외교부)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2단계 사업은 1단계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략 AI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인 만큼, 구축된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외교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성과 목표와 활용계획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교 현안 감지나 허위정보 탐지 등 핵심 기능이 정책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적 운용과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각 실·국별 업무 프로세스와 연계된 활용방안을 병행 설계하여 시스템이 현장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AI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데이터 품질과 운영조직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외교자료의 보안성과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학습 가능한 데이터의 폭을 넓히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표준화와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함.

더불어 2026년도에 추진되는 재외공관 대상 시범사업이 단순한 기술 확산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현지 공관의 인력·환경 여건을 고려한 운영지원 체계 및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사업 전반의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환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동 사업은 외교부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직원 간의 소통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행정역량 강화, 산하기관 평가, 외교역량 강화 정책연구, 재외공관 운영지원담당관 역량 강화, 청년인턴 채용,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2026년도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합 계	**1,139**	**1,617**	**1,957**	**340**	**21**
소통 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94	116	116	0	-
산하기관 평가	26	30	30	0	-
외교역량 강화 정책연구	10	10	10	0	-
재외공관 운영지원담당관 역량강화	0	100	100	0	-
청년인턴 채용	1,009	1,294	1,216	△78	△6.4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	67	485	418	623.8

2026년도에는 전년 대비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청년인턴 채용 예산은 12억 9,400만원에서 12억 1,600만원으로 소폭 감액된 반면,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4억 1,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외교부는 지방정부의 외교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청년의 외교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6월 비직제 조직인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팀은 외교부-지자체-재외공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지방외교 활성화 및 청년 국제화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하는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25년도에 6,700만원이 편성되어 외교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고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2030 자문단 운영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4억 1,800만원이 증액된 4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2030 자문단 운영 사업과 6개의 신규 내내역사업을 본격 추진될 예정임.

신규사업은 청년정책 분야와 지방외교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분야에서는 청년의 국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 청년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지방외교 분야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방외교 제도화 및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외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2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신규사업 현황 >

사업명	사업목적
【청년정책 분야】	
지방 청년 국제화 네트워크 행사 등 개최	외교부 청년정책 방향성을 소개하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차원 청년 국제화 네트워크 행사 개최 및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계기 청년 행사 개최
청년정책 박람회 참여 및 글로벌 커리어 개발 지원	국무조정실 주최 '청년정책 박람회' 개최 시(매년 9월 셋째 주),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부 청년정책 부스 운영 및 글로벌 커리어 개발 지원 행사 개최
청년사업 통합관리 사이트 개편	부내 각 실·국 및 산하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청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
지방청년 해외 스타트업 원격 일자리 사업	지방을 중심으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4차산업 중심의 해외진출의 경우 지방청년들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전무한 현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 원격 일자리 사업 추진
【지방외교 분야】	
주한 외교단·외국상의·외신과의 지자체 글로벌 네트워킹	지자체 중 일부 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등)를 제외하고는 주한 외교단 등 글로벌 네트워킹 관련 정보·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자체의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 기회 제공
국제관계대사 정례회의 확대 및 지방민생외교 전문가 포럼	지방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외교 정책 수립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근무 중인 국제관계대사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기회 마련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동 사업은 외교정책의 중앙집중적 구조를 보완하고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외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외교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지방외교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6개 신규사업의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행사 기획, 기념품 제작, 간담회 개최 등 일회성 성격의 지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성과 중심의 집행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2026년도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 산출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예산안
지방 청년 국제화 네트워크 행사 등 개최	- 기념품 제작비(일반수용비) 4백만원 - 정책 제언 원고료(일반수용비) 5백만원 - 행사장 임차료(임차료) 60백만원 - 행사 기획·진행비(일반용역비) 60백만원 - 간담회(사업추진비) 9백만원	138
청년정책 박람회 참여 및 글로벌 커리어 개발 지원	- 국제교류 분야 상담인력 초빙(일반수용비) 12백만원 - 기념품 제작(일반수용비) 5백만원 - 행사 기획·진행비(일반용역비) 20백만원 - 간담회(사업추진비) 3백만원	40
청년사업 통합관리 사이트 개편	- 홈페이지 개편(일반용역비) 30백만원	30
지방청년 해외 스타트업 원격 일자리 사업	- 홍보 및 자료제작(일반수용비) 2백만원 - 지자체 업무협의 출장(국내여비) 3백만원 - 현지 방문 출장(국외여비) 20백만원 - 간담회(사업추진비) 5백만원	30
주한 외교단·외국상의·외신과의 지자체 글로벌 네트워킹	- 기념품 제작비(일반수용비) 8백만원 - 행사장 임차료(임차료) 40백만원 - 행사 기획·진행비(일반용역비) 40백만원 - 행사 추진 업무협의 출장(국내여비) : 3백만원 - 간담회(사업추진비) 9백만원	100
국제관계대사 정례회의 확대 및 지방민생외교 전문가 포럼	- 기념품 제작비(일반수용비) 8백만원 - 행사장 임차료(임차료) 40백만원 - 행사 기획·진행비(일반용역비) 20백만원 - 행사 추진 업무협의 출장(국내여비) 2백만원 - 간담회 식사(사업추진비) 10백만원	8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외교부는 청년 및 지자체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네트워킹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도화 및 지역 외교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사업의 성과가 지방정부와 청년층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정책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대학·민간단체와의 협업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8. 한국국제협력단

가. 개요

1) 수입 · 지출 예산안 개요

2026년도 한국국제협력단의 출연금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총 1조 2,225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1조 3,644억 5,400만원) 대비 1,419억 3,800만원(△10.4%)이 감액되었음

< 2026년도 한국국제협력단 수입 및 지출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A)	추경		2025년 대비 (B-A)	%
수 입	정부출연금	1,295,540	1,262,170	1,148,022	△147,518	△11.4
	자체수입[82]	68,914	68,914	74,494	5,580	8.1
	- 이자수입	4,144	4,144	5,592	1,448	34.9
	- 이월결산잉여금	50,301	50,301	51,810	1,509	30.0
	- 잡수입	14,469	14,469	17,092	2,623	18.1
	- 임의보유금	-	-	-	-	-
	계	1,364,454	1,331,084	1,222,516	△141,938	△10.4
지 출	인건비	51,040	51,040	53,485	2,445	4.8
	경상운영비	1,756	1,756	1,599	△157	△8.9
	사업비	1,310,267	1,276,897	1,165,999	△144,268	△11.0
	예비비	1,391	1,391	1,433	42	3.0

82)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이월결산잉여금, 잡수입, 임의보유금으로 구성되는바, 이자수입은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 예치로 발생한 수입을 말하고, 이월결산잉여금은 직전년도 결산잉여금으로서 출연금 사업비 중 발생한 잉여

수입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출연금은 총 1조 1,480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1조 2,955억 4,000만원) 대비 1,475억 1,800만원 (△11.4%)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음. 자체수입은 55억 8,000만원(8.1%) 증액된 744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4.8%가 증가한 534억 8,500만원이, 경상운영비는 전년대비 8.9%가 감소한 15억 9,900만원이, 사업비로는 전년대비 11%가 감소한 1조 1,659억 9,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금을 의미함. 잡수입은 사업비 정산잔액, 유형자산 처분 이익(차량처분 등), ODA교육원 운영 수익, 임대 수익(구내매점, 은행 등 임대료 수입) 등이 해당하고, 잡수입은 결산 시 불용액, 이자수입초과달성분 등으로 구성되며, 임의보유금은 현금성 자산 중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아 차년도 이후 수입 편성이 가능한 잉여금을 말함.

2) 주요 사업별 예산안 개요

주요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4개 지역 국가원조로 구성된 국별 협력사업 예산은 7,044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7억 2300만원이 감액(△14%)되었으며, 글로벌 프로그램 역시 전년 대비 △14.0% 감소한 2,891억 4,500만원이 편성됨.

한편, 일부 사업의 증액은 ODA 예산 효율화를 위한 내역 사업 이관 및 유사 사업 통폐합에 기인*한 것임. 협력사업지원은 전년 대비 301억 8600만원이 증액(49.2%)된 915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각 세부사업에 분산되어 있던 사업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조사관리비 337억원과 사업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행정비 31억원이 협력사업지원 내 신규 내역 사업으로 통합·이관되었음.

* 사업조사관리비 : '25년 41,082백만원 → '26년 33,799백만원 (△17.7%)

사업행정비 : '25년 4,309백만원 → 26년 3,166백만원 (△26.5%)

< 2026년도 한국국제협력단 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예산	결산	본예산 (A)	추경		2025년 대비 (B-A)	%
계	1,232,412	1,139,643	1,295,540	1,262,170	1,148,022	△147,518	△11.4
1.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275,641	249,271	307,548	296,178	281,150	△26,398	△8.6
2.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306,614	282,575	302,087	289,087	249,882	△52,205	△17.3
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73,671	72,893	94,432	94,432	80,283	△14,149	△15.0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예산	결산	본예산 (A)	추경		2025년 대비 (B-A)	%
4.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133,274	119,607	115,139	111,139	93,168	△21,971	△19.1
5. 글로벌 프로그램	313,652	298,342	336,244	331,244	289,145	△47,099	△14.0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사업	128,756	119,778	143,026	143,026	127,245	△15,781	△11.0
글로벌연수	67,378	63,889	67,973	62,973	73,940	5,967	8.8
국제기구협력	81,915	80,193	80,015	80,015	35,030	△44,985	△56.2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35,603	34,481	45,230	45,230	52,930	7,700	17.0
6. 협력사업지원	59,260	51,975	61,390	61,390	91,576	30,186	49.2
7. 전략적협력강화	8,000	5,206	6,400	6,400	7,300	900	14.1
8.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62,300	59,774	72,300	72,300	55,518	△16,782	△23.2
민관협력사업	57,000	54,487	65,000	65,000	49,518	△15,482	△23.8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5,300	5,287	7,300	7,300	6,000	△1,300	△17.8

2026년도 국별협력사업 예산안은 아래와 같음.

< 2026년도 국별협력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	회계	세부사업	예·결산					2026년 예산안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지역별(국가별) 원조 합계			566,206	789,200	724,346	819,206	790,836	704,483
[2431] 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201,042	275,641	249,271	307,548	296,178	281,150
	[11] 일반	[401] 베트남	28,783	49,646	41,413	57,293	52,293	50,094
	[11] 일반	[402] 인도네시아	14,358	20,971	12,966	17,114	17,114	18,566
	[11] 일반	[403] 캄보디아	22,128	22,864	22,310	21,232	21,232	24,147
	[11] 일반	[404] 필리핀	16,724	31,043	21,414	30,470	30,470	27,632
	[11] 일반	[405] 방글라데시	13,506	13,790	9,349	14,044	14,044	10,125
	[11] 일반	[406] 몽골	14,360	17,122	16,772	20,937	20,937	22,519
	[11] 일반	[407] 라오스	25,276	24,652	26,369	27,290	27,290	25,256

단위사업	회계	세부사업	예·결산					2026년 예산안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408] 스리랑카	10,952	12,232	18,821	7,975	7,975	8,233
	[11] 일반	[409] 네팔	7,784	9,438	10,123	14,653	14,653	16,850
	[11] 일반	[410] 파키스탄	6,689	9,239	8,810	11,315	11,315	12,395
	[11] 일반	[411] 아시아태평양 일반협력 국가그룹	39,912	62,841	60,440	83,648	77,278	59,292
	[11] 일반	[412] 인도	411	853	189	250	250	699
	[11] 일반	[413] 미얀마	160	950	295	1,327	1,327	5,342
[2432] 아프리카지역원조			212,829	306,614	282,575	302,087	289,087	249,882
	[11] 일반	[401] 가나	9,222	15,943	15,613	20,583	20,583	18,795
	[11] 일반	[402] 에티오피아	29,697	30,643	28,186	28,644	28,644	23,478
	[11] 일반	[403] 아프리카 일반협력 국가그룹	115,324	187,826	174,739	178,966	173,966	131,620
	[11] 일반	[404] 르완다	15,329	15,714	15,475	17,733	17,733	19,850
	[11] 일반	[405] 우간다	14,334	14,501	13,159	17,547	17,547	19,697
	[11] 일반	[406] 탄자니아	13,984	18,927	16,448	17,931	9,931	18,508
	[11] 일반	[407] 세네갈	8,295	12,853	11,262	12,507	12,507	9,148
	[11] 일반	[408] 이집트	6,644	10,207	7,693	8,176	8,176	8,786
[2433] 중남미지역원조			79,819	73,671	72,893	94,432	94,432	80,283
	[11] 일반	[401] 콜롬비아	9,370	7,306	8,243	11,229	11,229	9,720
	[11] 일반	[402] 페루	6,703	9,964	6,970	9,497	9,497	17,747
	[11] 일반	[403] 볼리비아	7,361	8,024	9,101	17,250	17,250	13,180
	[11] 일반	[404] 파라과이	10,600	15,701	14,873	11,100	11,100	9,364
	[11] 일반	[405] 중남미 일반협력 국가그룹	45,784	32,676	33,706	45,356	45,356	30,272
[2434] 중동·CIS지역원조			72,516	133,274	119,607	115,139	111,139	93,168
	[11] 일반	[401] 우즈베키스탄	11,310	23,767	19,130	22,020	22,020	20,258
	[11] 일반	[402] 중동·CIS 일반협력 국가그룹	52,927	88,688	81,235	69,972	65,972	53,749
	[11] 일반	[403] 키르기스스탄	8,278	12,950	16,767	12,653	12,653	11,636
	[11] 일반	[404] 타지키스탄	1	7,169	1,775	5,439	5,439	2,500
	[11] 일반	[405] 우크라이나	0	700	700	5,055	5,055	5,025

나. 총 괄

□ 종료예정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률 관리 및 후속 조치 필요

한국국제협력단의 국별 협력사업은 사업 기간이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계획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사업추진 제반 여건 등을 조사하는 기획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이후 실제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사업종료연도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낮아 사업기간의 연장이나 사업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사업의 기간이 길었음에도 그동안의 공정률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2026년 종료 예정인 국별 협력사업 중 2025년 9월 말 현재 공정률[83]이 50% 미만인 사업은 총 26건으로, 이 중 10건은 공정률이 25% 미만임.

< 2026년 종료 예정 국별 협력사업 중 공정률 부진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국가	2026년 종료 사업명	총사업비	25.9월말	
				집행액	공정률
1	베트남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23-'26/930만불)	11,997	0	0.0
2	베트남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 역량강화사업('23-'26/495만불)	6,386	1,440	22.5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ICT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21-'26/1,041만불)	12,691	3,974	31.3
4	몽골	몽골 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및 운영 역량강화를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강화 사업('21-'26/1,400만불)	16,940	8,192	48.4
5	몽골	몽골 초중고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22-'26/800만불)	9,040	2,084	23.1

83) 총사업비/누적집행액

6	라오스	라오스 디지털혁신중소기업학과 설립 및 전문인력양성 기반 구축 사업('22-'26/500만불)	5,650	1,541	27.3
7	파키스탄	파키스탄 KP주 아보타바드시 하베리안지역 상수도 공급 지원사업('21-'26/1,200만불)	14,520	6,974	48.0
8	부탄	부탄 스포츠, 보건 및 가치교육을 통한 청소년 개발 지원사업('22-'26/680만불)	7,684	2,440	31.8
9	미얀마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강화 사업('19-'26/950만불)	10,450	2,552	24.4
10	가나	가나 세무행정 현대화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2-'26/220만불)	2,486	999	40.2
11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디지털 거버넌스 기반환경 조성사업('20-'26/1,300만불)	15,470	6,998	45.2
12	카메룬	카메룬 전자정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22-'26/823만불)	9,337	2,585	27.7
13	모로코	모로코 마라케시 친환경 전기버스 교통체계 구축사업('23-'26/1,300만불)	16,770	1,707	10.2
14	탄자니아	탄자니아 도도마주 유수율 제고 시범모델 구축 및 상수도 시설 개선사업('23-'26/382만불)	4,928	602	12.2
15	세네갈	세네갈 미곡가치사슬 강화 2차 사업('20-'26/1,100만불)	13,453	5,546	41.2
16	세네갈	세네갈 국가공중보건 실험실 역량강화사업('22-'26/600만불)	6,780	2,510	37.0
17	볼리비아	볼리비아 고원지역 농업기계화 및 농민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증대 지원사업('13-'26/500만불)	6,900	2,637	38.2
18	파라과이	파라과이 아순시온 국립대학 ICT 혁신센터 설립을 통한 ICT 경쟁력 강화 사업('22-'26/960만불)	10,848	5,036	46.4
19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버스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21-'26/590만불)	7,139	1,516	21.2
20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소외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 및 모자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23-'26/504만불)	6,502	694	10.7
21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사 역량강화 및 유아교육진흥센터 건립사업('21-'26/1,199.7만불)	14,686	5,605	38.2
2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질병부담 경감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사업('22-'26/1,415만불)	15,990	4,185	26.2
23	요르단	요르단 제라시주 마스타바 지역 노후 상수도 관망 개선사업('22-'26/1,034만불)	11,890	3,210	27.0
24	이라크	이라크 변압기 정비소 현대화 및 기술인력 역량강화 사업 ('22-'26/500만불)	5,650	3	0.1
25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전력소외 지역 전력망 구축 2차 사업('23-'26/1,400만불)	18,060	581	3.2
26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자롤리디니 발키-빤지 포욘 철도신설 타당성조사 사업('24-'26/400만불)	5,200	2,048	39.4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특히,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23-’26/930만불)’과 ‘이라크 변압기 정비소 현대화 및 기술인력 역량 강화 사업(’22-’26/500만불)’의 경우 각각 2023년, 2022년 착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정률이 0%대에 불과하여 2026년 종료 이전에 사업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임.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 추진 이전에는 철저한 기획조사를 통해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중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지 정세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 계획 수립 · 시행 등을 통해 국별 협력사업이 사업종료연도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저조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양자무상원조를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81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 대비 263억 9,800만원 감액(△8.6%)된 것으로, 2026년도 전체 국별협력사업 예산 중 39.9%를 차지함.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회계	세부사업	예·결산					2026년 예산안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지역별(국가별) 원조 합계			566,206	789,200	724,346	819,206	790,836	704,483
[2431] 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201,042	275,641	249,271	307,548	296,178	281,150
	[11] 일반	[401] 베트남	28,783	49,646	41,413	57,293	52,293	50,094
	[11] 일반	[402] 인도네시아	14,358	20,971	12,966	17,114	17,114	18,566
	[11] 일반	[403] 캄보디아	22,128	22,864	22,310	21,232	21,232	24,147
	[11] 일반	[404] 필리핀	16,724	31,043	21,414	30,470	30,470	27,632
	[11] 일반	[405] 방글라데시	13,506	13,790	9,349	14,044	14,044	10,125
	[11] 일반	[406] 몽골	14,360	17,122	16,772	20,937	20,937	22,519
	[11] 일반	[407] 라오스	25,276	24,652	26,369	27,290	27,290	25,256
	[11] 일반	[408] 스리랑카	10,952	12,232	18,821	7,975	7,975	8,233
	[11] 일반	[409] 네팔	7,784	9,438	10,123	14,653	14,653	16,850
	[11] 일반	[410] 파키스탄	6,689	9,239	8,810	11,315	11,315	12,395
	[11] 일반	[411] 아시아태평양 일반협력 국가그룹	39,912	62,841	60,440	83,648	77,278	59,292
	[11] 일반	[412] 인도	411	853	189	250	250	699
	[11] 일반	[413] 미얀마	160	950	295	1,327	1,327	5,342

□ 인도네시아(ODA) 사업추진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감액 필요

인도네시아(ODA)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171억 1,400만원) 대비 14억 5,200만원 증액되어 185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5개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그런데, 그 중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체계 개선사업', '인도네시아 국가 사무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철도 지속가능성 향상방안 구축사업',은 2025년 8월 말까지 누적 공정률이 0%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체계 개선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보건인력 관리체계 개선을 통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을 촉진함으로써 보건서비스의 질, 형평성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체계 개선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체계 개선사업 ('24-'28/300만불)	200	1,000	800	400
- 전문인력파견	200	210		
- 역량강화	0	200		
- 기자재	0	590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2025년 1월 작성된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체계 개선사업 연차점검 결과 보고"에서 사업 구성내용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라 2025년 8월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해당 집행계획에서 2025년 연내 예정한 PMC 조달이 아직 사전공고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후 사업 추진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큼.

둘째,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은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의 행정업무 지원을 관장하는 대통령실 직속 기구 국가사무처(SETNEG, Ministry of Secretariat)의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행정 혁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25-'27/300만불)	3	500	497	16,566.7
- 전문인력파견	0	200		
- 역량강화	0	200		
- 직접지원/프로그램	3	100		

그런데 동 사업은 2025년 4월에 작성된 집행계획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내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R/D 체결, 3분기 내 PMC 선정이 이루어지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2025년 11월 현재까지도 R/D 체결이 아직 안 되어 PMC 선정 및 후속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대상이 대통령실 직속 국가사무처인 만큼 기밀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다소 어려운 상태이나, 사업 진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함.

셋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철도 지속가능성 향상방안 구축사업'은 인도네시아 철도 운영 체계를 점검하여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발하고, 연계 가능한 교통 인프라 개발전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복지와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철도 지속가능성 향상방안 구축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철도 지속가능성 향상방안 구축사업('25-'30/1,195만불)	450	3	△447	△99.3
- 전문인력파견	450	3		

그런데 동 사업은 2025년 예산의 집행액이 8월 말까지 전혀 없으며, 2025년 연내 역량강화 초청연수 등 계획한 세부성과목표도 이루어지지 않음.

한국국제협력단은 동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분담 사항에 대해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 취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임.

한국국제협력단은 기획조사 단계에서 현지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수원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여 집행계획에 맞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몽골 울란바토르시 지속가능한 4계절 온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 역량강화 사업’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우려에 따른 재검토 필요

‘몽골 울란바토르시 지속가능한 4계절 온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 역량강화 사업('26-'31/1,300만불)'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겨울철 채소 생산 역량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 및 국민건강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몽골 울란바토르시 지속가능한 4계절 온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몽골 울란바토르시 지속가능한 4계절 온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 역량강화 사업('26-'31/1,300만불)	0	5	5	순증
- 직접지원/프로그램	0	5		

동 사업은 울란바토르시 농업기술센터 구축 및 온실 농가 지원 정책을 통한 겨울철 채소 생산역량 강화를 추진함.

그런데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몽골 스마트농업단지 육성 및 온실채소 보급사업’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음.

<동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사업 비교>

구분	몽골 울란바토르시 지속가능한 4계절 온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 역량강화 사업	몽골 스마트농업단지 육성 및 온실채소 보급사업
사업 주체	한국국제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배경	몽골은 전통적으로 겨울철 채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육식위주의 식생활로 인한 성인병, 비만 등의 문제 발생	몽골의 혹독한 겨울 날씨로 인한 겨울철 채소 생산이 어려워 스마트 온실 구축을 통해 연중 과일 및 채소 생산 확대 필요
기대 효과	몽골의 기후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온실과 울란바토르시 산하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신설해, 농촌지도사를 통한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겨울철 채소 생산 역량강화	몽골 연중 안정적인 채소 자급을 위한 국가 스마트농업단지 육성을 통해 채소 재배기간 확대,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총사업비	179억 4,000만원	59억 8,000만원
대상지역	울란바토르시 (항울구)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후구)
사업 내용	농업기술센터 구축 및 온실 농가 지원 정책을 통한 겨울철 채소 생산역량 강화	**채소연구개발센터 및 첨단형 연동온실 등 시설 구축**, 한국전문가 파견 및 재배 기술 현지 교육 등을 통한 채소 생산 역량 강화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분석 당시 동 사업은 단순히 농업 생산성 향상이 아닌 겨울철 신선채소 생산을 위한 시설 구축이 포함되어 중복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에도 채소연구개발센터(825㎡), 첨단형 연동온실(864㎡), Mid-Tech 단동 이중하우스(3,200㎡ 육묘장 1동 포함 10동), 한면밀폐형 온실(360㎡), 노지시험포장(5,000㎡), 컨테이너팜(40ft, 2개동)과 같이 구체적으로 시설 구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은 2022년 타당성조사 이후 2023년 PCP 접수,

2024년 협의의사록 체결 및 사업 착수가 이루어져, 2025년에 채소연구개발센터 실시설계 및 컨테이너 팜 구축 등이 진행되고 2026년부터 시설물 인수인계가 예정된 상태인데,

동 사업의 2024년 11월 사전 타당성조사 당시 충분히 사업의 중복·유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향후 한국국제협력단은 부처 간 ODA 분절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중복·유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사업을 조사하고, 동 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양자무상원조를 위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498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 대비 522억 500만원 감액(△17.3%)된 것으로, 2025년 전체 국별협력사업 예산 중 35.5%를 차지함.

<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예산안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회계	세부사업	예·결산					2026년 예산안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지역별(국가별) 원조 합계			566,206	789,200	724,346	819,206	790,836	704,483
[2432] 아프리카지역원조			212,829	306,614	282,575	302,087	289,087	249,882
	[11] 일반	[401] 가나	9,222	15,943	15,613	20,583	20,583	18,795
	[11] 일반	[402] 에티오피아	29,697	30,643	28,186	28,644	28,644	23,478
	[11] 일반	[403] 아프리카 일반협력 국가그룹	115,324	187,826	174,739	178,966	173,966	131,620
	[11] 일반	[404] 르완다	15,329	15,714	15,475	17,733	17,733	19,850
	[11] 일반	[405] 우간다	14,334	14,501	13,159	17,547	17,547	19,697
	[11] 일반	[406] 탄자니아	13,984	18,927	16,448	17,931	9,931	18,508
	[11] 일반	[407] 세네갈	8,295	12,853	11,262	12,507	12,507	9,148
	[11] 일반	[408] 이집트	6,644	10,207	7,693	8,176	8,176	8,786

마.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중남미지역 국가원조」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양자무상원조를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802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 대비 141억 4,900만원 감액(△15.0%)된 것으로, 2025년 전체 국별협력사업 예산 중 11.4%를 차지함.

< 2026년도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회계	세부사업	예·결산					2026년 예산안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지역별(국가별) 원조 합계			566,206	789,200	724,346	819,206	790,836	704,483
[2433] 중남미지역원조			79,819	73,671	72,893	94,432	94,432	80,283
	[11] 일반	[401] 콜롬비아	9,370	7,306	8,243	11,229	11,229	9,720
	[11] 일반	[402] 페루	6,703	9,964	6,970	9,497	9,497	17,747
	[11] 일반	[403] 볼리비아	7,361	8,024	9,101	17,250	17,250	13,180
	[11] 일반	[404] 파라과이	10,600	15,701	14,873	11,100	11,100	9,364
	[11] 일반	[405] 중남미 일반협력 국가그룹	45,784	32,676	33,706	45,356	45,356	30,272

바.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중동CIS지역 국가원조」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양자무상원조를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93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 대비 219억 7,100만원 감액(△19.1%)된 것으로, 2025년 전체 국별협력사업 예산 중 13.2%를 차지함.

< 2026년도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회계	세부사업	예·결산					2026년 예산안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지역별(국가별) 원조 합계			566,206	789,200	724,346	819,206	790,836	704,483
[2434] 중동·CIS지역원조			72,516	133,274	119,607	115,139	111,139	93,168
	[11] 일반	[401] 우즈베키스탄	11,310	23,767	19,130	22,020	22,020	20,258
	[11] 일반	[402] 중동·CIS 일반협력 국가그룹	52,927	88,688	81,235	69,972	65,972	53,749
	[11] 일반	[403] 키르기스스탄	8,278	12,950	16,767	12,653	12,653	11,636
	[11] 일반	[404] 타지키스탄	1	7,169	1,775	5,439	5,439	2,500
	[11] 일반	[405] 우크라이나	0	700	700	5,055	5,055	5,025

□ 중앙아시아 지역 의회 관련 ODA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및 적극적 사업 추진 필요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내에는 의회 관련 ODA 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23-'27/1,395만불)'과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23-'27/840만불)'이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공정률이 낮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먼저,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23-'27/1,395만불)'은 우즈베키스탄 상·하원 의회 내 통합 방송시스템 구축 및 시군의회 간 연계기반 강화를 위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4차연도인 2026년에 33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당초 집행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까지 총 사업비의 85.6%인 155억1,7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1월 초 기준 누적집행률은 6.7%이며, 2025년도 예산 18억 1,400만원 중 12억 1,200만원(66.8%)이 집행되었음.

<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 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 사업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2025년 11월초기준 실제 공정률
금액	2,626	12,891	2,548	68	18,135	1,215
누적집행률	14.5	85.6	99.6	100.0	100.0	6.7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에 따르면 이러한 집행부진의 사유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기인함.

첫째, 당초 하원의회를 대상으로 2023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협의의사록 및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의 요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상·하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1년 지연이 발생하였음.

둘째, 2024년 11월 PMC 1개 업체 단독응찰로 유찰이 발생함에 따라 2024년 배정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5년으로 PMC 선정 및 그에 따른 선급 지급 및 업무 진행이 이월됨.

그러나 동 사업이 상·하원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된 이후에 수립된 집행계획에서도 “2024년 3분기에 PMC를 선정하고, 2024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만큼, PMC 선정 절차 자체를 빠르게 진행했다면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재선정 작업을 통해 일정 순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23-’27/840만불)’은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를 통해 국회 입법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4차연도인 2026년에 9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 연도별 예산집행계획[84]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2025년 11월초 기준 실제 공정률
금액	503.1	4,192.5	5,289	606.3	245.1	10,836	2,251.9
누적집행률	4.6	43.3	92.1	97.7	100.0	100.0	20.8
본예산	50	1,200	2,200	-	-	-	-
예산현액	50	2,188	2,200	-	-	-	-
실집행액	49.5	2,171.4	31[85]	-	-	-	-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동 사업의 3차연도인 2025년 11월 초 기준 공정률은 49.3%로, 예산집행계획 상 2025년까지의 누적 집행률이 92.1%인 것을 고려하면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23년과 2024년 동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각각 99.09%, 99.25%임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현재 공정률이 낮은 것은 당초 집행계획에 비해 2023년과 2024년에 배정된 예산이 적었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연계 성과사업으로 아프리카 지역 국별 협력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을 참고할 때, 위 두 사업은 2025년 한-중앙아 국회의장 회의, 2026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이후 연계 성과사업 차원에서 중요성이 큼.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은 두 사업이 계획대로 2027년에 종료될 수 있도록

84) 집행계획 내 미화 예산 집행계획을 2023년 한국국제협력단 편성환율인 1,290원으로 원화 환산한 금액임.
85) 2025년 8월말 기준

성과를 낼 수 있는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계획 대비 집행률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 글로벌 연수

「글로벌 연수」는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고유의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73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9억 6,700만원이 증액(8.8%) 된 것임.

< 2026년도 글로벌 연수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글로벌 연수	66,962	67,973	73,940	5,967	8.8

「글로벌 연수」는 크게 단기 과정인 국별연수·다국가연수와, 장기 과정인 석·박사 학위연수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더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으로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 '부처 연수지원'이 신설되었음.

< 글로벌 연수 사업 세부 내역 >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연수과정 운영비	50,621	53,352	2,731	5.4
- 국별연수	27,384 (2,775명x9.9백만원)	29,885 (2,717명x11백만원)	2,501	9.1
- 다국가연수	4,105 (555명x7.4백만원)	5,534 (465명x11.9백만원)	1,429	34.8
- 특별과정연수	1,100 (100명x11백만원)	-	△1,100	순감
- 학위과정연수(석사)	16,759 (1,055명x15.9백만원)	16,909 (1,063명x15.9백만원)	150	0.9
- 학위과정연수(박사)	1,273 (42명x30.3백만원)	1,024 (34명x30.3백만원)	△249	△19.6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	4,200 (221명x19백만원)	4,200	순증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	-	2,200 (220명x10백만원)	2,200	순증
부처연수지원(N-1)	-	3,000 (24건x125백만원)	3,000	순증
연수지원경비	3,253	2,700	△553	△17.0
- 사업활동지원	1,550 (1식x1,550백만원)	1,400 (1식x1,400백만원)	△150	△9.7
- 연수지원업무	1,703 (1식x1,703백만원)	1,300 (1식x1,300백만원)	△403	△23.7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1,732	1,656	△76	△4.4
- 지식확산 활동 지원	382 (1식x382백만원)	200 (1식x200백만원)	△182	△47.6
- 성과관리 및 평가	45 (1식x45백만원)	45 (1식x45백만원)	-	전년동
- 국별동창회 운영비	1,305 (1식x1,305백만원)	1,411 (1식x1,411백만원)	106	8.1
[83]연수센터지원	6,623	6,832	209	3.2
[91]사업행정비	744	-	△744	순감

□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사업 준비 여부 검토 필요 등

신규 사업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민간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에서 고용과 실습을 연계하고, 본국 귀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4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21명을 선발할 예정임.

< 2026년도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글로벌 연수	66,962	67,973	73,940	5,967	8.8
-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	-	4,200	4,200	순증

기존 한국국제협력단의 연수사업이 개도국 공공부문 인재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비하여, 신규 연수 사업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민간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석사 과정 중 인턴십 과정도 함께 운영하며, 궁극적으로 인재가 본국으로 귀환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기존 연수사업과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비교 >

	기존 KOICA 석사학위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연수 대상자	수원국 공무원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	수원국민
연수기간	최대 17개월	30개월
인 원	1개 국가당 2~3명	1개 국가당 최대 50명
수원국 공식 추천 필요 여부	필요	불필요
연수기관	국내 소재 대학으로 개도국 대상 학위과정 추진을 위한 충분한 역량, 제도 및 인프라를 갖춘 연수기관	
인턴십 여부	X	O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동 사업이 기존에 한국 국제협력단이 수행하던 연수 사업과 그 방식 및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사업 규모도 연수생 221명을 대상으로 4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사업 준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제협력단은 내년 상반기 공고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오리엔테이션(OT)과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현재 사업의 세부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표준 절차(안) >

<table>
<tr><th colspan="7">2026년(1차년도)</th><th colspan="12">2027년(2차년도)</th><th colspan="12">2028년(3차년도)</th></tr>
<tr><td>상반기</td><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r>
<tr><td>준비</td><td colspan="6">OT & 한국어</td><td colspan="6">전공
1학기</td><td colspan="2">인턴
1차</td><td colspan="6">전공
2학기</td><td colspan="2">인턴
2차</td><td colspan="6">전공
3학기</td><td colspan="2">인턴
3차</td><td colspan="6">전공
4학기</td></tr>
</table>

동 사업을 위해서는 수요 조사 및 수원국의 교육기관, 행정기관 및 국내의 교육기관, 산업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과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바, 현재 이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 3월에 완료될 계획임.[86]

이에 대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은 동 용역과 병행하여 세부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내년 초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

86) 한국국제협력단은 'KOICA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침서 및 전문 인재 양성 세부 추진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5년 10월 착수보고를 진행하였음.

명하고 있는데, 동 사업이 단순한 연수 사업에서 나아가 국내의 노동 부족 문제 해결 및 본국 귀환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견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사업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체 예산 대비 운영비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42억원으로, 예상 인원 221명에 1인당 단가를 1,900만원으로 하여 계상한 것임. 1인당 단가 1,900만원 중 약 260만원은 운영비, 1,640만원은 사업비 성격으로,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약 14% 수준임.

< 미래 인재 사업 단가표(1인당) >

구분	지원 내역	세부내역/단가기준 (단위: 천원)						
		단가	수량	소계	1차년 (6개월)	2차년 (12개월)	3차년 (12개월)	산출 기준 및 근거
총 계		-	1인	96,000	**19,064**	39,435	37,501	
I.운영경비	소 계		-	11,591	**2,687**	4,540	4,364	
	위탁 용역	700	3년	2,100	700	700	700	단가: KOICA 석사 단가
	행정비	350	3년	1,050	350	350	350	단가: KOICA 석사 위탁 용역 단가 50%
	예비비	8,441	1식	8,441	1,637	3,490	3,314	단가: 사업비의 10%
II. 사업비	소 계		-	84,409	**16,377**	34,895	33,137	
	항공료 (평균)	1,500	2회	3,000	1,500	-	1,500	단가: 최단 운항순로 2등 왕복항공료
	등록금 (한국어)	1,300	3분기	3,900	2,600	1,300	-	단가: GKS 한국어 연수비 단가와 동일
	등록금 (본과정)	7,000	4학기	28,000		14,000	14,000	단가: KOICA 인문 석사 단가 (이공계 실습비 등 포함) 수량: 2년 과정(4학기)
	기숙사비 (평균)	400	24개월	9,600	2,400	4,000	3,200	단가: KOICA 석사 단가 수량: 학교 내 체류기간 24개월 (한국어 8개월 + 수업 16개월)
	생활비 (학생)	1,200	24개월	28,800	7,200	12,000	9,600	단가: KOICA 석사 단가 수량: 학교 내 체류기간 24개월 (한국어 8개월 + 수업 16개월)
	생활비 (인턴)	400	6개월	2,400	-	800	1,600	단가: KOICA 기숙사비 단가 (인턴 월급 발생에 따른 기본 숙박비만 제공) 수량: 인턴기간 2개월 * 3회
	정착지원금	1,200	1회	1,200	1,200	-	-	
	귀국지원금	600	1회	600	-	-	600	
	건강보험료 (평균)	79	24개월	1,896	474	790	632	단가: KOICA 학위과정 단가
	위탁수수료 및 계수조정 (평균)	5,013	1식	5,013	1,003	2,005	2,005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그런데, 교육부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의 경우 1인당 단가가 약 1,900만원으로 계상된 점은 동일하나, 전체 예산 1,275억원 중 운영비는 1% 수준인 12억 2,300만원으로,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비하여 운영비의 비율이 매우 낮음.

< 교육부 GKS 사업 예산 산출 근거 >

(단위: 백만원)

구분		비용	비고
총계		**127,529**	
운영비		**1,223**	
	신규선발 경비(심사, 오리엔테이션 등)	412	
	학사관리	205	
	동문관리	317	
	사업 전반 운영	289	
사업비(장학금)		**126,306**	
	한국어연수비	7,960	분기당 1,300천원
	등록금(학부, 대학원)	31,466	
	학업장려금	82,298	정착지원금, 건보료, 생활비 성격
	입국/귀국항공료	4,664	
	학업우수장학금	25	

(자료: 교육부 2025년도 예산(확정) 사업설명자료)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석사학위 과정 제공뿐 아니라 인턴십 기회, 국내 취업 연계, 본국 귀환 촉진 등을 포함하여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모델로, GKS 등 기존의 장학 연수 사업에 비하여 관리 부담이 큰 사업임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편성된 운영비가 유사 사업들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예산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셋째, 현재 진행 중인 'KOICA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침서 및 전문 인재 양성 세부 추진 방안 수립 용역'에서 국내 대학과 해외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중인바, 해당 결과를 면밀히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설계

할 필요가 있음.

국내 대학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단기 석사과정생에 대한 산업체의 인력 수요 부족 문제, 현장 인턴십 등을 위한 한국어 능력 문제 등이 발견되었음.

개발도상국 현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국가별 산업 발전 단계가 상이하므로 수원국 산업 단계별 성숙도에 맞춘 국내 대학의 정밀 매칭이 필요하고, 인턴십 과정에서 발생할 언어적 장벽의 문제, 수원국과 국내의 IT 인프라 격차 문제 등이 제시되었음.

< 국내 대학 및 개발도상국 현지 수요조사 결과 시사점 >

국내 대학	○ 어학 성적과 실제 의사소통 능력 간 괴리가 커 인턴십 애로사항 발생 우려 ○ 단기 석사과정생보다 연구 지속성이 높은 박사과정 유학생 선호 경향 ○ 기업 현장에서 석사과정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직접적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학생 지원금에 대한 우려
KOICA 현지 사무소	○ 국가별 산업 발전 단계가 상이하여 수원국 산업단계별 성숙도에 맞춘 국내 대학 정밀 매칭 필요 ○ 산업현장 인턴십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언어·문화적 장벽 제시 ○ 첨단산업 외 기초/뿌리 산업인력 수요 병존 ○ 내전 등 현지의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 존재 ○ 수원국과 국내 IT 인프라 및 교육수준 간의 간극 발생

(자료: KOICA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침서 및 전문 인재 양성 세부 추진 방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 2025. 10.)

동 사업이 교육부의 GKS 사업과 차별화를 가지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 대학과 개발도상국 인재와의 수급 매칭, 충분한 인턴십 기회 제공, 연수 종료 후 지방 기업으로의 취업 제공 또는 본국 귀환 등 체계적인 사후 지

원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바, 동 사업 참여 주체인 국내 대학, 지방의 산업체,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철저히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준비 철저 필요

신규 연수 사업인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은 기존의 단기·소규모·공무원 중심의 연수에서 벗어나 중장기·대규모·민간포함 연수를 실시하여 개도국 현지의 우수한 청년 인재에 대한 효과적인 연수를 제공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글로벌 연수	66,962	67,973	73,940	5,967	8.8
-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	-	-	2,200	2,200	순증

동 연수 프로그램은 2개년에 걸쳐 진행됨. 1차년도인 2026년의 경우 2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연수(1주)와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한 현지연수(5주) 등 총 6주의 연수를 제공할 계획임.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연수생 중 우수 연수생 약 60명을 선발하여 국내에서 2~3주 정도의 초청연수를 실시할 예정임.

연수 대상은 개도국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며, 공무원 외에도 민간 부분을 포함할 예정임. 연수 주제는 리더십 교육 및 수원국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진행할 예정임.

<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 개요 >

□ **주요 방향**
○ 개도국 공공·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청년층(약 5개국, **220여명**) 대상 리더십 교육 등 중장기(2년간, 약 8주) 연수 제공
※ 기존 단기연수는 총 3년(2주씩) 간 매년 공무원 위주로 연수생 15명 선발

□ **추진 목적**
○ **(우수인재 확보)** 개도국 현지의 우수한 청년 미래인재 확보하여, 한국의 미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기회 제공

- ①인원 증대·연수대상 다양화를 통한 상호학습 증진, ②기간 확대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 ③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도 확대

□ **프로그램 운영방안**
○ **(연수방식)** 1차년도220명 대상 6주간 온라인연수(1주)·거점국가* 중심 현지연수(5주), 2차년도우수연수생(60명 이내) 대상 국내 초청연수(2주) 제공
- 1차년도 연수 시 연수기관 주관 평가(역량·학업성취도) 고득점순 우수연수생(30% 이내) 선정, 인센티브로서 2차년도 초청연수 제공
* 차년도 거점국가(아프리카)는 사무소 소재국 중심, 대규모 연수 여건이 마련된 국가 선정(현지조사 예정), 인근국 연수생을 거점국가로 초청

○ **(연수대상)** 개도국 청년층(만 35세 미만) 중심으로 공무원 외에도 민간 부문 포함(학계, 사회적기업, 시민사회 종사자 등)
- 수원국 정부·대학·공관 등 다양한 채널 통한 연수생 추천 기반으로, 업무경험·영어능통 여부 등 종합적 심사를 통해 선발

○ **(연수주제)** 1차년도청년층 리더십을 함양하는 리더십 교육 및 우리 비교우위분야 중 수원국 수요*가 높은 분야(예: ICT - AI, 코딩 등), 2차년도우리나라 발전경험 특화교육, 발전상 공유를 위한 현장방문 등 심화과정 운영
* 거점국가 선정 후, 거점국가·인근국 수원기관 대상 연수주제 수요 확인 예정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아직 연수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연수생 선발 기준, 사업 수행 체계 등이 마련되지 않았음.

동 사업은 기존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해온 단기 연수가 평균 약 17명[87]

87) < 단기 연수 운영 현황 >

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과 달리, 22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수임. 또한, 연수가 2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연수의 형태도 온라인연수-현지연수-초청연수를 혼합한 형태임.

따라서 대규모 인원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커리큘럼 설계, 200명 이상을 4~5주 동안 현지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선정 등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나, 2025년 11월 초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한국국제협력단은 11월 중 기획조사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여건의 적절성 검토, 사업수행 및 의사결정체계 설계, 연수 커리큘럽 기획 및 연수생 선발기준 마련, 산출물·성과지표 및 점검계획 수립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현지연수를 수행할 거점국가를 선정할 계획임.

< 기획조사 개요 >

○ (파견인원) 3인
○ (파견기간) 2025. 11. 16. ~ 11. 22. (한국 출입국 기준) / 가나 아크라
○ (주요 과업)
-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등 현지여건 적절성 검토
- 사업수행·의사결정체계 설계(이해관계자 업무 협조체계, 현지 수행기관-국내 기관 연계방안, 관계기관 여건 파악)
- 연수 커리큘럼 기획 및 연수생 선발기준 마련
- 연수 관련 거점국 및 인근국 정책 분석
- 표제 사업 산출물·성과지표 및 점검계획 수립

	운영횟수	참여국 수	참여자 국가 수	참여자
2020	74회	24국	32국	1,385명
2021	194회	45국	61국	3,842명
2022	216회	48국	51국	4,100명
2023	232회	48국	72국	3,750명
2024	234회	47국	89국	3,613명
합계	950회	212국	305국	16,690명

또한, 동 사업은 현지의 수요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임. 이는 기존에 수행하던 연수 사업들이 n-2년에 실시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연수를 설계하는 방식임에 비하여, 동 사업은 거점국가를 우선 선정하고 그 이후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임.

< 사업 추진 절차 비교 >

구분	사업 절차
기존 소규모 연수	수요조사(n-2년) → 사업계획수립 → 기관선정 및 착수조사 → 사업실시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	사업 계획 수립 → 거점국가 선정 → **수요조사** → 사업실시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은 동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한 커리큘럼 설계 등 연수 준비를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아.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민간의 개발협력사업 참여 활성화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우리 기업의 민간재원, 혁신기술, 비즈니스 전략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77억원(17%)이 증액된 529억 3,0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35,116	45,230	52,930	7,700	17.0

동 사업의 하위 사업으로 ①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내외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사업, ② 개도국에 대한 우리 민간기업의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여 기업의 재무적 수익과 개도국 내 사회적 가치(일자리, 소득증대 등) 창출에 기여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사업, ③ 한국국제협력단이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나 국가에서 양자/다자 파트너의 관련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의 협업사업인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사업 등이 있음.

2026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조달청 혁신제품-CTS' 사업과 '혁신적기술프

로그램(CTS)-TIPS 연계’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각각 2026년도 예산안은 15억원, 30억원임.

<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11,051 (39건x283.4백만원)	11,751 (42건x279.8백만원)	700	6.3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24,725 (60건x412.1백만원)	27,975 (62건x451.2백만원)	3,250	13.1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5,150 (9건x572.2백만원)	4,850 (9건x538.9백만원)	△300	△5.8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2,654	2,354	△300	△11.3
- 기후 전략 및 제도(사업관리체계) 고도화	480 (5건x96백만원)	238 (3건x79.3백만원)	△242	△50.4
- 기후 지식 경험 공유 활성화	40 (4건x10백만원)	122 (4건x30.5백만원)	82	205.0
- 기후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2,134 (158.4만불x1,347원)	1,994 (144.5만불x1,380원)	△140	△6.6
조달청 혁신제품-CTS	-	1,500 (1식X1,500백만원)	1,500	순증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TIPS 연계	-	3,000 (5건X600백만원)	3,000	순증
사업관리비	1,500	1,500	-	전년동
사업행정비	150	-	△150	순감

□ ‘조달청 혁신제품-CTS’ 사업의 한국국제협력단으로의 이관 부적절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조달청 혁신제품-CTS’ 사업은 조달청이 공공성과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지정한 ‘혁신제품’[88]을 ODA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해외 공공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15억원임.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유사 ODA 사업 통합 관점에서 동 사업을 조달청에서 외교부로 이관할 계획이나, 이미 조달청에서 1차년도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의 초기 단계가 진행된바, 현 상황에서 외교부 이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동 사업은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신규 사업이기는 하나, 2025년부터 조달청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실상 기존의 조달청 사업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으로 이관한 것임.

조달청은 총 동 ODA 사업을 3개년(2025년~2027년)으로 계획하였으며, 1차년도 7억 2,000만원, 2차년도 12억 3,300만원, 3차년도 5억 1,300만원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예산으로 7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 중임.

조달청은 ‘혁신제품 ODA 사업’과 한국국제협력단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88)「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조(정의) 3.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CTS)'[89]은 국내 혁신기업의 수출 지원과 개도국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양 사업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예산이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이미 2025년도부터 시작되었고, 대상 국가와 사업 내용도 '필리핀 결핵진단 기술 스마트화 지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사업 수행자도 '한국조달연구원·대한결핵협회'로 특정되어 계약이 진행 중으로, 휴대용 X-ray, 검출기 등 납품 예정인 기자재의 종류도 모두 정해진 상태임.

< 조달청 혁신제품-CTS 사업(필리핀 결핵진단 기술 스마트화 지원) 개요 >

○ **사업명** :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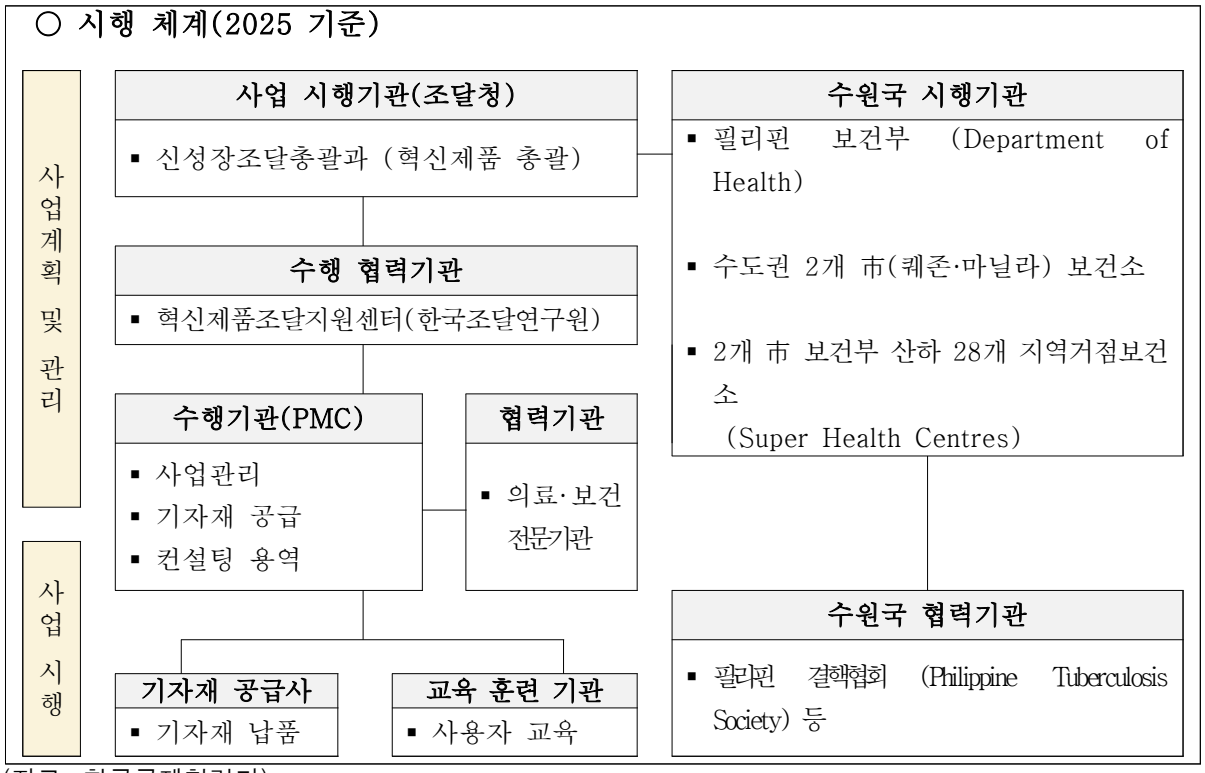
○ **예산 및 기간** : 24억원, 총 3개년 사업 ('25~27년)

○ **사업 내용** : 혁신제품 기반 필리핀 결핵진단 기술 스마트화 지원
- 필리핀 결핵진단 프로세스 컨설팅 및 혁신기술 기반 결핵진단 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체계 구축
- 결핵진단 혁신제품 지원 및 필리핀 관련 혁신기술 역량 강화

○ **기자재 구성 및 납품 목표**

구분	휴대형 X-ray	검출기	방사선 보호가운	노트북 (데이터 포함)	진단 장비 소모품
1차년도	6	6	20	6	1,500
2차년도	20	20	30	20	-
3차년도	3	3	20	3	-
계	29	29	70	29	1,500

89) 한국국제협력단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은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또는 소셜벤처가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임.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로 일원화하는 목표는 수원국 발굴, PCP 접수, 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사 선정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한국국제협력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함이나, 동 사업은 이미 수원국 발굴부터 수행사 선정까지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태로 한국국제협력단의 역할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또한 올해 10월 말 체결된 협의의사록(RD)에도 한국 측 수행기관이 '조달청'으로 되어 있어 현 단계에서의 이관은 오히려 수원국의 혼란을 야기하고 사업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와 같이 내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은 '조달청 혁신제품-CTS 사업'이라는 일반적인 사업명에도 불구, 실제 내용은 '필리핀 결핵진단 기술 스마트화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미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어 조달청을 통해 추진 중인바, 동 사업의 시행기관을 조달청에서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이관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1차년도인 올해 사업 진행 상황이 부진하며, 사업관리비가 과다 편성된 바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조달청은 1차년도인 2025년을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여 기초 조사 완료 후 기자재를 일부 공급하고 역량강화 등 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인 2026년에는 기자재 공급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었음.

< 필리핀 결핵진단 기술 스마트화 지원 사업의 연도별 사업예산 등>

○ **연도별 사업예산** (총 3년, 2,400백만원)

년도	주요 사업 내용
2025년도 (1차년도, 720백만원)	결핵진단 운영 고도화(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 전문가 파견 2억 1,000만원 – 기자재 공급 4억 5,000만원 • (휴대용X-Ray) 15,000,000 x 6개 • (검출기) 12,000,000 x 6개 • (보호가운) 378,000 x 20개 • (노트북) 2,000,000 x 12개 • (데이터) 17,150,000 x 1개 • (AI진단장비) 80,000,000 x 3개 – 역량강화(전문가 초청 및 연수) 6,000만원
2026년도 (2차년도, 1,200백만원)	시범운영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운영 매뉴얼 수립, 적용확산을 위한 전문가 대상 교육 운영
2027년도 (3차년도, 480백만원)	관련 유관기관 등 대상 교육 및 사업 평가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그런데 수원국과의 협의가 지연되며 2025년 11월 초 현재 협의의사록(RD) 체결만이 진행된바, 이는 RD 체결이 4월 초에 종료될 것으로 계획된

것에 비하여 반년 이상의 지연이 발생한 상황임.

또한, 당초 2차년도 예산에는 사업관리비로 3,3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에 사업관리비로 3억원이 편성된바 이는 전체 예산 15억원의 20%에 해당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사업 관리비 비교 >

당초 계획	편성 (2026년도 예산안)
3,300만원 **- 일반수용비(5.4백만원)** ・ 사업운영 관리를 위한 회의자료 번역 및 제작 : 50,000원×100부 = 5,000,000원 ・ 홍보물, 소모품 등 운영경비 : 10,000원x4명x5일x2회 = 400,000원 **- 임차비(10백만원)** ・ 사업운영 관련 수원기관과 회의장 임차 : 1,000,,000원×3일x2회 = 6,000,000원 ・ 차량임차 : 400,000원x5일x2회 = 4,000,000원 **- 국외업무여비(15,5백만원)** ・ 항공비 : 900,000원×4명×2회 = 7,200,000원 ・ 일비 (필리핀 5급) : $30x 4명x 5일x 2회 = 1,680,000원 ・ 숙박비 (필리핀 5급) : $81x 4명x 5일x 2회 = 4,536,000원 ・ 식비(필리핀 5급) : $37x 4명x 5일x 2회 = 2,072,000원 **- 사업추진비(2.4백만원)** ・ 수원기관과의 오만찬비 : 40,000원x 30명 x 2회 = 2,400,000원	**3억원**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의 지연 상황, 사업관리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를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19. 한·아프리카재단

가. 개요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임.

2026년도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외교부 출연금은 전년도(46억 4,900만원) 대비 2억 2,900만원(△4.93%) 감액된 4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한·아프리카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수 입	정부출연금	4,649	4,420	△229	△4.93
	계	**4,649**	**4,420**	**△229**	△4.93
지 출	인건비	1,718	1,721	3	0.17
	경상운영비	582	582	-	-
	사업비	2,349	2,117	△232	△9.88

한・아프리카재단의 수입예산은 「한·아프리카재단법」 제15조[90]에 따른 정부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이며,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체 예산은 100% 정부출연금으로 구성됨.

90)「한·아프리카재단법」
제15조(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수입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도 재단 사업이 전년에 비해 감액되어 추진됨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2,900만원(△4.93%) 감액된 4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지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26년 일용임금 최저임금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300만원(0.17%) 증액된 17억 2,100만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3,200만원(△9.88)이 감액된 21억 1,700만원, 경상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한·아프리카재단 사업비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항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합계	**2,246**	**2,349**	**2,117**	**△232**	**△9.88**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802	764	694	△70	△9.16
- 아프리카 경제 비즈니스 세미나/포럼	185	120	109	△11	△9.17
- 창업아이디어대회 및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교류	501	444	403	△41	△9.23
- 한-아프리카 중소기업 협력 강화	116	200	182	△18	△9.00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882	1,116	622	△494	△44.27
-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 및 청년교류 활성화	282	208	187	△21	△10.10
-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육성 교육	300	524	-	△524	순감
- 한-아프리카 청년 외교역량 강화 교육	-	-	90	90	순증
-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아프리카동창회,Af-PRO)	39	56	50	△6	△10.71
- 아프리카주간(Africa Week) 등 사회문화 인식제고	261	328	295	△33	△10.06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562	469	801	332	70.79

항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 아프리카관련 정보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축적	255	227	177	△50	△22.03
- 연례국제학술회의(서울아프리카 대화) 및 연구증진	307	242	200	△42	△17.36
-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424	424	순증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나. 총괄 검토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확보 필요

한-아프리카재단의 정원은 임원을 포함해 32명이나, 현재 24명의 인건비만 지원받고 있음. 재단은 2018년 설립 당시부터 정원보다 부족한 17명의 인건비를 편성해 오다, 2021년 정원이 32명으로 늘어난 이후에도 현재까지 24명 정도의 인건비를 유지하고 있음.

<재단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임원*	일반직
직제정원	32	2	30
현원	22	2	20

* 임원은 이사장 1인, 상근이사 1인/ 감사(비상근) 1인 미포함

** 정원외: 일반직 2인 육아휴직으로 인한 계약직 2인과 인턴 4인으로 총 6인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 설립 이후 한·아프리카재단 인건비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인건비	878	1,182	1,222	1,376	1,593	1,718	1,718	1,718	1,721
정 원*	21명	21명	22명	32명	32명	32명	32명	32명	32명
편성근거				임직원 18명 계약직 3명 인턴 2명	임직원 23.5명 계약직 2명 인턴 3명	임직원 24명 계약직 1명 인턴 3명			

* 임원 2인(이사장 1인, 상근이사 1인) 포함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국제사회에서 정치·안보 및 자원·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아프리카대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전략적 접근, 외교인프라 강화, 국민적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단의 업무 범위와 사업 규모의 확대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재단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인건비 부족으로 인하여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임시 인력[91]에 의존하여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재단의 직제 정원 32명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5억 6,500만원의 증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91) 육아휴직 2인 중 1인의 경우 상용임금이 편성되지 않아, 위탁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위탁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인건비 증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액안	최종안	산출근거*
인건비	1,718	1,721	565	2,286	· 임원(2명) 322백만원 (161백만원 X 2명) · 직원(30명): 1,964백만원 (65.46백만원 X 30명)

* 재단 보수규정 직급별 평균임금 기준 및 경영평가, 퇴직충당금, 법정부담금 등 포함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제출자료 재작성)

□ 고유사업비 축소로 인한 위탁사업 비중 과다 구조 개선 필요

재단은 지속적인 인건비 부족에 더해, 최근에는 사업비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기관의 재정 구조가 점차 왜곡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구성된 기관운영출연금 대비 사업출연금(고유사업비)의 비율은 2021년 114.8%에서 2026년에는 91.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단 본연의 기능 수행 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연도별 기관운영비 대비 사업비 비율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총 계	**4,155**	**5,193**	**4,771**	**4,425**	**4,649**	**4,420**
기관운영출연금(A) (350-01)	1,934	2,151	2,248	2,179	2,300	2,303
사업출연금(B) (350-02)	2,221	3,042	2,523	2,246	2,349	2,117
사업비 비율(B/A)	**114.8**	**141.4**	**112.2**	**103.1**	**102.1**	**91.9**

이러한 고유사업비 축소는 결과적으로 위탁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데, 재단은 2024년부터 정체된 사업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외부기관의 위탁사업을 적극 수행해 왔으나, 위탁사업의 규모가 고유사업비에 비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예산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한·아프리카재단 2024~2025년 위탁 수행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2025년 10월 기준)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연도	사업명			
2024	글로벌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196	194	중소벤처기업부 총괄 범부처 협업 사업
2024	아프리카 외교관 역량강화 특별연수	111	88	외교부 KOICA 소관
2025	글로벌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375	251	중소벤처기업부 총괄 범부처 협업 사업
2025	양자협력사업 아프리카 정책포럼	70	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입찰 공모

* 2025년 사업은 현재 진행중으로 하반기 집행할 계획임.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 재단 고유사업비 대비 위탁사업비 비율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고유사업비(A)	2,246	2,349	2,117
위탁사업비(B)	307	445	-
위탁사업비 비율(B/A)	**13.7**	**18.9**	**-**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위탁사업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업 수행 성격이 강해 재단의 중장기 전략 사업 추진과는 결이 다르며, 본래 재단이 수행해야 할 사업의 연속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재단이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는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건비와 고유사업비의 확충을 통해 기관운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위탁사업은 재단의 전문성과 운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보완적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조정해야 할 것임.

재단이 對아프리카 외교·협력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관운영비 대비 고유사업비 비율의 정상화와 인건비 증액을 통한 인력 운용 안정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다.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 2026년도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 (B-A)	(B-A)/A
합 계	**562**	**893**	**801**	**△92**	**△10.30**
1. 아프리카관련 정보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축적	255	227	177	△50	△22.03
2. 연례국제학술회의(서울아프리카대화) 및 연구증진	307	242	200	△42	△17.36
3.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424	424	-	동결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사업은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사회 등 주요 동향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아카이브와 간행물 등을 통해 국민의 아프리카 이해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8억 9,300만원) 대비 9,200만원이 감액된 8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조사·연구사업 강화 및 신규 사업 개발 노력 필요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의 내역사업인 「차세대아프리카 전문가 육성·교육 사업」은 '모의 아프리카연합(AU) 총회' 사업과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국제기구 파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재단은 2025년에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국제기구 파견' 사업을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로 이동하였음.

이에 따라, 동 조사·연구 사업의 예산현액이 2025년 8억 9,3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2026년에는 9,200만원이 감액된 8억 1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이에 대해 재단은 기존의 「차세대아프리카 전문가 육성·교육 사업」중 '모의 아프리카연합(AU) 총회'[92]는 교육홍보부가 담당하고,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국제기구 파견'사업은 조사연구부가 담당했던 상황으로, 사

92) '한-아프리카 청년 외교역량 강화 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함.

업 예산과 주무부서의 일치를 위하여 부서별 내역사업 이동 및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설명함.

< 2025년도 주요사업 및 내역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2025년 8월말)

항목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결산	본예산 (A)	예산 현액	집행 (8월)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882	815	1,116	692	256	622	△494	△44.27
-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 및 청년교류 활성화	282	264	208	208	24	187	△21	△10.10
-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육성 교육	**300**	**290**	**524**	**-**	**-**	**-**	**△524**	**순감**
- 한-아프리카 청년 외교역량 강화 교육	**-**	**-**	**-**	**120**	**58**	**90**	**90**	**순증**
-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아프리카동창회,Af-PRO)	39	15	56	46	3	50	△6	△10.71
- 아프리카주간(Africa Week) 등 사회문화 인식제고	261	246	328	318	171	295	△33	△10.06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562	552	469	893	422	801	332	70.79
- 아프리카관련 정보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축적	255	251	227	227	127	177	△50	△22.03
- 연례국제학술회의(서울아프리카대화) 및 연구증진	307	301	242	242	66	200	△42	△17.36
-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	**424**	**229**	**424**	**424**	**순증**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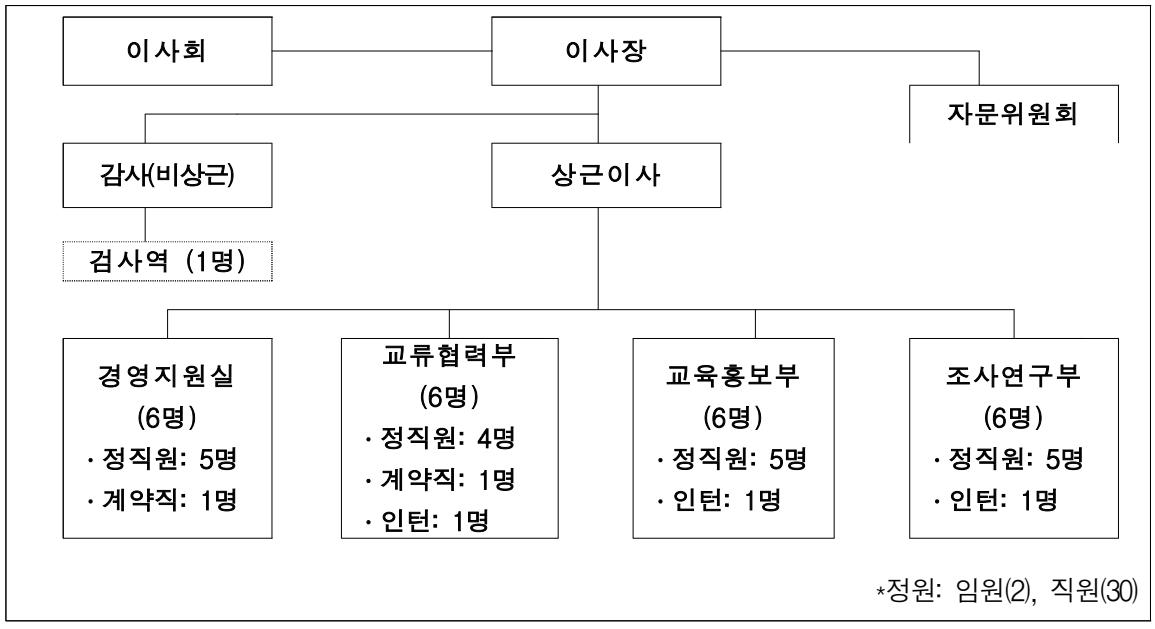
그러나,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은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oung Professionals on Africa, YPA) 양성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도, 언어능력 등 종합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리 청년들을 아프리카지역 소재 국제기구·싱크탱크 등에 파견하여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실질적 업무경험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성격이 조사·연구

보다는 교육적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음.

재단은 2026년도에는 연구형(Think-tank) 트랙과 실무형(International Organization) 트랙으로 이원화하여, 전자는 조사·연구에 보다 중점을 두어 차별화하고, 사후관리 프로그램(멘토링, 취업 컨설팅)을 강화하여 정규화된 아프리카 전문가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현장경험-전문성-기여역량의 3단계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나, 이 또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교육적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됨.

기존에 동 사업을 조사연구부가 담당한 것은 재단의 소규모 인원을 각 부서에 균형적으로 배치하려다 보니 업무 분배의 과정에서 사업의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한·아프리카재단 조직도>



이러한 사업 배치는 표면적으로 각 부서의 예산 및 업무가 균형 있게 보일 수 있으나, 성격에 안 맞는 예산의 이동으로 인하여 오히려 조사·연구

사업의 축소 및 위축을 감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실제로 동 사업의 이동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조사·연구 사업은 재단의 세가지 카테고리 사업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사·연구 사업의 연도별 예산 추이_YPA 파견 사업 이동 없는 경우>

(단위 : 백만원, %)

항목	2024년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	비중	본예산 (A)	비중	예산안 (B)	비중	(B-A)	(B-A)/A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802	35.71	764	32.52	694	32.78	△70	△9.16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882	39.27	1,116	47.51	1,046	49.41	△70	△6.27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562**	**25.02**	**469**	**19.97**	**377**	**17.81**	**△92**	**△19.62**
사업출연금 합계	2,246	100	2,349	100	2,117	100	△232	△9.88

<연도별 조사연구사업 비율 현황_YPA 파견 사업 이동 없는 경우>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전체 사업비(A)	1,500	2,221	2,221	3,042	2,523	2,246	2,349	2,117
조사연구사업 (B)	358	508	508	769	609	562	469	377
조사연구사업 비중(B/A)	23.9	22.9	22.9	25.3	24.1	25.0	20.0	17.8

「한 · 아프리카재단법」은 제1조[93] 및 제7조[94]에서 재단의 설립목적과

93)「한、아프리카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4) 「한、아프리카재단법」

제1호 사업으로 조사·연구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재단의 사업구성을 보면 교류협력 및 교육홍보사업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재단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연구 기능을 재정비하고, 교육·홍보 사업 중심의 구조적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아프리카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교육적 성격의 사업을 조사·연구 항목으로 이관하기보다, 실제로 아프리카 지역의 국별·권역별·분야별 정책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축적할 수 있는 신규 조사·연구사업을 발굴·확대해야 함.

이를 통해 재단이 아프리카 정책 연구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정부 및 민간의 대(對)아프리카 전략 수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프리카 국별·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연구
2.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4.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일반회계 예산안

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세 입		1,507	1,545	38	2.5
세출	합 계	328,907	335,293	6,386	1.9
	일반회계	228,907	235,293	6,386	2.8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100,000	100,000	-	-

(자료: 통일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5억 4,500만원 대비 2.5%인 3,800만원 증액된 15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3,289억 700만원 대비 1.9%인 63억 8,600만원이 증액된 3,352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 일반회계는 전년도(2025년) 2,289억 700만원 대비 2.8%인 63억 8,600만원 이 증액된 2,352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의 출연금은 전년도(2025년)와 동일한 1,00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관	항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	비 고
소 관 합 계		1,507	1,545	38	2.5	
재산 수입	관유물 대여료	256	256	-	-	o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관유물대여료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0	70	50	250.0	o 국고보조금 정산 이자 등
	소 계	276	326	50	18.1	
경상 이전 수입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0	10	-	-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1	1	-	-	o 위약금(지체상금 등)
	기타경상 이전수입	1,220	1,208	△12	△1.0	o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소 계	1,231	1,219	△12	△1.0	

(자료: 통일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

① 건물임대료, 국고보조금 정산이자 등 재산수입은 3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1%인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과태료,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경상이전수입은 12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인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다.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합 계		298,657	328,907	335,293	6,386	1.9
일반회계	계	198,657	228,907	235,293	6,386	2.8
	인 건 비	48,620	51,699	53,893	2,194	4.2
	기본경비	9,448	10,075	11,458	1,383	13.7
	사 업 비	140,589	167,133	169,942	2,809	1.7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100,000	100,000	100,000	-	-

(자료: 통일부)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5년 3,289억 700만원 대비 1.9%인 63억 8,600만원 증액된 3,352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는 2,352억 9,300만원으로 2025년 2,289억 700만원 대비 2.8%인 63억 8,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는 4.2%(21억 9,400만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각각 13.7%(13억 8,300만원), 1.7%(28억 900만원) 증액되었음.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2025년도와 동일한 1,00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통일부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은 남북 평화 공존 기반 구축, 국민 공감 대북·통일정책 추진 등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역점사업을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남북간 대화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대화 추진 예산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 등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26년 프로그램별 예산안(사업비 기준) 내역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25년 예산 (A)	'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167,133	169,942	2,809	1.7
□ 통일정책	13,574	15,268	1,694	12.5
□ 북한정세분석	19,205	26,373	7,168	37.3
□ 인도적 문제해결	21,174	13,557	△7,617	△36.0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0,782	80,749	△33	-
□ 남북관계 기반구축	6,628	6,807	179	2.7
□ 남북회담	240	660	420	175.0
□ 통일교육	15,609	16,004	395	2.5
□ 통일행정지원	9,921	10,524	603	6.1

(자료: 통일부)

사업비의 경우 1.7%가 증액된 가운데 남북회담 175.0%(4억 2,000만원), 북한정세분석 37.3%(71억 6,800만원), 통일정책 12.5%(16억 9,400만원), 남북관계 기반구축 2.7%(1억 7,900만원), 통일교육 2.5%(3억 9,500만원), 통일행정지원 6.1%(6억 300만원)가 증액되었고,

인도적 문제해결은 36.0%(76억 1,7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0.04%(3,300만원)가 감액되었음.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정책」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152억 6,8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6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됨. 증액된 주된 이유는 국내통일기반 조성 사업이 23억 3,700만원 증액됨. 통일정책추진 사업은 4억 2,600만원,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은 2억 1,700만원 감액 편성됨.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263억 7,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71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됨. 증액된 주된 이유는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이 36억 5,3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 10억 8,100백만원 증액,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 6억 7,300만원 증액,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17억 9,500만원 증액 등임.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135억 5,7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76억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됨. 감액된 주된 이유는 북한인권 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 38억 8,800만원 감액,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통일 공론화 사업 내역인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 29억 6,000만원 전액 감액 등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807억 4,900백만원으로 2025년 대비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됨. 감액된 주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46억 2,500백만원 감액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은 15억 3,900백만원,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은 25억 900백만원 증액 편성됨.

「남북관계 기반구축」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68억 7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됨. 증액된 주된 이유는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사업 4억 4,400만원 증액, 청사 등 시설관리 사업 7,000만원 증액 등임.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사업은 1억 7,700만원 감액, 남북전자출입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1억 1,800만원 감액 편성됨.

「남북회담」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 6억 6,0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4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됨. 증액된 주된 이유는 남북회담 추진 사업이 4억 2,000만원 증액됨.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250억 7,7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됨. 증액된 주된 이유는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 3억 1,300만원 증액, 통일교육 자료개발 사업 1억 4,800만원 증액,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사업 2억 9,200백만원 증액 등임.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세부사업은 총 41개로,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증액 세부사업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가율 (B-A)/A	비고
정세분석 역량 강화 (1533-307)	2,091	2,251	3,332	48.0	위성정보센터 운영 1,725백만원
북한자료센터 운영 (1535-308)	1,005	892	1,565	75.4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개관 준비 685백만원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331-500)	575	578	1,074	85.8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 시스템 DB서버 증설·라이선스 구매 496
남북회담 추진 (4031-300)	192	240	660	175.0	분야별 회담추진 551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1,819	1,719	2,907	69.1	무형자산(임차보증금) 1,150
본부 전산 운영경비(정보화) (7035-500)	1,671	1,768	2,497	41.2	노후 업무용 PC 및 SW라이선스 구매 729

(자료: 통일부)

또한, 2026년 신규 내역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 및 2025년 종료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음.

< 2026년 신규사업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통일정책추진(1031-300)	**1,848**	**1,756**	**1,330**	**△426**	**△24.2**
· 통일미래 기획	-	-	665	665	100.0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9,384**	**8,741**	**11,078**	**2,337**	**26.7**
· 사회적 대화 활성화	-	-	2,500	2,500	100.0
· 국민 평화·통일 문화체험	-	-	1,403	1,403	100.0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1535-503)	**-**	**-**	**3,653**	**3,653**	**100.0**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 업무 지원(2133-306)	**396**	**601**	**732**	**131**	**21.8**
·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행사	-	-	100	100	100.0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4,616**	**5,191**	**4,913**	**△278**	**△5.4**
· 미래세대 평화·통일 민주시민 인식 확산	-	-	954	954	100.0

(자료: 통일부)

< 2025년 종료사업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9,384**	**8,741**	**11,078**	**2,337**	**26.7**
· 통일문화진흥	944	1,296	-	△1,296	△100.0
· 통일정책 국민적합의 형성	463	500	-	△500	△100.0
·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1,123	1,226	-	△1,226	△100.0
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	**2,091**	**2,251**	**3,332**	**1,081**	**48.0**
·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183	100	-	△100	△100.0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5,452	12,442	8,554	△3,888	△31.2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63	69	-	△69	△100.0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2135-306)	2,766	3,813	-	△3,813	△100.0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1,850	2,960	-	△2,960	△100.0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4,616	5,191	4,913	△278	△5.4
·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464	1,121	-	△1,121	△100.0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5031-309)	3,583	3,644	3,957	313	8.6
·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93	70	-	△70	△100.0

(자료: 통일부)

2.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가. 수입·지출계획안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 감	
		당초(A)	수정		(B-A)	(B-A)/A
수입	**합계**	**1,443,848**	**1,123,848**	**1,427,774**	**△16,074**	**△1.1**
	자체수입	43,872	43,872	39,079	△4,793	△10.9
	정부내부수입	1,311,853	*991,853*	973,840	△338,013	△25.8
	여유자금회수	88,123	88,123	414,855	326,732	370.8
지출	**합계**	**1,443,848**	**1,123,848**	**1,427,774**	**△16,074**	**△1.1**
	사업비	798,089	478,089	1,000,325	202,236	25.3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	548,737	544,897	374,567	△174,170	△31.7
	여유자금운용	94,334	98,174	50,660	△43,674	△46.3
	기금운영비	2,688	2,688	2,222	△466	△17.3

(자료: 통일부)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4,278억원으로 2025년 1조 4,438억원 대비 1.1%인 16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수입계획은 정부내부수입이 2025년 대비 25.8%(3,380억원) 감액 등에 따라 축소되었고, 지출계획은 사업비가 2025년 대비 25.3%(2,022억원) 증액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이 2025년 대비 31.7%(1,742억원) 감액 등에 따라 축소되었음.

나.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 감		비 고
		당초(A)	수정		(B-A)	(B-A)/A	
수입 합계		1,443,848	1,123,848	1,427,774	△16,074	△1.1	
자체수입	소계	43,872	43,872	39,079	△4,793	△10.9	
	건물대여료	40	40	43	3	7.5	o 미래센터 건물임대료
	민간융자원금회수	22,560	22,560	15,777	△6,783	△30.1	o 대출원금 회수
	민간이자수입	3,856	3,856	3,856	-	-	o 대출이자 수입
	재산이자수입	2,840	2,840	3,765	925	32.6	o 여유자금운용 수입
	민간출연금	150	150	150	-	-	o 민간출연금
	경상이전수입	11,249	11,249	12,311	1,062	9.4	o 무상지원 환입분 등
	잡수입	3,177	3,177	3,177	-	-	o 보험료 수입 등
정부내부수입	소계	1,311,853	991,853	973,840	△338,013	△25.8	
	일반회계전입금	100,000	100,000	100,000	-	-	o 정부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1,211,853	891,853	873,840	△338,013	△27.9	o 경수로원금(차환분), 사업비 부족분
여유자금회수	소계	88,123	88,123	414,855	326,732	370.8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4,855	4,855	4,855	-	-	o 통화금융기관 예치 여유자금 회수분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3,268	83,268	410,000	326,732	392.4	o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여유자금 회수분

(자료: 통일부)

2026년도 수입계획안 규모는 1조 4,278억원으로 2025년 1조 4,438억원 대비 1.1%인 16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자체수입은 391억원으로 2025년 439억원 대비 10.9%인 4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정부내부수입은 9,738억원으로 2025년 1조 3,119억원 대비 25.8%인 3,38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그 중 일반회계 전입금(정부출연금)은 1,000억원으로 2025년과 동일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은8,738억원으로 2025년 1조 2,119억원 대비 27.9%인 3,38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여유자금 회수는 4,149억원으로 2025년 881억원 대비 370.8%인 3,26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융자원금회수는 대출 등에 대한 원금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5년 대비 67억 8,300만원 감액되었고, 재산이자수입은 연평잔 및 예상수익률 증가 전망에 따라 2025년 대비 9억 2,500만원 증액되었음.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경수로 원금 차환 등 감소로 2025년 대비 3,380억 1,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여유자금 회수의 경우 2026년도 여유자금 이월액 증가 예상 등에 따라 2025년 대비 3,267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음.

다.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감	
			당초(A)	수정		(B-A)	(B-A)/A
지 출 합 계		796,466	1,443,848	1,123,848	1,427,774	△16,074	△1.1
일반 지출	소 계	35,165	800,777	480,777	1,002,547	201,770	25.2
	사업비	32,987	798,089	478,089	1,000,325	202,236	25.3
	기금운영비	2,178	2,688	2,688	2,222	△466	△17.3
내부 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상환	571,211	548,737	544,897	374,567	△174,170	△31.7
보전 지출	여유자금운용	190,091	94,334	98,174	50,660	△43,674	△46.3

(자료: 통일부)

2026년도 지출계획안 규모는 1조 4,278억원으로 2025년 1조 4,438억원 대비 1.1%인 16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관련 재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규모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에 필요한 민생·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일반지출은 1조 25억원으로 전년도(2025년) 8,008억원 대비 25.2%인 2,0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사업비는 1조 3억원으로 2025년 7,981억원 대비 25.3%인 2,02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금운영비는 22억 2,200만원으로 2025년 26억 8,800만원 대비 17.3%인 4억 6,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상환은 3,746억원으로 전년도(2025년)

5,487억원 대비 31.7%인 1,74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여유자금운용은 507억원으로 2025년 943억원 대비 46.3%인 43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프로그램별 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통일정책(한반도통일미래센터)」은 통일체험 연수 및 남북간 청소년 교류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2025년 대비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51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남북사회문화교류」는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간 인적 왕래와 학술·종교·문화·예술·체육·문화유산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2025년과 동일하게 103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인도적 문제해결」은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이 2025년과 동일하게 134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구호지원 사업도 2025년과 동일하게 1,122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의료 분야 및 농축산·산림·환경 분야 협력 등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2025년 4,758억 8,500만원 대비 794억 9,500만원 증액된 5,553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남북관계 기반구축」은 남북간 호혜적 경제교류협력을 지원하고 교류협력 기반(SOC)을 구축하며, 개성공단 관리·운영, 기반시설·지원시설 조성 및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경협기반(무상) 사업의 대폭 증액 등에 따라 전년도(2025년) 1,811억 5,500만원에서 1,225억 9,200만원 증액된 3,037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프로그램별 계획안(사업비 기준)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 감	
	당초(A)	수정		(B-A)	(B-A)/A
합 계	798,089	478,089	1,000,325	202,236	25.3
□ 통일정책	5,043	5,043	5,192	149	3.0
□ 남북사회문화교류	10,368	10,368	10,368	-	-
□ 인도적문제해결	601,523	363,679	681,018	79,495	13.2
□ 남북관계 기반구축	181,155	98,999	303,747	122,592	67.7

(자료: 통일부)

<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 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 감	
		당초(A)	수정		(B-A)	(B-A)/A
사업비 합계	**32,987**	**798,089**	**478,089**	**1,000,325**	**202,236**	**25.3**
통일기반조성	**4,220**	**5,043**	**5,043**	**5,192**	**149**	**3.0**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4,220	5,043	5,043	5,192	149	3.0
남북사회문화교류	**3,486**	**10,368**	**10,368**	**10,368**	**-**	**-**
- 사회문화교류지원	3,486	10,368	10,368	10,368	-	-
이산가족교류지원	**1,663**	**13,408**	**13,408**	**13,408**	**-**	**-**
- 이산가족교류지원	1,663	13,408	13,408	13,408	-	-
대북인도적지원	**763**	**588,115**	**350,271**	**667,610**	**79,495**	**13.5**
- 구호지원	-	112,230	77,230	112,230	-	-
- 민생협력지원	763	475,885	273,041	555,380	79,495	16.7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17,687**	**176,191**	**94,035**	**297,443**	**121,252**	**68.8**
- 경제교류협력보험	-	2,501	2,501	3,739	1,238	49.5
- 경협기반(무상)	15,921	102,649	51,324	221,107	118,458	115.4
- 경협기반(융자)	-	59,051	28,220	59,051	-	-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	5,850	5,850	7,332	1,482	25.3
- DMZ 평화적 이용	1,767	6,140	6,140	6,214	74	1.2
개성공단 조성	**5,168**	**4,964**	**4,964**	**6,304**	**1,340**	**27.0**
-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	2,819	2,819	2,819	-	-
- 개성공단 기반조성	5,168	2,145	2,145	3,485	1,340	62.5

(자료: 통일부)

3. 총수입 및 총지출

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합계	**14,405**	**45,379**	**40,624**	**△4,755**	**△10.5**
일반회계 (세입)	1,300	1,507	1,545	38	2.5
남북협력기금 (수입)	13,105	43,872	39,079	△4,793	△10.9

(자료: 통일부)

2026년도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안)은 전년도(2025년) 453억 7,900만원 대비 10.5%인 47억 5,500만원이 감액된 406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감액 사유는 2026년 남북협력기금 자체수입 규모가 전년도(2025년) 438억 7,200만원 대비 10.9%인 47억 9,300만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총수입 계획안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나.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합계	**233,822**	**1,029,684**	**1,237,840**	**208,156**	**20.2**
일반회계 (세출)	198,657	228,907	235,293	6,386	2.8
남북협력기금 (지출)	35,165	800,777	1,002,547	201,770	25.2

(자료: 통일부)

2026년도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 총지출(안)은 전년도(2025년) 1조 296억 8,400만원 대비 20.2%인 2,081억 5,600만원이 증액된 1조 2,378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규모가 전년도(2025년) 2,289억 700만원 대비 2.8%인 63억 8,600만원이 증액된 2,352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안이 전년도(2025년) 8,007억 7,700만원 대비 25.2%인 2,017억 7,000만원이 증액된 1조 25억 4,7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이 주된 증액 사유임.

4. 주요 검토의견

가. 총괄 사항

□ **대표 성과지표인 '통일공감대 형성 지수', 질적 평가 보완 필요**

성과계획서[95]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이고, 국가 예산의 편성과 심사, 집행 및 결산 과정에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되며,

성과계획서에 포함된 성과목표와 지표 등은 사업 집행 후 성과보고서 작성 및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환류되어 예산 낭비 방지, 성과 중심 재정운영 촉진 등에 기여함.[96]

통일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 및 기반 조성'을 임무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프로그램 목표로 구성된 '성과계획 목표체계'를 제시하면서

대표 성과지표로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과 함께 2026년에 새로 도입된 '통일공감대 형성 지수'를 설정하고 있음.

---

95) 성과계획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등에 따라 작성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 구체적인 성과관리 내용을 미리 설정하여 작성하는 공식 문서임.

※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 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96) **성과계획서**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향후 목표와 성과지표, 달성 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는 문서로 사업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류이고, **성과보고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 실제 성과와 목표 달성 여부, 원인 분석 등을 기록하여 계획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한 서류임.

< 통일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 목표체계 >

임 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 및 기반 조성
비 전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실현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 표	▪ **전략목표 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관계를 만들어간다.** - 프로그램 목표 Ⅰ-1. 남북연락채널 복원 및 대화 재개를 도모하며, 재개 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Ⅰ-2. 남북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 되고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Ⅰ-3. 지속가능한 평화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교류협력 체계를 조성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Ⅰ-4.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한다.
	▪ **전략목표 Ⅱ. 평화·통일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향한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1. 통일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강화하여 포용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3. 정세분석 역량 강화 및 북한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4. 전국민 대상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한다.

자료: 통일부(2026년도 성과계획서, p.2. 재구성.)

통일부는 2026년도에 **전략목표Ⅰ(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관계 조성)**에서 남북한의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 남북대화 여건 조성 및 재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 및 질서있는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남북협력기금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생협력 사업, 분야별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 등 남북 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 지원할 계획임.

또한, **전략목표Ⅱ(평화 통일에 대한 통일공감대 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에서 통일정책 추진 기반 마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북한정보 제공 확대, 통일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등 통일공감대 확산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이러한 '2026년도 성과계획'에 따라 전년(2025년) 대비 일반회계 사업보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사업을 강화하였음.

통일부는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민생·경제협력 등 기금 규모의 확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견인하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생협력 사업, 분야별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증액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였다는 설명임.

< 2025년예산과 2026년도예산안 재원배분의 변화 >

(단위: 백만원, %)

전략 목표		'25예산(A)	'26예산안(B)	증감(B-A)
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간다.	금액	494,962	1,009,895	514,933
	(비중)	78.9	87.7	8.8
Ⅱ. 평화 통일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향한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금액	132,701	141,782	9,081
	(비중)	21.1	12.3	△8.8

자료: 통일부(2026년도 성과계획서, p. 21)

신규 대표 성과지표인 '통일공감대 형성 지수'는 사회적 대화, 통일체험 연수 등 국민 참여형 행사를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도를 측정

하기 위한 지표로, 참여자 만족도와 체감효과를 중심으로 산출됨.

이러한 지표는 정책 성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유용하다고 봄.

< '통일공감대 형성 지수'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 근거 >

가. 사회적대화 참여자 만족도(50%)

◦ 측정방법 : 2026년에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측정대상기간: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년 1월말
  * 측정방법 : 사회적 대화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
    · '만족' 이상인 80점의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산식: (실적/목표(80점))*100

◦ 목표치 설정근거 : '26년에 해당 목표치가 최초로 재정성과지표로 설정된 상황('25년 실적 無), 행사에 비교적 만족한 수준인 100점 만점의 80점을 목표치로 설정

나. 통일체험연수 효과성(50%)

◦ 측정산식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진행하는 통일체험연수 설문 중 '통일인식의 변화' 설문의 5점 척도법 측정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측정방법 : 통일체험연수 참가자 설문조사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집계 완료시점 : '27년 1월말

◦ 목표치 설정근거 : '26년 목표치는 최근 3개년('22~'24년) 통일체험연수 '통일인식의 변화' 평균 결과값(4.18점) 대비 3% 상향하는 4.3점(86점)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22년 4.18점 △'23년 4.3점 △'24년 4.08점(△학생 수 감소 △다수 인원 체험연수 지양 등의 사유로 연수 인원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자료: 통일부(2026년도 성과계획서, pp.78-79)

다만, 해당 지표는 조사 대상의 대표성이 제한적이고, 행사참여자의 만족도 측정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설문 구성, 응답자 특성 등 외적 요인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지표의 신뢰성과 지속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보완이 일정하게 요

구된다고 봄.

즉, ‘통일공감대 형성 지수’를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평가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바, 심층 인터뷰, 포커스그룹 토론, 성공·실패 사례의 질적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내면적 인식 변화, 사회적 맥락, 통일정책에 대한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평가체계 구축이 요구됨.

아울러, 이러한 질적 평가 결과가 통일부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체계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정책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체감형 통일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통일공감대 형성 지수’의 장단점 분석 >

구분	장점	단점	개선방안
대표성	정책 성과의 투명성 제고 단기 성과 관리에 적합	참여자 집단의 대표성 한계 행사 중심의 참여자만 반영	전국 단위 인식조사 연계 지역·계층별 대표 표본 확대
측정 구조	만족도 및 효과성의 정량적 집계 용이	내면적 인식·태도 변화 반영 어렵고, 설문 문항 구성 등 외적 변수에 영향	심층 면접 및 포커스그룹 등 질적 조사 병행 질문지 구조 표준화
정책 활용성	객관적 수치 제공으로 정책설계 용이	결과가 단기적 현상에 편중될 위험 있고, 장기·지속 이용 시 신뢰성 저하	질적 평가 반영, 추이 비교·추적 강화
기타	현장 의견 반영, 수치 관리에 장점	의미있는 정책적 인사이트 도출에 한계	정량·정성 복합 평가체계 구축 성공·실패 사례 분석제 도입

□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규모와 세부사업명 변경 검토 필요

통일부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및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는 통일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과 국립통일교육원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516억 9,900만원 대비 4.2%인 21억 9,400만원이 증액된 538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통일부 인건비 예산은 '26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부처 정·현원 및 과거 집행 실적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인건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통일부 인건비	48,620	51,699	53,893	2,194	4.2
-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42,286	44,763	46,254	1,491	3.3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6,334	6,936	7,639	703	10.1

자료: 통일부

또한, 통일부 기본경비는 본부 기본경비(7011)와 소속기관 기본경비(7018)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으며, 통일부 소속 부서의 원활한 통일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비공무원 등) 및 기관운영, 행정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81억 7,000만원 대비 15.8%인 13억 7,100만원이 증액된 100억 2,400만원[97]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통일부 기본경비	9,448	10,075	11,458	1,383	13.7
본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	8,170	8,653	10,024	1,371	15.8
7011 본부 기본경비 - 총액인건비 대상/비대상 본부 기본경비 총액	5,035	5,326	6,617	1,291	24.2
7018 소속기관 기본경비 - 총액인건비 대상/비대상 소속기관 기본경비 총액	3,135	3,327	3,407	80	2.4
국립통일교육원 기본경비 - 총액인건비 대상/비대상	1,278	1,442	1,434	12	0.8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3년 당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을 감안하여 기능과 인력을 축소 개편한 바 있음.

당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를 폐지하고, 회담·교류·개성공단·출입 담당 4개 부서를 1개 소속기관(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하는 등 정원을 617명에서 536명(81명)으로 감축하였음.

97) 통일부장관 관사 전세 임차를 위해 신규 편성된 무형자산 11억 5,000만원을 제외할 경우, '26년 기본경비는 88억 7,400만원으로 '25년 대비 2억 2,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3년 통일부 조직개편 개요 >

▪ (정 원) 617명 → 536명 (81명 감원)

▪ (기 구) ▽1기관(가급) ▽1관(나급) ▽2부(나급) ▽1단(나급) ▽9과 ▽2팀

- 본 부: (前) 3실 3국(1대변인 포함) 6관(1센터장 포함) 1단 31과 5팀
(後)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1센터장 포함) 27과 6팀
(▼1관 ▼1단 ▼4과 ▲2팀)

- 소속기관: (前) 6소속기관 4부 20과 3팀
(後) 5소속기관 2부 15과 4팀
(▼1기관 ▼2부 ▼5과 ▲1팀)

자료: 통일부

그런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핵심 기능을 복원·정상화하고, 국정과제인 '통일부 조직·기능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25.11.4. 시행)를 개정[98]하여 정원을 600명으로 재조정하고 조직을 재설계하였음.

조직개편에 따라 통일부 소속 부서는 총 1본부(가급), 1단(나급), 7과가 새로 증가하게 되었음.

98) 추진 경과
- '25.7~9월, 조직개편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진행
- 9월, 조직개편 관련 기획재정부 협의 진행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입법예고(10.15.~10.20.), 차관회의 상정(10.23.), 국무회의 상정(10.28.), 공포·시행(11.4.)

< 조직개편 개요 >

▪ (정 원) 533명 → 600명 (67명 증원)
- △본부 282명 → 336명 △소속기관 251명 → 264명

▪ (기 구) △1본부(가급) △1단(나급) △7과 ▽1팀

- 본 부: (前)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 27과 6팀
(後) 3실 3국(1대변인 포함) 2단 4관 33과 6팀
(▲1단 ±1단·관 ▲6과)
- 소속기관: (前) 4소속기관 2부 1센터 15과 4팀
(後) 4소속기관 3부 1센터 16과 3팀
(▲1본부 ±1단·부 ▲1과 ▼1팀)

자료: 통일부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 통일부 소관 기본경비 및 인건비는 조직개편 이전('25.11.4.)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조직개편에 상응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음.

이에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및 인원 규모 변동 등을 고려하여 부서 간 기본경비 및 인건비 조정을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600명으로 재조정되면서 2025년 11월 기준 현원은 561명[99]으로 정원(600명) 대비 39명이 부족한 사정으로,

통일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승진임용, 신규 채용, 외부 전입, 파견 복귀, 수습직원 정규임용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2025년도 말 기준 인건비 집행률은 98% 수준으로 예상되고, 202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3.5%)을 감안할 때, 2025년 11월 개정

99) 조직개편 전 정원 533명 대비 현원 561명으로 28명 초과한 상태

된 직제 및 이에 따른 2026년도 중 해당 인력 충원이 이루어질 경우, 2026년도 통일부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67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 예산의 적정한 수준에서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 증액 산출 내역 >

▪ 2026년도 정부안: 53,898백만원 / 현원 561명 **= 1인당 평균 인건비 96,056,953원**
▪ 결원 39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산정 **96,056,953원 * 39명 = 3,746,221,167원**
⇛ 2026년 통일부 인건비 37억 46백만원 증액 필요

자료: 통일부

이와 함께 동 직제 개정에 따라, 통일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 참여제도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 새로운 업무 추진을 위해 한반도평화경청단과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이들 신설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기본경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통일부 본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 조정(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6 정부안 (A)	조정 (B)	증감 (B-A)	조정내역
총 계		10,024	10,024	-	-
본부	합 계	6,617	6,732	115	
	기관운영	4,837	4,837		
	통일정책실 (20명 증가)	492	620	128	협력국(←104), 인권실(←24) · 국제협력과 공무직 (←통일협력국) 38 · 국외여비 (←통일협력국) 66 · 비대상 (←인권실) 24 * 210(12), 240(12)
	인권인도실 (폐지, 58명)	456	0	△456	교류실(→27), 정책실(→24), 관리단(←5), 사회문화(→372) · 기타운영비 국장실 운영 (→평화교류실) △1 · 국외여비 (→평화교류실) △14 · 국외여비 (←남북관계관리단) 5 · 비대상 (→평화교류실) △12 * 210(△5), 220-01(△3), 240(△4) · 비대상 (→정책실) △24 * 210(△12), 240(△12) · 이외 사회문화 이관 △410
	(新)사회문화협력국 (신설, 51명)	-	410	410	인권실(←410)
	정보분석국 (新)정세분석국 (3명 증가)	442	442	-	
	통일협력국 (폐지, 30명)	390	0	△390	교류실(→286), 정책실(→104) · 국장 비서실 공무직 (→평화교류실) △38 · 국제협력과 공무직 (→통일정책실) △38 ·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평화교류실) △26 · 220-02 국외여비 (→통일정책실) △66 · 비대상 (→평화교류실) △222 * 210(△109), 220-01(△32), 240(△36), 430(△45)
	(新)평화교류실 (신설, 44명)	-	423	423	협력국(←286), 인권실(←27), 관리단(←110) · 실장 비서실 공무직 (←통일협력국) 38 · 인도지원과 공무직 (←인권인도실) 38 · 제재대응과 공무직 (←남북관계관리단) 64 ·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통일협력국) 26 · 기타운영비 국장실 운영 (←인권인도실) 1 · 국외여비 (←인권인도실) 14 · 국외여비 (←남북관계관리단) 27 · 비대상 (←인권인도실) 12 * 210(5), 220-01(3), 240(4) · 비대상 (←통일협력국) 222 * 210(109), 220-01(32), 240(36), 430(45) · UNESCAP 파견 (←남북관계관리단) 19
	(新)한반도평화협상단 (신설, 18명)	**-**	**-**	**-**	**증액 필요**
	(新)평화협력지구 추진단 (신설, 19명)	**-**	**-**	**-**	**증액 필요**

소속기관	합 계	3,407	3,292	△115	
	남북관계관리단 (폐지, 63명)	2,881	0	△2,881	교류실(→110), 사회문화(→5) 회담(2,766) · 당국사업과 공무직 (→평화교류실) △64 · 국외여비 (→사회문화협력국) △5 · 국외여비 (→평화교류실) △27 · UNESCAP 파견 (→평화교류실) △19
	(新)남북회담본부 (신설, 75명)	-	2,766	2,766	관리단(→2,766)
	하나원	233	233	-	
	제2하나원	91	91	-	
	북한인권기록센터	62	62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140	140	-	

자료: 통일부

신설 조직의 기본경비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신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예산의 적정한 수준에서의 반영이 필요한 상황임.

<통일부 신설 부서 기본경비 증액 검토(안)>

□ 신규부서 인원 규모

- 한반도평화경청단: 1국 1과 2팀 18명(고위나1, 4급1, 4.5급2, 5급7, 6급4, 7급3)
- 평화협력지구추진단: 1국 2과 19명(고위나1, 4급2, 4·5급1, 5급6, 6급6, 7급2, 8급1)

□ 기본경비 증액 필요액: 2억 8,600만원

< 부서별 기본경비 산출내역 >

한반도평화경청단 기본경비 : 184,300천원

① 총액인건비 대상 한반도평화경청단 기본경비: 13,200천원

예산	산출내역
13,2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9,6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3,600천원

② 총액인건비 비대상 한반도평화경청단 기본경비: 171,100천원

예산	산출내역
171,1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8,2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800천원 ○ 임차료(210-07) : 13,320천원 ○ 국내여비(220-01) : 14,400천원 ○ 국외여비(220-02) : 24,86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5,02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33,500천원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기본경비 : 102,000천원

① 총액인건비 대상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기본경비: 10,200천원

예산	산출내역
10,2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7,2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3,000천원

② 총액인건비 비대상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기본경비: 91,800천원

예산	산출내역
91,8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9,8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800천원 ○ 임차료(210-07) : 5,6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90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8,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28,700천원

자료: 통일부

참고로, 통일부는 폐지되는 통일협력국의 업무가 통일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통일정책실 기본경비를 증액하였고, 일부는 신설되는 평화교류실 기본경비로 전환하는 한편, 인권인도실의 조직 축소에 따라 해당 부서의 기본경비 일부를 평화교류실로 이관하였고, 이외에 공무직 근로자 이동에 따른 상용임금 등을 조정할 계획임.

한편, 통일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기본경비 세부사업 명칭도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봄.

< 기본경비 조정 대상 비교표 >

(단위 : 백만원)

실국별 기본경비	26년 정부안	조정액 (감액)		실국별 기본경비	26년 정부안	조정액 (증액)
[7011-201]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79			[7011-201]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79	38
[7011-207] 총액인건비 대상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84	△84		폐지		
[7011-210]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102	△102		폐지		
[7011-251]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413			[7011-251]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413	90
[7011-257] 총액인건비 비대상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372	△372		폐지		
[7011-260]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288	△288		폐지		
[7018-216]총액인건비 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	516	△516		폐지		
[7018-266]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	2,365	△2,365		폐지		
				[신규] 총액인건비 대상 평화교류실 기본경비		129
			→	[신규] 총액인건비 비대상 평화교류실 기본경비		294
				[신규] 총액인건비 대상 사회문화협력국 기본경비		83
				[신규] 총액인건비 비대상 사회문화협력국 기본경비		327
				[신규] 총액인건비 대상 한반도평화경청단 기본경비		13
				[신규] 총액인건비 비대상 한반도평화경청단 기본경비		171
				[신규] 총액인건비 대상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기본경비		10
				[신규] 총액인건비 비대상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기본경비		92
				[신규] 총액인건비 대상 남북회담본부 기본경비		452
				[신규]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회담본부 기본경비		2,314
기본경비 감액조정대상 사업 수 : 총 6개		△3,727		**기본경비 증액조정대상 사업 수 : 총 12개**		4,013

자료: 통일부

<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명칭 변경 >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정부안	**수정안**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5002-100)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5002-100)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5018-200)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5018-200)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5018-250)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5018-250)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5033-308)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설운영 (5033-308)
총액인건비 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09)	총액인건비 대상 정세분석국 기본경비 (7011-209)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세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7034-501)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 및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7034-501)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및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자료: 통일부

나. 일반회계

(1) ‘통일정책추진’의 내역사업 ‘통일미래 기획’(신규)의 내내역사업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4억 6,500만원)과 관련하여, ‘신진연구자 지원’은 젊은 연구자들의 지속적 확대와 창의적 정책 연구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도록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통일·북한 분야 미래 연구역량과 정책 혁신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통일연구 종합학술대회’ 등 연구교류사업은 국책·민간 연구기관 정례협의체 확대회의와 신진연구자 워크숍 등과 통합·연계 추진함으로써 예산 효율성과 연구 성과의 실질적 확산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내내역사업 ‘평화통일고문회의 운영’(2억원)과 관련하여, 투명한 위원 위촉 기준 마련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그리고 해외정책 설명회 대상국 선정의 전략적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2) ‘국내통일기반조성’의 내역사업인 ‘국민 평화·통일 문화체험’ 중 내내역사업인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신규, 11억 300만원)은 기존 사업과의 내용적 차별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설득·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및 계획이 필요하고,

내역사업 ‘사회적 대화 활성화’(신규, 25억원)와 관련하여, 동 내역사업은 다양한 국민 참여와 법적 기반 확립을 목표로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면밀한 계획 수립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고,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내외 여

론 수렴·자문 기능과 구별되는 정책참여 제도 플랫폼으로서 사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조율 및 목표별 차별화 노력이 필요함.

(3)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 ‘북한인권 실태조사’ 사업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사업들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 조사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피조사자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정세분석 역량강화’의 내역사업 중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과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지므로,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시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의 결과물 중 경제실상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정책연구 기능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47억 3,200만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는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준공 및 개관 준비를 위하여 3개의 세부사업(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개관준비 사업,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세부사업들은 사업단계별 일정이 상호 연계되어 진행되는 만큼, 2027년 상반기 개관을 위해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6)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의 내역사업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지원’(1억 8,500만원)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국고보조

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및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내역사업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1,900만원)과 관련하여, 귀순 의사가 없는 북한주민의 장기 체류 및 해상 송환에 대비해 최소 예산의 확보와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 마련,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한 효율적 예산 운영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7)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의 내역사업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81억 7,600만원)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정책 재검토에 따라 국회 심의 전 신속한 계획 제시가 필요하며 사업 방향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공사비 등 사업비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봄.

(8)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의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2억 1,400만원)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보고서 발간 및 설명회 관련 예산의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고,

내역사업인 '기록센터 운영' 중 심층조사 및 연구에 관한 비용은 그 성격상 정책연구에 해당하므로,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기보다 정책연구비(260-02)로 분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의 내내역사업 중 '지역사회 정착지원'(16억 3,700만원)과 관련하여, 2026년도 예산에 수탁하나센터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지원비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 다른 사업비에서의 전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지정에 상응하는 적정한 운영지원비

증액이 필요하고,

내역사업인 ‘자립·자활 지원’(47억 9,700만원)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구 양상 변화를 분석하여 취업·창업 지원 시 성별에 따른 통계와 성과를 구분하고, 여성 특화형 취업·창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함.

(10) ‘통일교육 현장체험’ 사업 중 ‘DMZ 평화 걷기’ 내내역사업(2억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역 현장에 기반하여 대규모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유사 사업을 재개할 경우 국가 예산의 중복 투자 및 역할 중복이라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중복을 해소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11) ‘통일교육 원내과정’ 사업 중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내내역사업(2억 6,700만원)과 관련하여, 2026년도 동 사업 예산안은 사업계획과 예산 규모 간 정합성이 떨어지고, 교육의 질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역이 과도하게 증액되었으며,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12)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 중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 내내역사업(9억 5,400만원)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의 참여자수는 최근 4년 평균 약 13,108명에 달하고 있는 반면, 신규 사업의 2026년 참여자수는 최대 1,000명에 머물것으로 보여 기존 사업 대비 참여자수가 7.6%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바, 신규사업 추진 시 참여자 수의 급

격한 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중 참여형 프로그램(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등)을 일부 복원하여 신규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신규, 29억 700만원)는 무형자산으로 통일부장관 임차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신규 편성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장관 거주지 및 근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다. 남북협력기금

(1) 통일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평가를 받은 3개 사업 중 구호지원 사업은 2025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2개 사업[민생협력지원, 경제교류 협력대출(융자)]은 오히려 증액하였는바,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에 필요한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되지 않은 3개 세부사업의 편성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2)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 중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내역사업(12억 2,700만원)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교육 사업적 성격이 강하고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성이 높으므로,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민생협력지원의 '농축산·산림·환경 협력'(2,477억 3,600만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집행 가능성, 북한 참여 여부, 현장조사 제한을 감안하여 남북관계의 변화 흐름에 맞춘 유연한 기금 운용과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4) 경협기반(무상)의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40억 6,800만원)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구축운영중인 북한지하자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업, 데이터 표준화, 시각화 기술 고도화 등 실효성 중심의 시스템 개선과 공동 정보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봄.

(5) ‘DMZ 평화적 이용’ 사업 중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내역사업(22억 900만원)과 관련하여, 동 사업 계획액은 일반견학 재개시점이 불투명하고, 최근 인건비성 경비 및 버스임차료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액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Ⅱ.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 통일정책(10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6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C=B-A)	%
[1000] 통일정책			13,640	13,574	15,268	1,694	12.5
	[1031] 평화통일기반조성		13,640	13,574	15,268	1,694	12.5
		[300] 통일정책추진	1,848	1,756	1,330	△426	△24.2
		[301] 국내통일기반조성	9,384	8,741	11,078	2,337	26.7
		[302] 국제통일기반조성	2,408	3,077	2,860	△217	△7.1

자료: 통일부

「통일정책」 프로그램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 통일정책 및 비전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2025년) 예산 135억 7,400만원 대비 12.5%인 16억 9,400만원이 증액된 152억 6,8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통일정책추진 사업에서 4억 2,600만원,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에서 2억 1,700만원 각각 감액되었고,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에서 23억 3,700만원 증액되었음.

나. 세부사업

(1) 통일정책추진(1031-300)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통일정책추진(1031-300)	1,848	1,756	1,330	△426	△24.2
-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908	706	665	△41	△5.8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940	1,050	-	△1,050	△100.0
- 통일미래 기획(신규)	-	-	665	665	100.0

자료: 통일부

‘통일정책추진’(1031-300)은 다양한 차원의 한반도 상황과 안보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통일 이후 통합까지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제도·법제 등을 마련하는 한편, 통일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국내 통일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문기구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통일미래를 기획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7억 5,600만원 대비 24.2%인 4억 2,600만원이 감액된 1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에서 통일연구DB 운영 사업의 종료로 4,100만원이 감액되었고,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종료로 10억 5,000만원이 전액 감액된 대신에 ‘통일미래 기획’에 6억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통일·북한 분야의 미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지속적 추진 필요

‘통일미래 기획’의 내내역사업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은 국책·민간연구기관 정례협의체 운영에 8,500만원, 신진연구자 지원에 1억 8,000만원, 통일연구 종합학술대회 개최에 2억원을 각각 반영함으로써 총 4억 6,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내내역사업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의 2026년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산출 내용
통일미래 기획 -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	국책·민간 연구기관 정례협의체 운영	85	◦ 정례회의 4회, 확대회의 2회 - 일반수용비(210-01) 18 - 사업추진비(240-01) 1 - 일반용역비(210-14) 66
	신진연구자 지원 (180)	100	o 신진연구자 양성: 100 - 일반수용비(210-01) 14 - 정책연구비(260-02) 86
		80	o 신진연구자 워크숍(연 2회) 개최: 80 - 일반수용비(210-01) 4 - 사업추진비(240-01) 1 - 일반용역비(210-14) 75
	통일연구 종합학술대회(가칭) 개최	200	- 일반수용비(210-01) 6 - 임차료(210-07) 4 - 국내여비(220-01) 2 - 사업추진비(240-01) 3 - 일반용역비(210-14) 185
	계	465	

자료: 통일부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 중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인해 폐지되었다가 2026년도 예산안에 다시 반영된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신진연구자 양성에 1억원, 신진연구자 워크숍 개최에 8,0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음.

< ‘신진연구자 지원’, 2026년 예산안 세부 산출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세부 산출 내용
신진연구자 지원 (180)	100	o 신진연구자 양성: 100 - 일반수용비(210-01) 14 · (석사급) 0.3 × 6명 × 2회(서류·면접) = 3.6 · (박사급) 0.3 × 6명 × 2회(서류·면접) = 3.6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0.3 x 8명 x 3회 = 7.2 - 정책연구비(260-02) 86 · (박사급) 8 × 7명 = 56 · (석사급) 6 × 5명 = 30
	80	o 신진연구자 워크숍(연 2회) 개최: 80 - 일반수용비(210-01) 4 · 심사사례비: 0.2 × 5명 × 2회 = 2 · 조달수수료: 1 × 2식 = 2 - 사업추진비(240-01) 1 · 회의준비 및 간담회 : 30,000원 × 15명 × 2회 = 1 - 일반용역비(210-14) 75 · 신진연구자 워크숍 개최(연2회) : 37.5 × 2회 = 75

자료: 통일부

즉, 2022년과 2023년 당시 정보분석국 소관의 세부사업 ‘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 내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양성” 사업[100]으로 추진하였는바, 매년 10명 내외의 신진연구자(박사 및 석사 취득 5년 이내)를 선정하여 박사 700-800만원, 석사 400-500만원 수준의 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북한·통일 관련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젊은 연구자들에게 연구 기회와 정책 제안의 통로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폐지되었음.

통일부는 2026년도부터 기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연구주제를 기존처럼 ‘북한 정세’ 관련에 국한하지 않고 통일·북한 분야 전반에 대한 과제 공모를 추진하고,

기존 사업의 경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에게 ‘연구비’만 지

100) 2022년, 2023년 각각 8,000만원 집행.

원하였지만, 향후 사업은 신진연구자들과 소통·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연 2회) 개최를 포함하는 등 사업설계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함.

< 2022년-2023년,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양성'의 석·박사 연구비 지원 내역 >

(단위: 만원)

연도	과 제 명	연구자	계약금액
2022	김정은 시기 북한 사회주의 농촌건설전략 분석 및 평가 : 보편성과 특수성을 중심으로	박사	800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과 대미외교행태 : 균형과 편승전략을 중심으로	박사	800
	김정은 시기 북한의 평화 담론 연구 : 노동신문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800
	김정은 정권의 대학입시문화에 관한 연구	박사	800
	김정은 집권 10년의 북한 보건의료 발전 전략 연구	박사	800
	김정은 시대 '생태환경-정치' 전략과 대응방안 연구	박사	800
	북한 가요에 나타난 대남전략 : 통일담론을 중심으로	박사	800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박사	800
	김정은 시기 에너지 정책 분석 : 재생에너지 정책 및 농촌 지역 에너지 수급 현황을 중심으로	석사	400
	남북한 전염병 관련법제와 대응체계 비교 연구	석사	400
	신년사를 통해 본 김정은의 통치체계와 내용 : 텍스트마이닝과 인과적 과정 추적법을 중심으로	석사	400
	김정은의 통치이념과 조작적 담화 전략	석사	400
2023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 분석	박사	700
	김정은 시기 자연유산 정책 특성 분석	박사	700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재난협력 법제도 연구	박사	700
	김정은 시기 나선의 도시공간과 일상변화 : 머신러닝과 지리-문화 기술지 기반 연구	박사	700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탐구 : 학교-지역사회와의 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박사	700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유시장 메커니즘 분석 : 디젤엔진용 연료 정제 중심으로	박사	700
	김정은 시대 북한의 농장책임관리제 연구 : 농장의 기업화를 중심으로	박사	700
	One Voice or Multiple Voices? : 관료제적 시각에 기반한 북한 대남 메시지 분석	석사	500
	북·중·러 삼각관계의 형성과 전개	석사	500
	최근 북한의 주택법제 정비 동향과 개선과제 연구	석사	500
	김정은 시대의 과학환상소설에 나타난 북한 '청년'과 '노인'의 표상 관계 연구 -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석사	500
	북한 만성 질환 감소를 위한 보건 사업의 비용 및 효과 추산	석사	500

자료: 통일부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통일 및 북한 연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사회적 지혜와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있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이 폐지 및 신규 편성되는 것이 반복될 경우에는 젊은 연구자의 안정적 성장이 저해될 수 있는 바,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연구과제 공모 주제의 확대와 네트워킹, 워크숍 등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활발히 제시될 수 있고 젊은 연구자들이 현안에 대한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 및 선정주제를 세심하게 기획함으로써 통일정책의 혁신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가칭)통일연구 종합학술대회, ‘국책·민간 연구기관 정례협의체 확대 회의’와 통합 추진 필요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이 중첩된 복합적 과제로 학제 간 협력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통일연구 분야는 연구자·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성과 축적 및 상호 연계가 어렵고 중복연구 및 정보의 단절 현상 발생하고 있는 바, 학제 간 통일연구 플랫폼 구축과 학술대회를 통한 연구자료 공유,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여 연구자 간 시너지 극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는 2026년도에 통일·북한 분야의 국책·민간·학계 연구자 간, 학제간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칭)통일연구 종합학술대회’를 연 1회(2일간) 개최하되, 기존 ‘외교·안보·경제 분야’ 중심에서 ‘IT, 바이오, 인구, 기후환경,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가칭) 통일연구 종합학술대회 개최’ 예산안 산출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산출 내용
(가칭)통일연구 종합학술대회 개최	200	**- 일반수용비(210-01) 6** · 심사사례비: 0.3 × 5명 × 1회 = 2 · 회의자료 제작 등: 0.5 × 4회 = 2 · 조달수수료: 2 × 1식 = 2 **- 임차료(210-07) 4** · 회의실 임차료: 1 × 4회 = 4 **- 국내여비(220-01) 2** · 국내여비: 20,000원 × 5명 × 10회 = 1 · 근무지외출장비: 0.1 × 5명 × 2회 = 1 **- 사업추진비(240-01) 3** · 회의준비 및 간담회: 30,000원 × 20명 × 5회 = 3 **- 일반용역비(210-14) 185** · 통일연구 종합학술대회 개최(연 1회): 185 × 1회 = 185

자료: 통일부

그런데, (가칭)통일연구 종합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는 인적 자원의 풀(pool)이 비교적 협소한 현 통일·북한 분야 학계 내에서 국책·민간연구기관의 연구자 간, 학제간 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해 편성된 행사성 사업인 만큼, 같은 내내역사업에 편성된 ‘국책·민간연구기관 정례협의체 운영’에서의 확대회의(세미나, 워크숍)와 그 역할이 일정하게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는 통일부·국책연구기관 정례협의체[101]가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연구자료 공유, 공동연구 기획, 기관 간 교류를 수행 중이고, 연 1회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음.[102]

2026년 예산안에는 기존 정례협의체에 민간연구기관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 개최를 위해 용역비 6,6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확대회의에 참여할 민간연구기관으로 대학 부설 연구소(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등), 학술단체(북한연구학회, 통일과 북한법학회 등), 민간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 북한연구소 등) 등을 예정하고 있음.

101) 통일부는 2024년 10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약칭 “경인사”)의 ‘통일미래연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경인사 통일미래연구단 국책연구기관(16개)

통일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향후 참여 기관 확대 가능)

102) 2024년에 이어 금년에도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약칭 “경인사”)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임. 2024년 11월 25일(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통일연구원 주관 학술회의는 주제 “가슴 뛰는 통일 대한민국”으로 국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하였고, 통일부가 약 1,850만원, 경인사가 약 5,000만원의 예산을 부담하였음. 2025년에는 11월 28일(금), 코리아나 호텔에서 통일부와 경인사 공동주최, 통일연구원 주관으로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 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할 예정임.

< ‘국책·민간 연구기관 정례협의체 운영’ 예산안 산출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산출 내용
국책·민간 연구기관 정례협의체 운영	85	◦ 정례회의 4회, 확대회의 2회 – 일반수용비(210-01) 18 · 사례비: 0.2 × 19명 * 4회 = 15 · 심사사례비: 0.2 × 5명 * 2회 = 2 · 조달수수료: 1 × 1식 = 1 – 사업추진비(240-01) 1 · 회의준비 및 간담회: 30,000원 × 15명 * 2회 = 1 – 일반용역비(210-14) 66 · 확대회의 개최: 33 * 2회 = 66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정례협의체 ‘확대회의’가 연구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면, ‘학술대회’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1년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제 간 융합과 새로운 통일연구 플랫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두 사업을 차별화하여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일정 기간 지원 감소로 열악해진 통일·북한 분야의 연구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내내역사업에 편성된, 통일·북한학 신진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인 ‘신진연구자 워크숍’(8,000만원 편성) 또한 연구 교류·정보 공유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통일부의 설명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예산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을 적절히 연계하는 사업추진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학술대회’를 위한 2억원 중 1억 8,500만원(92.5%)이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된 바, 이는 장소 임차, 행사운영 용역, 제작·홍보 등에 사용될 것이므로 그 불요불급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IT·바이오 등으로 연구분야를 확장한다는 계획 또한, 북한의 관련 역량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체적 실현가능성이 다소 미흡하여 통일·북한연구의 집중도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연구결과물 생산,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실질적인 연구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

따라서 행사비 중심의 ‘학술대회’ 사업을 연구 협력과 관련된 ‘확대회의’ 사업과 공동기획을 모색하거나, ‘신진연구자 워크숍’ 등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을 위한 위촉 기준 마련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해외정책 설명회’ 계획 필요

‘통일미래 기획’의 내내역사업 ‘평화통일고문회의 운영’은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시민단체, AI 등 첨단산업을 포함한 사회 각계의 원로·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화통일고문회의’를 운영하여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2억원이 신규 편성됨.

< 내내역사업 ‘평화통일고문회의 운영’의 2026년 예산안 산출 근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요구액			산출 내용
통일미래 기획 - 평화통일 고문회의 운영	일반수용비 (210-01)		61	· 정기회 참석 사례비: 0.25 * 30명 * 4회 = 30 · 정기회 회의용품 구입비: 10천원 * 30명 * 4회 = 1.2 · 정기회 현수막제작비: 0.1 * 4회 = 0.4 · 정기회 자료인쇄비: 0.5 * 4회 = 2백만원 · 임시회 참석 사례비: 0.25 * 30명 * 2회 = 15 · 임시회 회의용품 구입비: 10천원 * 30명 * 2회 = 0.6 · 임시회 현수막제작비: 0.1 * 2회 = 0.2 · 임시회 자료인쇄비: 0.35 * 2회 = 0.7 · 고문 위촉장 제작: 20천원 * 30부 = 0.6 · 해외정책설명 면담사례비: $200 * 10명 * 2회 = 5.9 · 해외정책설명 통역사례비: $500 * 3일 * 2회 = 4.4
	임차료 (210-07)		25.4	· 정기회 임차료: 2.5 * 4회 = 10 · 정기회 음향장비임차료: 1 * 4회 = 4 · 임시회 임차료: 2.5 * 2회 = 5 · 임시회 음향장비임차료: 1 * 2회 = 2 · 해외정책설명 차량임차료: $500 * 3일 * 2회 = 4.4
	여비	국내 (220-01)	3	· 정기회·임시회 참석지원 국내여비: 0.1 * 5명 * 6회 = 3
		국외 (220-02)	89	· 항공료: {(9*3명) + (4*2명)} * 2회 = 70 · 일비: {($40*2명*4일)+($35*1명*4일)+($30*2명*4일)}*2회 = 2.1 · 숙박비: {($282*2명*3박)+($223*1명*3박)+($176*2명*3박}*2회 = 10.1 · 식비: {($133*2명*4일)+($107*1명*4일)+($81*2명*4일)}*2회 = 6.3 · 해외정책설명 여행자보험: 50,000원 * 5명 * 2회 = 0.5
	사업추진비 (240-01)		21.6	· 정기회 간담회 : 50천원 * 50명 * 4회 = 10 · 임시회 간담회 : 50천원 * 50명 * 2회 = 5 · 해외정책설명 간담회 : ($50 * 15명 * 3회) * 2회 = 6.6
	계		200	

자료: 통일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4조[103]에 근거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추진’은 역대 정부의 공통 역점과제인 바, 남북관계가 단절된 현 상황에서 국민통합적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고 초당적·범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 간의 소통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는 사회 각계를 대변하는 원로·전문가 30명으로 ‘평화통일 고문회의’(이하 “고문회의”)를 구성하고 의장이 소집하는 정기회(분기별 1회)와 임시회(필요시) 등을 운영하며, 해외 교민 및 싱크탱크 등을 방문하는 해외 정책설명회(2회)를 진행할 계획임.

헌법 제92조[104]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별도로, 동 고문회의는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서 ‘국가적·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원로·전문가들이 모인 통일 논의의 상징적 주체로서 국민 공감대 형성과 평화통일 메시지 전달에 설득력과 무게감을 더할 수 있으며, 범국민적인 의견을 종합하고 통일정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통일부는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문회의 운영을 위한 사회 각계 원로·전문가 30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현역 여부, 소속 단체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사전 접촉이 쉽지 않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 기준을 제시하지

---

103) 「대한민국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104) 「대한민국헌법」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않을 경우 선정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특히, 원로급 인사는 대부분 여러 직위를 겸임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참여 확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문회의 구성을 위한 인선 절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당초의 추진 계획과 달리 매 분기 정기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음.[105]

또한, 위원 수가 30명인 회의체 운영을 위해 음향장비까지 별도 임차해야 하는 회의 장소에서 개최하기보다는, 음향 등 회의설비가 이미 갖추어진 공공기관 회의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임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봄.[106]

한편, 통일부는 한반도문제 당사국(미국, 일본 등), 통일·체제전환 경험국(독일, 헝가리 등), 북미회담 개최국(베트남, 싱가포르 등) 또는 아태 중요국가(필리핀, 호주 등) 중에서 방문국을 선정, 고문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을 활용하여 우리 교민과 해외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약 1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해외 정책설명(2회)을 위한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가등급지 3박 4일 일정으로 두 차례, 원로 위원(2명)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 3명(국장급 1명, 과장급 이하 2명)을 예정하고 있음.[107]

---

105) 통일부는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5.10.31.시행)에 따라 금년 내 구성을 목표로 인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인 바, 내년도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함.

106)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30쪽, Ⅲ. 목별 지침 중 임차료(210-07목) 참조.

107)외여비 산출내역을 보면, 원로 위원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별표 4]

통일부는 개개 위원들이 보유한 역량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정책 입안 및 집행 담당자인 공무원의 역할을 배가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성과를 증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평화통일고문회의, '해외정책 설명'을 위한 사업비 산출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 내역	계
일반수용비 (210-01)	· 면담사례비: $200 * 10명 * 2회 = 5.9 · 통역사례비: $500 * 3일 * 2회 = 4.4	10.3
임차료 (210-07)	· 차량임차료: $500 * 3일 * 2회 = 4.4	4.4
국외여비 (220-02)	· 항공료: {(9*3명) + (4*2명)} * 2회 = 70 · 일비: {($40*2명*4일)+($35*1명*4일)+($30*2명*4일)}*2회 = 2.1 · 숙박비: {($282*2명*3박)+($223*1명*3박)+($176*2명*3박)}*2회 = 10.1 · 식비: {($133*2명*4일)+($107*1명*4일)+($81*2명*4일)}*2회 = 6.3 · 해외정책설명 여행자보험: 50,000원 * 5명 * 2회 = 0.5	89
사업추진비 (240-01)	· 해외정책설명 간담회 : ($50 * 15명 * 3회) * 2회 = 6.6	6.6
계		110.3

자료: 통일부

그런데, 고문회의 운영을 위한 2026년도 사업비(2억원)의 약 55%인 1억

의 '가등급지'(이하 동일)로 일비 $40, 숙박비 $282(상한액 적용, 이하 동일) 및 식비 $133를, 국장급 수행(1명)의 경우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일비 $35, 숙박비 $223 및 식비 $107를, 과장급 이하 수행(2명)의 경우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일비 $30, 숙박비 $176 및 식비 $81를 각각 산정하고 있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22. 5. 9.> 및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 <개정 2021.5.25.> 참조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 나. (생 략)
	다. .....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1,000만원 가량을 해외정책 설명을 위한 출장에 집행할 계획인 바, 회의체 구성이 지연될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상·하반기 출장이 모두 실시되기 어려울 수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출장 시 차량을 임차한 경우 일비를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108]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봄.[109]

아울러, 독일 지역의 경우 독일 통일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사업으로 충분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한정된 정부 예산을 고려할 경우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진 주요국에 한정하여 필요한 대상국을 선정하고 전략적 목표를 세워 통일부의 다른 사업들과 차별화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108)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 ② (생 략)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109) 참고로, 2025년 상반기까지 활동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구성 첫 해(2023년)의 국외여비 집행률이 계획 대비 45.9%에 불과했고, 위원회의 2023년도 독일 출장에 대하여 위원 수(3인)보다 많은 공무원(5인)이 수행한 집행이 부적정했음을 국회가 지적한 사례도 있음. 통일부는 2023년 독일 출장의 경우, 통일준비 차원과 북한인권 차원의 2개 팀으로 나누어 출장을 실시, 각 팀의 통일부 공무원은 단순 수행이 아니라 관련 정책 사례조사를 위해 참석하였다고 설명함. 한편, 국회의 경우 의회외교활동을 위해 해외 출장하는 경우 국회의원 5명까지 공무원이 1명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국내통일기반조성 (1031-301)	9,384	8,741	11,078	2,337	26.7
- 통일정책 대국민소통 활성화	2,137	2,739	3,085	346	12.6
- 통일+센터 설치 운영	4,717	2,980	3,080	100	3.4
- 국민 평화·통일 문화체험	-	-	1,403	1,403	100.0
- 사회적 대화 활성화	-	-	2,500	2,500	100.0
-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510)	(510)	1,010	1,010	98.0
- 통일문화진흥	944	1,296	-	△1,296	△100.0
-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463	500	-	△500	△100.0
- 통일인식 · 북한이해 제고	1,123	1,226	-	△1,226	△100.0

자료: 통일부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통일정책 홍보 및 국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통일관련 서비스 종합지원 및 민간-정부 간 소통·협력 거점 마련,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및 국민 평화·통일문화 등을 통해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과 공감대를 강화하는 한편,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제도화 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체계 구축·운영, 통일·북한 관련 정보의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등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87억 4,100만원 대비 23억 3,700만원이 증액된 110억 7,8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통일정책 대국민소통 활성화에서 3억 4,600만원 증액되었고, 국민 평화·통일 문화체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서 14억 300만원, 25억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음.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은 세부사업 '북한인권 및 자유평화통일 공론화'의 내역사업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 확산' 예산 8억 5,300만원 중 5억 1,000만원이 이관 편성되고 추가로 5억원이 증액되었음.

□ 신규 사업 편성 시 다른 사업과 차별화 필요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국민 평화·통일 문화체험' 사업의 내 내역사업인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은 통일·대북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연령층 및 직종의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행사' 추진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1억 3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음.

<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국내통일기반조성	8,741	8,741	11,078	2,337	26.7
국민 평화통일 문화체험	-	-	1,403	1,403	순증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	-	1,103	1,103	순증

<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1,103,372 천원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 1,103,372천원** ○ **상용임금(110-03) : 33,793천원** 가.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지원인력 보수(1명)(33,793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4,000천원** 가.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운영 : 34,000천원 ・조달수수료 5,000천원 + 기술평가 사례비 6,000천원 + 전문가 의견수렴 3,000천원 + 자료제작 20,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지원인력 500,000원 x 1명 ○ **일반용역비(210-14) : 981,000천원** 가.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운영 위탁 : 981,000천원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 **국내여비(220-01) : 8,900천원** 가.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의견수렴 50,000원x8명x22.2회+2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8,487천원** 가.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업무협의 50,000원x15명x24.64회 ○ **일반연구비(260-01) : 20,000천원** 가. 행사 평가용역 : 20,000천원 x 1식 ○ **고용부담금(320-09) : 6,692천원** 가. 행사 지원인력(6,692천원)

통일부는 동 사업은 문화 형성 추진위원회(가칭, 이하 '문화 형성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예술 활동가 등이 기획단계부터 참여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부 주도의 통일문화행사 사업[110]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설명함.

즉, 기존 정부주도형 사업을 지역참여형 구조로 재구조화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전문가 등 약 10여 명으로 구성된 문화 형성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월별 평화통일문화제를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대시킨다는 계획임.

110) 통일문화진흥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통일문화행사 사업은 2026년 폐지되었음.

< 통일문화행사와 평화통일문화제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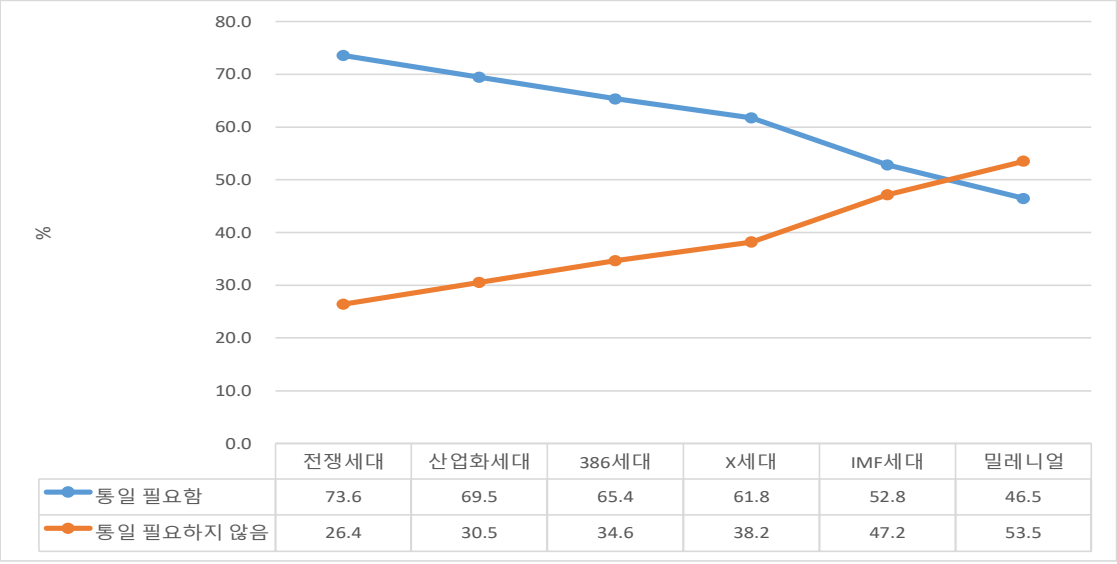
구분	통일문화행사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목적	문화예술을 통한 대국민 통일공감대 확산	
기획	통일부 -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 기획 - 문화예술 행사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 부족	**문화 형성 추진위원회** - 행사 기획단계부터 일반국민, 시민사회, 지자체, 지역문화예술 활동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 (시민사회+지자체+문화예술전문가 10여 명) - 정례적 대면 회의를 통해 행사 주제, 기본방향, 행사별 주요내용 등 기획·발굴 - 각 지자체와도 연초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상 - <시민 참여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각 행사별 현장 점검 및 피드백 등도 지속적으로 수렴
대상	광역 대도시 - 광장 등 별도로 마련된 대형 행사장	**지방 소도시** - 지역 시민들의 생활현장
시기	연 3회 - 회당 2일간 운영	**연 10회** - 회당 개최일수는 다양하게 구성, 회당 2시간~ 5일 등 유동적으로 기획 - 봄, 가을은 야외행사 중심, 여름·겨울은 주로 실내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
내용	• 개막식(장관 및 의원 축사, 국민의례) • 공연(탈북민 합창단, 어린이 태권도 등) • 체험부스(태극기 만들기 등)	•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예술/체육 행사** - 지역사회/기업 연계 프로그램 조사·발굴 - 대국민 공모전을 통한 지역별 행사 컨셉 선정 - 매회 다른 형태와 방식의 문화예술제 추진 ※ (예시) 판교 네이버와 평택 제조업체에서 하는 100인 직장인 통일노래녹음 릴레이 등 (예시) 전라, 경상지역 달리기 동호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리산 둘레길 걷기대회 (예시)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접경지역 재래시장 3곳에 찾아가 지역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민속 공연, 놀이를 함께하는 평화대동제 • **이동형 종합문화부스(트럭 등) 2동 운영** - 평화통일에 대한 대국민 이해·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종합홍보센터(리플릿, 선물 증정) - '쉽게 풀어쓴 대북·통일정책 이야기' 상영 - 소규모 야외 토크쇼 무대 등 다양하게 활용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 및 단절의 장기화로 인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가 하락하고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111] 기존의 정책홍보 중심의 일방향·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관심 수준과 정서에 부합하는 세분화된 문화예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다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 통일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문화예술행사의 특성상 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통일 필요성 인식의 코호트별 비교 (2014~2024) >



	전쟁세대	산업화세대	386세대	X세대	IMF세대	밀레니얼
통일 필요함	73.6	69.5	65.4	61.8	52.8	46.5
통일 필요하지 않음	26.4	30.5	34.6	38.2	47.2	53.5

111) 이상신 민태은 박주화 이무철 윤광일 구본상 Antonio Fiori Marco Milani,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통일연구원, 2025. 45면 참조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의 예시[112]로 '직장인 통일염원 노래 녹음 릴레이'는 직장인 통일염원 노래녹음 릴레이 행사로서, 판교 네이버 사옥 1층에 이동형 녹음부스를 설치해 30~40대 직장인 학부모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계획되어 있음.

그러나 밀레니얼세대(1991년 이후 출생)는 전체 세대 중 유일하게 통일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이 지역사회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문화예술행사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 및 중장년층 등 무관심층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참여 유도방안 및 프로그램 지속성 확보 방안이 필요해 보임.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사업과의 내용적 차별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설득·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및 계획이 필요하다고 봄.

112) 이외에 '남북평화 희망 둘레길 달리기', '접경지역 청년대동제', '종교인과 함께하는 통일한반도 탁구대회' 등이 있음

□ ‘사회적 대화 활성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 필요

현 정부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6년부터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역사업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신규로 편성함.

동 사업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 13억원, ‘사회적 대화 발전방안 수립’ 2억 5,000만원, ‘사회적 대화 기구 관련 홍보’ 5,000만원, ‘국민제안 민관협의체 운영’ 9억원 등 총 25억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예산안 ‘사회적 대화 활성화’ 세목별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세목예산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	1,300	일반수용비(210-01)	· 자료제작 및 물품구매 · 평가 자문 사례비 등	93
		임차료(210-07)	· 행사장, 차량 임차	14
		일반용역비(210-14)	· 사회적 대화 행사 개최	1,161
		국내 여비(220)	· 행사장 답사, 출장 등	10
		사업추진비(240-01)	· 간담회비 등	21
사회적 대화 발전 방안 수립 (260-02)	250	· 분과별(△정치군사분과 △민생·사회분과 △국제협력분과), 청년패널 등 의제개발(4건)		200
		· 패널단 모집 운영 및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1건)		50
사회적 대화 기구 관련 홍보 (210-15)	50	· 온라인 소통 채널 고도화(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소통 플랫폼」(https://www.unikorea.go.kr/promise)		50
국민제안 민관협의체 운영	900	일반수용비(210-01)	·전문가 및 청년 민관협의체 운영 사례비 등 국민참여 소통체계 구축 및 이행 사례비 등	120
		임차료(210-07)	·차량 등 임차	3
		일반용역비(210-14)	· 전문가 및 청년 프로그램 운영 용역 ·국민참여 소통체계 구축 및 이행 용역	753
		국내 여비(220-01)	· 전문가 및 청년 민관협의체 운영 ·국민참여 소통체계 구축 및 이행	12
		사업추진비(240-01)	· 전문가 및 청년 민관협의체 운영 ·국민참여 소통체계 구축 및 이행	12
합 계				2,500

자료: 통일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의 기간(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 동안, 정부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2017년)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통일정책 추진(1031-300)'의 내역사업으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원칙 아래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통일정책 분야 최초로 '사회적 대화' 방식을 추진하였음.

즉, 당시 보수·진보·중도·종단 등 다양한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추진기구 '통일비전시민회의' 주도 하에 총 63회, 연인원 6,000여 명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2021년 6월 26일 '통일국민협약안'[113]을 채택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동 협약안의 확산 및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해 '권역별'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 바 있음.

113) 통일국민협약안은 전문과 협약본문 2개의 장으로 구성됨. 제1장은 시민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 등 세부과제(8가지)를 명시함.

< 2018년~2023년, ‘사회적 대화’ 추진 실적 >

(단위: 백만원)

연도	추진 실적	활동 내역	집행액
2018	공론화 모델 개발 및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	20회, 1,500여 명	510
2019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실시	30회, 3,400여 명	630
2020	통일국민협약 기초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실시	8회, 717명	610
2021	통일국민협약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실시 및 「통일국민협약안」 채택('21.6월)	5회, 418명	554
2022	「통일국민협약안」 확산 및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권역별’ 사회적 대화 개최	31회, 2,253명	566
2023		25회, 2,221명	912
계		60여 회, 6,000여 명	3,782

주: 집행예산은 용역비이며,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행업체 선정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당시 ‘통일국민협약안’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보수・중도・진보 및 7대 종교)가 참여하여 도출한 합의였고, 채택 이후 통일부를 거쳐 대통령 보고(2021.7.8.), 국회의장 보고(2021.9.23.)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사업의 지속성과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114]

2026년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대화 2.0’은 이전 정부의 사업과 비교하여 ‘민간주도, 정부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참여자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설명임.

114) 국회 외통위는, 사업 추진 첫 해(2018년)에는 통일국민협약 사업의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고 통일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소의 기반을 마련한 점 등에 의의가 있으나, 일관된 계획 없이 4.27 남북정상회담, 평창동계올림픽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계획에 없던 사업을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등 사업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한 바 있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2018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2019.8.), pp. 16-19. 참조.

즉, 국민주권에 기반한 대북정책 수립을 위해 '민간주도 정부지원' 원칙 하에 이전 정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 참여 방식과 범위를 한층 확대하여 동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 등을 패널단으로 구성하고,[115]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여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및 법제화 등을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제도화'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에 해당하고, 정권 변화에 따라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2018년 예산 및 2026년 예산안, 편성내역 비교 >

(단위: 백만원)

2018년		2026년안	
세부내역	예산	세부내역	예산안
통일국민협약포럼	100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	1,300
정책연구용역 (대국민 인식조사 모델 개발 및 인식조사)	50	**사회적 대화 발전 방안 수립**	**250**
※다른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과제 개발 및 체계화'에 통일국민협약 모델 개발 및 협약 내용연구로 편성·집행	(100)	사회적 대화 기구 관련 홍보(홈페이지 개선)	50
		국민제안 민관협의체 운영	900
합 계	**150 (250)**	**합 계**	**2,500**

주: 2018년 세부사업 '통일정책(1031-300)'에 내역사업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으로 처음 편성되었고, 당시 예산을 보면 통일국민협약포럼에 1억원, 정책연구용역에 5,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1억 4,100만원을,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과제 개발 및 체계화'에 사회적 대화 의제 개발 및 공공토의 모델 개발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다가 7,7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2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음.

115) 통일부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고, 정부·국회·시민사회가 협업하는 기구' 구성을 위해 의견수렴 중이라고 설명함.

다만, 2026년도 예산안에 사회적 대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2018년 편성 예산의 10배 규모에 해당하는 25억원을 편성하면서도, 현재(2025.10.)까지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고,

지난 9월부터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 2.0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사업비 2,000만원)을 진행(2025.9.~12월)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는 바, 사업의 방향 및 내용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임.[116]

구체화된 설계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의 성과 및 한계, 국회에서의 지적사항 등을 검토하고 철저한 사전계획 및 차별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봄.

참고로, 통일부가 2019년도 예산안 심사(2018.11.)에서 제시했던 ‘통일국민협약 포럼 및 사회적 대화 참여자 구성(안)’ 및 2018년도 결산(2019.8.) 시 설명한 ‘통일국민협약의 사업 추진 구도’는 각각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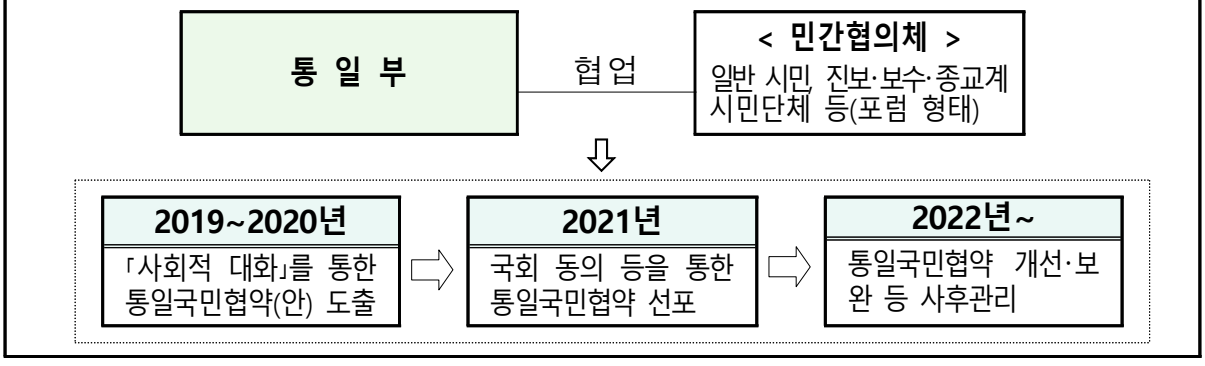
116) 2026년도 예산안에도 ‘사회적 대화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260-02)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미 축적된 사회적 대화의 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 개발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봄.

< 통일국민협약 포럼 및 사회적 대화 참여자 구성(안) >

통일국민협약 포럼(안)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참여자 구성(안)
▪ **(개념)**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공론화)를 주관하는 민간 주도의 플랫폼 ▪ **(구성)** 시민단체(진보·보수·중도)·종교계·학계·정계 등 대표성을 갖는 민간 인사로 포럼(위원회 성격) 구성, 중앙조직 및 17개 시·도 네트워크 조직 운영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범시민사회단체연합·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과 협업하여 '18년 하반기 포럼 구성 ▪ **(기능)** △사회적 대화 규칙·절차 제정, 참여자 구성 △의제 선정 및 사회적 대화 과정 관리 △협약안 심의·확정 △협약 이행과정 관리·감독 등 「통일국민협약」 전 과정 주관	※ 참여자는 △일반 국민 △진보·보수 활동가·전문가 △미래세대 등 균형 있게 구성 o 4대 권역별 △시민 100명(시민 50명, 진영 50명) △미래세대 100명 등 총 200명 • **시민 패널** :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진보·보수·중도) • **진영 패널** : 이념 지향이 분명한 진보·보수 시민사회 활동가 등 구성(추천) • **미래세대 패널** : 고등학교(50명) 및 대학교(50명) 재학생 구성 • **전문가 패널** : 양 진영 추천을 통해 구성(토의참가×, 패널 활동 지원)

자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2019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p.14 인용

< 2019년의 '통일국민협약' 추진 구도 >



자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2018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p.16 인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업과 차별화 추진 필요

헌법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및 국민적 합의 도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도 세부사업 ‘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의 내역사업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에 사업비 11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업 비교 >

구 분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화 (정의) 다양한 시민들이 정부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bottom up 방식의 숙의 민주주의 프로그램	
사업 목적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 조정 및 국민통합 기반 마련, 통일·북한 관련 정보의 대국민 신뢰 제고 등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민주평통이 함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26년 예산안 및 세부 편성 (단위: 백만원)	2,500	1,144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 1,300 사회적 대화 발전방안 수립 250 사회적 대화 기구 관련 홍보 홈페이지 운영 50 국민제안 민관협의체 운영 900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위원회 20 국내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782 해외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273 영상 제작 16 분기별 분석자료집 및 종합자료집 발간 53

자료: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통일부는 민주평통에서 추진하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통일부 사업의 경우 ‘민간’이 그 운영주체로서 시민사회·

국회・정부가 협업하는 형태로 참여하여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제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민주평통 사업의 경우 국내(또는 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 통일여론수렴 및 통일논의 활성화를 추진하게 되므로 사업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또한, 통일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는 국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117] 사회적 대화의 축적된 경험은 향후 통일문제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숙의 토론을 통해 실질적 통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주평통과도 중복되지 않도록 기관 간 소통을 통해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임.

따라서, 통일부는 민주평통 등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기관들과 사전에 조율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함으로써, 다른 정부기관들의 유사사업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동 사업이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17) 김남중 차관, "지속가능 통일정책 위한 사회적 대화", <파이낸셜 뉴스, 2025.9.21.>

□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지정’ 보조의 필요성 재검토 필요

내역사업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은 민간 차원의 통일 활동을 지원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도(2025년)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0억 1,000만원이 편성됨.

<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비교>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10	※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세부사업(2135-306) ○ 일반용역비(210-14) : 10 가. 회계검증 용역 · 보조금 회계검증 1x10개 = 10 ○ 민간경상보조(320-01) : 500 가. 민간단체 지원 · 민간단체 평화통일 활동 국고보조금 지원 100 x 5개 = 500	1,010 (+500)	※ “국내통일기반조성” 세부사업(1031-301) ○ 일반용역비(210-14) : 10 가. 회계검증 용역 · 보조금 회계검증 1x10개 = 10 ○ 민간경상보조(320-01) : 1,000 가. 민간단체 지원 · 민간단체 평화통일 활동 국고보조금 지원 100 x 10개 = 1,000

자료: 통일부

금년도까지는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 사업에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들을 통합 운영한 바,[118]

통합 운영의 경우 예산 집행의 단순화 등 예산 운용의 관점에서는 장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 목적이 다양화되고 예산 집행의 성과

118) 2025년까지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 사업 중 내역사업 “북한인권증진활동 지원”은 인권인도실(북한인권증진과)에서, 내역사업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 확산”에서 통일협력국(통일협력기획과)은 ‘민간단체 자유민주평화통일 활동 지원’ 사업을, 국립통일교육원(사회교육협력과)에서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을 각각 추진함. 즉, 하나의 세부사업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가 공통된다는 점에서 3개 실·국에서 분산하여 추진함.

평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평가관리 또는 행정감사 등에서 부서별 책임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음.

이에 통일부는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을 구성하던 사업 중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을 폐지하고, '민간단체 자유민주평화통일 활동 지원'은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의 내역사업으로,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5031-309)'의 내역사업으로 각각 이관하여 2026년부터 추진하기로 함.

통일부는 통일운동의 대표단체라 할 수 있는 민족통일협의회(이하 "민통")를 1981년부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를 1998년부터 지원하여 왔음.

< 단체 개요 >

구 분	단체 구성(임원)	회원 구성	주요 사업
민족통일협의회 ('81.2.27. 설립)	도재영 의장, 부의장 14명, 시도회장 17명, 사무총장 1명, 선임 이사 14명, 감사 2명 등	전국 17개 시도 및 230여 개 시군구협의회로 구성(10만여 명)	통일공감, 미래세대 통일역량 강화사업 등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98.9.3. 설립)	김삼열 대표상임의장 외 7인, 공동의장 25인, 집행임원 21인 등	정당, 종교, 경제, 문화예술, 여성, 시민사회 등 200여개의 각계각층 단체와 인사들로 구성	민족화해 및 국민합의 통일사업 등

< 민족통일협의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보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민 통	312	267	267	267	200	190
민화협	700	630	630	630	160	143
계	1,012	897	897	897	360	333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국회 및 기획재정부의 지적사항(참고자료 참조) 등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지정'에서 '공모'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 통일부는 2026년도 사업부터 민통과 민화협에 대한 보조방식을 '지정'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정부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정'과 '공모'가 있는데, 두 방식은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와 정책 집행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며, 각각의 장단점은 그 운영 목표와 행정환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

사전에 특정 단체나 기관을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통일·인권·사회복지 등 정부의 일관된 추진체계가 필요한 분야에서 경험과 신뢰를 갖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정책 목표와 사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특정 단체로 예산이 편중될 위험이 있고, 신규 단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단체가 진입하기 어려워 사업의 다양성과 경쟁성이 떨어지며 심사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119]

119) 한편, '공모' 방식은 정부가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선정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공모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경쟁적으로 제시되므로 창의적 정책 모델을 발굴하기 용이하고, 행정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도 또한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단기성과 중심의 제안이 늘어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이 약화될 수 있고,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단체는 절차적 부담 탓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보조금 지원 방식 비교 >

구분	지정방식	공모방식
개념	특정 단체나 기관을 미리 지정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응모한 단체 중 심의를 통해 선정
절차	행정기관 내부 결정 또는 협의로 지정, 심의 절차 간소	공고 → 신청접수 → 선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장점	-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용이 - 예산 집행 속도 빠름 - 정부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쉬움	- 경쟁을 통한 공정성·투명성 확보 - 사회의 다양한 참여 유도 - 혁신적 아이디어와 신규 단체 발굴 가능
단점	- 특정 단체 편중 가능성 - 투명성 부족 및 특혜 논란 소지 - 신규 단체 진입장벽 존재	- 절차 복잡 및 행정부담 증가 - 단기성과 위주 사업 제안 - 행정 경험 적은 단체 불리
적용 적합분야	장기간 축적된 전문성이 필요한 위임·지정사업 (예: 제도적 협력기관, 법정사업 등)	국민참여형, 사회혁신형, 지역연계형 신규 사업 등 다양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사업
제도적 방향	제한적 예외 허용 (필요시만 지정 가능)	원칙적 운영 방식으로 권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필수)

통일부는 민통과 민화협 두 단체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전국 조직(지역별, 회원단체별 협의체)으로 전국 각지에 미치는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므로 사업의 연속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지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과 함께, '지정' 보조금의 근거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120]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121]을 제시하고 있음.

1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 (생 략)
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1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이와 같은 통일부의 입장과 같이 민통·민화협 등 일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현행 ‘공모’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더라도, 국회 및 기획재정부의 종전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발생 우려가 있는 관행적 지원, 공정성 논란 등이 없도록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공재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민간의 창의성·공익성을 지원하려는 보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서도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자료]

<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회 등 지적사항 >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외통위)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47) 민간단체 지원방식 개선필요	ㅇ [지적사항] 통일부는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3개의 민간단체에만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민족통일협의회는 '82년('01~'08년 제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03년, 통일교육협의회는 '02년부터 관행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2년) 1,420백만원 → ('23) 전년 동 (민통 267, 민화협 630, 통일교육협의회 523) ㅇ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것	ㅇ '24년 예산은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음. - 全 민간단체 대상으로 공모 추진 예정임 ㅇ 조치완료일 : '24년 1월 1일

○ 2022년도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평가요약 부분 등)

구 분	국내통일기반조성(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총평
평가결과	· 사업방식변경 -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들 간의 유사중복사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결과 위주의 객관적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문제점	· 법령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보조사업의 효과성에서 구성의 합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달성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함. - 보조사업이 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부족하여 보조사업의 내역사업과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보조사업 간 유사중복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통일부 내의 여타 국고보조사업(사회통일교육내실화, 학교통일교육강화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 보조사업이 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결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종합평가 및 제언	본 사업은 여러 특성상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일부 사업방식변경을 통해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의 효과성에서 구성의 합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달성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함. - 보조사업이 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부족하여 보조사업의 내역사업과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화협과 민통의 내역사업 간 유사 중복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통일부 내의 여타 국고보조사업(사회통일교육내실화, 학교통일교육강화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민화협과 민통 이외의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공모 방식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국제통일기반조성 (1031-302)	2,408	3,077	2,860	△217	△7.1
-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	373	447	447	-	-
-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1,614	2,520	2,363	△157	△6.2
-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421	110	50	△60	△54.5

자료: 통일부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및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30억 7,700만원 대비 7.1%인 2억 1,700만원이 감액된 28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에서 1억 5,700만원,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에서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2. 북한정세분석(15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6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C=B-A)	%
[1500] 북한정세분석			10,632	19,205	26,373	7,168	37.3
	[1533]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강화		3,963	5,376	6,423	1,047	19.5
		[301]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	340	306	△34	△10.0
		[307] 정세분석 역량 강화	2,091	2,251	3,332	1,081	48.0
		[502]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1,872	2,785	2,785	-	-
	[1535] 북한자료센터 운영		6,669	13,829	19,950	6,121	44.3
		[308] 북한자료센터 운영	1,005	892	1,565	673	75.4
		[310]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5,664	12,937	14,732	1,795	13.9
		[503]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	3,653	3,653	100.0

자료: 통일부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은 북한정보 수집·분석 및 정세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 상황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 및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2025년) 예산 192억 500만원 대비 37.3%인 71억 6,800만원이 증액된 263억 7,300만원임.

나. 세부사업

(1)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1533-301)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	340	306	△34	△10.0
-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	340	306	△34	△10.0

자료: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1533-301)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북한의 경제·사회·주민생활·주민의식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와 같은 공개보고서 발간 등 조사 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3억 4,000만원 대비 10.0%인 3,400만원이 감액된 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사업의 효율화 방안 필요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심층 인터뷰를 통한 북한의 경제·사회·주민생활·주민의식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3억 4,000만원 대비 10.0%인 3,400만원이 감액된 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기존(2010년~2023년)에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24년에 중단되었고, 2025년부터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음.

동 사업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사업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실시하는 ‘탈북민 실태조사’ 사업이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2.6%가 감액된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및 북한인권 실태조사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 조사	340	306	△34	△10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964	875	△89	△9.2
기록센터 운영	716	628	△88	△12.3
탈북민 실태조사	190	90	△100	△52.6

자료 :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는 북한 경제·사회 및 주민의 생활상의 실상과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하나원 입소 및 사회 진출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활동·주민생활·주민의식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임.[122]

<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주요 조사 내용 >

조사항목	내 용
일반공통사항	연령, 학력, 지역 등
경제실태	경제 전반, 국영경제 실태, 사경제 확대 등
사회실태	식생활, 교육, 정보통신, 교통시설, 보건의료 등
주민의식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자료: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 목차 참조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약 1,100여 개의 문항에 대해 1:1 설문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후에 최근 북한 변화와 밀접한 주제 및 정량조사의 보완 측면에서 주요 설문 중 응답이 미비한 주제 등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사업의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306	○ **일반연구비(260-01) : 160** **< 연구용역 1건 >** 가. 인건비 22 나. 정량조사비 108 다. 인쇄비 3 라. 기타 27 ○ **정책연구비(260-02) : 141** **< 연구용역 1건×14 >** 가. 인건비 45

122) 기존 사업의 결과는 Ⅲ급 비밀로 관리하여 공개하지 않았으나, 북한 실상 알리기 차원에서 2023년 사업의 결과물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2024년 2월)한 바 있음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나. 정성조사비 34 다. 인쇄비,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38 라. 기타 24 ○ **일반수용비(210-01) : 5** 가. 자문·평가 개최에 따른 사례비 1 나. 조달수수료 4

한편,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기존에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던 조사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2016년 11월) 후에 2016년 11월 이전에 국내로 입국해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들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123)]

< 북한인권 실태조사 사업의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90	○ **탈북민 실태조사 : 90** • 실태조사 답례품, 조사준비물품 : 39 • 실태조사 조사관 여비 : 21 • 실태조사 연구용역 : 30

두 실태조사는 법적 근거, 목적, 항목, 조사 결과의 활용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하나원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1 설문과 심층 면접을 대면조사로 진행한 결과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123) 기존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발간해왔으나,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백서 형식의 보고서로 2023년, 2024년에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였으나,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였음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및 북한인권 실태조사 비교>

구분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북한인권 실태조사
조사근거	통일부 직제 제11조	북한인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 통일부 직제 제32조의4
수행부서	정세분석국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목적	대북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북한 경제·사회관련 전반적인 정보 수집 및 장기 변화 추이 관찰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파악 및 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 거주시 본인과 관련한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 조사·기록
법적성격	예산사업(연구용역)	법정조사(직접조사)
조사방법	설문 조사 중심. 필요시 심층 인터뷰	사전 설문 토대로 개별 면접 조사 중심
조사대상자	하나원 입소 및 사회진출 만 18세 이상 탈북민 중 희망자	하나원 입소 탈북민 중 만 14세 이하 아동, 임신부, 환자, 조사 거부자 제외
조사내용	• 북한 경제 실태와 변화 • 북한 사회 실태와 변화 • 주민의식	• 시민적· 정치적 권리 - 생명권,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등
조사결과 활용	• 용역결과보고서(3급비밀) 형태로 관리 • 결과보고서는 리서치 회사(통계분석) 및 북한연구기관(결과해석) 공동 작성	• 문답서 형태로 기록· 관리 • 문답서를 매 분기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

또한, 두 조사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설문에 답하는 형식이므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이나 북한에서의 생활에 기초한 질문은 공통적인 내용이 포함될 여지가 있음.

최근 북한과의 대화 단절로 인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축소와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대북 정보 파악의 어려움 속에서, 통일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설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음.

설문 또는 인터뷰 방식의 조사사업이 부서별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중복 응답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코로나19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북한의 탈북 단속 강화, 탈북 제반비용 증가, 중국 단속 강화 등으로 단기간에 북한이탈주민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최근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자 및 하나원 입소인원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입국인원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236	96
하나원 수료인원	1,297	1,444	1,367	1,111	1,371	538	87	50	144	242	132

주: 입국인원은 2025년은 6월 말, 하나원 수료인원은 7월 말 기준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은 여건에서 한정된 조사 대상에게 다수의 중복조사가 시행될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영위상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사업들은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 조사 횟수와 범위를 최소화하고, 조사 목적과 항목을 통합·조정하는 등 피조사자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정세분석 역량강화	2,091	2,251	3,332	1,081	48.0
-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58	100	99	△1	△1.0
-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294	308	337	29	9.4
- 정보상황실 운영	863	928	951	23	2.4
- 위성정보센터 운영	464	595	1,725	1,130	189.9
-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229	220	220	-	-
-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183	100	-	△100	△100.0

자료: 통일부

‘정세분석 역량강화’(1533-307)는 북한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과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북한 관련 정세분석의 질을 제고하고 대북 및 통일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22억 5,100만원 대비 48.0%인 10억 8,100만원이 증액된 33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에서 100만원 감액,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은 사업 종료로 1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공개정보관리실 운영에서 2,900만원, 정보상황실 운영에서 2,300백만원, 위성정보센터 운영에서 11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유사 사업 간 효율적인 추진 필요

‘정세분석 역량강화’는 북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과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북한 정세분석의 질을 제고하고, 대북 및 통일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역사업 중 하나로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사업을 두고 있음.[124]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은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정부와 북한경제 연구자간 종합적 소통 플랫폼으로서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북한경제에 대한 연례적 평가 및 위성을 통한 북한경제 지표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220	○ **일반용역비(210-14) : 60** 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용역: 60 ・1건×60=60 ○ **정책연구비(260-02) : 160** 가. 북한경제 연례평가 연구용역 : 80 ・1건×80=80 나. 위성자료 등을 활용한 북한 경제지수 개발 연구 : 80 ・1건×80=80

한편, 통일부 정세분석국에서는 북한 경제 분석·평가를 통해 정세

124)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외의 내역사업으로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정보상황실 운영, 위성정보센터 운영 등이 있음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경제사회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사업의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306	○ **일반연구비(260-01) : 160** **< 연구용역 1건 >** 가. 인건비 22 나. 정량조사비 108 다. 인쇄비 3 라. 기타 27 ○ **정책연구비(260-02) : 141** **< 연구용역 1건×14 >** 가. 인건비 45 나. 정성조사비 34 다. 인쇄비,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38 라. 기타 24 ○ **일반수용비(210-01) : 5** 가. 자문·평가 개최에 따른 사례비 1 나. 조달수수료 4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사업은 북한경제 연구자 중심으로 정례적으로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물가·환율 등 주요 북한경제 지표의 정례적 조사를 통하여 북한경제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사업 내용으로 구성되고,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는 북한연구기관 및 용역업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경제·사회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

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두 사업 모두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기초자료로 삼기위하여 조사 분석·평가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공통되는 측면이 있음.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과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비교>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목적	■ 북한경제 평가 및 종합분석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경제·사회 현황 조사·분석
주요 내용	■ 북한경제연구 포럼, 북한경제 연례 평가, 북한 경제지표 조사	■ 북한 경제·사회·문화·주민의식의 실태와 변화 추이 분석
수행 방법	■ 정부와 북한경제 연구자 간 포럼 및 세미나, 연구용역	■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실시
결과 활용	■ 내실있는 북한경제 분석·평가 ■ 북한 경제 연구 역량 강화	■ 북한 경제·사회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이에 관하여 통일부는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사업이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에 중점을 두는 반면,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은 북한 원문 등 공개정보 기반 전문가들의 북한경제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중점을 두고,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은 북한의 최근 경제상황을 매년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인 반면,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를 매년 축적하여 탈북시기를 기준으로 북한의 경제·사회의 중장기적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추적·분석한다는 점

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설명을 제시함.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도 북한 경제 분석·평가를 통해 정세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 경제사회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와 그 목적에서 공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해 보임.

즉,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에서 수행되는 북한경제 분석과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에서 도출되는 조사결과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지므로, 향후 사업의 확장 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시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의 결과물 중 경제실상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정책연구 기능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308)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북한자료센터 운영	1,005	892	1,565	673	75.4
- 북한자료센터 운영	1,005	892	1,565	673	75.4

자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308)은 북한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관리·활용 및 북한 정세분석을 지원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8억 9,200만원 대비 75.4%인 6억 7,300만원이 증액된 15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4)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5,664	12,937	14,732	1,795	13.5
- 건설보상비(410-00)	4,662	4,611	1,758	△2,853	△61.8
- 공사비(420-03)	956	7,552	11,279	3,727	49.3
- 감리비(420-04)	31	747	1,687	940	125.8
- 시설부대비(420-05)	15	27	8	△19	△70.4

자료: 통일부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은 북한자료센터를 신축·이전함으로써 장서확충·열람공간 확대를 통해 북한연구자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려는 사업으로,

향후 통일정보자료센터는 북한·통일 전문도서관으로서 온·오프라인 학술·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통일사료 수집·전시, 민간·연구기관을 위한 열린 공간(플랫폼) 공유·개방 등 통일문화 복합 기능도 수행할 예정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29억 3,700만원 대비 13.5%인 17억 9,500만원이 증액된 147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비목별로는 건설보상비(410-00) 17억 5,800만원, 공사비(420-03) 112억 7,900만원, 감리비(420-04) 16억 8,700만원, 시설부대비(420-05)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개관 준비 철저 필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서초) 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하여 통일 및 북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을 재정립하는 사업으로,

동 센터는 학술·연구 지원뿐 아니라 정보교류·전시·체험·소통 등 사료관·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통일정보자료센터’로 추진되던 사업의 공식 명칭이 2025년 8월에 확정됨으로써 2026년부터는 ‘국립평화통일자료원’으로 표기함.

2026년도 예산안은 147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2025년) 129억 3,700만원 대비 13.5%인 17억 9,500만원 증액되었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50억 7,200만원이 투입되는 대형 건축사업인 동 사업은, 부지 규모 약 4,120㎡(1,246평), 건축 연면적 약 8,463㎡(2,557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이어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함.[125]

---

125)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개요>

구분	개 요
건립위치	**(당초)**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7-1 → **(변경)** 대화동 2706
건립규모	부지 4,120㎡(1,246평), 건축연면적 8,463㎡(2,557평), 지하1·지상3층
총사업비	**451억원**(보상비 177억, 공사비 226억, 시설부대경비 47억) * 총사업비 조정('24.8.30.)
주요시설	보존서고, 어린이열람실, 일반열람실, 북한·특수 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연구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사무공간, 강당, 전시관 등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총사업비 정보(연도별) >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계
사업비	2,774	5,022	5,664 * 고양시, 재설계비 790 별도	16,097	14,732	45,072

자료: 통일부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고양시의 부지 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건립 일정이 지연되어 건립 사업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도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1월 준공 및 2027년 상반기 중 개관 예정임.

< 총사업비 변경내역 >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445.05	2022	2026	
(1)차 변경	2023		447.92	2022	2026	감정평가 결과 반영 등
(2)차 변경	2023		489.42	2022	2026	기본설계 결과 반영
(3)차 변경	2024		473.86	2022	2026	부지변경에 따른 보상비 및 재설계(고양시 부담) 비용 반영
(4)차 변경	2024		483.56	2022	2026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증액
(5)차 변경	2025		450.72	2022	2026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32억,84억 감액(자율조정)
2026년도 요구			147.32			

자료: 통일부

2025년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29%이며, 연말까지 누적 예상 공정률 4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된 만큼, 통일부는 2025년말까지의 예상 공정률(45%)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당초 계획 대비 건립공사 공정률 현황 및 향후 계획 >

구분	공정률	2023	2024	2025	2026
당초	예상공정률	25%	50%	25% * '25.11 준공	-
	누적공정률	25%	75%	100%	-
변경	예상공정률	-	15%	30%	45%
	누적공정률	-	2% * '24.12.16. 착공	45% * '25.10월 말 기준 29% 진행	100% * '26.11. 준공

자료: 통일부

2026년도 예산안에는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준공 및 개관 준비를 위하여 3개의 세부사업(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개관준비 사업,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동 세부사업들은 사업단계별 일정이 상호 연계되어 진행되는 만큼, 2027년 상반기 개관을 위해 2026년 11월 준공 일정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함.

그러나 부지 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이미 일정이 약 1년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남은 공정기간 동안 철저한 사업관리와 공정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특히 2026년도에는 골조공사와 더불어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부대공사 및 내부 마감공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단계별 공정관리, 품질검사 등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준공 이후 개관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시공간 조성 등 후속 사업과의 연계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관 준비(2026~2027년)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일정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5)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1533-503)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	3,653	3,653	100.0
-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	-	-	3,653	3,653	100.0

자료: 통일부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1533-503)은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에 따른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운영 관리체계를 위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북한자료의 체계적 관리, 특수자료 취급기관 연계, 북한자료 열람·대출·복제 등 대국민 공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6억 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차질없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건립에 따른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통합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 정보화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36억 5,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건립에 따라 북한자료의 체계적 관리, 특수자료 취급기관 간 연계, 북한자료의 대국민 공개(열람·대출·복제) 서비스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기반사업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26]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또는 정보시스템 중장기 전략기획(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 요구가 가능함에 따라, 통일부는 2025년 4월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보시스템 설계 및 구축비를 산출하였음.

동 정보시스템 구축은 2개년(26년~27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 81억 1,800만원[127] 중 1차년도 구축비 36억 5,300만원을 2026년에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기능 개발을 위해 33억 7,300만원을, 정보시스템 상용 SW·HW 도입을 위해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

126)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사업유형별 지침 중 정보화사업(45쪽 참조)
-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ISP 또는 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BPR은 수립 전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판단하에 자체예산으로 수립 가능)

127) 통일부는 1차년도(26년)에 3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차년도(27년)에 44억6,500만원을 요구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 심의 후에 2차년도 예산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함.

<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안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3,653	○ **일반연구비(260-01) : 3,373** 가. △홈페이지 △자료관리시스템(이용자관리, 예약관리, 도서관리) △지능형통합검색시스템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일반자료, 특수자료 별도망 구성) 등 응용 SW 개발 ○ **자산취득비(430-01) : 280** 가.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통계관리시스템 등 상용SW·HW 도입

자료: 통일부

2차년도(2027년)에는 44억 6,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128]

<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집행절차 >

<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구축 >

통일부 (사업 총괄)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신규 시스템 구축** (`26~`27)

<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 >

통일부 (사업 총괄)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신규 시스템 운영** (`28~계속)

*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1년간 무상 유지보수('27년)

128) 2027년에는 클라우드 정보인프라(서버, DB) 구축 등 상용 SW·HW 도입, 정보검색 등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발, 자료관리시스템과 도서자동화·무인화장비 연계, 각 단위시스템 간 통합 구축, 서버 연동 등을 통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임

<세부 사업추진 일정>

구분		2026년				202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시스템 개발·구축	조달계약체결						
	통합정보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설계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지능형통합검색시스템 △홈페이지 △자료관리시스템 △이용자관리시스템 △예약관리시스템 △프로그램관리시스템 등 응용SW 기능개발 구현/시험/인수						
	△클라우드기반 정보인프라(서버, DB) △PDF스트리밍솔루션 △RFID 장비 △무인과금장비 등 상용 SW/HW 발주/연계/시험/인수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사업 완료	검사 및 종료						
	통합정보시스템 시험 및 운영						
	안정화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순수 사업기간이 13~1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개관계획이 2027년 상반기임을 감안하면, 2개년에 걸친 단계별 구축계획에 따라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6)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1533-502)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1,872	2,785	2,785	-	-
-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	-	2,785	-	-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1533-502)은 내부적으로 북한·통일 관련 AI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 ‘북한정보포털’을 통해 AI·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북한정보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이며,

북한정보의 특수성·저작권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자료를 포함한 ‘내부 분석 시스템’과 대국민 공개용 ‘북한정보포털’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예산과 동일한 27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3. 인도적 문제해결(21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6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C=B-A)	%
[2100] 인도적 문제해결			12,142	21,174	13,557	△7,617	△36.0
	[2133]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1,270	1,490	1,586	96	6.4
		[302]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479	504	504	-	-
		[306]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396	601	732	131	21.8
		[505]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395	385	350	△35	△9.1
	[2135]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강화		9,473	18,205	10,415	△7,790	△42.8
		[302]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5,452	12,442	8,554	△3,888	△31.2
		[303]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840	964	875	△89	△9.2
		[304] 북한인권재단 운영	-	475	475	-	-
		[305]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79	131	131	-	-
		[306]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2,766	3,813	-	△3,813	△100.0
		[501]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36	380	380	-	-
	[2137]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1,399	1,419	1,556	77	5.2
		[301]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399	1,419	1,556	77	5.2

자료: 통일부

「인도적 문제해결」프로그램은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북한 인권개선 기반구축, 전시납북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2025년) 예산 211억 7,400만원 대비 36.0%인 76억 1,700만원 감액된 135억 5,7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단위사업인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9,600만원,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에서 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강화 사업에서 77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부사업

(1)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2133-302)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479	504	504	-	-
-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82	82	82	-	-
- 초청행사 및 위로 사업	301	322	322	-	-
-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96	100	100	-	-

자료: 통일부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2133-302)은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를 시급히 대처하고, 이산가족 초청행사를 통해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등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와 동일하게 5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인도적 사안인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내역사업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는 법정기념일인 '이산가족의 날'[129] 행사를 통해 이산의 고통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이 편성됨.

< 내역사업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예산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	○ 일반수용비(210-01) : 5 가. 홍보 및 사례비 등 : 1회 × 5 ○ 일반용역비(210-14) : 95 가. 기념행사 위탁용역 : 1회 × 95	100	○ 일반수용비(210-01) : 5 가. 홍보 및 사례비 등 : 1회 × 5 ○ 일반용역비(210-14) : 95 가. 기념행사 위탁용역 : 1회 × 95

자료: 통일부

이산가족 문제는 당사자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130]에도 불구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8년 '제21차 상봉'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산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감소하는 추세임.[131]

이에 이산가족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129)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8.]

130) 2025년 9월말 현재 기준,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이산가족의 평균 연령은 83.2세이고, 매년 2-3천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어 전체 신청자 13만 4,000여 명 중 생존자는 약 3만 6,900명(약 28%)에 불과함.

131) 2025년 4월 발표된 '초중고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초중고 학생의 응답 비율은 통일 필요성 전반의 인식 하락과 함께 감소(자료: 통일부·교육부, 「2024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법률 제19277호, 2023. 3.28.시행)하여 이전까지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음력 8월 13일)'[132]을 기념일로 하고 법정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통일부는 2023년부터 '이산가족의 날'[133]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9,500만원의 예산으로는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나 홍보 활동을 추진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134]

2025년에 편성된 다른 법정기념일 예산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날 3억 5,400만원, 노인의 날 3억원, 이북도민 체육행사 2억 5,000만원 등으로 기념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 등 부대행사를 통해 기념하고 있음.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개요

- o **(조사대상)** 초·중·고 775개교, 총 79,706명
  - 학생(74,288명) : 초(5·6학년) 24,324명, 중 25,195명, 고 24,769명(95% 신뢰수준, ±0.36%p)
  - 교사(4,427명) 및 관리자(991명) : 초등 담임, 중등 사회·도덕·역사 교사 등(95% 신뢰수준, ±1.47%p)
    * 지역, 학교급에 따른 학교별 층화추출
- o **(조사기간 및 방법)** 2024.10.21.~11.15.
- o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 o **(조사기관)** 글로벌알앤씨(주)

132)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남북적십자회담 11주년인 1982년 8월 12일 남북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창한 대한적십자사의 취지를 다짐하면서,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이산가족 당사자들이 스스로 잃어버린 고향과 가족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매년 기념식과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음. 2011년부터 매년 추석 전전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오다가 법률에 규정됨.

133) 2025년 '제3회 이산가족의 날'은 10월 4일(토) 오전 10시 30분, 더 플라자호텔 서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각 지역사회에서도 통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문화행사를 추진함.

134) 2024년 9월 15일 KBS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도 (누님 두 분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으로 2010년 이산가족 상봉 참석자 중 최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마침내 큰 누님을 상봉할 수 있었다"면서 "반세기보다 더 긴 60년 만의 만남은 2박 3일 순간으로 지나고 북으로 떠나는 버스를 눈물로 배웅하면서 단장의 고통이라는 생이별의 고통을 절절하게 실감했다"고 하였고, 이산가족 고령화로 상봉 재개가 시급한 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상시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당장 어렵다면 서신 교환과 통신 왕래만이라도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바 있음.

< 법정기념일 관련 예산 비교 >

부처명	행사명	과업내용	예산	정책대상	근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행사	▪ 사전홍보(온·오프라인) ▪ 기념식 진행 및 무대구성 ▪ 시민참여행사	3.54억	탈북민 및 전국민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	이산가족의날	▪ 기념식 진행 및 무대구성 ▪ 참석자 오찬	0.95억	이산가족	이산가족법
통일부	통일교육주간	▪ 사전홍보(온·오프라인) ▪ 개막식 진행 및 무대구성	2.4억	전국민	통일교육지원법
재외동포청	세계한인의날	▪ 기념식 진행 및 무대구성	1억	재외동포	기념일 규정
복지부	노인의날 기념식	▪ 사전홍보(온·오프라인) ▪ 기념식 진행 및 무대구성 ▪ 부대행사(학술포럼 등)	3억	노인	기념일 규정
행안부	이북도민 체육행사	▪ 개·폐회식 진행 ▪ 운동경기 진행	2.5억	이북5도민	이북5도법

자료: 통일부(조달청 나라장터, 2025년 기관별 제안요청서 등)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기념행사와 관련된 적정 소요액을 반영함으로써 기념식 외에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동시에[135] ‘이산가족의 날’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의 공감을 제고할 수 있는 기념일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35) 국회예산정책처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384) 비용추계서에서 ‘이산가족의 날’ 지정에 따른 재정소요를 연평균 3.6억으로 추계한 바 있음. 2022년 9월 비용추계 당시, 타 부처 기념일 행사사례(인권의 날, 바다의 날, 여성의 날, 세계인의 날)를 참조하여 2022년 기준 평균 예산액(3억 6,100만원)에서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에 지원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날 행사비(1,700만원)를 제외한 3억 4,4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2)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 예산안(B)	증감	
				(B-A)	(B-A)/A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396	601	732	131	21.8
-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185	185	185	-	-
-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168	325	366	41	12.6
-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사업	33	62	62	-	-
-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행사	-	-	100	100	100.0
-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9	29	19	△10	34.5

자료: 통일부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은 전후납북자 단체 및 귀환납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 가족을 위로하고, 북한주민 송환 및 사체 인도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6억 100만원 대비 21.8%인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7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136]에서 4,100만원 증액되었고,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행사가 1억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인도적 송환업무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음.

136)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및 납북피해가족의 피해 보상을 위한 피해위로금 등 보상금 지급,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관련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 추진, 납북자 문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책임성 강화 필요

내역사업 ‘전후납북자 가족단체 지원’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137]에 근거하여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138](이하 “가족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통일부는 2012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가족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500만원이 편성됨.

가족연합회는 단체 사업의 수행을 위해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 등을 실시[139]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

137)「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단체)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11. 4. 28.]

138)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개요
○ 설립일 : 2012.8.7. (「전후납북자법」 제29조에 따라 법정단체 등록)
○ 조직·규모: 최○○ 이사장(1952년생,) 및 이사 5명, 회원 400여명, 전국 5개 지부(△서울 △경기·인천 △강원도 △충청·전라도 △경상도) 운영
○ 주요활동 : 납북피해자 권익증진 및 생활지원, 국내외 홍보 활동 등
○ 국고보조금 : 1.85억원(2025년)
- 예산은 △‘12~’14년 100백만원, △15~’18년 150백만원, △‘19년~현재 185백만원 지원

139)「(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정관」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 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위 각호를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비, 사업비 등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고,[140] 통일부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함에도 사업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사후적으로 받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후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족연합회가 수행하여온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가족연합회가 적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연합회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반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통일부는 가족연합회가 법이 보호하는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등 그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주의 및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봄.

140) < 2024년~2026년(안), 보조금지원(320-01)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내역사업명	피보조기관 (피보조)기관명	구분	2024	2025	2026안	비고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 - 전후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예산액	185	185	185	「전후납북자법」 제29조
		교부액	185	185	-	
		자부담	**0**	**0**	**-**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2133-302) -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예산액	82	82	82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공모)
		교부액	82	82	-	
		자부담	**9.3**	**9.3**	**-**	
6.25전쟁납북자기념관운영(2137-301) -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예산액	100	100	100	「6.25납북자법」 제12조
		교부액	100	100	-	
		자부담	**15**	**15**	**-**	

주: 「전후납북자법」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25납북자법」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자료: 통일부

□ 귀순 의사 없는 북한주민의 체류 장기화에 대비한 예산 반영 필요 등

내역사업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은 어선 고장, 조난 등 의도치 않은 사유로 남하한 북한주민의 송환 및 사체 인도 등 인도적 사안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2025년)에 한시적으로 반영되었던 ‘북한주민 사체 통합 추모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비가 제외되면서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1,900만원이 최종 편성된 바, 동 금액은 북한주민 사체 수습·인도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송환 절차에 필요한 최소 비용에 해당함.

< 내역사업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예산안 산출 내역 >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	**인도적 송환업무 관리를 위한 사체 수습 · 인도** ○ 사체 수습 안치 및 인도: 15 - 사체 수습 및 인도 5명 × 3 ○ 인도적 송환업무 관련 업무협의: 3.6 -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담회 12회 × 3만원 ×10명 **○ 사체 통합 추모 공간 마련 10** - 통합추모 공간 마련 4구 x 2.5 = 10	19	**인도적 송환업무 관리를 위한 사체 수습 · 인도** ○ 사체 수습 안치 및 인도: 15 - 사체 수습 및 인도 5명 × 3 ○ 인도적 송환업무 관련 업무협의: 3.6 -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담회 12회 × 3만원 ×10명

자료: 통일부

최근 북한주민의 송환(2025년, 2건, 6명)과 관련, 기존 판문점을 통한 즉각적인 송환이 아닌, 북한의 무응답에 따른 해상 송환 사례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귀순 의사 없이 사고로 남하하게 된 북한주민의 송환까지 소요되는 최소 비용의 반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즉, 2025년 3월 7일 서해에서 2명의 표류자, 5월 27일 동해에서 4명의 북한어민이 어선 고장 등으로 남하하였고, 이들은 북한 당국의 무응답으로 장기간 체류하다가 동년 7월 9일, 서해 표류자(2명)의 경우 구조 후 124일, 동해 어민(4명)의 경우 43일만에 동해 해상을 통해 일괄 송환되었음.

통일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1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는 바, 대기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다음 표의 '비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외에 다른 실·국의 기본경비를 활용하여 집행하였음.

< 2025년 북한주민(6명)의 인도적 송환 관련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집행액	세부 집행 내용	비고
일반수용비 (210-01)	28	- 생활 지원 물품 구입: 28 × 1회 = 28 * 병원진료비, 약품, 생활용품(이불, 의불 등) 구입 등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18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10
임차료 (210-07)	8	- 장비 임차료: 8 × 1식 = 8 * 크레인(1대) 및 발전기(2대) 임차료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국내여비 (220-01)	73	- 동·서해 직원 여비: 60×1식=60 * 주·야간 2~3명 근무자(1일 평균 5명) 등에 지급('25년 송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각 실·국별 기본경비로 집행) - 동해 숙박비 : 60만원 × 1개월 × 5개(룸) = 3 - 협조기관 여비 : 33,500원 × 6명 × 51일 = 10 * 대상자 신변보호 관련 협조 인력에 대한 여비	-각 실·국 기본경비
사업추진비 (240-01)	31	- (동해) 업무협의: 10 × 1회(31일) = 10 - (서해) 업무협의: 22 × 1회(118일) = 22 * 동·서해 북한주민(6명), 관계기관 근무자 등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24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7
계	140		

자료: 통일부

2025년의 동 송환 사례는 남북 간의 공식 연락 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정부가 유엔군사령부를 경유해 송환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해상 경로를 통한 송환은, 기존 판문점을 통한 송환 방식과 달리, 보안·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과 장비, 장기 체류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

참고로,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이전까지, 2010년부터 표류 등으로 남하한 북한주민 송환은 매년 평균 4.6건이고, 남북 간 연락 채널을 통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송환까지 4~6일이 소요되었음.

< 2010년~2025년, 북한주민의 인도적 송환 현황 >

(단위: 건, 명)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송환건수	4	5	2	4	9	4	3	9	3	3	-	-	1	-	-	2
송환인원	7	37	13	12	45	12	8	37	9	7	-	-	7	-	-	6

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76건, 300명의 북한주민이 표류 등으로 남하하여 이 중 49건 200명은 송환(100명은 귀순)
자료: 통일부

북한주민이 어선 고장 등으로 남하하거나 사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통일부가 송환 등 업무를 총괄하고, 국방부(경계), 국가정보원·경찰청(신변보호), 해양경찰청(선박 수리, 해상 송환) 등 공동대응이 필요한 바, 그 일반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 북한주민 및 사체 송환 절차 >

◦ **(북한주민 송환 절차)**

- 상황 발생 → 상황 전파(최초인지기관) → 구조 활동(해군·해경) → 합동조사(국정원 주관) → 대북 통보 및 인계(통일부 주관)

* 통일부는 대북통보, 언론대응, 호송 및 인계(판문점 또는 해상) 등 송환주관기관 (근거 : 통합방위법령에 따른 관련 매뉴얼)

◦ **(북한주민 사체 송환 절차)**

- 사체 발견 → 사체 조사 → 사체 처리 및 관리(대북통지, 연고자 파악, 사체 인계 등) → 사후처리(장제 비용 정산 등)

ⅰ) 북한 인수 동의 시 사체 인계

ⅱ) 북한 무응답 또는 인수 거부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무연고자 장제 처리 (근거: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훈령))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표류 북한주민 등 송환 업무의 주관기관으로서 주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바, 대북 통보 등 기존 업무 외에도 북한주민이 안전하게 체류할 시설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생활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요구되며,[141] 특히 보안성·안전성 등을 고려한 수도권 내 민간시설의 임차, 특수경비 용역을 위한 관리용역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142]

현재의 사업예산 규모로 볼 때, 향후 귀순 의사가 없는 북한주민의 표류가 발생할 때마다 통일부 내 사업비 전용 등을 통한 집행이 반복되고, 이 경우에는 전용되는 사업들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표의 달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41) 통일부는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임차료, 특수경비 용역 등으로 약 5억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함.

142) 북한주민 보호시설을 위한 임차료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일부는 하나원·통일교육원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할 경우 '귀순 유도' 오해의 가능성이 있고, 민간인 접촉 등 보안 문제, 북한주민 임시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은 남북 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상징적 사업으로, 향후 북한의 무응답 등으로 인한 송환 지연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소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봄.

아울러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기관별 역할, 장기체류 시 지원항목(의료, 숙식 등)을 명확히 분담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통일부는 향후 상황 발생 시 인도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투명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해양경찰청·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기관별 비용 부담 기준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귀순 의사가 없는 단순 체류 북한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2133-505)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 예산안(B)	증감	
				(B-A)	(B-A)/A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396	385	350	△35	△9.1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	396	385	350	△35	△9.1

자료: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2133-505)은 이산가족 교류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전면적·대규모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교류활성화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3억 8,500만원 대비 9.1%인 3,500만원이 감액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4)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5,452	12,442	8,554	△3,888	△31.2
- 북한인권 개선정책 기획 · 조정	54	54	54	-	-
-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891	1,637	324	△1,313	△80.2
-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4,444	10,682	8,176	△2,506	△23.5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63	69	-	△69	△100.0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은 북한인권 개선정책 기획 및 조정,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국제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북한인권 실상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24억 4,200만원 대비 31.2%인 38억 8,800만원이 감액된 85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에서 13억 1,300만원,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에서 25억 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은 사업이 종료되어 6,900만원 전액 감액되었음.

□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재검토 등에 따른 감액 필요

내역사업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북한인권 침해기록 보존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력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인프라를 건립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에는 3차년도 건립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비 71억 5,800만원, 감리비 10억 1,8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약 25억원 감액된 81억 7,6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 예산 및 2026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82	○ **건설보상비(410-00) 5,424** - 토지매입비(잔금) 5,424,233천원 × 1식 ○ **공사비(420-03) : 4,680** - 공사비 4,680,000천원 X 1식 ○ **감리비(420-04) : 560** - 감리비 560,201천원 x 1식 ○ **시설부대비(420-05) : 18** - 시설부대비 18,000천원 x 1식	**8,176** (△2,506)	○ **공사비(420-03) : 7,151** - 공사비 7,151,000천원 X 1식 ○ **감리비(420-04) : 1,018** - 감리비 1,018,000천원 x 1식 ○ **시설부대비(420-05) : 7** - 시설부대비 7,000천원 x 1식

자료: 통일부 2026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1, 208쪽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은 당초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2024년 예산에 총사업비 약 260억원 규모로 반영되었다가 2025년 8월 총사업비가 234억 4,100만원으로 최종 조정되었음.

< (가칭)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개요 >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사업부지</td><td>(2024) 서울 시내 적정 부지 검토
→ (2025)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매입 완료</td></tr>
<tr><td>연면적 및 규모</td><td>건축 연면적 2,400㎡(지하 1층 및 지상 3층)</td></tr>
<tr><td>주요시설</td><td>국제회의 등 커뮤니티 공간, 북한인권 체험관, 상설전시실(인권과 생명관, 북한인권현장관, 활동관, 미래비전관 등), 시청각실, 인권자료실, 사무실 등</td></tr>
<tr><td>총사업비 및 조정내역</td><td>25,967백만원(2024. 1., 최초) → 22,979백만원(2025. 3., 1차 조정)
→ 22,943백만원(2025. 4., 2차 조정) → 23,441백만원(2025. 8., 3차 조정)
<table>
<tr><th>계</th><th>토지매입비
(410-00)</th><th>실시설계비
(420-02)</th><th>공사비
(420-03)</th><th>감리비
(420-04)</th><th>시설부대비
(420-05)</th></tr>
<tr><td>25,927(최초)</td><td>13,440</td><td>498</td><td>10,845</td><td>1,119</td><td>25</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22,979(1차)</td><td>9,506
(△3,934)</td><td>498</td><td>11,831
(986)</td><td>1,119</td><td>25</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22,943(2차)</td><td>9,506</td><td>462
(△36)</td><td>11,831</td><td>1,119</td><td>25</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23,441(3차)</td><td>9,506</td><td>462</td><td>11,831</td><td>1,617
(498)</td><td>25</td></tr>
</table></td></tr>
<tr><td>사업기간</td><td>2024년~2026년(3개년)
<table>
<tr><th>구분</th><th>2024</th><th>2025</th><th>2026</th><th>계</th></tr>
<tr><td>예산</td><td>4,583</td><td>10,682</td><td>8,176</td><td>23,441</td></tr>
</table>
'24년(토지매입, 설계 및 착공 등) → '25년(토지매입 완료 및 공사) → '26년(완공)</td></tr>
</table>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당초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의 핵심 허브(Hub)로 북한인권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토지소유권 이전('25.2.), 설계('25.4.), 건축 관련 심의 및 인허가('25.6.)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 절차(~9.26.)를 진행하였으나, 현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사업 재검토가 긴급 결정되어 조달청 입찰기간을 11월 20일까지로 연장한 상황임.

사업 중단 시점까지 총사업비 234억 4,100만원 중 토지보상비 95억 600만원, 시설부대경비 5억 100만원 등이 집행되었고, 아직 공사를 위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인 바, 통일부는 사업내용, 명칭 등 구체적인 개편방향이 결정되면 예산 재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143)]

2025년도가 두 달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센터 건립을 위한 기존 계획이 중단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개편될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최종결과 보고(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사업), 조달청 입찰 취소 요청, 지자체(강서구청)의 기존 인허가에 대한 변경 등 관련 절차의 이행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센터 건립을 위해 편성되었던 금년도 공사비 등 52억 5,800만원은 대부분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81억 7,600만원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므로 센터 건립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완료 전에 사업변경의 방향 및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에 편성된 공사비 등 사업비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143) 통일부는 현재 건립사업 명칭을 '한반도평화공존(교류)센터' 등으로 변경하고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전시관 신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5)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840	964	875	△89	△9.2
- 기록센터 운영	543	716	628	△88	△12.3
-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13	34	33	△1	△2.9
- 조사결과 활용	284	214	214	-	-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3-303)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각종 국내외 문헌자료와 정보수집을 통한 간접 조사를 실시하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내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9억 6,400만원 대비 9.2%인 8,900만원이 감액된 8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따른 사업비 일부 감액 필요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은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기록센터 운영’, 북한인권 실태 및 인권 기록에 관한 각종 국내외 문헌자료 등을 통한 조사를 위한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보고서 발간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내외에 정보 제공하는 ‘조사결과 활용’ 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을 위한 예산은 2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자료 발간에 1억 9,000만원, 설명회 개최에 2,435만원 등임.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조사결과 활용	214	○ **자료발간 : 190** • 사례비, 인쇄비 등 : 185 • 발송요금 : 1 • 사업추진비 : 4 ○ **설명회 개최 : 24,349천원** • 행사준비물품, 사례비 등 : 5 • 차량, 장소임차 : 2.5 • 국제통신료 : 0.2 • 국내여비 : 1 • 국외여비 : 14,297천원($4,520) • 사업추진비 : 1	214	○ **자료발간 : 190** • 사례비, 인쇄비 등 : 185 • 발송요금 : 1 • 사업추진비 : 4 ○ **설명회 개최 : 24,349천원** • 행사준비물품, 사례비 등 : 5 • 차량, 장소임차 : 2.5 • 국제통신료 : 0.2 • 국내여비 : 1 • 국외여비 : 14,297천원($4,520) • 사업추진비 : 1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여 오다가,

지난 2023년과 2024년, 당시 “북한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개

선을 유도하겠다"라는 정책 전환에 따라 그동안 축적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 형식의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하였음.[144]

최근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022년 이전과 같이 내부자료(Ⅲ급 비밀)로 생산·관리하고 대국민 공개보고서는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통일부의 검토 배경에는, 최근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연 200명 가량에 불과하고 그들 대부분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 후 입국하고 있어 북한의 최신 상황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고서에 담을 새로운 진술 내용이 적다는 어려움뿐 아니라, "북한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쓰지 않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내부 보고서는 작성하되 외부에 비공개하는 것으로 통일부의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책자 등 보고서 발간 및 설명회 개최를 위해 편성된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 예산(2억 1,400만원) 중 해당 사업비 부분은 감액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통일부가 발간하는 「북한인권보고서」 외에 1996년부터 통일연구원이 매년 공개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가 있는 바,[145] 두 발간물은 조사방식 및 데이터·활용성에서 장점과 제한점을 지니며, 국제사회 및 국내 인권 정책 수립에서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144)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보고서」는 2023년과 2024년에 작성·발간한 '공개' 보고서의 명칭임.

145) 비영리 민간기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03년부터 매년 1회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연구, 국제사회 대응 및 정부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북한인권정보 플랫폼(https://www.kinu.or.kr/nkhr)"을 2025년 2월 13일부터 공개하고 있음.

< 북한인권보고서와 북한인권백서 비교 >

구 분	북한인권보고서	북한인권백서
발간 주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통일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발간 목적	「북한인권법」에 근거,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함	북한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학술적·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발간주기, 공개 여부	2018~2022 비공개, 2023년·2024년 공개, 연 1회	1996년~2025 현재, 연 1회, 공개
조사 방식	하나원 입소 탈북민 전수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분야 파악, 1:1 심층 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 기록	주로 탈북민 증언, 문헌·국제기구 보고서 등 민간 차원의 조사 중심
주요 내용	탈북민 심층 면담을 통해 침해 유형별 북한인권 실태 수집·기록	탈북민 면담, 문헌 조사 등을 통해 인권 침해 유형별실태 분석
활용 목적	북한주민 인권 실태 조사·연구, 정부 정책 수립, 국회 보고	학술연구, 국내외 정책제안, 정책 자문자료 등
강점	정부 공식 문서로 공신력 높음, 민간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 포함	실증적 자료를 장기간 체계적으로 축적, 변화 추세 분석 가능, 공개성·접근성 높음
한계	정부 내부 참고자료로 접근성 한계	표본 수 한계, 증언 중심의 자료, 연구기관 발간물로 정책 연계성 약함

자료: 통일부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일반연구비 항목 조정 필요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및 구체적 침해 사례를 조사·기록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은 기록센터 운영,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조사결과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8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기록센터 운영’ 예산은 6억 2,800만원임.

내역사업인 ‘기록센터 운영’은 「북한인권법」 제13조[146]에 따라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및 구체적 침해 사례를 조사·기록하여 실질적인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록센터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628	○ 탈북민 실태조사 : 90 ・ 실태조사 답례품, 조사준비물품 : 40 ・ 실태조사 조사관 여비 : 21 ・ **실태조사 연구용역 : 30** ・ 단수조정 : 453 천원 ○ 분야별 인권실태 평가 : 6 ○ 조사관 심리상담 및 역량강화 : 23 ・ 강사사례비, 심리상담 등 : 4 ・ 워크숍 장소임차 : 2 ・ 조사관 간담회 : 1.6 ・ **조사역량강화 연구용역 : 15** ○ 유관기관 업무협의 : 7.6 ○ 자문단 운영: 13.6 ○ 지원인원 인건비 : 133

146) **「북한인권법」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 **심층조사 및 연구 : 15** **· 국내기관 및 단체 대상 북한인권분야 연구 위탁 : 15** ○ 기록센터 운영 및 관리 : 338

즉,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행하는 법정조사(직접조사)로, 국제규약 및 향후 책임규명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조사관을 채용하여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를 수집·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정 문답서의 형태로 기록·관리함.[147]

기록센터 운영 사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탈북민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과 심층조사 및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로 구분되어 있고, 이중 심층조사 및 연구를 위한 비용으로 일반연구비(260-01) 1,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동 비목의 본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반연구비(260-01)[148]는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편성하는 비목임.

147)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답서를 매 분기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
148)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6..

반면, 통계자료 연구·분석 및 북한사회 테마별 분석 등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되는 연구로서 정책연구용역(260-02)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연구를 일반연구비 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해당 비목의 용도에 어긋난다고 할 것임.

< 민간위탁·대행 관련 비목 분류 기준 >

비 목	내 용
민간위탁사업비	· 국가사무를 민간의 명의·책임하에 행사(민간위탁)시 비용
법정민간대행사업비	·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정책연구비	·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 정책개발 외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연구용역비
관리용역비	· 청소 등 유지관리 비용
일반용역비	· 상기 비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일반업무 용역비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6.6

실제로 통일부의 다른 사업을 보면, 자료 수집과 수집한 자료에 대한 연구·분석은 각각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로 분리하여 그 성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를 들어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사업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는 일반연구비(260-01)로, 설문을 바탕으로 한 심층조사 연구용역은 정책연구비(260-02)로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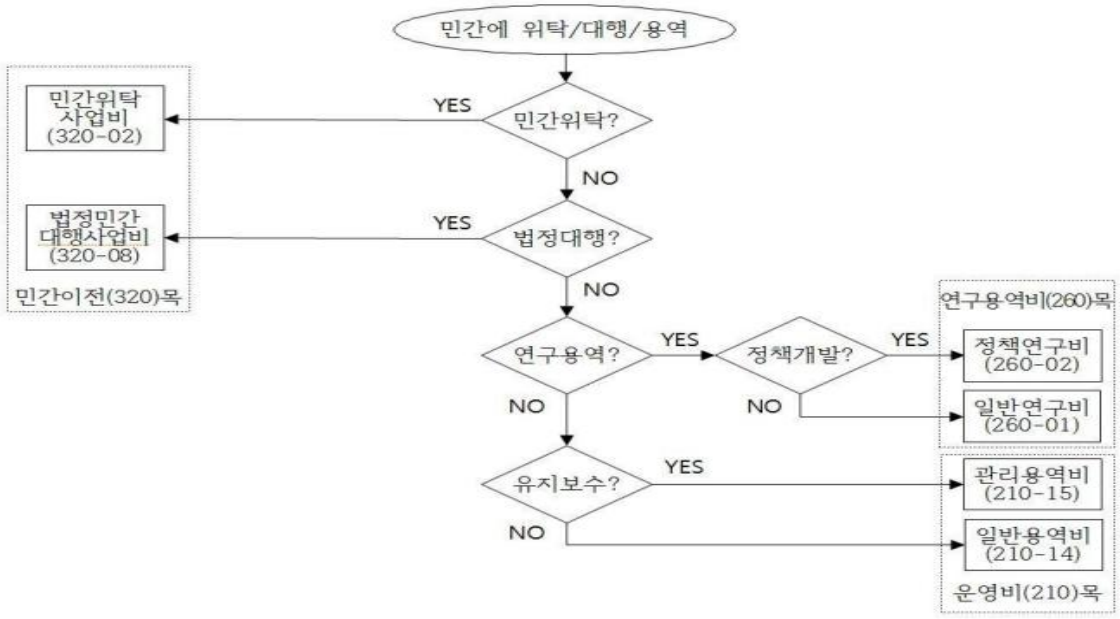
이처럼 연구활동의 성격에 따라 연구비 비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일반연구비 항목을

통해 정책연구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정책연구비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제 및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있어 많은 규제를 받게 되며,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발간 및 공개하여야 함.[149]

반면, 일반연구비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기준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따라서 정책연구 성격의 과제를 일반연구비로 수행하는 것은, 향후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예산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14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을 고려할 때 기록센터 운영 사업 중 심층조사 및 연구에 관한 비용은 그 성격상 정책연구에 해당하므로,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기보다 별도의 정책연구비(260-02)로 분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 북한인권재단 운영	-	475	475	-	-
- 북한인권재단 운영	-	475	475	-	-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은 「북한인권법」 제10조[150]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의 운영과 북한인권 실태 조사,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재단 출범준비 필수비용인 재단 사무실 설치비 3억 7,500만원, 사무실 임대·관리비 2개월분 1억원 등 4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2025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150)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단 출범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등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위한 예산은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 출범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단 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출연금(350-01)으로 편성한 것으로, 재단이 실제 출범하게 될 경우에 소요되는 나머지 비용은 예비비로 집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2026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산출 내역 >

- 사무실 설치공사(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소방, 전기·통신 공사 등 통합공사) : 3억 7,500만원 - 사무실 임차료: 임차 및 관리비(2개월분) 1억원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4억 7,500만원은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재단 출범에 대비하여 2016년 당시[151]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일진빌딩 7-8층)에 2,393.19㎡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비용에 근거한 것으로, 재단 이사 선임을 위한 여야 간 합의 등 출범을 위한 선행조건의 해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은 상황임에도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즉, 「북한인권법」은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지만, 재단 출범과 관련한

151)

< 재단 설립 추진 경위 >

○ 2016.3.3.「북한인권법」 제정·공포, ’16.9.4. 시행
○ 2016.3~8월, 재단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계획(안) 마련
○ 재단 설립위원회 회의 개최(’16.3.25., 5.20., 8.26.) 등 설립 준비
* △정관 제정(’16.8.) △직제 편성(42명) △예비비 편성(47억원) 등
○ 2016.9월, 재단 사무실 마련 등 설립 및 운영체계 기반 마련
※ 2016년 재단 사무실 임차 및 설치공사 당시 소요 예산 산출
- 재단 사무실 설치공사(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소방, 전기·통신 공사 등 통합공사) 계약 금액은 393백만원(VAT포함)
- 재단 사무실 임차료는 임대차보증금 362백만원, 임차료(1개월분) 41백만원, 관리비(1개월분) 22백만원
* 당시 재단 사무실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소재 일진빌딩 7,8층에 위치, 면적은 2,393.19㎡(723.94평, 전용 409.45평)

여야간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단시일 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영 및 실질적 집행 가능성의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아울러, 재단이 출범하게 되더라도 재단이 수행하게 될 각종 사업이 정부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과 서울 주요 지역의 건물 보증금, 임차료 인상 등의 측면에서, 관계자의 접근성 및 교통 편의라는 이유만으로는 임대료가 고가인 마포구 등지에 사무실을 두어야 할 당위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입지의 검토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7)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2135-305)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79	131	131	-	-
- 인도지원 정책개발	19	17	25	8	47.1
- 인도지원 민관 국제거버넌스 운영	60	114	106	△8	△7.0

자료: 통일부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2135-305)은 정부와 민간과 국제사회 간 인도지원 협조체계 정비 및 정책개발 등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예산과 동일한 1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인도지원 정책개발에서 800만원 증액되었고, 인도지원 민관 국제거버넌스 운영에서 800만원 감액되었음.

(8)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2,766	3,813	-	△3,813	△100.0
- 북한인권증진활동 지원	1,850	2,960	-	△2,960	△100.0
- 자유민주평화통일담론 확산	916	853	-	△853	△100.0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는 북한인권 증진활동 관련 시민사회 활동 및 국민 통일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동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예산 38억 1,300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북한인권증진활동 지원에서 29억 6,000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자유민주평화통일담론 확산 8억 5,300만원이 세부사업 국내통일 기반조성에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5억 1,000만원, 세부사업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에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으로 3억 4,300만원으로 각각 이관 편성되었음.

(9)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2135-501)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36	380	380	-	-
-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336	380	380	-	-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2135-501)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 및 인권침해 사건을 기록·보존하기 위해 이를 DB로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예산과 동일한 3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0)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2137-301)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399	1,479	1,556	77	5.2
-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100	100	100	-	-
- 기념관 운영	1,299	1,379	1,456	77	5.6

자료: 통일부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2137-301)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운영을 통해 전시납북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전시납북자 가족들의 아픔 위로 및 전시납북자 가족단체의 명예회복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4억 7,900만원 대비 5.2%인 7,700만원이 증액된 15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23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6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C=B-A)	%
[230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74,015	80,782	80,749	△33	△0.1
	[2331]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52,706	52,609	54,692	2,083	4.0
		[30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5,858	16,945	16,993	48	0.3
		[30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36,273	35,086	36,625	1,539	4.4
		[500]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75	578	1,074	496	85.8
	[233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21,329	28,173	26,057	△2,116	△7.5
		[30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10,704	16,413	11,788	△4,625	△28.2
		[302]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0,605	11,760	14,269	2,509	21.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 강화, 자립·자활 기반 확충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 및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동 프로그램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807억 8,200만원 대비 0.1%인 3,300만원이 감액된 807억 4,9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단위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4,8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15억 3,900만원,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4억 9,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단위사업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5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46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부사업

(1)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5,857	16,945	16,993	48	0.3
- 북한이탈주민 정책기획·조정	484	162	214	52	32.0
-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	450	300	△150	△33.3
- 보로금	-	-	564	564	100.0
-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4,508	5,062	4,611	△451	△8.9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3,213	3,387	3,027	△360	△10.6
-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124	156	154	△2	△1.3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7,528	7,728	8,123	395	5.1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정부·지자체·민간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정착지원제도 확립과 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69억 4,500만원 대비 0.3%인 4,800만원이 증액된 169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보로금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으로 5억 6,400만원 이관 편성되었고, 북한이탈주민 정책기획·조정 5,2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3억 9,500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에서 1억 5,000만원,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에서 4억 5,100만원,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에서 3억 6,000만원 각각 감액되었음.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36,273	35,086	36,625	1,539	4.4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36,273	35,086	36,625	1,539	4.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자립·자활, 교육·연구,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350억 8,600만원 대비 4.4%인 15억 3,900만원이 증액된 366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8억 500만원,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1억원, 정착금 지급 3억 7,400만원, 인건비 3억 3,500만원, 경상비 1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립·자활 지원 3,100만원,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1억 9,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 세부항목별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36,273**	**35,086**[152]	**36,625**[153]	**1,539**	**4.4**
❑ 사업비	24,952	23,919	25,013	1,094	4.6
1.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4,798	5,061	5,911	850	16.8
1-1 지역사회 정착지원	1,679	1,187	1,637	450	37.9
1-2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3,119	3,874	4,274	400	10.3
2. 자립 · 자활지원	4,289	4,828	4,797	△31	△0.6
2-1 일자리창출 및 자립촉진	1,906	2,585	2,554	△31	△1.2
2-2 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	1,963	1,893	2,243	350	18.5
2-3 일자리성공 패키지지원	421	350	-	△350	-
3. 교육개발 및 지원	2,833	2,798	2,798	-	-
3-1 통일미래 인재육성	1,255	1,265	1,265	-	-
3-2 교육 및 적응 지원	1,578	1,533	1,533	-	-
4.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1,883	1,911	2,011	100	5.2
4-1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1,081	1,107	1,107	-	-
4-2 대외협력사업	803	804	904	100	12.4
5.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2,602	2,210	2,011	△199	△9.0
5-1 경영기획	57	61	61	-	-
5-2 정착실태 조사연구	520	469	469	-	-
5-3 정보화 · 정보보안	2,025	1,680	1,481	△199	△11.8
6. 정착금 지급	8,546	7,111	7,485	374	5.3
6-1. 가산금	346	430	399	△31	△7.2
6-2. 교육지원금	4,366	4,657	6,267	1,610	34.6
6-3. 정착자산형성	3,834	2,024 (△결산잉여금 2,622)	819 (△결산잉여금 3,827)	△1,205	△59.5
❑ 인건비	9,016	9,556	9,891	335	3.5
❑ 경상비	1,589	1,611	1,721	110	6.8
❑ 예비비	376	-	-	-	-

자료: 통일부

152) '25년도 출연금(35,086백만원)+결산잉여금(2,622백만원)= **37,708백만원('25년 예산현액)**
153) '26년도 정부안(36,625백만원)+결산잉여금(3,827백만원)= **40,452백만원('26년 예산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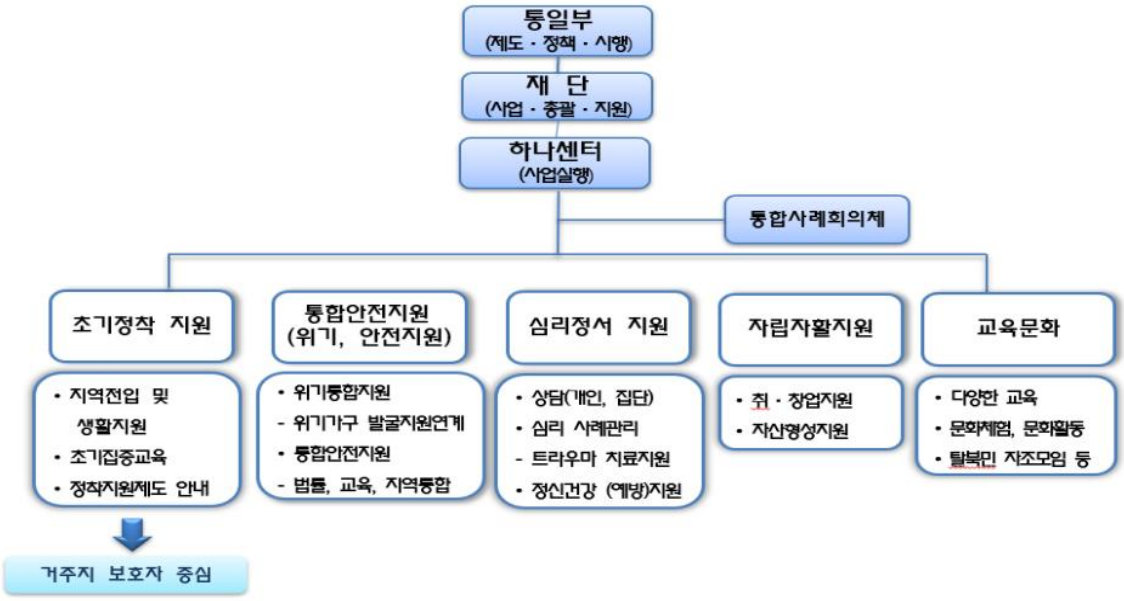
□ 남북하나재단 수행 출연사업 관련, 적정한 예산 확보 필요

(1) 수탁 하나센터 확대에 따른 운영비 반영 필요

내역사업인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자립·자활 등과 관련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을 비롯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제공, 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수탁 하나센터 통합서비스 모델 >



통일부에 따르면, 2025년도에 남북하나재단이 수탁하여 운영하는 하나센터가 4개소 추가 지정됨으로써 재단 수탁하나센터는 총 7곳으

로 확대되었으나, 추가 지정된 하나센터의 운영지원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남북하나재단은 불가피하게 정착자산형성,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 무연고청소년 관리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추가 지정된 4개소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설명함.

< 재단 수탁 6기 지역적응센터 현황 >

센터명	관할 지역	거주 탈북민 ('24.12.31.기준)
서울동부하나센터	서울 9개 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1,506명
경기동부하나센터	경기 8개 시(성남, 하남, 구리, 용인, 광주, 등)	1,765명
강원북부하나센터	강원 9개 시, 군(춘천, 홍천, 철원, 화천, 등)	381명
충북하나센터(신규)	전 지역 (충남 15개 시, 군)	1,414명
충남하나센터(신규)	전 지역 (충북 11개 시, 군)	1,731명
경남하나센터(신규)	전 지역 (경남 18개 시, 군)	1,045명
제주하나센터(신규)	전 지역 (제주 2개 시)	346명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재단 수탁하나센터 4곳 운영비 지원 현황 >

(단위 : 천원)

	조정액	사용 내역
수탁하나센터 운영지원	○정착자산형성 : 193,000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 : 100,000 ○무연고청소년 관리 : 30,000 ○하나센터 운영지원* : 7,000 (*프로그램 개발비 자체조정)	o **사무실 임차 및 관리비: 216,000** -서울동부:(임차 5,500+ 관리 833)×12개월= 76,000 -경기동부:(임차 3,740+ 관리 1,343)×12개월=61,000 -충 남:(임차 2,217+ 관리 700)×12개월=35,000 -충 북:(임차 3,667)×12개월=44,000 o **업무용차량 대여비 : 31,000** -서울동부:500×12개월= 6,000(모닝 1대) -경기동부:833×12개월=10,000(셀토스1대,아반떼1대) -충 남:917×12개월=11,000(카니발1대,아반떼1대) -충 북:333×12개월= 4,000(레이 1대) o **세무회계비 : 19,200** - 400×12개월×4개 센터 =19,200 o **사무실 시설 관리 및 사무기기 대여비 : 24,000** - 무인경비:200×12개월×4개 센터=9,600 - 사무기기:300×12개월×4개 센터=14,400

	조정액	사용 내역
		o **사무실 물품 구매비 : 3,840** - 80×12개월×4개 센터=3,840 o **직원복지포인트 : 12,960** - 45×6명×12개월×4개센터=12,960 o **개소식 및 지역주민과의 만남 행사 등 : 23,000** - 5,750×4개 센터 =23,000
총액	**+330,000천원**	**330,000천원**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센터 추가 지정 경위를 살펴보면, 통일부는 2024년 6기 하나센터 공모 시 공모에 응한 기관이 없거나 운영하기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가 없는 곳 4개소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7항[154]를 근거로 남북하나재단을 하나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운영지원비는 이에 맞추어 증액되지 않았음.

< 수탁 하나센터 운영지원 예산 비교 >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수탁하나센터 운영지원 1억 8,000만원 (3곳×6,000만원)	수탁하나센터 운영지원 1억 8,000만원 (7곳 ×2,571만원)

이와 같이 민간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하나재단이

154)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하나센터의 지정) ⑦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공모 및 제5항의 재공모를 거쳤음에도 하나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영 별표1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하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하나센터 담당 지역 내의 기관 또는 단체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추가로 하나센터 운영을 수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에 운영지원비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 다른 사업비에서의 전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탁하나센터 추가 지정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준의 운영지원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2) 하나센터 인건비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2026년 예산안 기준 하나센터 인건비는 전년 대비 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하나센터가 2025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고 종사자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155] 대비 78.1% 수준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하나센터 인건비 예산 편성 내역 >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4,897백만원 (=38.56백만원×127명) *총액 7,428백만원	5,242백만원 (=41.28백만원×127명) *총액 7,773백만원	345백만원 (전액 인건비 증액) *기존직원 처우개선

업무의 과중과 낮은 처우로 인해 하나센터 상담사 및 종사자의 근속 유지가 어려워짐으로 인하여 인력 변동이 잦아지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전문성 약화 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하나센터의 인건비 현실화 필요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센터 지원 예산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55)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시간외근무 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

<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월, 만원) >

조사 대상자 수	기본급	초과근무 수당	가족 수당	명절 수당	기타 수당	보수액 합계
67,054	247.4	30.1	9.6	12.5	16.1	315.7

(3) 남북하나재단의 적정한 임차료 편성 필요

현재 남북하나재단은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빌딩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으로, 현재 임대차 계약은 3차 계약 갱신 상태이며, 현 계약기간은 2023.11.20.~2025.11.19.(2년)이고, 보증금 371,000,000원, 월 임차료 38,227,050원, 월 관리비 23,785,720원임.

재단은 2025년 11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4차 갱신을 협의 중이며, 임대인이 현 임차료가 시세의 85.5%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월 임차료 49,270,420원, 월 관리비 28,882,660원 수준으로 협상을 진행 중임.

현행 임대차 계약 현황

○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서울대학교총동창회빌딩 4-5층, 14층 일부
※ 임대주: 재단법인 관악회
○ 계약면적 : 임차면적 849.49평(4층 : 349.12평, 5층 374.42평, 14층 : 125.95평)
○ 계약기간 : 2023.11.20. ~ 2025.11.19.(2년)
○ 계약조건 : 보증금 : 371,000,000원
- 월 임차료 : 38,227,050원(평당 45,000원)×110%=42,049,755원(VAT 포함)
- 월 관리비 : 23,785,720원(평당 28,000원)×110%=26,164,292원(VAT 포함)
※ 월 임차료·관리비 : 68,214천원, **연간 합계: 818,569천원**
○ (추가)전기·수도요금 사용분 부담액 : 연평균 32,481천원(최근 5년 평균액)

< 2015년~2023년 재단 청사 임대차 계약(갱신) 현황 >

구분	최초~1차 갱신		2차 갱신		3차 갱신		4차 예정	
	'15.11.~'20.11		'20.11~'23.11		'23.11~'25.11		'25.11~'28.11	
	단가	금액(천원)	단가	금액(천원)	단가	금액(천원)	단가	금액(천원)
임차료	35,245	29,200	36,200	30,751	45,000	38,227	58,000	49,270
관리비	23,899	19,800	24,500	20,812	28,000	23,785	34,000	28,882
소계		49,000		51,563		62,012		78,152
VAT		4,900		5,156		6,201		7,815
월간 합계		53,900		56,719		68,213		85,967
연간 비용		646,800	(+33,831)	680,631	(+137,937)	818,568	(+213,052)	1,031,620
비고	3+1년 임대료 동일		5.2% 인상 (시세의 75% 수준)		20.3% 인상 (시세의 85.5% 수준)		26.0% 인상 (시세의 96.7% 수준)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 가운데 남북하나재단의 경상비 항목에는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9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남북하나재단은 1억 3,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경상비는 임차료, 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서, 남북하나재단은 2021년부터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경상비 절감 편성 및 자구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효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상비 내 임차료 및 관리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절감 운영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이와 같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부족한 경상비(임차료 및 관리비) 증액 편성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증액 편성은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공공청사 입주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소결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생활안정, 자립·자활 지원, 지역사회 통합 등 정착지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실제 운영 여건과 사업 확대 규모에 비해 일부 항목의 반영이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남북하나재단의 운영 여건과 사업 확대, 인건비 및 임차료 상승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서 운영비 및 경상비의 적정 수준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경상비 절감을 위한 공공청사 입주 등 방안에 대하여도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자활 지원 필요

남북하나재단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자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48억 2,800만원 대비 0.6%인 3,100만원이 감액된 47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 영농정착지원, 창업지원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이 있음.

< 자립·자활 지원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2. 자립 · 자활지원	4,289	4,828	4,797	△31	△0.6
2-1 일자리창출 및 자립촉진	1,906	2,585	2,554	△31	△1.2
2-1-1 탈북민 고용사업체 지원	62	159	128	△31	-
2-1-2 영농희망자 육성	238	253	253	-	-
2-1-3 영농경쟁력 제고 및 기반 조성	609	618	618	-	-
2-1-4 기창업자 지원	782	600	600	-	-
2-1-5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125	855	855	-	-
2-1-6 경영컨설팅	90	100	100	-	-
2-2 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	1,963	1,893	2,243	350	18.5
2-2-1 취업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6	82	82	-	-
2-2-2 지역취업지원사업	324	383	383	-	-
2-2-3 단기연수지원사업	1,040	858	858	-	-
2-2-4 직업역량강화	542	570	570	-	-
2-2-5 일자리성공 패키지지원	-	-	350	350	100
2-3 일자리성공패키지	421	350	-	△350	△100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총 34,226명이고, 그 가운데 여성이 24,672명(약 72%)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

또한,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30~40대 인구 비율은 46.7%이고, 이 중 여성 비율은 77.5%로 조사되었음.[156]

< 연령별(입국 시 연령 기준) >

('24. 12월말 기준, 단위: 명, %)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52	1,709	2,643	2,177	1,409	605	359	9,554
여	646	2,113	7,028	7,678	4,704	1,498	1,005	**24,672**
합계	1,298	3,822	9,671	9,855	6,113	2,103	1,364	**34,226**
비율	3.8	11.2	28.3	28.8	17.9	6.1	4.0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일부 인원 제외
자료: 통일부

한편,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률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비율 증가, 경력단절, 돌봄 부담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분석됨.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50.2%가 30~49세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생계활동과 육아의 이중 부담을 지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취업 및 창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156) 통일부, 「202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25. 10면 참조

남북하나재단은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구 양상 변화를 분석하여 취업·창업 지원 시 성별에 따른 통계와 성과를 구분하고, 여성 특화형 취업·창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여성 맞춤형 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 북한이탈주민 수의 증가는 단순한 성비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진출뿐 아니라 사고무친의 환경에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지원방식을 다양하게 발굴·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임.

□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정착자산형성 사업의 예산 편성 필요

정착금 지급 사업 중 미래행복통장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최대 30%(50만원 한도) 저축 시 하나재단의 출연금으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157]

북한이탈주민의 미래행복통장 적립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2년 연장포함)이고, 만기 시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이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됨.

미래행복통장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8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필요액 46억 4,600만원 중 2024년 결산잉여금 38억 2,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1,900만원만 2026년도 출연금으로 요구하여 반영된 결과임.

< 미래행복통장 예산 편성 내역 >

(단위:천원)

예산안 산출내역	예산액
1. 기존가입자 : 4,365,488	
- 기존가입자(2026년에도 계속 가입유지자)	4,646,000
가입유지자×평균저축금액×12개월	
⇨ 606명-×487천원×12개월 = 3,541,464	△결산잉여금
* 가입유지자 606명 설명 : '25년 유지자 471명+'25년 신규가입 예정자 312명	-3,827,000

157)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산안 산출내역	예산액
(월평균 26명 가입)-'25년 4월 이후 만기도래자 21명- '25~26년 중도해지 예정자 156명(783명의 20%) * 2015~2024년까지 가입자 평균 저축 금액 : 487천원, 19~24년까지 중도해지자 **19.67%** ⇨ **20% 반영)** - **만기예정자(2026년 만기도래자)** 만기예정자×평균저축금액×6개월 ⇨ 282명×487×6개월 = 824,024 * 만기예정자 282명 설명 : 만기예정자 352명-중도해지자 70명(20%) **2. (2026년) 신규가입자 : 280,512** - 예상 가입인원-(예상 가입인원×중도해지율)×평균저축금액 × 6개월 ⇨ {120명-(120명×중도해지율 20% 24명)} 96명×487×6개월 = 280,512 *** 6개월 책정사유 : 1월 가입자는 12개월 적립, 2월 가입자는 11개월, 3월 가입자는 10개월, 4월 가입자는 9개월,…, 12월 가입자는 1개월 적립 가능 ⇨ 평균 적립월 6개월** *** '26년 예상 가입 인원 : 120명('2024년 월 평균 9명 가입)**	
합 계	819,000

자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미래행복통장은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경제활동(취업·창업) 중이면 가입할 수 있음.

다만, 정부·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사유[158]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약정기간 중 연속 6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총 12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약정위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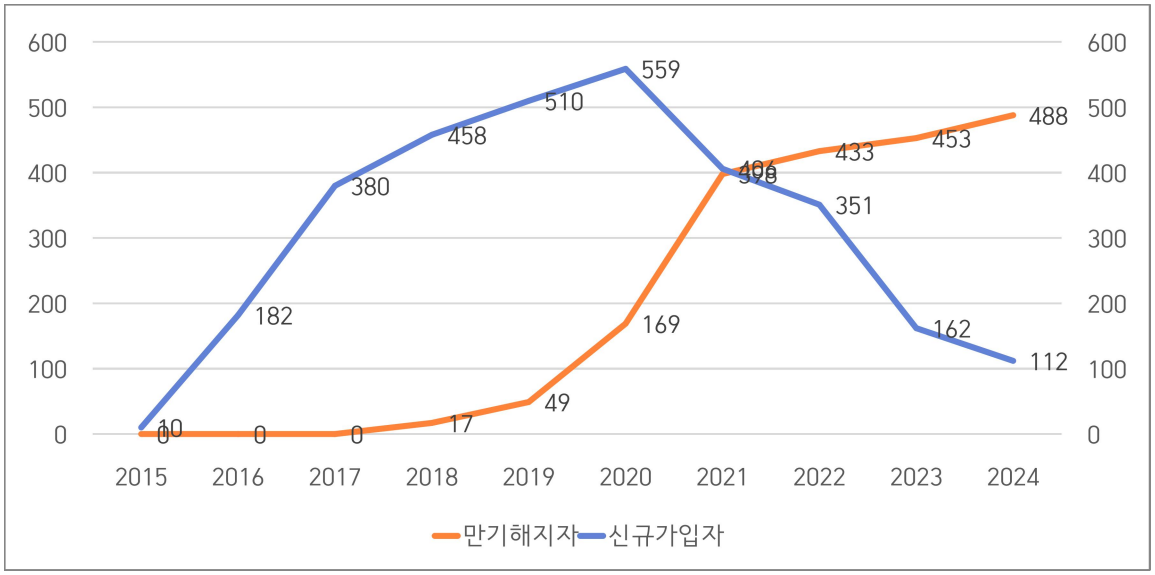
158) [가입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유사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취업한 회사의 사업주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행위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된 자
· 전월의 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계약이 해지되며, 실직, 사고·질병 등의 사유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저축의 일시중지가 가능함.

미래행복통장의 연도별 사업 현황을 보면, 신규가입자는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비해 만기해지자 수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남북하나재단은 이러한 감소의 원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 감소를 지적하고 있음.

나아가 탈북자 단속 강화, 국경경비 및 검문 강화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입국자 급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미래행복통장 가입자를 유지·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미래행복통장 연도별 신규가입 및 만기해지자 현황 >



자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편, 미래행복통장 제도는 연고 없는 남한에서 정착금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5년에 도입[159]되었으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가입자는 3,130명으로, 이는 2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의 약 10% 수준에 불과함.[160]

이러한 통계에 기반하여 볼 때, 정착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동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고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지원의 실효성에 일정한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2026년도에도 신규가입자보다 만기해지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통장 유지 인원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바,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현실, 현행 지원체계가 초기정착지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159) 대상을 2014년 11월 29일 이후 국내입국자로 하였음
160) 류지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24. 65면 참조

(3)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331-500)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75	578	1,074	496	85.8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61	462	462	-	-
-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14	116	612	496	427.5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331-500)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 과정에 걸친 현황 및 현 실태를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이력을 구축·관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현을 뒷받침하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5억 7,800만원 대비 85.8%인 4억 9,600만원이 증액된 10억 7,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전년도(2025년) 예산과 동일한 4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은 4억 9,600만원 증액되었음.

(4)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10,704	16,413	11,788	△4,625	△28.2
- 정착기본금	2,058	5,009	3,690	△1,319	△26.3
- 주거지원금	4,706	6,610	5,389	△1,221	△18.5
- 정착장려금	3,271	3,966	2,644	△1,322	△33.3
- 가산금	105	90	65	△25	△27.8
- 보로금	564	738	-	△738	△100.0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의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여 초기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자활 의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64억 1,300만원 대비 28.2%인 46억 2,500만원이 감액된 117억 8,8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정착기본금 13억 1,900만원, 주거지원금 12억 2,100만원, 정착장려금 13억 2,200만원, 가산금 2,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로금이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으로 이관 편성되었음.

□ 실질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정착금 지급 사업 개선 필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의지를 제고하고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64억 1,300만원 대비 28.2%인 46억 2,500만원이 감액된 117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의 예산안 산출 내역 >

(단위: 천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09,000	○ 정착기본금 (5,009,160) 1) 초기지급금 • 2025년 수료자 : 10,340×380명 =3,929,200 2) 분할지급금 • 2025년 수료자 : 2,842×380명 ×0.5=539,980 • 2024년 수료자 : 2,842×380명 ×0.5=539,980	3,690,000	○ 정착기본금 (3,690,400) 1) 초기지급금 • 2026년 수료자 : 8,789×280명 =2,460,920 2) 분할지급금 • 2026년 수료자 : 4,391×280명 ×0.5=614,740 • 2025년 수료자 : 4,391×280명 ×0.5=614,740
6,610,000	○ 주거지원금 (6,609,769) 1) 임대보증금 : 15,387x380명 x0.89=5,203,883 2) 지방거주장려금 : 2,700x16명 =43,200 3) 주거지원금 잔액 • 5년후 잔액 지급 : 3,060x684세대x0.5=1,046,520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 : 5,988x132세대x0.4=316,166	5,389,000	○ 주거지원금 (5,389,332) 1) 임대보증금 : 14,630천원x260세대=3,803,800 2) 지방거주장려금 : 2,590천원x21세대=54,390 3) 주거지원금 잔액 • 5년후 잔액 지급 : 2,879x474세대=1,364,646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 : 1,892x88세대=166,496
3,966,000	○ 정착장려금 (3,966,201) 1) 취업장려금 • 19년 수료자(수료 6년차) : 5,900x1,210명x0.25=1,784,750 • 20년 수료자(수료 5년차) :	2,644,000	○ 정착장려금 (2,643,768) 1) 취업장려금 • 20년 수료자(수료 6년차) : 5,500x497명x0.19=519,365 • 21년 수료자(수료 5년차) : 5,500x72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900x497명x0.34=996,982 • 21년 수료자(수료 4년차) : 5,900x72명x0.32=135,936 • 22년 수료자(수료 3년차) : 5,900x35명x0.06=12,390 • 23년 수료자(수료 2년차) : 5,900x119명x0.02=14,042 • 24년 수료자(수료 1년차) : 5,900x380명x0.01=22,420 2) 새출발장려금 : 2,000x500명 =1,000,000 3) 단수조정 : -319		명x0.23=91,080 • 22년 수료자(수료 4년차) : 5,500x35명x0.27=51,975 • 23년 수료자(수료 3년차) : 5,500x119명x0.30=196,350 • 24년 수료자(수료 2년차) : 5,500x225명x0.28=346,500 • 25년 수료자(수료 1년차) : 5,500x280명x0.09=138,600 2) 새출발장려금 : 2,000x650명 =1,300,000 3) 단수조정 : -102
90,000	○ 가산금 (89,500) 1) 고령가산금 : 164건x500=82,000 2) 한부모가산금 : 30건x250=7,500	65,000	○ 가산금 (64,500) 1) 고령가산금 : 124건x500=62,000 2) 한부모가산금 : 10건x250=2,500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이 2026년도 예산에서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등 정착금을 일부 감액한 것은, 최근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의 추세를 반영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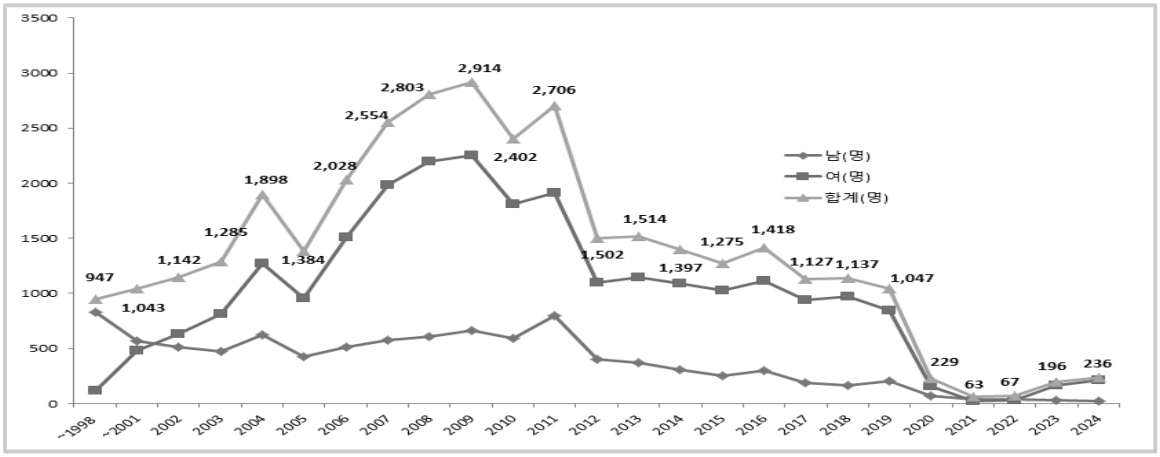
실제로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9년 1,047명, 코로나19 이후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에 그쳤으나, 최근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196명, 2024년 236명이 입국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이번 감액 편성은 입국자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한 조정으로 보임.

다만, 북한 및 중국 내 탈북자 단속 강화, 국비경비 강화 등 외부요인으로 단기간 내 입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단순한 예산 감액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인구 및 정착 양상 변화를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연도별 입국추세 >



자료: 통일부

<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33,865	33,865	32,210	14,823	43.8	**46.0**	17,387
2022	28,005	28,005	28,005	10,268	36.7	**36.7**	17,737
2023	20,981	20,981	20,981	10,086	48.1	**48.1**	10,895
2024	18,757	18,757	18,757	10,704	57.1	**57.1**	8,053
2025.7	16,413	16,413	16,413	6,241	38.0	**38.0**	-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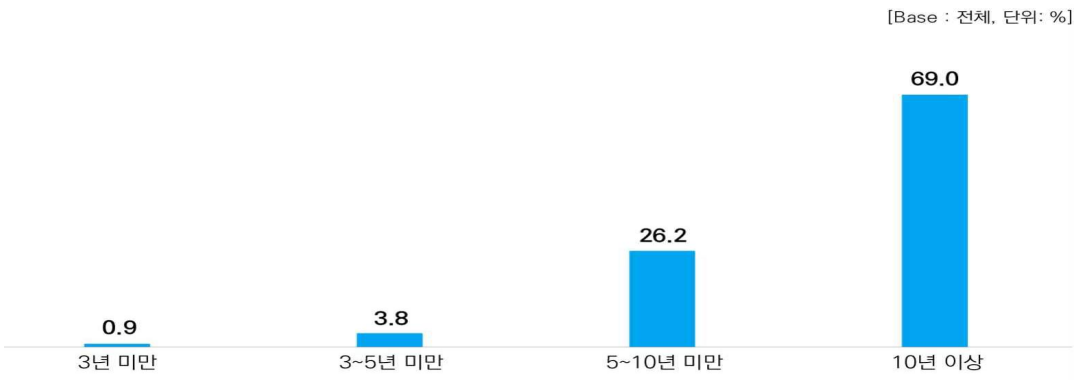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현재(2025. 10. 31. 기준) 국내 입국 후 5년을 경과한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초기 12주의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을 마치

고 이후 거주지 보호 기간 5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 내 일반 주민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어려워짐을 의미함.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무기한 지원을 받는 구조보다는,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착지원의 근복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음.

다만, 남한에 입국 후 5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도 안정적인 정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제도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남한 거주 기간 >



자료: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이 발간한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161]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였으나, '고용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61) 남북하나재단,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보고서」, 2024년, 45쪽 참조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2023년 대비 0.4%p 감소하고, 실업률은 1.8%p 증가하였으며, 일반국민 대비 고용률은 3.4.%p가 낮고, 실업률은 3.3.%p가 높게 나타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최근 정착금 지원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왔음. 1인 세대 기준 정착기본금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100만원 증액된 데 이어, 2025년에는 500만원이 인상되었으며,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출발장려금'이 2024년에 신설되었음.

< 세대원수별 정착기본금 증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2022	800	1,400	1,900	2,400
2023	900	1,500	2,000	2,500
2024	1,000	1,600	2,100	2,600
2025	1,500	2,400	3,150	3,900

자료: 통일부

< 새출발장려금 개요 >

새출발 장려금	**지급금액**	6개월 이상 근무시 200만원(1년 6개월, 최대 600만원)
	지급기준	①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 ② 기존 취업장려금을 받은적이 없거나, 절반(50%) 이하(1년 6개월까지, 2년 미만)로 지원받은 경우 ③ 6개월 이상 근무시 회당 200만원씩 최대 3회(1년 6개월) 600만원까지 지급(연중 상시) 단, '24.1.1. 이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에 한함

자료: 통일부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이미 우리 사회에 정착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취약성은 심화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행 지원체계는 초기 정착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사후관리나 위기 대응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162]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착기본금 등 각종 지원금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되도록 하는 한편, '새출발장려금'과 같은 사후지원형 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착금이 초기 생계 안정뿐 아니라 장기적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핵심 지원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정착지원) 달성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의 현금 지급과 함께 취업·교육·주거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한편, 자립계획 이행과 연계한 추가적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착지원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162)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1532) 제안이유 참조

(5)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0,605	11,760	14,269	2,509	21.3
- 하나원 교육훈련	1,382	1,590	1,464	△126	△7.9
- 제2하나원 교육훈련	695	869	768	△101	△11.6
- 하나원 시설운영	6,690	7,374	10,027	2,653	36.0
- 제2하나원 시설운영	1,838	1,927	2,010	83	4.3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응교육 실시 및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17억 6,000만원 대비 21.3%인 25억 900만원이 증액된 142억 6,9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하나원 시설운영 26억 5,300만원, 제2하나원 시설운영 8,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하나원 교육훈련 1억 2,600만원, 제2하나원 교육훈련 1억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 기정착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강화 필요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응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최초 입국한 여성, 남성 및 청소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사회적응교육 및 수료생 대상 심화직업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입소할 경우 3개월(12주) 동안 약 40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됨.

교육 내용은 시장경제, 사회보장제도, 남한문화, 정보화교육, 언어적응 등 우리 사회 이해 교육 147시간, 기초 직업교육훈련 162시간, 초기 정착 지원 안내 31시간, 성평등 및 법정교육 22시간,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관련 교육 3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같은 과정을 수료한 후 하나원을 퇴소하게 됨.

2026년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예산안은 142억 6,900만원이고, 이 중 하나원 및 제2하나원 교육훈련 사업에는 22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훈련 예산 및 기준 인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	교육생 기준 인원
하나원 교육훈련	1,464	260명
제2하나원 교육훈련	768	60명

또한, 하나원을 퇴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사업으로는 하나원 및 제2하나원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2026년도 예

산안은 6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하나원 및 제2하나원 진로지도 프로그램 예산안 산출내역 >

2026년 본예산	
예산	산출내역
673 백만원	**① 하나원 교육훈련** **○ 진로지도 프로그램 540백만원** 가. 직업교육관 운영 (540백만원) • 강사사례비 등(일반수용비) 13기수 x 28.466백만원 = 370백만원 • 비품 등 운영비(일반수용비) 13기수 x 3.846백만원 = 50백만원 • 공공요금(가스)(공공요금 및 제세) 5㎥ x 10일 x 12월 x 4천원 = 2백만원 • 직종심화반 기업 현장 견학(임차료) 13기 x 540천원 = 7백만원 • 교육실습 재료비(재료비) 13기 x 2.54백만원 = 33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구호 및 교정비) 13기 x 7일 x 23명 x 3천원 = 6백만원 • 훈련수당 지급(구호 및 교정비) 100명 x 9주 x 80천원 = 72백만원 **② 제2하나원 교육훈련** **○ 제2하나원 진로지도 프로그램 133백만원** 가. 진로지도프로그램 (133백만원) • 강사료 등(일반수용비) 13기수 x 6.153백만원 = 80백만원 • 버스, 운전시뮬레이터 임차료(임차료) 13기수 x 3.384백만원 = 44백만원 • 중간식비(구호 및 교정비) 13기수 x 0.692백만원 = 9백만원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예산의 대부분(86.6%)은 하나원에 최초로 입소하는 인원 320명(비대상포함)을 산정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음.

< 진로지도 프로그램 예산집행 및 참여인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예산안)
예산집행액		782	584	353	673
참여 인원	기초생	74	187	132	-
	수료생	195	273	162	-

자료: 통일부

진로지도 프로그램 안에 이미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훈련으로 '심화직업훈련'이 있는데, 2022년부터 2025년 9월 현재까지 정보화자격 등 28개 과정에 718명이 참여하였으며, 673명('23년 6개과정 신설[163])이 과정을 이수하고 46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수료자(자격취득과정, 552명) 대비 85.2%의 높은 자격취득률을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심화직업훈련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3			2024			2025.9.		
	참여	수료	자격	참여	수료	자격	참여	수료	자격
요양보호사	23	22	21	19	16	15	17	16	15
요양보호(실무)				13	13	-	-	-	-
떡제조(필기)	6	5	4				-	-	-
떡제조(체험)				17	17	-	-	-	-
도배기능사	6	5	5	7	5	5	-	-	-
미용(헤어)	14	12	11				11	9	8
헤어(실무)	5	5	-				-	-	-
피부미용	8	8	8	19	19	14	-	-	-
피부미용(실무)							-	-	-
네일아트(필+실)	19	19	18				-	-	-
애견미용(필+실)	10	5	5	12	10	10	-	-	-
메이크업(실기)				8	8	7	-	-	-
미용취창업				12	12	-	12	12	-
바리스타(2급)	49	44	44	42	41	41	11	9	7
바리스타(1급)				10	9	7	4	4	4
바리스타실무				21	21	-	5	5	-
제빵기능사	7	6	6						
한식조리	8	7	7						
ITQ(한글)	7	6	6	5	4	3	12	11	10
ITQ(엑셀)	21	20	20	8	8	8	6	6	
ITQ(파워포인트)				8	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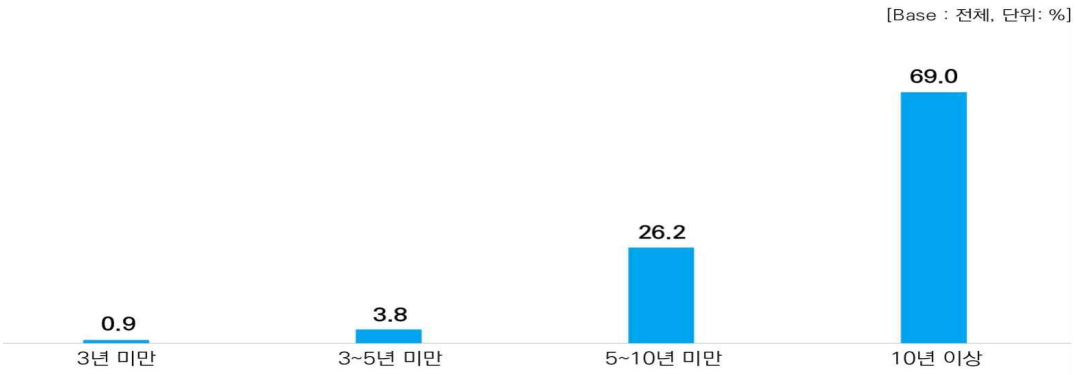
163) 신설과정: 바리스타, 헤어, 애견미용, 떡제조, 도배기능사, 건축목공

구분	2023			2024			2025.9.		
	참여	수료	자격	참여	수료	자격	참여	수료	자격
컴퓨터활용능력(필+실)				16	15	0			
취업캠프				22	22	-			
정리수납							24	24	24
한식소스마스터							9	9	9
건축도장							6	6	2
1종대형면허	25	24	21	45	45	40	45	45	42
건축목공	8	7	1						
계	**216**	**195(190)**	**177**	**284**	**273(174)**	**157**	**162**	**156(139)**	**95**

자료: 통일부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인구 동향 및 경제활동 특성을 살펴보면,[164] 국내 체류 북한이탈주민 중 입국 후 5년이 경과한 인원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2023년 대비 0.4%p 감소하고, 실업률은 1.8%p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일반 국민에 비해 고용률은 3.4.%p 낮고, 실업률은 3.3.%p 높게 나타나는 등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음.

< 남한 거주 기간 >



자료: 통일부

164) 남북하나재단,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보고서」, 2024년, 45쪽 참조

이러한 가운데, 하나원을 퇴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화 직업훈련은 85%의 높은 자격취득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남한 사회에서의 높은 정착 의지와 함께, 하나원 퇴소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임.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행 지원체계는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사후관리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이미 퇴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존 교육과정의 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취업 연계 효과가 높은 직종 중심으로 신규 과정을 발굴하거나, 교육생의 수요와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5. 남북관계 기반구축(30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6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3000] 남북관계 기반구축			5,693	6,628	6,807	179	2.7
	[3031] 남북관계관리단 시설관리		4,954	5,593	6,107	514	9.2
		[300]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2,994	3,521	3,965	444	12.6
		[302] 청사 등 시설관리	1,960	2,072	2,142	70	3.4
	[3032] 남북경제협력지구 관리		573	836	541	△295	△35.3
		[303]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297	563	386	△177	△31.4
		[506] 남북전자출입시스템 운영(정보화)	276	273	155	△118	△43.2
	[3036]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166	199	159	△40	△20.1
		[312]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166	199	159	△40	△20.1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기반구축」프로그램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남북관계관리단 시설관리, 남북경제협력지구 관리,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2025년) 예산 66억 2,800만원 대비 2.7%인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68억 700만원임.

(1)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3031-300)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2,995	3,521	3,965	444	12.6
- 출입심사시설 관리	2,702	3,019	3,258	239	7.9
- 노후시설 개보수	293	502	707	205	40.8

자료: 통일부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3031-300)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철도 출입시설 및 물류센터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35억 2,100만원 대비 12.6%인 4억 4,400만원이 증액된 39억 6,5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출입심사시설 관리 2억 3,900만원, 노후시설 개보수 2억 500만원 각각 증액되었음.

(2) 청사 등 시설관리(3031-302)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 청사 등 시설관리	1,960	2,072	2,142	70	3.4
- 남북통신망 운영	977	1,006	1,006	-	-
- 청사시설관리	681	711	781	70	9.8
- 노후시설 개보수	303	355	355	-	-

자료: 통일부

‘청사 등 시설관리’(3031-302)은 남북통신망의 관리 운용, 남북회담 청사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20억 7,200만원 대비 3.4%인 7,000만원이 증액된 21억 4,2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청사시설관리에서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3032-303)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298	563	386	△177	△31.4
- 개성공단 상황 관리 및 기업지원	209	263	186	△77	△29.2
- 평화경제특구 운영지원	89	300	200	△100	△33.3

자료: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3031-302)는 개성공단 중단 상황이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개성공단 기업 경영 활동 정상화를 지원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평화경제특구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5억 6,300만원 대비 31.4%인 1억, 7,700만원이 감액된 3억 8,6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개성공단 상황 관리 및 기업지원에서 7,700만원, 평화경제특구 운영지원에서 1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4) 남북전자출입시스템 운영(정보화)(3032-506)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 남북전자출입시스템 운영(정보화)	276	273	155	△118	△43.2
- 시스템 유지관리	249	244	126	△118	△48.4
- 기타 운영지원	27	29	29	-	-

자료: 통일부

‘남북전자출입시스템 운영(정보화)’(3032-506)은 남북전자출입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해 남북 간 출입 절차 간소화 및 통행 편의를 제고하고 출입 심사기관의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2억 7,300만원 대비 43.2%인 1억 1,800만원 감액된 1억 5,5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1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음.

(5)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3036-312)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166	199	159	△40	△20.1
-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9	85	47	△38	△44.7
-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97	114	112	△2	△1.8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3036-312)은 남북교류협력의 재개와 민간의 정책과정 참여 및 소통 확대,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억 9,900만원 대비 20.1%인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5,9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3,800만원,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에서 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6. 남북회담(40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6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C=B-A)	%
[4000] 남북회담			192	240	660	420	175.0
	[4031] 남북회담 추진		192	240	660	420	175.0
		[300] 남북회담 추진	192	240	660	420	175.0

자료: 통일부

「남북회담」 프로그램은 남북대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면서 남북 간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및 인도 등 각 분야별 남북회담의 지속적 추진으로 남북 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제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2025년) 예산 2억 4,000만원 대비 175%인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6억 6,000만원임.

(1) 남북회담 추진(4031-300)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 남북회담 추진	192	240	660	420	175.0
- 분야별 회담 추진	89	136	551	415	305.1
- 남북회담 역량강화	26	32	32	-	-
- 회담운영 및 지원	77	72	77	5	6.9

자료: 통일부

'남북회담 추진'(4031-300)은 남북 간 정치·군사, 경제 등 각 분야별 회담·접촉을 추진하고 회담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화해·협력의 남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2억 4,000만원 대비 175%인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6억 6,0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분야별 회담 추진 4억 1,500만원, 회담 운영 및 지원에서 500만원 각각 증액되었음.

7. 통일교육(50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6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C=B-A)	%
[5000] 통일교육			22,815	23,967	25,077	1,110	4.6
	[5031] 통일교육추진		13,775	14,097	14,200	103	0.7
		[304]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438	2,490	2,410	△80	△3.2
		[308] 학교 통일교육 강화	4,616	5,191	4,913	△278	△5.4
		[309]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3,583	3,644	3,957	313	8.6
		[310] 통일교육 자료개발	2,657	2,288	2,436	148	6.5
		[507]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481	484	484	-	-
	[5033]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428	1,512	1,804	292	19.3
		[308]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428	1,512	1,804	292	19.3
	[5002] 국립통일교육원 인건비		6,334	6,936	7,639	703	10.1
		[100]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6,334	6,936	7,639	703	10.1
	[5018] 국립통일교육원 기본경비		1,278	1,422	1,434	12	0.8
		[200]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251	267	277	10	3.7
		[250]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1,027	1,155	11,157	2	0.2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통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 및 사회의 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4개의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2025년) 예산 239억 6,700만원 대비 4.6%인 1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50억 7,7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에서 3억 1,300만원, 통일교육 자료개발에서 1억 4,800만원, 국립통일교육 시설운영에서 2억 9,20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에서 8,000만원, 학교 통일교육 강화에서 2억 7,800만원 각각 감액되었음.

2026년도 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는 76억 3,9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14억 3,400만원임.

나. 세부사업

(1)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438	2,490	2,410	△80	△3.2
-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321	342	342	-	-
- 통일교육 원내과정	1,305	1,256	1,346	90	7.2
- 통일교육 연구센터 운영	167	175	175	-	-
- 통일교육 현장체험	587	467	547	80	17.1
- DMZ 통일걷기 지원	58	-	-	-	-
- 글로벌 통일체험	-	250	-	△250	△100.0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은 통일교육 추진기반 확대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통일교육 유관기관·단체 등 통일교육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통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24억 9,000만원 대비 3.2%인 8,000만원이 감액된 24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통일교육 원내과정에서 9,000만원, 통일교육 현장체험에서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글로벌 통일체험은 사업이 종료되어 2억 5,000만원 전액 감액되었음.

□ 양성 및 재교육 인원의 적정인원 조정 필요 등

‘통일교육 원내과정’ 내역사업의 하위사업인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내내역사업은 새로운 통일교육 기조(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에 부합하는 강사 인력 양성 및 기존 강사 재교육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2억 6,700만원을 편성함.

< 2026년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내내역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 통일교육 원내과정	1,305	1,256	-	1,346	1,346	90	7.16
-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113	117	117	267	267	150	128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예산안 증액 사유에 대해 양성 및 재교육 인원이 2025년 100명에서 2026년 200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2026년도 동 사업의 세목별 예산 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예산이 7,090만원, 급식비 예산이 3,600만원, 임차료 예산이 2,250만원 및 국내여비 예산이 2,060만원씩 각각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나머지 세목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편성됨.

<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업 예산안 산출 내역 >

(단위: 천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7,000	○ 일반수용비(210-01) : 63.5백만원 가. 책자 제작 • 15,000원×260부= 3,900천원	266,810	○ 일반수용비(210-01) : 134.4백만원 가. 책자 제작 • 18,000원×2,000부=36,000천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나. 교육용품 및 소모품 구입 • 8,000원×100명×2분기= 1,600천원 다. 강사료 1) 특별1 • 500,000원×5명=2.500천원 2) 일반1 • (230,000원+120,000원)×34명= 11,900천원 3) 일반2 • (150,000원+100,000원)×150명= 37,500천원 라. 수료준비 1) 기념품 구입 • 30,000원×120명= 3,600천원 2) 상장 및 수료증, 현수막 제작 등 • 20,000원×120명= 2,400천원 3) 단수조정 • 100,000원=1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0.5백만원** 가. 전화사용료 및 우편료 • 500,000원×1식= 500천원 **○ 급식비(210-04) : 35백만원** 가. 교육진행 음료대 준비 • 3,820원×25명×40회=3,820천원 나. 원내급식 • 27명×89식×5,000원=12,015천원 다. 원외급식(특별만찬 포함) • 27명×29식×25,000원=19,575천원 라. 단수조정 • -410,000원=△410천원 **○ 임차료(210-07) : 9백만원** 가. 현장견학 버스임차료 • 550,000원×18회=9,900천원 나. 단수조정 • -900,000원=△9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5백만원** 가. 현장견학 교육생 여비 • 70,000원×50명×2일=7,000천원 나. 강사 여비 지원 등 • 100,000원×5명=5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5백만원** 가. 교육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의 • 30,000원×8명×4회= 960천원 나. 교육생 과정 평가 간담회 • 30,000원×6명×3회= 540천원		나. 교육용품 및 소모품 구입 • 20,000원×200명×4회=16,000천원 다. 강사료 1) 특별1 • 500,000원×24명=12,000천원 2) 일반1 • (230,000원+120,000원)×60명=21,000천원 3) 일반2 • (150,000원+100,000원)×120명=30,000천원 라. 수료준비 1) 기념품 구입 • 50,000원×200명= 10,000천원 2) 상장 및 수료증, 현수막 제작 등 • 47,000원×200명=9,4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0.5백만원** 가. 전화사용료 및 우편료 • 500,000원×1식=500천원 **○ 급식비(210-04) : 71백만원** 가. 교육진행 음료대 준비 • 4,000원×50명×40회=8,000천원 나. 원내급식 • 50명×100식×5,000원=25,000천원 다. 원외급식(특별만찬 포함) • 50명×30식×25,000원=37,500천원 라. 단수조정 • 500,000원=500천원 **○ 임차료(210-07) : 31.5백만원** 가. 현장견학 버스임차료 • 550,000원×30회=16,500천원 나. 장소 임차료 • 1,500,000원×10회=1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8.1백만원** 가. 현장견학 교육생 여비 • 70,000원×50명×2일×4회=28,000천원 나. 강사 여비 지원 등 • 100,000원×1명=1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5백만원** 가. 교육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의 • 30,000원×8명×4회= 960천원 나. 교육생 과정 평가 간담회 • 30,000원×6명×3회= 540천원

자료: 통일부

2026년도 동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는 양성 및 재교육 대상 인원수, 예산 편성규모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를 순차적으로 검토함.

(가) 양성 및 재교육 인원의 적정인원 조정 필요

통일부는 예산편성 인원(200명)과 실제 양성 및 재교육 인원을 다르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도 동 사업 예산안은 양성 및 재교육 인원을 200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양성 및 재교육 인원은 최소 180명에서 최대 220명까지로 계획하고 있음.

< 2025년 및 2026년 양성 및 재교육 계획 인원 비교 >

(단위: 명)

구분	2025년	2026년
신규 양성	0	60~ 80
재교육	100	120~140
합계	100	180~220

자료: 통일부

예산안이 투입 인원(양성 및 재교육 인원)과 투입 단가(양성 및 재교육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부가 편성한 2026년도 동 사업 예산안은 사업계획과 예산 규모 간의 정합성이 떨어짐.

통일부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 대상 인원을 180명으로 확정할 경우, 200명을 기준으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은 20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다 편성되어 불용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2026년도 양성 및 재교육 인원은 과거 실적(최대 130명)을 고려

하여 적정인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신규양성 및 재교육 시행 현황 >

(단위: 명)

연도	신규양성	재교육	합계
2022년	33	97	130
2023년	13	40	53
2024년	0	104	104
2025년 9월	0	40	40

자료: 통일부

(나) 교육의 질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비 등 적정 규모 조정 필요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수용비 중 일부 편성액과 임차료 및 국내여비 편성액의 경우 2026년 양성 및 재교육 인원 증가율 200%를 크게 초과하여 편성되었음.

< 증가율 200% 초과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원)

비목	편성명세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가액 (B-A)	증가율 (%)
일반수용비	책자 제작	3,900	36,000	32,100	823%
	교육 용품 및 소모품 구매비	1,600	16,000	14,400	900%
	상장 및 수료증, 현수막 제작 등	2,400	9,400	7,000	292%
임차료	현장견학 버스 임차료	9,000	16,500	7,500	250%
	장소 임차표	0	15,000	15,000	
국내여비	현장견학 교육생 여비	7,000	28,000	21,000	300%

이에 대해 통일부는 과정 횟수 증가 및 워크숍 등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등으로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다고 설명함.

< 증가율 200% 초과 예산편성 사유 >

비목	편성명세	증가율 200% 초과 예산편성 사유
일반수용비	책자 제작	° 교육자료를 「교육생」뿐만 아니라 통일 교육 현장에서 「통일 교육 시 수강자」들에게 「통일교육교재」로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작
	교육 용품 및 소모품 구매비	° 과정 횟수 증가 및 워크숍 등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상장 및 수료증, 현수막 제작 등	° 과정 횟수 증가 및 워크숍 등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임차료	현장견학 버스 임차료	° 신규양성 과정 워크숍 신설과 현장견학 횟수 증가
	장소 임차료	° 신규양성 과정 중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교육하고, 교육 종료 후 워크숍 개최
국내여비	현장견학 교육생 여비	○신규양성 과정 종료 후 과정별 위크숍과 합동 워크숍 개최

자료: 통일부

그러나 예산 증가율 200%를 초과하는 일반수용비 편성내역을 보면, 책자 제작 수량이 260부에서 2,000부로 증가하고, 소모품 구입비 구입단가가 8,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역이 과다하게 증액되었음.

또한, 현장견학 버스임차료의 경우 최근 4년간 집행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해당 예산을 95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현장견학 교육생 여비는 최근 4년간 집행사례가 없어 편성 예산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해당 예산을 7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증액하였음.

< 최근 4년간 현장견학 버스임차료 및 교육생 여비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현장견학 버스임차료			현장견학 교육생 여비	
	예산액	임차 횟수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2022년	9,000	2회	880	7,000	집행실적 없음
2023년	9,000	1회	440	7,000	
2024년	9,000	1회	440	7,000	
2025년 9월	9,000	1회	440	7,000	

자료: 통일부

따라서 동 사업 예산안 중 증가율이 200%를 초과하는 예산은 교육의 질 향상에의 기여 정도, 최근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필요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165]는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166]」은 통일교육원 원장으로 하여금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사후관리와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강의활동을 지원을 위하여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관한 정보(관리대장, 데이터베이스 및 강사정보)를 관리·제

165)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166)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9조(전문강사 관리 및 지원) ① 원장은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을 작성·유지한다.
② 원장은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강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교육원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재교육)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통일교육 전문강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교육원이 실시하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하도록 하고 있고, 통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2년마다 교육원이 실시하는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 통일교육 전문강사 관련 사후관리 규정 >

규정	관리 방법	관리 목적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9조	관리대장 작성·유지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사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강사정보 홈페이지 등재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강의활동을 지원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10조	재교육	통일교육 전문강사 능력 향상

통일부는 양성된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관리를 위하여 양성인원 총 852명[167] 중 837명을 관리대장에 작성·유지하고 있고, 공공부분 전문강사 30여명의 정보를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양성인원 중 총 847명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관리대장에 작성된 통일교육 전문강사 837명에 관한 정보[168]는

167) 통일부는 2010년 이후 2025년 9월말까지 총 852명의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신규 양성함.

< 신규 양성 현황 >

연 도	학교통일	탈북민	사회통일	공공통일	합 계
'10년	21	-	31	-	52
'11년	21	25	36	-	82
'12년	21	79	-	-	100
'13년	29	21	-	-	50
'14년	47	46	31	-	124
'15년	54	학교과정과 통합운영	30	-	84
'16년	45		26	-	71
'17년	41		18	-	59
'18년	-		-	37	37
'19년	32		-	-	32
'20년	-		-	-	-
'21년	-		20	34	53
'22년	33		-	-	23
'23년	-	33	13	-	46
'24년	-	23			23
'25년	-	15	-	-	15
합계	334	242	205	71	852

자료: 통일부

168)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지역(활동, 거주 등), 양성연도 및 양성부문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통일교육 전문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연도에 작성된 자료를 단순 누적한 자료에 불과하여 시의성 부족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로서의 활용성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문강사 정보는 총 양성인원 852명 대비 약 3.2%에 불과하여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려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로서의 역할이 크지 아니함.

아울러, 통일부가 재교육했다는 인원 847명에는 동일인이 여러 차례 재교육을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관리 자료로서의 의미가 미약함. 더욱이 통일부는 양성된 통일교육 전문강사 총 852명 중 절반 이상이 재교육을 단 한 번도 수료하지 않았다는 정보만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전문강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현재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는 통일교육 전문 강사는 공공 부문 30여 명, 학교 부문 50~60여 명을 포함해 총 80~9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와 같이 통일부의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관한 통계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봄.

□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사업 중복 해소 및 예산 효율성 제고 필요

‘통일교육 현장체험’ 내역사업의 하위사업인 ‘DMZ 평화 걷기’ 내내역사업은 청년 등 국민들에게 DMZ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2026년 DMZ 평화 걷기 내내역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 통일교육 현장체험	587	467	-	547	547	80	17.1
- DMZ 평화 걷기	58[169]	-	-	200	200	200	-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2021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나 2024년에 정부 예산 절감 기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바 있음.

2021년 이후 동 내내역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2021년 7억 5,000만원에서 2024년 6,000만원으로 축소되면서, 참여인원 또한 2021년 386명에서 2023년 4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169) 2024년 예산은 ‘통일교육 현장체험’ 내역사업이 아닌 ‘DMZ 통일걷기 지원’ 내역사업에 편성함.

< DMZ 평화 걷기 내내역사업 사업추진 실적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참여인원
2021년	5031-304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750	691	386명
2022년	3036-312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300	299	251명
2023년	3036-312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280	260	140명
2024년	5031-304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60	58	43명
2025년	2024년 사업종료로 미편성			

자료: 통일부

2024년에 종료되었던 동 사업을 2026년에 재개하는 이유로, 통일부는 DMZ의 생태적·평화적 가치를 활용한 통일의 필요성 확산 및 이전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170] 등을 들고 있음.

통일부는 2026년 'DMZ 평화의 길' 사업을 대학생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총 3회(회당 50명) 참가자를 모집하여, 경기(파주~연천)와 강원(고성~철원) 구간별로 3박 4일 또는 4박 5일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임.

< 2026년 동 사업추진 계획 >

구분	기간	주요 노선 (안)	참가자 (예정)
경기 구간	3박 4일	ㅇ임진각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 남북출입사무소 → 김포아트홀 →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 강화평화전망대 → 대룡시장 → 화개정원	50명, 2회
강원 구간	4박 5일	ㅇ고성통일전망대 → DMZ 박물관 → 양구 두타연 → 백암산케이블카 → 평화의댐 → 안동철교 → 승리전망대 → 용양보 → 철원평화전망대 등	50명 1회

자료: 통일부

170) 2024년도 전체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5%가 매우 만족 및 만족 응답, 향후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도 100%가 지속 희망 및 재참여 희망

그런데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에서 다수 시행되고 있음.

< 2025년 지자체 등 유사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명	시행 주체	사업목적	횡단구간	참가수 (예정)	소요 예산
DMZ OPEN 평화 걷기	경기도청 북부청사	DMZ 일원 스포츠 행사를 통한 평화·통일에 대한 경기도의 염원과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DMZ 관광 활성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171]	1,500여명	2억원
접경지역 DMZ 평화의 길 관광 페스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172]	DMZ 지역 순회 음악회 개최,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역 관광명소 연계 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내 관광객 유치	강원 접경지역 4개 군(철원, 양구, 화천, 인제)	4,000명	3억 9,000만원
2025 파주 DMZ평화의 길 DMZ 펫트레킹	파주도시관광공사[173]	DMZ평화의 길 브랜드 구축 및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 등	경기도 파주시 일원(DMZ평화의 길 9코스, 리비교역사문화공원)	150팀	5,000만원
2025 연천 DMZ 평화의 길 걷기	연천군	지역 관광 활성화와 DMZ 평화의 길 홍보 강화	DMZ 평화의 길 13코스 일원	220명	3,000만원

자료: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DMZ 관광 활성화' 등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수요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통일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방점을 두어 사업추진 목적이 다소 상이하지만, 실제 과업 내용(걷기 행사 운영)에서는 양 사업 간에 큰 차이는 없음.

171) 걷기 코스 운영(안)
○ (9.1㎞) ① 임진각 → ② 에코뮤지업 → ③ 초평도 전망대 → ④ 64T → ⑤ 임진나루 → ⑥ 율곡습지공원 → 셔틀버스 → ⑦ 임진각
○ (6㎞) ① 임진각 → ② 에코뮤지업 → ③ 초평도 전망대 → ④ 64T → 셔틀버스 → ⑤ 임진각
17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됨.
173) 「지방공기업법」 제80조 및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됨.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역 현장에 기반하여 대규모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유사 사업을 재개할 경우 국가 예산의 중복 투자 및 역할 중복이라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2024년에 종료된 동 사업을 재개하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 방안[174]을 마련하여 사업의 중복을 해소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봄.

174) 예를 들어, 국가(통일부)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한 거시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역 관광 및 문화 활성화' 역할에 집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2)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학교 통일교육 강화	4,616	5,191	4,913	△278	△5.4
-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1,046	1,177	1,174	△3	△0.3
-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106	2,893	2,785	△108	△3.7
- 미래세대 평화·통일 민주시민 인식 확산	-	-	954	954	100.0
-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464	1,121	-	△1,121	△100.0

자료: 통일부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은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 및 대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51억 9,100만원 대비 5.4%인 2억 7,800만원 감액된 49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미래세대 평화·통일 민주시민 인식 확산에서 9억 5,4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에서 300만원,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에서 1억 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은 사업이 종료되어 11억 2,100만원 전액 감액되었음.

□ 소수의 우수학생 중심 신규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 필요

‘학교 통일교육 강화’ 세부사업은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 및 대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보다 2억 7,800만원이 감액된 49억 1,300만원을 편성함.

< 학교통일교육 강화 세부사업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예산안(B)	(B-A)	(B-A)/A
○ 학교 통일교육 강화	4,616	5,191	5,191	4,913	△278	△5.4
-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1,046	1,177	1,177	1,174	△3	△0.3
-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106	2,893	2,893	2,785	△108	△3.7
- 미래세대 평화·통일 민주시민 인식 확산	0	0	0	954	954	순증
-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464	1,121	1,121	0	△1,121	순감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6년 ‘학교 통일교육 강화’ 세부사업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내역사업 예산 11억 2,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미래세대 평화·통일 민주시민 인식 확산’ 내역사업 예산 9억 5,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25년까지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내역사업은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등 총 3개의 내내역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자체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하면서 이 중 ‘학교통일 체험교육’ 내내역사업은 사업 명칭과 내용이 개편되어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 내내역사업으로 편입되었으며,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및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두 내내역사업은 폐지되었다고 설명함.

< 2026년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내역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예산안(B)		(B-A)/A
○ 참여 · 체험형 프로그램	1,464	1,121	1,121	0	△1,121	순감
-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115	135	135	0	△135	순감
- 학교통일 체험교육	1,149	782	782	0	△782	신규사업 편입
-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200	204	204	0	△204	순감

자료: 통일부

2026년 예산안에 신설된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와 기존 '학교통일 체험교육' 내역사업을 비교해 보면, 사업 운영 방식(기존: 학교별 선착순 ↔ 신규: 우수학생 100명 선발), 참석 범위(기존: 교사 및 학생 ↔신규: 시도교육청 등 관계자 추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

< 학교통일 체험교육과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 사업 비교 >

구 분	(기존) 학교통일 체험교육	(신규)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
사업 운영 방식	o **학교별 선착순**(1개교당 1회만 가능) 신청, 개별 학교 단위로만 교육 진행 * 교육원 홈페이지 자체 모집	o 각 시도교육청에서 △초등5~6학년 △중등 1~2학년 대상 **우수 학생 100명 선발**, 지역 내 다양한 학교 및 연령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함께 참여
참석 범위	o **신청교사 및 1개 학급**(25~30명 내외)	o 초중등 학생 100명 내외 및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평화통일 교육 교사가 함께 참여, 기성세대 역량 강화 도모
프로그램 내용	o 당일 교내 및 교외 체험 위주 운영, 교육 시간이 4시간 내외로 다소 부족 -(교내) 통일 인형극, 통일 OX 퀴즈, 북한 음식·평화의 집 만들기 등 -(교외) 파주 임진각, 도라산 전망대, 제3땅굴 견학 등	o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2박 3일 프로그램 구성 - △(1일차) 입소식-게이미피케이션-평화통일 콘서트 △(2일차) 통일 현장 견학(1·2차 운영)-토론회·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강연 등 △(3일차) 평화통일 미래 경연대회-폐회식

구 분	(기존) 학교통일 체험교육	(신규)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
수행업체 성격	o 체험교육 안전관리 및 교외 견학 프로그램 수행에 적합한 업체 선발	o 퍼실리테이터, 해커톤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집단 필요
사후 네트워킹 관리	o 학교별 당일 체험교육 위주로 운영되어, 네트워킹 관리가 사실상 어려움	o 평화·통일 리더 기수제 도입, △수료증 발급 △우수 참여자 포상 △수료 이후 기수별 네트워크 관리 등 평화통일 미래세대 리더로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통일부

그런데, 기존 사업의 참여자수는 최근 4년 평균 약 13,108명에 달하고 있는 반면, 신규 사업의 2026년 참여자수는 최대 1,000명에 머물것으로 보여 기존 사업 대비 참여자수가 7.6%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간 학교통일 체험교육 내역사업 사업추진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참여자 수
2021년	541	507	10,354명
2022년	941	891	13,143명
2023년	941	892	12,313명
2024년	1,209	1,149	16,624명
평균			13,108명

자료: 통일부

이러한 사업 참여자수 감소는 통일교육 참여자 수(통일교육 원내 과정 참여자 수+학교 통일교육 참여자 수+사회 통일교육 참여자 수)를 합산하여

통일교육의 성과를 도출하는 신규 사업이 속한 프로그램[175]의 성과목표와 방향성이 상충됨.

< 프로그램 성과지표 및 목표치 >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구분	'22	'23	'24	'25	'26	
①통일교육 참여자 수(명)	목표	신규	신규	526,561	530,215	667,139	통일교육 참여자수(통일교육 원내 과정 참여자 수+학교 통일교육 참여자 수+사회 통일교육 참여자 수)
	실적	신규	514,894	894,685	-	-	

자료: 통일부

더욱이,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통일인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176]에서 청소년의 통일인식 제고 및 세대 간 인식격차[177] 해소를 위해서는 참여 문턱이 낮은 청소년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체험교육의 저변확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성과목표와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소수의 우수학생 중심'으로 신규사업[178]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방향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임.

따라서 신규사업 추진 시 참여자 수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175) 관련 예산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4결산	'25예산	'26예산안
(1) 통일교육추진(5031)	일반회계	4,067	14,097	14,200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304)	일반회계	2,438	2,490	2,410
학교 통일교육 강화(308)	일반회계	4,616	5,191	4,913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309)	일반회계	3,586	3,644	3,957
통일교육 자료개발(310)	일반회계	2,657	2,288	2,436
사이버통일교육센터운영(정보화)(507)	일반회계	481	484	484

176) '24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통일필요' 인식 점차 감소('21년 61.2% → '22년 57.6% → '23년 49.8% → '24년 47.6%)

177) '24년 하반기 통일·대북정책 정기 여론조사(통일부) : 통일 관심도 67.4% (△30대 이하 49.6% △40·50대 73.4% △60대 이상 77.2%)

178) 기존 사업은 학교별 선착순 방식이고, 신규사업은 우수학생 선발방식임.

폐지된 대중 참여형 프로그램(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등)을 복원하여 신규사업과 병행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5031-309)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3,583	3,644	3,957	313	8.6
-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1,426	1,423	1,291	△132	△9.3
-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	2,064	2,151	2,323	172	7.9
-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지원	-	-	343	343	100.0
-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93	70	-	△70	△100.0

자료: 통일부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5031-309)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 통일교육 저변 확대 및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36억 4,400만원 대비 8.6%인 3억 1,300만원이 증액된 39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지원은 세부사업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공론화에서 자유민주평화통일담론확산 8억 5,300만원 중 3억 4,300만원이 이관 편성되었고,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에서 1억 3,200만원 감액,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에서 1억 7,2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는 사업이 종료되어 7,000만원 전액 감액되었음.

□ 셔틀버스 운영 재개 등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 대책 강구 필요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세부사업의 하위사업인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내역사업은 오두산통일전망대를 운영함으로써 대국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보다 1억 7,200만원이 증가한 23억 2,3000만원을 편성함.

< 2026년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내역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3,583	3,644	3,644	3,957	3,957	313	8.6
-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2,064	2,151	2,151	2,323	2,323	172	0

자료: 통일부

2026년도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내역사업의 세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예산이 3,500만원(’25년 내진 적용 여부 점검 수수료 반영), 공공요금 및 제세 및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이 각각 4,000만원(공공요금 최근 3년 동결분 인상분 반영 및 낡은 시설·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용역비 예산이 5,700만원(비정규직 처우개선 기재부 일괄 증액) 증액되었고, 일용임금, 유류비 등 나머지 세목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편성됨.

< 2026년도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사업 세목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목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합계	2,151	2,323	172
	일용임금	3	3	0
	일반수용비	129	164	35
	공공요금및제세	106	146	40
	유류비	28	28	0
	시설장비유지비	80	120	40
	일반용역비	155	155	0
	관리용역비	1,508	1,565	57
	국내여비	6	6	0
	사업추진비	5	5	0
	일반연구비	20	20	0
	실시설계비	3	3	0
	공사비	60	60	0
	감리비	2	2	0
	시설부대비	1	1	0
	자산취득비	45	45	0

자료: 통일부

2025년과 동일한 금액이 편성된 유류비 예산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배치된 공용차량 3대[179]의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비용으로, 최근 4년간 집행률을 살펴보면 집행액이 2022년 2,800만원에서 2024년 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 8월말 기준으로는 집행액이 300만원에 그치고 있음

< 연도별 유류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2026년
편성액	집행액	편성액	집행액	편성액	집행액	편성액	집행액	편성액
28	28	28	10	28	6	28	3	28

자료: 통일부

179) 전망대 차량 3대(△중대형 승합 셔틀버스 1대, △대형 승합 셔틀버스 1대 △소형화물 트럭 1대)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23년에는 공공요금 부족 예산 충당[180]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최소화함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입장료 무료화 이후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여 유류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셔틀버스 미운행이 2026년에도 지속될 경우 2026년 유류비 수요는 최근 집행액 추이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임.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공공요금 예산이 4,000만원 증액되어 실제 소요액 수준에 맞게 현실화한 만큼, 공공요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통일부는 셔틀버스 운영 재개 등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거나, 유류비 예산을 실소요 만큼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180) 매년 반복되는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유류비 절감 및 미집행액을 세목 조정하여 사용함.
- 세목조정 내용 △'23년 유류비→공공요금 세목조정(17백만원) △'24년 유류비→공공요금 세목조정(22백만원)

(4) 통일교육 자료개발(5031-310)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통일교육 자료개발	2,657	2,288	2,436	148	6.5
- 통일교육 자료개발·보급	1,949	1,547	1,647	100	6.5
-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운영	653	685	733	48	7.0
- 통일교육 자료센터 운영	56	56	56	-	-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 자료 개발’(5031-310)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북한관 확립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교육 표준교재, 통일 및 북한 관련 각종 교재 자료의 개발·보급, 수요자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의 개발·운영, 통일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원내 교육생, 통일교육 전문가·연구자 등 ‘통일교육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양질의 정보자료를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22억 8,800만원 대비 6.5%인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24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통일교육 자료개발·보급에서 1억원,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운영에서 4,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5)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5031-507)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481	484	484	-	-
-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481	484	484	-	-

자료: 통일부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5031-507)은 공공, 교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원활한 통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예산과 동일하게 4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6)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5033-308)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428	1,512	1,804	292	19.3
-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428	1,512	1,804	292	19.3

자료: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5033-308)은 국립통일교육원 청사 시설 관리 및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5억 1,200만원 대비 19.3%인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8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8. 통일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6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7000] 통일행정지원			59,527	63,337	66,802	3,465	5.5
	[7001] 인건비		42,286	44,763	46,254	1,491	3.3
		[100]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42,286	44,763	46,254	1,491	3.3
	[7011] 본부 기본경비		5,035	5,326	6,617	1,291	24.2
	[7018] 소속기관 기본경비		3,135	3,327	3,407	80	2.4
	[7031] 통일업무 정책연구개발		263	438	438	-	-
		[300] 정책연구개발	263	438	438	-	-
	[7032] 통일업무지원		1,040	1,118	1,137	19	1.7
		[303] 통일업무지원	1,040	1,118	1,137	19	1.7
	[7033] 대북활동지원		1,572	1,992	1,873	△119	△6.0
		[304] 통일정책추진활동	1,572	1,992	1,873	△119	△6.0
	[7034] 통일정보화		1,815	1,955	1,959	4	0.2
		[501] 통일업무 정보화(정보화)	1,815	1,955	1,959	4	0.2
	[7035] 본부 전산운영		4,381	4,418	5,117	699	15.8
		[500] 본부 전산 운영경비(정보화)	1,671	1,768	2,497	729	41.2
		[517]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	2,710	2,650	2,620	△30	△1.1

자료: 통일부

「통일행정지원」프로그램은 통일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여건 조성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그 밖에 정책연구개발, 통일업무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2025년) 예산 633억 3,700만원 대비 5.5%인 34억 6,500만원이 증액된 668억 2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14억 9,100만원, 본부 기본경비에서 12억 9,100만원, 소속기관 기본경비에서 8,000만원, 통일업무지원에서 1,900만원, 통일업무 정보화(정보화)에서 400만원, 본부 전산 운영경비(정보화)에서 7억 2,90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통일정책추진활동에서 1억 1,900만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에서 3,000만원 각각 감액되었음.

나. 세부사업

(1)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1,819	1,719	2,907	1,188	69.1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1,819	1,719	2,907	1,188	69.1

자료: 통일부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는 원활한 통일업무 수행을 위해 본부 기관운영 및 행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7억 1,900만원 대비 69.1%인 11억 8,800만원이 증액된 29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관사 관련 신규 예산 편성 시 적정성 검토 필요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은 기관운영 및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통일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1,719	1,719	2,907	1,188	69.1
무형자산	-	-	1,150	1,150	순증

자료: 통일부

이 가운데 무형자산 11억 5,000만원은 통일부장관의 관사 임차를 위하여 신규로 편성된 것임.

< 무형자산(전세보증금) 예산안 세부내역 >

ㅇ 무형자산(440-00) 1,150백만원 - 숙소 전세임차(보증금)

자료: 통일부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제1항[181]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안보 관련 긴급회의가 소집될 경우 신속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음.

통일부는 현재 안보부처(통일, 외교, 국방, 국정원) 중 유일하게 장관 공

18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관이 없고, 외교부장관(한남동), 국방부장관(한남동), 국가정보원장(내곡동) 등은 모두 공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당연직 위원 외에도 대통령령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위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사가 없는 위원에 해당함.

통일부는 2022년 예산에 장관 관사 임차비로 11억을 편성하였으나, 당시 장관 자택이 용산구에 위치하여 관사 임차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어 해당 예산이 불용 처리된 바 있음.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사가 없는 기관의 경우 긴급회의 참석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타 부처 사례를 검토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고, 향후 임명되는 장관의 경우 그 거주지에 따라 관사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한편, 통일부 전체 관사 이용 현황에 따르면 총 73개 관사 중 28개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의선 출입사무소 근무자들을 위한 관사 임대차 계약에서 고액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182]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는 관사 중 그 관사입주를 선호하지 않

182) 통일부는 향후 계약 체결 시 대상 건물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을 경우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 관사 임대차 관련 계약 관리가 미흡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임차 예산의 집행 이전에 통일부가 관리하는 관사의 임대차 계약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관사 계약과 운영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 통일부 전체 관사 이용 현황 >

기관명		제공 수	위치	운영 방식 (직접/위탁)
국립6.25 납북자기념관		20㎡(2실)	파주시 문산읍	위탁(임차)
남북 관계 관리단	전방 사무소	59.42㎡(1실) 59.97㎡(2실) 69.07㎡(1실)	파주시 문산읍	직접(취득)
	경의선 출입	27.83㎡(2실)	파주시 문산읍	위탁(임차)
		19.29㎡(1실)	파주시 문산읍	위탁(임차)
		18.59㎡(4실)	파주시 문산읍	위탁(임차)
		17.90㎡(1실)	파주시 문산읍	위탁(임차)
		84.98㎡(1실)	파주시 문산읍	위탁(임차)
	동해선 출입	59.68㎡(3실) 39.36㎡(2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직접(취득)
		39.60㎡ (1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직접(취득)
		49.44㎡ (1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직접(취득)
한반도통일미래센터		17㎡(16실)	연천군 전곡읍	직접(취득/ 기숙사)
		21.73㎡(24실) 32.59㎡(4실)	연천군 전곡읍	직접(취득/ 기숙사)
하나원		57.60㎡(3실) 74.30㎡(2실)	안성시 죽산면	직접(취득)
		26.44㎡(59실)	안성시 삼죽면	직접(취득/ 기숙사)
		79.34㎡(1실)	안성시 금광면	위탁(임차)
제2하나원		25.9㎡(32실) 51.8㎡(8실)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직접(취득)

자료: 통일부

(2) 정책연구개발(7031-300)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정책연구개발	263	438	438	-	-
- 정책연구개발	263	438	438	-	-

자료: 통일부

‘정책연구개발’(7031-300)은 통일·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통일 및 북한문제 등과 관련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의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예산과 동일한 4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3) 통일업무지원(7032-303)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통일업무지원	1,040	1,118	1,137	19	1.7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75	280	280	-	-
- 통일부 기록관 운영	96	94	94	-	-
- 비상안전기반 구축	49	72	72	-	-
- 청년인턴 운영	620	672	691	19	2.8

자료: 통일부

‘통일업무지원’(7032-303)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통일부 기록관 운영, 비상안전기반 구축, 청년인턴 운영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1억 1,800만원 대비 1.7%인 1,900만원이 증액된 11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청년인턴 운영에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음.

(4)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7034-501)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	1,815	1,955	1,959	4	0.2
- 통일업무 정보화기반 개선	277	285	415	130	45.6
- 개인정보보호 강화	177	178	178	-	-
-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69	203	77	△126	△62.0
-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 및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202	198	198	-	-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1,090	1,091	1,091	-	-

자료: 통일부

‘통일업무 정보화(정보화)’(7034-501)는 통일업무 정보화 기반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 및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9억 5,500만원 대비 0.2%인 400만원이 증액된 19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통일업무 정보화기반 개선에서 1억 3,000만원 증액되었고,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정보시스템 ISP 구축 사업이 종료되어 1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음.

(5)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7035-500)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671	1,768	2,497	729	41.2
- 본부 전산운영경비	1,671	1,768	2,497	729	41.2

자료: 통일부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7035-500)는 통일 행정업무시스템 유지 관리 및 기능개선,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운영, e-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통일부 업무용 PC·SW 관리 등 통일업무 정보화 추진에 따른 각종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7억 6,800만원 대비 41.2%인 7억 2,900만원이 증액된 24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액 사유는 노후화된 업무용 PC·SW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7억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6)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7035-517)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	2,710	2,650	2,620	△30	△1.1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2,710	2,650	2,620	△30	△1.1

자료: 통일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7035-517)은 사이버 공격에 대비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및 침해대응을 통해 통일분야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26억 5,000만원 대비 1.1%인 3,000만원이 감액된 26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감액 사유는 해킹메일 모의훈련 솔루션 교체가 완료되어 자산취득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음.

9. 남북협력기금 전출(80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6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8000] 남북협력기금 전출			100,000	100,000	100,000	-	-
	[8410] 남북협력기금 전출		100,000	100,000	100,000	-	-
		[880] 남북협력기금 전출	100,000	100,000	100,000	-	-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전출」프로그램은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및 기금사업비 충당을 위한 예비재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2025년)와 동일한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

나. 세부사업

(1) 남북협력기금 전출(8410-880)

< 2026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남북협력기금 전출	100,000	100,000	100,000	-	-
- 남북협력기금 전출	100,000	100,000	100,000	-	-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전출’(8410-880)은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및 기금사업비 충당을 위한 예비재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와 동일한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

□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필요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은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및 기금사업비 충당을 위한 예비재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하려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과 동일한 1,000억원을 편성함.

< 2026년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A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원 중 716억원은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용도이며, 나머지 284억원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한 예비재원 용도임.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은 과거 대북 경수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차입한 공자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분(경수로계정)과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부족분 예수 시 그 이자 상환분(남북협력계정)으로 구분되며, 2026년도 계획액 716억원 중 631억원은 경수로계정 차입비용 이자 상환분으로 편성되었고, 85억원은 남북협력계정 예수비용 이자 상환분으로 편성되었음.

< 사용 용도별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편성내역(1,000억원) >

구성		계획액		산출내역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원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716억원) 및 기금사업비 충당(284억원)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716억원		경수로계정 및 남북협력계정 예수이자 상환	
			631억원	경수로 계정	경수로 사업 관련 기존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한 당해연도 신규 예수에 따른 이자
			85억원	남북협력 계정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당해연도 공자기금 신규 예수에 따른 이자
	사업비 충당	284억원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 예비재원	

자료: 통일부

최근 4년간 기금 사업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6.1%, 2023년 1.9%, 2024년 3.8%에 그치고 있고 2025년의 경우에도 9월말 현재 2.5%에 머물고 있음.

< 최근 4년간 기금 사업비 집행률 >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2년	1,269,046	1,269,046	13,231	1,282,276	77,916	6.1	-	1,204,360
2023년	1,210,118	1,210,118	-	1,210,118	22,434	1.9	3,300	1,184,384
2024년	872,235	872,235	3,300	875,535	32,987	3.8	-	842,548
2025년 (9월말)	798,089	478,089	-	478,089	11,825	2.5	-	-

자료: 통일부

이처럼 기금 사업비 집행률이 부진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한 기금예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183] 예비재원 역시 그 집행수요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전출금 중 남북협력계정용 전출금과 사업비 충당용 예비재원 전출금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되고 있으며, 전출 후 집행되지 아니한 잔액은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편성액	집행액	편성액	집행액	편성액	집행액	편성액	집행액
1,000	1,000	1,000	1,000	1,000	572	1,000	1,000

자료: 통일부

따라서 통일부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편성 목적대로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동 전출금을 실제 집행 수요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기금에 전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183) 최근 4년간 공자기금 예수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B)	불용액 (C)	집행률 (C/A)
		당초	수정(A)				
2022	합계	90,000	90,000	90,000	43,087	46,913	47.9
	경수로계정	46,213	46,213	46,213	43,087	3,126	93.2
	남북협력계정	**43,787**	**43,787**	**43,787**	-	**43,787**	-
2023	합계	73,914	73,914	73,914	44,873	29,041	60.7
	경수로계정	45,054	45,054	45,054	44,873	181	99.6
	남북협력계정	**28,860**	**28,860**	**28,860**	-	**28,860**	-
2024	합계	76,209	76,209	76,209	51,211	24,998	67.2
	경수로계정	51,714	51,714	51,714	51,211	503	99.0
	남북협력계정	**24,495**	**24,495**	**24,495**	-	**24,495**	-
2025 (8월말)	합계	93,337	89,497	89,497	29,818	-	33.3
	경수로계정	76,802	76,802	76,802	29,818	-	38.8
	남북협력계정	**16,535**	**12,695**	**12,695**	-	-	-

Ⅰ. 2026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개요

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367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5,200만원(2.7%) 증가하였음.

<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추경		(B-A)	%
세 입	13	13	13	-	-
세 출	35,764	35,764	36,716	952	2.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나. 세입 예산안

2026년도 세입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조직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운영비, 사업비)의 이자 수입인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과오지급금 회수, 급여 환급금, 정부구매카드 결제 취소에 따른 수수료 회수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모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세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관	항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 감		비 고
		본예산 (A)	추경		(B-A)	%	
소관 합계		13	13	13	-	-	
기타 이자 수입 및 재산 수입	기타재산 수입	-	-	-	-	-	
	기타재산 이자수입	3	3	3	-	-	o 지역회의·협의회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운영비·사업비) 이자 수입
	소계	3	3	3	-	-	
기타 경상 이전 수입	기타경상 이전수입	10	10	10	-	-	o 과오지급금 회수, 급여 환급금, 정부구매카드 결제 취소에 따른 수수료 회수 등
	소계	10	10	10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세출 예산안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367억 1,6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357억 6,400만원 대비 2.7%인 9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음.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25년 71억 2,700만원 대비 1.6%인 1억 1,700만원, 기본경비는 2025년 19억 1,500만원 대비 0.2%인 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비도 2025년 267억 2,200만원 대비 3.1%인 8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세출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합 계	33,996	35,764	35,764	36,716	952	2.7
인 건 비	6,462	7,127	7,127	7,244	117	1.6
기 본 경 비	1,858	1,915	1,915	1,918	3	0.2
주 요 사 업 비	25,676	26,722	26,722	27,554	832	3.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출예산안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72억 4,4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19.7%, 기본경비는 19억 1,8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5.2%, 주요 사업비는 275억 5,4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75.1%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은 전년 대비 6억 900만원 증액(15.0%)된 46억 6,300만원, ‘정보화사업’은

전년 대비 1,400만원(3.1%) 감액된 4억 3,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은 2025년과 동일하게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500만원(0.1%) 감액된 217억 6,700만원, ‘시설관리’는 전년 대비 2억 4,200만원(59.3%) 증액된 6억 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단위사업별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합 계	25,676	26,722	26,722	27,554	832	3.1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4,488	4,054	4,054	4,663	609	15.0
○ 자문회의 운영	4,488	4,054	4,054	4,663	609	15.0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7	37	37	37	-	-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7	37	37	37	-	-
정보화사업	427	451	451	437	△14	△3.1
○ 정보화사업 추진	427	451	451	437	△14	△3.1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20,350	21,772	21,772	21,767	△5	△0.1
○ 자문위원 역량강화	2,529	2,359	2,359	2,380	21	0.9
○ 지역협의회 운영	12,141	13,239	13,239	13,382	143	1.1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5,680	6,174	6,174	6,005	△169	△2.7
시설관리	374	408	408	650	242	59.3
○ 청사관리 운영	374	408	408	650	242	59.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주요 검토의견 요약

(1) 자문회의 운영’ 세부사업 중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내역사업(5억 9,300만원)과 관련하여, 민주평통은 회의 출석 수당 단가를 100,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지역운영위원회의, 청년 및 여성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회의 출석 수당 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는 바, 이 경우 위원 간 차별로 인식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위원들의 참여 동기를 저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회의 출석 수당을 균일하게 인상(예: 75,000원)하는 등 형평성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회의 출석 수당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 및 청년·여성운영위원회는 회의 출석 수당이 지급되는 회의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바, 민주평통은 그 지급근거를 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자문회의 운영’ 세부사업의 하위사업인 ‘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내역사업(28억 6,900만원)과 관련하여, 민주평통은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을 타 비목으로부터 임차료 부족액을 반복적으로 충당하고 있는 바, 민주평통은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현실적 수요에 기반해 조정·편성함으로써, 임차료 예산의 구조적 초과 집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4)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내역사업의 하위사업인 ‘해외 청년·여성위

원 역량지원’ 내내역사업(2억 6,500만원)과 관련하여, 민주평통은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보고서에서 제시된 의견(사업의 중복성 및 실효성 부족 문제 해소)에 대한 개선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규모를 형식적으로만 감액하면서 실질적으로는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바,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됨.

(5) ‘기관지 제작’ 내역사업의 하위사업인 ‘기관지 발간’ 내내역사업(4억 5,500만원)과 관련하여, 민주평통의 기관지(민주평통) 제작 및 배포 방식은 웹진 제작 및 배포 방식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바, 민주평통은 기관지 발간 방식을 저비용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소요 비용을 절감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2026년도 예산안 사업별 검토

1. 총괄

□ 일부 회의 출석 수당 미인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령[184]은 통일자문회의[185]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매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의 회의 출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반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이내로 하며, 회의시간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민주평통은 통일자문회의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출석 수당 단가를 2025년 50,000원에서 2026년 100,000원으로 인상하여 2026년도 회의 출석수당 예산안을 2025년보다 1억 627만원 증액된 2억 1,254만원으로 편성함.

< 회의 출석 수당 인상 현황 >

1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5조(수당과 여비 등) ① 통일자문회의, 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지역회의·협의회 및 그 지회,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국내외의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지급기준
회의 출석 수당	매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

18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구분		2025년		2026년	
		편성단가 (원)	편성총액 (천원)	편성단가 (원)	편성총액 (천원)
운영 위원회	위원회	50,000	9,280	100,000	18,560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50,000	17,500	100,000	31,500
분과 위원회	분과위원회	50,000	79,490	100,000	158,980
	소위원회				
합계			106,270		212,54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그런데 민주평통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청년 및 여성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회의 출석 수당 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0원을 유지함.[186)187)]

< 회의 출석 수당 인상 현황 >

세부사업	내역사업	참석회의명	2025년 예산 편성단가(원)	2026년 예산안 편성단가(원)
자문회의 운영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50,000	100,000
		상임위원회		100,000
		분과위원회		100,000
	지역 운영위원회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50,000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자문위원 역량강화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청년 운영위원회		
		여성 운영위원회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지역운영위원회 등 특정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만 수당 인상

186) 민주평통은 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협의회 및 그 지회의 회의 참석 수당 예산은 편성하고 있지 아니함.
187) 민주평통은 지역운영위원회의 등 회의 참석 수당을 인상하지 않은 사유에 직접적 언급을 회피함.

< 미인상 사유에 대한 민주평통 답변 >

구분	민주평통 답변
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출석 수당 미인상 사유	○지역별 평화통일활동 논의를 위해 생계활동 시간을 할애하여 회의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있음
청년 및 여성 운영위원회 회의 출석 수당 미인상 사유	○시행령 개정 및 관련 예산 증액 상황을 고려하여 증액 지급을 검토하겠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원 간 차별로 인식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위원들의 참여 동기를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민주평통은 특정 회의 수당만을 100,0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모든 회의 수당을 균일하게 인상(예: 75,000원)하는 등 형평성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출석수당 지급 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회의에 대한 법령상 지급 근거 마련 필요

2025년 현재 민주평통은 운영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 및 청년·여성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회의 출석 수당 5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회의 출석 수당 지급 회의 >

구분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포함)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포함)	청년·여성운영위원회
지급단가 (2025년 준)	5만원			

그런데 회의 출석 수당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회의 출석 수당이 지급되는 회의 대상을 1)통일자문회의, 2)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3)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4)지역회의·협의회 및 그 지회 및 지역운영위원회로 열거하고 있을 뿐,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 및 청년·여성운영위원회는 회의 출석 수당이 지급되는 회의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

< 회의 출석 수당 관련 법령 규정 >

구분	규정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table>
<tr>
<td>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td>
<td>제5조(수당과 여비 등) ① 통일자문회의, 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지역회의·협의회 및 그 지회,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국내외의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table>
<tr><th>구분</th><th>지급기준</th></tr>
<tr><td>회의 출석 수당</td><td>매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td></tr>
</table>
</td>
</tr>
</table>

이에 대해 민주평통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는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청년·여성운영위원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188]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189]에 근거하여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청년·여성운영위원회는 민주평통 내부 규정에 근거한 회의로써 현행 법령(법 제13조, 시행령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회의가 아니며,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현행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 회의 참석 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이와 같이 현행 법령에 적시되지 않은 회의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18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지원 등) 사무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8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지원 등) 사무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가 재정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

따라서, 민주평통은 현행 법령에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는 회의로 열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회의에 대하여는 그 지급근거를 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2. 사업별

가. 자문회의 운영

‘자문회의 운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법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분석 등을 통하여 의장인 대통령에게 실효성 있는 자문과 건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40억 5,400만원 대비 15.0%인 6억 900만원이 증액된 46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 자문회의 운영	4,488	4,054	4,054	4,663	609	15.0
-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546	578	578	593	15	2.6
-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230	242	242	242	-	-
- 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2,864	2,041	2,041	2,869	828	40.6
- 자문회의 구성	-	304	304	70	△234	△77.0
- 자문위원 일반지원	157	157	157	157	-	-
- 간부위원 활동지원	244	250	250	250	-	-
- 직능별 정책회의	165	182	182	182	-	-
- 지역 운영위원회	282	300	300	300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에 따라 격년 회의방식 변경(홀수년 출범회의, 짝수년 지역회의)[190]으로 '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예산이 8억 2,800만원,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예산의 경우 회의참석 수당 증액 등으로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문회의 구성' 예산이 2억 3,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19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 임기(2년)에 따라 격년제로 회의방식을 변경[(2023년) 출범회의 → (2024년) 지역회의 → (2025년) 출범회의]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구성되는 해(2025년)에는 국내의 경우 제22기 자문회의 출범회의가 전체회의로 열리고, 해외의 경우 각 해외 협의회별 현지 출범회의가 개최되는데 비하여, 출범회의가 없는 연도(2024년)에는 국내의 경우 18개 시·도별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자문위원은 국내로 초청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1)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은 자문회의의 운영과 통일정책 건의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법정위원회[191]인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장에 대한 정책 자문과 건의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5억 7,800만원 대비 2.6%인 1,500만원이 증액된 5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546	578	578	593	15	2.6
· 운영위원회 운영	45	44	44	54	10	22.7
· 상임위원회 운영	66	155	155	95	△60	△38.7
· 정책건의 보고 및 분과위원회 운영	392	336	336	416	80	23.8
· 정책포럼	18	18	18	28	10	55.6
· 자문건의 기반시설 사업	25	25	25	-	△25	△1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운영(분기별 1회) 5,400만원, 상임위원회 운영(연 1회) 9억 5,000만원, 정책건의 보고 및 분과위원회 운영(분기별 1회) 4억 1,600만원, 정책포럼(7회)이 2,8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191) 자문회의 법정위원회

구 분	소 집	대 상	결과 보고	개최 주기
운영위원회(법 제19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50명)	의장	분기별
상임위원회(법 제18조)	상임위원장	상임위원(300~500명)	의장	연 1회 이상
분과위원회(법 제18조)	분과위원장(상임위원장 승인)	분과위원(9개×55명 내외)	의장	분기별

＜2026년도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593백만원)	<백만원>
① 운영위원회 운영 * 분기별 1회	**54**
- 운영위원회 개최 (13.5백만원×4회)	54
② 상임위원회 운영 * 연 1회	**95**
- 상임위원회 개최 (95백만원×1회)	95
③ 정책건의 보고 및 분과위원회 운영 * 분기별 1회	**416**
- 분과위원회 운영 및 건의보고서 작성 (96백만원×4회)	384
- 정책건의 분과위원회 워크숍 (6.4백만원×5회)	32
④ 정책포럼 * 연 7회	**28**
- 정책포럼 (4백만원X7회)	2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은 통일문제 현안에 대하여 일반 국민, 전문가 및 국내외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4,200만원으로 편성됨.

< 2026년도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230	242	242	242	-	-
· 평화통일 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90	93	93	95	2	2.2
· 평화통일문제 여론조사	104	105	105	103	△2	△1.9
·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36	44	44	44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연 4회) 9,500만원, 통일문제 여론조사(정기 4회, 수시 1회) 1억 300만원,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연 2회) 4,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평화통일 여론수렴·분석 】(242백만원)	<백만원>
①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 연 4회	**95**
-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23.8백만원×4회)	95
② 통일문제 여론조사 * 연 5회(정기 4회, 수시 1회)	**103**
- 통일문제 여론조사 (20.6백만원×5회)	103
③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 연 2회	**44**
-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22백만원×2회)	4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는 법정회의인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 또는 출범회의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20억 4,100만원 대비 40.6%인 8억 2,800만원이 증가한 28억 6,900만원으로 편성됨.

< 2026년도 국내·해외 출범(지역)회의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2,864	2,041	2,041	2,869	828	40.6
·국내 지역(출범)회의	410	1,188	1,188	428	△760	△64.0
·해외 지역(출범)회의	2,454	853	853	2,441	1,588	186.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 임기(2년)에 따라 격년제로 회의 방식을 변경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국내 출범회의의 경우 제22기 자문회의 출범회의가 전체회의로 열리고, 해외 출범회의의 경우 각 해외 협의회별로 현지 출범회의가 열릴 예정임.

2026년에는 국내 각 지역회의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자문위원은 국내로 초청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2026년 예산안은 ‘국내 지역(출범)회의’ 및 ‘해외 지역(출범)회의’ 사업의 예산이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된 2024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회의방식 변화에 따른 국내·해외 출범(지역)회의 사업 예산규모 비교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제21기 지역회의)	2025년 (제22기 출범회의)	2026년 (제22기 지역회의)
<계>	2,869	2,041	2,869
국 내	428 (18개 시·도별 회의)	1,188 (전체회의, 해외대표 초청)	428 (18개 시·도별 회의)
해 외	2,441 (국내 초청회의)	853 (현지회의, 45개 협의회)	2,441 (국내 초청회의)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임차료 예산의 구조적 초과 집행 문제 해소 노력 필요

‘자문회의 운영’ 세부사업의 하위사업인 ‘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내역사업은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제고하고, 지역회의별로 활동방향을 결의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대비 8억 2,800만원이 증가한 28억 6,900만원을 편성함.

< 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내역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A
○ 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2,864	2,041	2,041	2,869	2,869	828	40.6%
· 일용임금	7	12	12	7	7	△5	△41.7%
· 일반수용비	360	208	208	354	354	146	70.2%
· 공공요금 및 제세	-	1	1	-	-	△1	순감
· 특근매식비	-	2	2	1	1	△1	△50.0%
· 임차료	155	490	421	160	160	△330	△67.3%
· 일반용역비	369	366	435	390	390	24	6.6%
· 국내여비	252	267	267	282	282	15	5.6%
· 국외업무여비	1,705	595	595	1,658	1,658	1,063	178.7%
· 사업추진비	16	99	99	16	16	△83	△83.8%
· 고용부담금	-	1	1	1	1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내역사업이 2025년 대비 40.6% 증액된 이유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내·해외 지역회의가 2026년에 개최됨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액은 2024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됨.

< 최근 3년간 '국내·해외 지역회의' 내역사업 예산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제21기 지역회의)	2025년 (제22기 출범회의)	2026년 (제22기 지역회의)
<계>	2,869	2,041	2,869
국 내	428 (18개 시·도별 회의)	1,188 (전체회의, 해외대표 초청)	428 (18개 시·도별 회의)
해 외	2,441 (국내 초청회의)	853 (현지회의, 45개 협의회)	2,441 (국내 초청회의)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통은 2026년도 국내 지역회의 내역사업 예산안 중 임차료를 2024년 대비 1,396만원이 증가한 3,346만원으로 편성함.

< 2024년 및 2026년도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안 비교 >

(단위: 천원)

2024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500	가. 국내지역 회의		19,500	33,460	가. 국내 지역 회의		33,460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19,500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33,460
	가) 서울	11,000,000원 *1회=	11,000		가) 서울	13,060,000원* 1회=	13,060
	나) 서울외 17개시도	500,000원*17개 시도=	8,500		나) 서울외 17개 시도	1,200,000원*17개 시도=	20,4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통이 최근('22년 및 '24년)에 개최된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

을 집행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등이 임차료 부족액의 충당재원으로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국내지역회의 내역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210-01)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비목으로부터 3,900만원과 해외 지역회의 내역사업에 편성된 임차료(210-07) 비목으로부터 2,120만원이 각각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부족액의 충당재원으로 활용되었음.

<2022년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편성		집행		B-A	조달재원(B-A)
편성내역	금액(A)	집행내역	금액(B)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19.5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79.7	60.2	ㅇ1031-300(자문회의 운영)-[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중 국내 지역회의 210-01: 34백만원 ㅇ1031-300(자문회의 운영)-[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중 국내 지역회의 210-02: 5백만원 ㅇ1031-300(자문회의 운영)-[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중 해외 지역회의 210-07: 21.2백만원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전 사례라고 할 수 있는 2024년에도 국내지역회의 내역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210-01),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및 특근매식비(210-05) 비목으로부터 4,400만원과 해외 지역회의 내역사업에 편성된 임차료(210-07) 비목으로부터 1,320만원이 각각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부족액의 충당재원

으로 활용된 바 있음.

<2024년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편성		집행		B-A	조달재원(B-A)
편성내역	금액(A)	집행내역	금액(B)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19.5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76.7	57.2	ㅇ 1031-300(자문회의 운영)-[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중 국내 지역회의 210-01: 38백만원 ㅇ 1031-300(자문회의 운영)-[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중 국내 지역회의 210-02: 5백만원 ㅇ 1031-300(자문회의 운영)-[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중 국내 지역회의 210-05: 1백만원 ㅇ 1031-300(자문회의 운영)-[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중 해외 지역회의 210-07: 13.2백만원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임차료 예산이 실제 소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편성되고, 그 부족분을 타 비목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충당하는 관행은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민주평통은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현실적 수요에 기반해 조정·편성함으로써, 임차료 예산의 구조적 초과 집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4) 자문회의 구성

‘자문회의 구성’ 사업은 2026년 지방의원 선거에 따른 자문위원 보궐[192] 위촉을 위한 것이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3억 400만원 대비 77%인 2억 3,400만원이 감소한 7,000만원으로 편성됨.

< 2026년도 자문회의 구성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자문회의 구성	4,488	304	304	70	△234	△77.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자문회의 구성 사업 예산(안) 비교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2기 구성)	2026년 (22기 보궐 구성)
< 총 계 >	304	70
자문위원 지급품 (발송료 포함)	229	46
일용 인력 (사회보험료 등 포함)	54	10
자료 인쇄비 (위촉 협조자료 등)	6	10
전산장비 임차료 (컴퓨터, 프린터 등)	6	1
기타 비용 (물품구입, 발송비 등)	9	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9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1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자문위원 일반지원

‘자문위원 일반지원’은 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지원, 통일 유관기관·단체 대상 통일여론 수렴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와 동일한 1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자문위원 일반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자문위원 일반지원	186	157	157	157	-	-

주요 편성내역은 국내외 지역회의·협의회 물품 등 지원비 4,200만원, 통일활동 지원 여비 2,000만원, 통일활동 사업추진 간담비 및 통일정책 건의 및 의견수렴 간담비 7,300만원 등임.

(단위: 백만원)

【 자문위원 일반지원 】	157
지역회의·협의회 지원 업무보조 일용인력 임금	5
국내외 지역회의·협의회 물품 등 지원비	42
국내 지역회의·협의회 물품 등 발송료 1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물품 등 발송료 3	4
통일활동 지원 여비	20
통일활동 사업추진 간담비, 통일정책 건의 및 의견수렴 간담비	73
통일·대북정책 여론 수렴 활동경비	12
일용인력 사회보험료	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6) 간부위원 활동지원

‘간부위원 활동지원’은 연중 경상적 업무 소요가 있는 법정위원회 및 지역 조직의 주요 간부위원[193]들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보조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와 동일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간부위원 활동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간부위원 활동지원	244	250	250	250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지급대상은 수석부의장 1명, 운영위원회 간사 1명, 상임위원회 간사 2명, 지역 부의장 24명 등 총 48명이며,

월평균 지급단가는 수석부의장 600만원, 운영위원회 간사 150만원, 상임위원회 간사 130만원 등으로 간부위원별로 다음 표와 같이 반영되어 있음.

193) 간부자문위원 선정 및 위촉 절차
- 간부위원 인선은 리더십, 활동역량과 의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식견(전문성), 대외 관계 협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장(대통령)이 임명

< 간부위원 활동지원 예산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월 지급액	정원	총액	월 지급액	정원	총액
수석부의장	600만원	1명	72	600만원	1명	72
운영위원회 간사	150만원	1명	18	150만원	1명	18
상임위원회 간사	130만원	2명	31	130만원	2명	31
지역 부의장	30만원	24명	87	30만원	24명	87
분과위원장	20만원	10명	24	20만원	10명	24
분과위원회 간사	15만원	10명	18	15만원	10명	18
합 계		48명	250		48명	25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7) 직능별 정책회의

‘직능별 정책회의’는 직능별 자문위원의 통일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와 동일한 1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직능별 정책회의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직능별 정책회의	165	182	182	182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직능별 정책회의 6회를 개최(1박 2일 기준)하기 위하여 숙박비, 식비, 직원 여비 등 9,700만원, 자료 인쇄비, 강연 등 사례비, 회의용품 구입비 등 5,800만원, 각종 임차료 2,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직능별 정책회의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직능별 정책회의】	182
자료 인쇄비, 강연 등 사례비, 회의용품 등 (9.6백만원×6회)	58
차량, 노트북, 회의실 및 부대시설 등 임차료 (4.1백만원×6회)	25
숙박비, 식비, 직원 여비 등 (16.1백만원×6회)	97
역할자 간담 1.5(0.25백만원×6회) 기획·평가회의 0.5(0.3백만원×2회)	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년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중 국내 직능대표는 14,658명이며, 이들은 다음 표와 같은 10개 직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1기 국내 직능별 자문위원 현황 >

(단위: 명)

경제 과학	산업 통상	건설 교통	문화 체육	정치 행정	교육	외교 안보	농림 수산	보건 복지	환경 노동
1,351	825	1,672	3,076	1,519	1,390	958	1,039	2,190	638

주: 지역대표(지방의원) 제외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능별 정책회의는 직능별 의제에 관하여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분임토의 및 종합토론 등을 거쳐 정책건의 및 지역실천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직능별 정책회의 프로그램(예시) >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일차>			
개 회	14:00~14:10(10)	o 개회식	
	14:10~15:00(50)	o 전문가 주제강연	
회 의	15:00~18:20(200)	o 분임토의(정책건의 및 지역 실천방안) 및 종합토론	전문가, 자문위원
<2일차>			
회 의	09:00~09:50(50)	o 통일 현안문제 및 전문지식 특강	
	11:10~11:30(20)	o 종합정리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8) 지역운영위원회

‘지역운영위원회’는 국내·해외 지역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와 동일하게 3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지역운영위원회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지역운영위원회	282	300	300	300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6년 지역운영위원회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지역운영위원회】	300
①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125**
· 배너, 현수막, 자료 인쇄비 등 26 (360,000원X18개소X4회) · 회의용품 및 음료비 8 (100,000원X18개소X4회) · 회의 참석수당 48 (50,000원X300명*80%X4회)	82
· 여비 (19,500원X300명X80%X4회)	19
· 식비 (25,000원X300명X80%X4회)	24
②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175**
· 배너, 현수막, 자료 인쇄비 등 11(1,100,000원X5개소X2회) · 회의용품 및 음료비 1 (120,000원X5개소X2회) · 참석수당 8(50,000원X100명X80%X2회)	20
· 회의장 임차료 (1,000,000원X5개소X1회)	10
·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여비 137 - 자문위원 숙박비 33백만원($200*100명*60%*2회) - 자문위원 교통비 66백만원($400*100명*60%*2회) - 출장직원여비 : 32백만원 - 단수조정 : 6백만원	137
· 식비 ($25X100명X60%X2식x2회)	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나.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은 변화관리 워크숍, 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행정 효율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와 동일한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7	37	37	37	-	-
- 변화관리 워크숍	31	32	32	32	-	-
- 제안제도 운영	3	1	1	1	-	-
- 성과관리제도 운영	3	4	4	4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변화관리 워크숍 3,200만원, 제안제도 운영 100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 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7
① 변화관리 워크숍	32
자료 인쇄비, 음료 및 용품 구입비, 강사료 등	7
버스, 회의실 및 부대시설 임차료	8
워크숍 일반용역비	6
숙박비	5
워크숍 참석자 식비 등	6
② 제안제도 운영	1
제안 우수자 포상금	1
③ 성과관리제도 운영	4
자문위원 설문조사, 전문가 사례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인쇄비	3
전문가 및 직원 간담비	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사업 추진’은 국내외 자문위원, 지역회의·협의회 등 자문회의 구성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2025년) 대비 3.1%인 1,400만원 감액된 4억 3,7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 정보화사업 추진	427	451	451	437	△14	△3.1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206	190	190	190	-	-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8	234	234	234	-	-
- 행정업무용 PC 보안기능 강화	13	13	13	13	-	-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	14	14	-	△14	△1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용 백신 구입을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은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1,400만원 전액이 감액 편성되었음.

라. 자문위원 역량강화

‘자문위원 역량강화’는 자문위원의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책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23억 5,900만원 대비 0.9%인 2,100만원이 증액된 23억 8,0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 자문위원 역량강화	2,529	2,359	2,359	2,380	21	0.9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650	591	591	591	-	-
-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690	659	659	633	△26	△3.9
- 유공자문위원 포상	119	99	99	105	6	6.1
-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684	649	649	706	57	8.8
- 평화통일자료 지원	386	361	361	345	△16	△4.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이 연수 자료집 제작 조정으로 2,6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유공자문위원 포상’ 사업이 자문위원 지급품 제작 단가 현실화를 위해 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기관지 제작’ 사업이 웹진 강화, e-book 및 오디오북 제작 사업비 증가, 기관지 발송비 증가로 5,7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평화통일자료지원’ 사업이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서비스 사업 조정 등으로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1)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은 청년 자문위원과 여성 자문위원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2025년)과 동일하게 5억 9,100만원임.

< 2026년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650	591	591	591	-	-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253	180	180	180	-	-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104	146	146	146	-	-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293	265	265	265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6년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591
①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180
· 청년운영위원회 (6.5백만원×2회)	13
· 국내 청년분과위원장 워크숍 (46백만원×1회)	46
· 청년위원 역량강화 기획사업 (24백만원x5개권역)	120
· 직원 여비	1
②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146
· 여성운영위원회 (6.5백만원×2회)	13
· 국내 여성분과위원장 워크숍 (46백만원×1회)	46
· 여성위원 역량강화 기획사업 (17.2백만원x5개권역)	86
· 직원 여비	1
③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265
· 해외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132.5백만원×2회)	26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제20기 및 제21기 여성·청년위원 현황 >

(단위: 명)

기 수	제20기	제21기	증감
여 성	6,929	6,414	△515
청 년	5,164	4,952	△212
전체위원	20,000	21,984	1,98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해외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는 민주평통 해외 지역조직이 디브레인시스템을 통한 회계 처리가 불가하여 사무처의 관리·감독 하에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사무처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과 협의한 결과, 국내사업과 달리 해외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해외 지역조직의 인적·물적 토대를 먼저 마련한 후에 직접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하였다는 설명임.

□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등 강구 필요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내역사업의 하위사업인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내내역사업은 해외 청년·여성층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2025년)와 동일한 2억 6,500만원을 편성함.

<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내내역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A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649	591	591	591	591	0	0
·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293	265	265	265	265	0	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6년도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의 세목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임차료 비목은 1,8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경상보조 비목은 1,800만원을 감액함.

< 2026년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세목별 예산안 >

(단위 : 천원)

사업명	세목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합계	264,578	264,578	-
	일반수용비	7,700	7,700	-
	임차료	-	18,000	18,000
	국외업무여비	69,078	69,078	-
	사업추진비	1,800	1,800	-
	민간경상보조	186,000	168,000	△18,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에 대해 민주평통은 민간경상보조 예산 중 임차료로 집행되고 있는 비용(6,367만원)[194] 중 1,800만원을 임차료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는 1) '지역협의회활동추진'(타 세부사업) 내에서 자문위원 역량강화가 가능하게끔 설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2)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컨퍼런스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또한 실효성이 제한적이며, 3) (성과지표가) 동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적절하지도 않다고 보아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을 감축하도록 평가한 바 있음.

<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 사유>

· **감축**('자문위원역량강화' 세부사업, 일정 수준, 2026년, 186백만 원) · 동일 단위사업(지역협의회 활동지원) 내 세부사업 '지역협의회활동추진'에서 제공하는 지원 내용과의 중복성 정도의 판단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지역협의회활동추진' 내에서 자문위원 역량강화가 가능하게끔 설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감축을 권고함 - 세부사업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의 수혜대상에 자문위원이 포함되어 있고 **동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컨퍼런스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또한 실효성이 제한적**이며, 수혜자가 해외 청년·여성위원으로 국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독립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당화에 충분하다고 보기가 어려움 - 동사업에서는 만족도로 사업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만족도는 동사업의 목적(자문위원 역량강화)과 거리가 있으며, **동사업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적절하지도 않음**

194) 해외 청년·여성 역량지원 사업 중 민간경상보조(320-01) 예산의 집행액을 그 성격별로 구분한 평균적 집행금액은 다음과 같음.

○ 청년·여성 역량지원 예산(320-01) 평균 집행액 - 임차료 63,676천원 - 일반수용비 43,434천원 - 여비 75,750천원

그러나 민주평통은 연장평가 보고서에서 제시된 의견(사업의 중복성 및 실효성 부족 문제 해소)에 대한 개선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규모를 형식적으로만 감액하면서 실질적으로는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평가 결과의 환류 측면에서 적정해 보이지 않음.

따라서, 민주평통은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2)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는 간부 자문위원과 지역별로 자문위원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사업과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통일콘텐츠 및 연수자료집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6억 5,900만원 대비 3.9%인 2,600만원이 감액된 6억 3,3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690	659	659	633	△26	△3.9
·온라인 지식서비스 제작	136	111	111	111	-	-
·간부위원 역량지원	144	145	145	145	-	-
·국내 자문위원 연수	366	333	333	333	-	-
·연수자료집 제작	44	70	70	44	△26	△37.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연수 자료집 제작’ 사업이 자료집 발간 부수 및 단가를 조정하여 2025년 7,000만원 대비 2,600만원 감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지역 통일준비 역량강화】	633
① 온라인 지식서비스 제작 *연 11회	111
· 온라인 지식서비스 제작	106
· 기획·평가 간담 등	5
② 간부자문위원 역량지원 *연 2회	145
· 국내 부의장·협의회장 및 지역회의·협의회 간사 워크숍 (72백만원×2회)	144
· 직원 여비 (100천원×6명×2회)	1
③ 국내 자문위원 연수 *연 18회	333
·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용역 (17.48백만원×18회)	315
· 기술평가회의 및 평가회의 및 조달수수료	5
· 직원 여비 (150천원×4명×18회)	11
· 기획·평가회의 간담비 (30천원×10명×8회)	2
④ 연수 자료집 제작 * 5개 분야	44
· 집필 사례비 및 기획회의 (11.5백만원×2회)	21
· 연수 자료집 발간 (4,400원×5,000부)	22
· 기획·평가회의 간담비 (30천원×10명×5회)	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유공자문위원 포상

‘유공자문위원 포상’은 통일정책건의 및 지역 통일 활동에 기여가 큰 자문위원(개인)과 지역협의회(단체)를 포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9,900만원 대비 6.1%인 6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유공자문위원 포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유공자문위원 포상	119	99	99	105	6	6.1
·공적심사	2	8	8	8	-	-
·국민훈장 수여	31	34	34	34	-	-
·의장표창 수여	86	57	57	63	6	10.5

자문위원 표창장 및 부상품 제작비 증액으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유공자문위원 포상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유공자문위원 포상】	105
· 공적 심사자료 인쇄비, 행사용품 및 음료비, 안내물 제작비, 지급품 제작비, 사례비, 영상중계비, 사진인화비	64
· 행사장 및 화물차 임차료	3
· 수여식 다과비 및 간담비	8
· 포상금	3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4) 기관지 제작

‘기관지 제작’은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등 통일기반조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조직과 자문위원의 우수활동사례를 소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6억 4,900만원 대비 8.8%인 5,700만원이 증액된 7억 6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기관지 제작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기관지 제작	684	649	649	706	57	8.8
·기관지 발간	442	392	392	455	63	16.1
·SNS 운영	214	220	220	211	△9	△4.1
·공무직 인건비	28	37	37	40	3	8.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요 증액 내역은 ‘기관지 발간’ 사업 웹진 강화와 e-book 및 오디오북 제작 사업비 증액 3,500만원, 기관지 발송비 등 증액 2,200만원임.

< 2026년도 기관지 제작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기관지 제작】	706
① 기관지 발간 * 6회	455
발송작업비, 기획·편집위원 및 평가회의 사례비, 조달수수료 등	40
기관지 우편발송비	158
기관지 발간 용역비	251
평화통일활동 취재	2
기획편집, 제작 및 평가 간담	4
② SNS 운영	211
SNS 기획·편집위원 등 사례비, 편집회의 음료 구입비, 조달수수료 등	13
SNS 제작, 모바일 뉴스레터, 청년자문위원 기자단 운영 용역비	194
평화통일활동 취재	2
블로그 운영 간담비	2
③ 공무직 인건비	40
영상 기획·편집 및 SNS 운영 지원 인력	33
맞춤형 복지비	1
고용부담금	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웹진 방식 기관지 발간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마련 필요

‘기관지 제작’ 내역사업의 하위사업인 ‘기관지 발간’ 내내역사업은 자문위원에게 남북관계 현안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2025년) 대비 6,300만원이 증가한 4억 5,500만원을 편성함.

< 기관지 제작 내역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 기관지 제작	683	649	649	684	706	57	8.8
· 기관지 발간	442	392	392	435	455	63	16.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6년도 ‘기관지 제작’ 내내역사업의 세목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예산이 4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이 2,010만원 및 일반용역비 예산이 3,900만원 각각 증액되었음.

< 2026년도 기관지 제작 내내역사업 세목별 예산안 >

(단위 : 천원)

세목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 일반수용비	**35,400**	**40,100**	**4,700**
- 발송작업비	18,000	18,000	0
- 기획·편집위원 사례비	8,640	8,640	0
- 조달수수료	1,900	2,000	100
- 독자만족도조사	2,600	2,400	-200
- 평가회의 사례비	2,700	2,700	0
- 기획편집회의 음료 구입비	1,560	1,560	0
- 역할자(인터뷰, 패널 등)	-	4,800	4,800

사례비			
ㅇ 공공요금 및 제세	**138,000**	**158,106**	**20,106**
- 발송료	138,000	158,106	20,106
ㅇ 국내여비	**2,400**	**2,400**	**0**
ㅇ 일반용역비	**212,366**	**251,366**	**39,000**
- 기획편집비	87,380	108,380	21,000
- 인쇄비	121,986	121,986	0
- 독자 이벤트 경비	3,000	3,000	0
- 웹진 제작 및 운영, e-book 제작 등	-	18,000	18,000
ㅇ 사업추진비	**3,600**	**3,600**	**0**
합계	391,766	455,572	63,80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는 일반수용비 비목에 역할자 사례비가 신설되어 48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이 발송단가 인상 등에 따라 2,0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용역비 비목은 기관지 제작과 연계된 온라인 자료제작을 위한 기획편집비[195] 2,1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현재 민주평통은 기관지(민주평통)를 종이 제작 및 우편 배포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민주평통은 격월마다 기관지(평화통일) 23,000부를 제작하여 우편으로 배포할 계획임.

< 최근 4년간 발간물량 및 2026년 발간계획 >

(단위: 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계획)
발간물량	23,000	23,000	24,500	23,000	23,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95) 기획편집비 증액 사유 및 세부 산출내역
ㅇ 기관지 1회 제작 당 연계 제작물(오디오 또는 포토뉴스 1개, 뉴스레터 형식 메일링 이미지 1개, 외부 포스팅용(홈페이지, SNS 등) 영상 1개)) 기획·제작비
ㅇ 연계 제작물 산출내역 : 3,500천원 * 6회 = 21,000천원

< 최근 4년간 발송처 및 2026년 발송 계획 현황[196] >

(단위: 명 또는 개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계획)
발송처	총 23,000부 ○ 국내 - 자문위원 16,100부 - 지자체, 도서관, 유관기관 등 2,810부 ○ 해외 - 자문위원 3,900부 - 외교 공관 190부	총 23,000부 ○ 국내 - 자문위원 16,100부 - 지자체, 도서관, 유관기관 등 2,810부 ○ 해외 - 자문위원 3,900부 - 외교 공관 190부	총 24,500부 ○ 국내 - 자문위원 18,000부 - 지자체, 도서관, 유관기관 등 2,310부 ○ 해외 - 자문위원 4,050부 - 외교 공관 140부	총 23,000부 ○ 국내 - 자문위원 18,000부 - 지자체, 도서관, 유관기관 등 950부 ○ 해외 - 자문위원 4,050부	총 23,000부 예정 - 제22기 자문위원 구성에 따른 발송처 재검토 예정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그런데 현행과 같은 민주평통의 기관지 제작 및 배포 방식은 인쇄비 외에 발송작업비(1,800만원), 발송비(1억 5,810만원)가 수반됨으로써 이들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웹진[197] 제작 및 배포 방식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음.

< 웹진 및 종이 제작 방식 비교 >

196) 2024년 및 2025년 발송처 전체 리스트

구 분		대 상	수량(부)	
			2024년	2025년
<총계>			24,500	23,000
① 민주평통	<소계>		23,000	22,400
	자문위원	국내 자문위원	18,000	18,000
		해외 자문위원	4,050	40,50
	국내 조직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750	250
	사무처	직원, 방문자 비치용	100	100
		보관·홍보·신청독자 등	100	-
② 대학 및 국ㆍ공립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450	150
③ 주요 기관ㆍ단체, 전문가		통일관련 기관, 시민사회단체, 연구소, 전문가 등	310	70
④ 외교 공관		재외 한국공관	140	-
⑤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단체장, 자치행정과 등)	270	250
⑥ 정부 주요 기관		대통령실, 행정부, 사법부 등	150	50
⑦ 주요 언론사		중앙·지방 언론사 통일담당 기자	130	30
⑧ 국회 및 정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당	50	5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97)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잡지를 의미하며, 기존 종이 잡지를 온라인 환경에 맞게 전환한 형태를 말함.

구분	웹진(Webzine, 전자 기관지)	종이 인쇄물 Paper Magazine)
매체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해 배포되는 디지털 콘텐츠	종이에 인쇄하여 우편 또는 직접 배포하는 실물 형태
비용	발행 비용 절감 (인쇄비, 제본비, 우편 발송료 대폭 절감)	인쇄 및 제본 비용, 매번 상당한 발송(우편) 비용 발생
콘텐츠 형태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 (동영상, 오디오, 애니메이션, GIF 등)	텍스트와 정지 이미지(사진, 일러스트)에 한정됨
상호작용성	쌍방향 소통 가능 (댓글, 설문, 투표, 공유 버튼 등)	일방향적 정보 전달 (독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움)
접근성 및 속도	신속한 배포(발행 즉시 전 세계 동시 접근 가능),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열람 가능	배포에 시간 소요 (인쇄, 포장, 우편 발송 기간 필요), 물리적 공간 필요
수정 및 보완	발행 후에도 내용 수정 및 업데이트가 용이함	발행 후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며, 정오표 등을 별도 발송해야 함
보관 및 검색	디지털 형태로 영구 보존 용이, 키워드 검색을 통한 과거 자료 접근이 편리함	물리적 보관 공간 필요, 특정 내용을 찾기 위해 직접 넘겨봐야 함

특히 민주평통은 기관지 발송 수단으로 우편 발송만 활용하는데 그치고,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전자우편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우편요금의 증액요인을 흡수하도록 하는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민주평통은 기관지 발간 방식을 저비용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소요 비용을 절감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평화통일자료 지원

‘평화통일자료 지원’은 대북·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2025년) 대비 4.4%인 1,600만원이 감액된 3억 4,500만원으로 편성됨.

< 2026년도 평화통일자료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평화통일자료 지원	386	361	361	345	△16	△4.4
· 영상자료 제작	208	214	214	215	1	0.5
· 기타 평화통일자료 지원	25	26	26	25	△1	△3.8
· 공무직 인건비	70	75	75	79	4	5.3
·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서비스	83	46	46	26	△20	△43.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요 증감사유로는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서비스’ 사업 조정으로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공무직 인건비’ 사업 공무직 처우개선으로 400원 증액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평화통일자료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평화통일자료 지원】	345
① 영상자료 제작	215
패널·기획팀 사례비, 촬영 소모품 구입비, 스튜디오 운영비품 등	28

영상 촬영 및 편집비	181
업무협의 간담비	1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입비	5
② 기타 평화통일자료 지원	**25**
인쇄비, 해외 발송경비	22
국내 발송경비	2
업무협의 간담비	1
③ 공무직 인건비	**79**
온라인 활동 보조, 사진 등 촬영·편집	65
맞춤형 복지비	1
고용부담금	13
④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서비스	**26**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서비스 용역비	2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마.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운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내 및 해외 조직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직원 실무능력 제고 등 지역통일활동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132억 3,900만원 대비 1.1%인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133억 8,200만원임.

주요 증액내역은 행정실장 처우 개선을 위해 ‘협의회 인건비’ 예산이 5억 7,5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협의회 운영비’ 예산은 국내와 해외 부분이 각 1억 7,700만원씩 감액되었으며, ‘협의회 직무교육’ 예산은 지출 구조 조정으로 전액 감액되었음.

<2026년도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 지역협의회 운영	12,141	13,239	13,239	13,382	143	1.1
- 협의회 인건비	9,090	9,786	9,786	10,361	575	5.9
- 협의회 운영비	2,967	3,375	3,375	3,021	354	△10.5
- 협의회 직무교육	84	78	78	-	△78	△1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협의회 인건비

‘협의회 인건비’는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250명)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2025년) 97억 8,600만원 대비 5.9%인 5억 7,500만원이 증액된 103억 6,1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협의회 인건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협의회 인건비	9,090	9,786	9,786	10,361	575	5.9
·공무직 근로자	9,044	9,725	9,725	10,298	573	5.9
·출산휴가 대체 근로자	41	50	50	52	2	4.0
·장애인 고용부담금	5	11	11	11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증액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단가 상향 등임.

< 2026년도 협의회 인건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협의회 인건비】	10,361
▪ 공무직 근로자	10,298
· 급여 (2,150,730원×12월×250명)	6,452
· 명절휴가비 (2,150,730원×50%×2회×250명)	645
· 초과근무수당 (11,980원×1.5×13시간×12월×250명)	701
· 연차휴가근로수당 (95,840원×11.4일×250명)	273
·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250명)	420
· 맞춤형 복지비 (500,000원×250명)	125
· 퇴직금 (8,491,478,000원×1/12)	708
· 사회보험료 (8,491,478,000원×11.47%)	974
▪ 출산휴가 대체근로자	52

· 급여 (2,156,880원×2월×10명)	43
· 퇴직금 (43,138,000원×1/12)	4
· 사회보험료 (43,138,000원×11.47%)	5
▪ 고용 부담금	**11**
· 기본 부담금 (1,060,000원×2명x5월)	1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협의회 운영비

‘협의회 운영비’는 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0억 2,100만원으로서 전년도(2025년) 33억 7,5만원에 비해 10.5%인 3억 5,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협의회 운영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협의회 운영비	2,967	3,375	3,375	3,021	△354	△10.5
·국내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1,671	1,672	1,672	1,495	177	△10.6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1,296	1,703	1,703	1,526	177	△10.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6년도 협의회 운영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협의회 운영비】	3,021
▪ 국내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1,495
국내 지역회의 (0.8백만원×18개소×12월)	173
국내 지역협의회 (0.48백만원×228개소×6월 +0.48백만원×229개소×6월)	1,322
▪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1,526
해외 송금 수수료	4
해외 지역회의 (2.9백만원×5개소×12월)	171
해외 지역협의회 (2.5백만원×45개소×12월)	1,35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국내 운영비 산출 근거 >

(단위: 천원)

구 분	공공요금및제세	사무실유지비	회의운영 보조경비	행사개최 보조경비	행정실장 여비
지역회의	30	65	25	38	15
협의회	225	490	198	290	11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해외 운영비 산출 근거 >

(단위: 천원)

구 분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	계
지역회의	500	600	1,750	2,850
협의회	500	600	1,400	2,5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는 국내 18개 지역회의, 228개 지역협의회에 운영비를 교부하고 있으며, 해외 5개 지역회의, 45개 협의회에 분기별로 운영비를 교부하며, 지회는 협의회에서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 등은 월 평균 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해외 지역회의 등 50곳에 실제 송부하는 금액은 지역별 물가 수준 등에 따라 그 편차가 있음.

□ 지역회의 등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성 경비 이관 등 필요

‘지역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의 하위사업인 ‘협의회 운영비’ 내역사업은 지역조직인 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2025년) 대비 3억 5,400만원이 감소한 30억 2,100만원을 편성함.

< 협의회 운영비 내역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 지역협의회 운영	12,057	13,161	13,161	12,961	13,382	221	1.7
· 협의회 인건비	9,090	9,786	9,786	9,786	10,361	575	5.9
· 협의회 운영비	2,967	3,375	3,375	3,175	3,021	△354	△10.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6년도 ‘협의회 운영비’ 사업의 세목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예산은 전년(2025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전년(2025년) 대비 3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 2026년도 협의회 운영비 내역사업 세목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목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협의회 운영비	합계	3,375	3,021	△354
	일반수용비	4	4	-
	민간경상보조	3,371	3,017	△35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026년 예산 편성 시 감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임.

< 2025년 국고보조사업('지역협의회 운영' 세부사업) 연장평가 결과 >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평가 제외	비목 전환	폐지 (폐지연도)	통합	감축 (감축수준) (감축연도)	사업운영 개선	정상추진
					O (일정 수준) (2026년)		

자료: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이들 법령은 경상적 경비로만 구성된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198]

이러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만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협의회 운영비' 사업이 국고보조사업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동 사업에 사업성 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198)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 보조금법 제15조제1항 >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제4호 >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제4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❶ 경상경비성 지출로만 구성되어 평가 실익이 없는 사업

- **헌법기관 경상경비**, 법령에 지원근거가 명시된 공공기관 등의 기관운영 지원 사업(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 등에 한정**)

2024년 집행액 기준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에 37%의 사업성 경비와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에 19%의 사업성 경비가 각각 포함되어 있음.

< 협의회 운영비 경비 성격별 지출 비중(2024년 집행 기준) >

(단위: 백만원)

국내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경비 구분	지출 항목	지출액(비중)			경비 구분	지출 항목	지출액(비중)		
경상적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53 (63%)	292	(17%)	경상적 경비	사무실 임차료	1,049 (81%)	387	(30%)
	사무실 유지비		615	(37%)		사무직원 인건비		468	(36%)
	행정실장 여비		147	(9%)		사무실 유지비		158	(12%)
						공공요금 및 제세		36	(3%)
사업성 경비	**회의운영 보조경비**	**623 (37%)**	**256**	**(15%)**	**사업성 경비**	**회의운영 보조경비**	**243 (19%)**	**103**	**(8%)**
	행사개최 보조경비		**367**	**(22%)**		**행사개최 보조경비**		**140**	**(11%)**
계		**1,672**			**계**		**1,29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사업('협의회 운영비' 내역사업)은 경상적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시 주요 평가사항의 하나인 사업의 효과성[199]을 제고하기 용이하지 아니함.

199)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15조(평가 내용)** ①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다음 각 호에 대해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1.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실효성
2.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3. 보조사업의 지원규모 적정성
4. 보조사업의 관리 적정성

<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 >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축**('지역협의회 운영' 세부사업, 일정 수준, 2026년, 3,371백만 원) · '**지역협의회 운영'은 평가에서 당연히 제시되어야 하는 사업 효과성 관련 내용이 부재함** - **동사업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특수성 자체가 보조사업을 평가 취지를 우선하여 사업 효과성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어떤 형태로든 **성과지표 등의 마련을 통해 사업 효과성 관련 내용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함 - 동 세부사업과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지역협의회활동추진'은 모두 지역협의회라는 공통의 토대를 두고 운영과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이 연계성을 통한 비용효과성 강화와 현재 부재 상태인 사업 효과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21년 예산부터 '지역협의회활동추진'에서 분리된 점을 종합 고려하여 현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이에 따라 동 사업은 향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시 주기적으로 감액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지역회의 및 협의회 운영에 일정하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민주평통은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동 사업에 포함된 사업성 경비를 다른 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성과지표 설정 등 필요

성과계획서[200]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이고, 국가 예산의 편성과 심사, 집행 및 결산 과정에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되며, 성과계획서에 포함된 성과목표와 지표 등은 사업 집행 후 성과보고서 작성 및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환류되어 예산 낭비 방지, 성과 중심 재정운영 촉진에 기여함[201]

민주평통은 '지역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을 2026년도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 2026년 민주평통 소관 예산사업별 성과관리 계획 현황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5 예산	'26 예산안	프로그램 목표번호	비고
통일정책 자문·건의 성과제고	통일정책자문 통일여론조성	자문회의운영	4,054	4,663	Ⅰ-1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7	37	Ⅰ-1	
	정보화사업	민주평화통일자	451	437	Ⅰ-1	

200) 성과계획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등에 따라 작성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 연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 구체적인 성과관리 내용을 미리 설정하여 작성하는 공식 문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이며, 국가 예산의 편성과 심사, 집행 및 결산 과정에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됨.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01) 성과계획서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향후 목표와 성과지표, 달성 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는 문서로 사업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류이고, 성과보고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 실제 성과와 목표 달성 여부, 원인 분석 등을 기록하여 계획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한 서류임.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5 예산	'26 예산안	프로그램 목표번호	비고
		문회의 정보화사업추진 (정보화)				
통일논의 플랫폼 기능강화	사무처인건비	인건비	7,127	7,244	비대상	인건비(공무원), 인건비성 비용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384	388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	1,349	1,348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전산운영경비	182	182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자문위원 역량강화	2,359	2,380	Ⅰ-2	
		지역협의회 운영	**13,239**	**13,382**	**비대상**	**위원회, 자문회의 운영**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6,174	6,005	Ⅰ-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에 대해 민주평통은 동 세부사업이 협의회 인건비, 협의회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고, 202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인건비성 비용, 기본경비성 비용 등 세부사업 內 구성 사업 전부가 성과관리 제외 대상인 경우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세부사업을 제외하였다고 설명함.

< 성과관리 대상 제외 기준 >

구분	dBrain 코드	내 용
일반재정 · 정보화	인건비(공무원), 인건비성 비용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 해당 프로그램 사업범위내의 인건비는 성과 관리대상에 포함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 기본행정경비·소규모 전산운영경비·사회복무요원 운영비 등의 기본경비, 기본 경비성 비용 ※ 해당 프로그램 사업범위내의 기본경비는 성과 관리대상에 포함
	정부내부거래	○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 보전지출
	교부금	○ 법정 교부금,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사업명

		또는 비목이 지방교부금(330-02)인 사업
	예비비	○ 예비비
	차입이자상환, 원리금 상환	○ 차입이자상환, 원리금 상환, 대출금 또는 원금상환, 이자지원 ※ 사업성 대출지원 및 이차보전은 성과관리대상에 포함
	청사 관리 (단순시설물유지보수비)	○ 청사시설 확충·개선사업, 청사관리비용 ※ 부처 고유사업인 경우는 성과관리대상에 포함
	타부처 수행사업	○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 자문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회의나 심의·의결기구 등의 자문비 지급, 회의비용 지출 등의 운영사업** **※ 부처 고유 사업인 경우 성과 관리 대상에 포함**
	기관 운영 출연금사업 (소속기관 운영지원 사업)	○ 매년 지급되는 기관운영 출연금사업, 소속기관 운영지원 사업 ※ 기관운영 출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기관운영 성격이 아닌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
	부처특성 (대외공개 곤란)	○ 관계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 대외공개가 곤란한 경우
R&D	인건비(공무원), 인건비성 비용	○ 정부연구소 인건비 ※ 해당 프로그램 사업범위내의 인건비는 성과 관리대상에 포함
	출연금 사업	○ 과학기술계 출연연지원금(연구회 포함), 경제사회계 출연연지원금 ※ 해당 프로그램 사업범위내의 출연금 등은 성과 관리대상에 포함
	부처특성 (대외공개 곤란)	○ 관계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 대외공개가 곤란한 경우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그런데 이와 같은 민주평통의 설명은 '지역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에 대해 사업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의 내용과 거리가 있음.

<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 >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축**('지역협의회 운영' 세부사업, 일정 수준, 2026년, 3,371백만 원) · '**지역협의회 운영'은 평가에서 당연히 제시되어야 하는 사업 효과성 관련 내용이 부재함** - **동사업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특수성 자체가 보조사업을 평가 취지를 우선하여 사업 효과성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어떤 형태로든 **성과지표 등의 마련을 통해 사업 효과성 관련 내용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함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 세부사업은 사업성 비용이 포함되

어 있고, 동 세부사업 內 구성 사업 전부가 성과관리 제외 대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움.[202]

따라서, 동 세부사업 중 사업성 경비를 타 사업으로 이관하거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 202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는 '위원회, 자문회의 운영' 사업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이 부처 고유 사업인 경우 성과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통일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61억 7,400만원 대비 2.7%인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60억 500만원으로 편성됨.

< 2026년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5,679	6,174	6,174	6,005	169	2.7
- 평화통일포럼	463	325	325	325	-	-
- 평화통일 시민교실	344	394	394	394	-	-
- 지역통일활동 지원	3,580	4,523	4,523	3,593	△930	△20.6
-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1,003	637	637	348	△289	△45.4
-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195	201	201	201	-	-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94	94	94	1,144	1,050	1,117.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업이 10억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역통일활동 지원’ 사업이 9억 3,000만원’, ‘청소년 통일공감사업’이 2억 8,900만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1)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포럼’은 국내 시·도별, 해외 주요 국가별로 자문위원과 여론주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통일 논의, 대안 모색, 여론 수렴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2025년)과 동일하게 3억 2,500만원으로 편성됨.

< 2026년도 평화통일포럼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평화통일 포럼	463	325	325	325	-	-
·국내 평화통일포럼	86	89	89	89	-	-
·해외 평화통일포럼	377	236	236	236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평화통일포럼’이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해외 평화통일포럼’은 2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평화통일포럼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평화통일포럼】(국내 17회 / 해외 3회)	325
① 국내 평화통일포럼 * 17개 시·도별	89
▪ 포럼 개최 (4.7백만원×17개 지역회의)	79
▪ 포럼 평가회의 등	10
② 해외 평화통일포럼	236
▪ 포럼 개최 (79백만원×3회)	23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평화통일 시민교실

‘평화통일 시민교실’은 국내 지역협의회가 남북관계 및 대북·통일정책 이해 증진과 통일여론 수렴을 위하여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연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2025년)과 동일하게 3억 9,400만원으로 편성됨.

< 2026년도 평화통일 시민교실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평화통일 시민교실	344	394	394	394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내용은 ‘평화통일 시민교실’을 개최하고자 하는 국내 지역협의회가 주제·목적에 적합한 전문강사를 선정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2026년에는 150개 지역협의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2026년도 평화통일 시민교실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평화통일 시민교실 】	
▪ 평화통일 시민교실 개최 (2.6백만원×150개소)	384
▪ 기획·평가회의 등 (0.8백만원×4회)	3
▪ 직원 출장여비 (0.1백만원×1명×65회)	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지역통일활동 지원

‘지역통일활동 지원’은 국내외 지역협의회 단위의 통일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2025년) 45억 2,300만원 대비 20.6%인 9억 3,000만원 감액된 35억 9,300만원으로 편성됨.

< 2026년도 지역통일활동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지역통일활동 지원	3,580	4,523	4,523	3,593	△930	△20.6
·정기회의	946	914	914	914	-	-
·특화사업	2,634	3,609	3,609	2,679	△930	△25.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특화사업 중 지역추진 사업이 1억 2,500만원,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이 2억 8,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해외 특화사업 중 지역추진 사업이 2억 3,200만원,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사업이 2억 8,800만원 각각 감액됨.

< 2026년도 지역통일활동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지역통일활동 지원 】	3,593
① 국내 정기회의(4회, 분기별)	579
▪ 논의 참고자료 작성, 종합 분석 자료집 제작 및 발송	29
▪ 국내 지역협의회별 정기회의 (600천원×229개소×4분기)	549
▪ 기획 및 평가 간담회 등	1
② 해외 정기회의(연 3회)	335
▪ 토론자료 번역 및 감수, 의견수렴 결과 분석 사례비	18
▪ 해외 지역협의회별 정기회의 (2.35백만원×45개소×3회)	317
③ 국내통일 특화사업	1,473
▪ 국내 특화사업 (2.85백만원×246개 지역회의·지역협의회)	700
▪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 (2.32백만원×246개 지역회의·지역협의회)	555
▪ 국내 청년 특화사업 (4.95백만원×20회)	99
▪ 국내 여성 특화사업 (4.95백만원×20회)	99
▪ 국내 직원 출장여비	20
④ 해외통일 특화사업	1,206
▪ 해외 특화사업 (10.53백만원×95개 지역회의·지역협의회·지회)	1,000
▪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컨퍼런스(150백만원X1회)	150
▪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지원 직원 국외여비	54
▪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간담비	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4)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청소년 통일공감사업’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관, 국가관 등의 정립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2025년) 6억 3,700만원 대비 45.3%인 2억 8,900만원 감액된 3억 4,800만원으로 편성됨.

< 2026년도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	1,003	637	637	348	△289	△45.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6년도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 국내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100(2.5백만원×40개소)	100
- 해외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248
▪ 통일골든벨 (5.1백만원×45개소)	228
▪ 문제 출제위원, 심사위원 사례비 등	12
▪ 문제 출제위원 업무협의 간담비	1
▪ 사업 지원 직원 여비	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5)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해외 통일정책강연회’는 해외 자문위원 및 재외동포에게 통일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통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2025년) 2억 1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195	201	201	201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6년도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해외 통일정책 강연회】	
① 기획 및 사전준비	25
자료 인쇄비, 물품 구입 및 현수막 등	23
기획 및 준비 협의 간담비	2
② 강연회 개최 *16회	176
실시단 여비	69
현지 개최 (6.7백만원×16회)	10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6)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민주평통이 함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2025년) 9,400만원 대비 1,117.0%인 10억 5,000만원 증액된 11억 4,400만원으로 편성됨.

< 2026년도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94	94	94	1,144	1,050	1,117.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위원회 2,000만원, 국내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7억 8,200만원, 해외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2억 7,300만원, 영상제작 1,600만원, 분기별 분석자료집 및 종합자료집 발간 5,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1,144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위원회	20
▪ 국내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782
▪ 해외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273
▪ 영상 제작	16
▪ 분기별 분석자료집 및 종합자료집 발간	5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세부사업의 하위사업인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내역사업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민주평통이 함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2025년) 대비 10억 5,000만원이 증가한 11억 4,400만원을 편성함.

<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내역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5,679	6,174	6,174	4,970	6,005	△169	△2.7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94	94	95	94	1,144	1,050	1,11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내역사업은 민주평통이 2025년 현재 추진 중인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내역사업을 확대·개편한 사업임.

민주평통은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으로 9,4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 내 조정 과정에서 사업명칭이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로 변경되었고, 사업규모도 10억 5,0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11억 4,400만원임.

<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내역사업 예산 요구안 및 조정안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2026요구안(A)	2026조정안(B)	증감액(B-A)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94	1,144	1,050
-일반수용비(210-01)	64	89	25
-임차료(210-07)	9	-	△9
-일반용역비(210-14)	-	16	16
-국내여비(220-01)	4	10	6
-국외여비(220-02)	-	95	95
-사업추진비(240-01)	17	16	△1
-민간경상보조(320-01)	-	918	91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에 대해 민주평통은 현정부의 국정과제[203]인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통일담론 확산을 위해 국내 시·군·구 생활권 단위로 사회적 대화를 확대 실시하고, 해외 지역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신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204]한 것으로 설명함.

2026년도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내역사업의 세목별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 비목이 87.4%를 차지하고 나머지 세목 예산이 12.6%를 차지함.

< 2026년도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내역사업 세목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목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합계	94	1,144	1,050
	일반수용비	67	89	25
	일반용역비	-	16	16
	국내여비	4	10	6
	국외여비	-	95	95
	사업추진비	17	16	△1
	민간경상보조	-	918	91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3) [국정과제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국내외 평화공존·통일담론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204) ('25) 국내 3회 → ('26) 국내 34회, 해외 5회

이와 같이 동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민간경상 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 바,

「202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현황을 첨부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평통이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내역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의 정책목표(정책건의에 연계)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세부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205]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국내외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참석률 (단위 : %)	목표	62	58	59	59	58	과거 실적치, 현재 상황 등을 고려	(국내 정기회의 평균 참석률)*0.8 +(해외 정기회의 평균 참석률)*0.2
	실적	54	58	54	-	-		
	달성도	87	100	92	-	-		
지역협의회 평화통일 활동지원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85	84	84	84	84	과거 실적치, 현재 상황 등을 고려	∑(10점 척도별 점수*항목별 응답자수)/응답자수
	실적	82	83	88	-	-		
	달성도	96	99	105	-	-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참여자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87	85	85	85	85	과거 실적치, 현재 상황 등을 고려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참여자의 10점 척도별 만족도 산술평균
	실적	83	84	86	-	-		
	달성도	95	99	101	-	-		
국민	목표	87	88	88	87	85	과거 실적치,	(평화통일포럼

205) 성과지표별 내역사업명 대응 현황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세부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세부사업 下 내역사업명
국내외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참석률(단위 : %)	지역통일활동 지원
지역협의회 평화통일 활동지원 만족도(단위 : 점)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 시민교실 지역통일활동 지원 청소년 통일공감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참여자 만족도(단위 : 점)	청소년 통일공감
국민 평화통일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만족도(단위 : 점)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 시민교실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평화통일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만족도(점)							현재 상황 등을 고려	만족도)*0.4 +(평화통일시민교실 만족도)*0.4 +(평화통일정책강연회)*0.2
	실적	88	86	86	-	-		
	달성도	-	101	97.7	-	-		

성과지표는 재정성과관리제도(성과계획서→집행→성과보고서→환류)의 핵심적인 도구인 만큼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내역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 청사관리 운영

‘청사관리 운영’은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경비, 청소 및 조리원을 직접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및 청사 진입로 열선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2025년) 4억 800만원 대비 59.3%인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6억 5,00만원임.

< 2026년도 청사관리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 청사관리 운영	374	408	408	650	242	59.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요 증액사유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2,200만원 증액, 청사 진입로 열선 설치를 위한 공사비 2억 2,000만원 증액임.

< 2026년도 청사관리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청사관리 운영 】			650
① 공무직 인건비			430
청사 방호원	미화원	조리원	430
· 급여 171 (2,372,630원×12월×6명)	· 급여 77 (2,150,730원×12월×3명)	· 급여 26 (2,150,730원×12월×1명)	274
· 정액급식비 10 (140,000원×12월×6명)	· 정액급식비 5 (140,000원×12월×3명)	· 정액급식비 2 (140,000원×12월×1명)	17
· 명절휴가비 17 (2,372,630원×60%×2회×6명)	· 명절휴가비 8 (2,150,730원×60%×2회×3명)	· 명절휴가비 2 (2,150,730원×60%×2회×1명)	27
· 야간수당, 연가보상비 34 - 야간수당 31 - 연가보상비 3	· 연가보상비 2	· 연가보상비 1	37

· 보험료, 퇴직금 등 46	· 보험료, 퇴직금 등 18	· 보험료, 퇴직금 등 6	70
· 맞춤형 복지비 3 (500,000원×6명)	· 맞춤형 복지비 1.5 (500,000원×3명)	· 맞춤형 복지비 0.5 (500,000원×1명)	5
② 청사 진입로 열선 설치			**220**
청사 진입로 열선 설치			22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참 고 자 료

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현황

Ⅱ. 자문위원 위촉 현황

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현황

1 기 능

<설치근거 : 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 혁

○ 1980. 10. 2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헌법 제68조)
○ 1981. 3. 14.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 1981. 6. 5.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
○ 1987. 10.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 변경(헌법 제92조)
○ 1988. 2. 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
○ 2025. 11. 1.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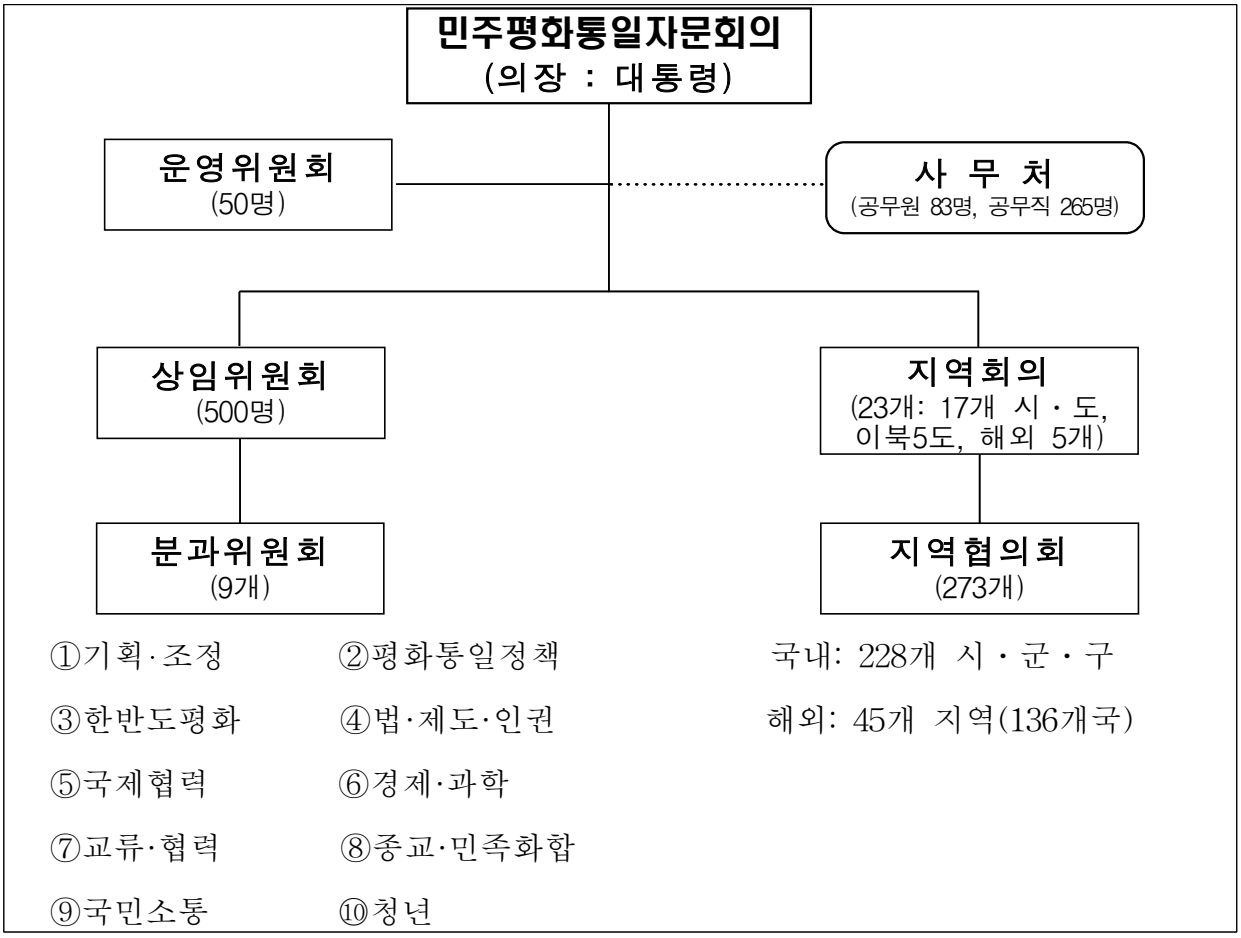
3 조 직

o 자문위원

◇ 제21기 자문위원 현황 : 22,824명

- 국내 : 18,787명 (직능대표 15,721명, 지역대표 3,066명)
  *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회의, 228개 시·군·구 지역협의회
- 해외 : 4,037명 (137개국 재외동포대표)
  * 5개(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45개 지역협의회

o 조직도



o 기구별 기능(개요)

기 구	구 성	기 능
전체회의 (법제20조)	전(全) 자문위원	· 범국민적 통일의지 결집 ·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운영위원회 (법제19조)	50명 이내	·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 · 자문위원 위촉 해제 심사 · 기타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상임위원회 (법제18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 · 의장이 명한 사항 심의 ·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심의
분과위원회 (법제18조제5항)	9개 분과위원회	· 각 분야별 안건 심의 · 분야별 통일정책 연구 및 건의
지역회의 (법제29조제1항)	국내: 17개 시·도, 이북5도 해외: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	·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 자문·건의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 여론 형성·수렴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 지지기반 확충 ·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 기타 지역 통일기반 조성활동
지역 운영위원회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지역부의장, 지역회의 간사, 소속 협의회장 등	· 지역회의의 운영, 활동 등 주요사항에 관한 사항 심의
지역협의회 (법제29조제1항)	국내: 228개 시·군·구 해외: 45개 지역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수렴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논의 활성화 ·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도출 ·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 기타 지역 통일기반 조성활동

Ⅱ 자문위원 위촉 현황

1 자문위원 위촉

1 자문위원 위촉권자 : 대통령

o 대통령은 지역·계층·정파·세대를 초월하여 각 분야에서 대표성을 지닌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2 자문위원 추천기관

o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받아 대통령이 위촉

<위촉대상별 추천권자>

위촉 대상(법 제10조)	추천권자(시행령 제4조)
1.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2. 시·도 및 시·군·구 지도급 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4.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 추천 지도급 인사	정당대표, 국회의원
5. 재외동포 대표	해당 재외공관장
6.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	관계 부·처의 장
7. 기타 통일과업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인사	민주평통 사무처장

3 위촉절차

① 위촉 방침 대통령 재가 → ② 추천기관별 추천의뢰 → ③ 신원조사 및 후보자 선정 → ④ 위촉 재가 → ⑤ 자문위원 등록 및 임기시작(2년)

※ 지방의원은 개인별 후보자 신청서 접수 및 활동확약 후 위촉

4 자문위원 역할 및 활동

o 신분 및 임기

- 자문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서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며,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
- 자문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며 연임 가능(법 제11조)
- 지역대표 위원의 임기는 지방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

o 임무

- 모든 자문위원은 각 지역별로 설치된 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

  * 지역협의회는 국내 228개, 해외 45개 설치

- 자문위원은 대통령의 통일·대북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다양한 통일여론을 수렴하며, 국내 및 재외동포사회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통일역량을 결집하는 등의 역할 수행

< 기수별 자문회의 구성현황 >

구 분	임 기	계	국 내		재외동포 대표
			지역대표	직능대표	
22기	25.11.1~27.10.31	**22,824**	**3,066**	**15,721**	**4,037**
21기	23.9.1~25.8.31	**21,984**	**3,288**	**14,658**	**4,038**
20기	21.9.1~23.8.31	**20,000**	**2,944**	**13,156**	**3,900**
19기	19.9.1~21.8.31	**19,000**	**3,118**	**12,282**	**3,600**
18기	17.9.1~19.8.31	**19,710**	**2,980**	**13,100**	**3,630**
17기	15.7.1~17.6.30	**19,947**	3,157	13,512	3,278
16기	13.7.1~15.6.30	**19,937**	3,085	13,577	3,275
15기	11.7.1~13.6.30	**19,950**	3,170	13,643	3,137
14기	09.7.1~11.6.30	**17,800**	3,317	11,839	2,644
13기	07.7.1~09.6.30	**16,791**	3,445	11,369	1,977
12기	05.7.1~07.6.30	**17,193**	3,974	11,588	1,631
11기	03.7.1~05.6.30	**14,940**	4,121	8,522	2,297
10기	01.7.1~03.6.30	**14,113**	4,120	7,526	2,467
9기	99.7.1~01.6.30	**14,142**	4,146	7,526	2,470
8기(2차)	98.7.1~99.6.30	**13,340**	4,117	7,012	2,211
8기(1차)	97.7.1~98.6.30	**13,305**	5,325	6,059	1,921
7기	95.7.1~97.6.30	**13,420**	5,373	6,251	1,796
6기	93.7.1~95.6.30	**11,501**	5,170	5,185	1,146
5기	91.6.29~93.6.30	**10,918**	5,170	4,756	992
4기*	87.6.1~91.6.28	**10,593**	4,846	4,763	984
3기	85.6.1~87.5.31	**10,634**	4,991	4,673	970
2기	83.6.1~85.5.31	**10,074**	5,106	4,129	839
1기	81.6.5~83.5.31	**8,919**	5,214	3,320	38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제22기 자문위원 위촉 통계

(단위 : 명)

구 분		21기	22기	증감
합 계		**21,984**	**22,824**	**840**
국내	소 계	17,946	18,787	841
	지역대표(지방의원)	3,288	3,066	△222
	직능대표	14,658	15,721	1,063
해외	재외동포대표	4,038	4,037	△1

신규비율	구 분	21기		22기	
		신규	연임	신규	연임
	계	**12,304** (65.8%)	**6,392** (34.2%)	**12,451** (63.0%)	**7,307** (37.0%)
	직능대표	10,065 (68.7%)	4,593 (31.3%)	10,477 (66.6%)	5,244 (33.4%)
	재외동포대표	2,239 (55.4%)	1,799 (44.6%)	1,974 (48.9%)	2,063 (51.1%)

여성비율	구 분	21기	22기
	계	**6,414**(34.3%)	**7,307**(40.0%)
	직능대표	5,013(34.2%)	6,343(40.3%)
	재외동포대표	1,401(34.7%)	1,564(38.7%)

청년비율	구 분	21기	22기
	계	**4,952**(26.5%)	**6,016**(30.5%)
	직능대표	3,986(27.2%)	4,983(31.7%)
	재외동포대표	966(23.9%)	1,033(25.6%)

재외동포청 소관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예산안 개요

가. 세 입

(단위: 백만원)

관	항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비 고
합 계		1,026	1,015	△11	△1.1	
재산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	1	-	-	금융기관 이자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 이전수입	1,000	1,000	-	-	재외동포단체 보조금 반납금 등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20	9	△11	△55	증명서 등 영사 민원 발급 수수료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잡수입	5	5	-	-	물품 매각 등 수입금

* 재외공관 세입은 외교부에서 일괄 징수 후 국고세입, 재외동포청은 국내세입만 징수 예정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10억 2,600만원 대비 1.1%에 해당하는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나. 세 출

1) 기능별 분류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7,063**	**109,164**	**2,101**	**2.0**
일반지출	107,063	109,164	2,101	2.0
인 건 비	10,214	10,898	684	6.7
기본경비	5,856	6,329	473	8.1
주요사업비	90,993	91,937	944	1.0

* 2025년 예산 현액 대비 21억1백만원 증액(2.0%)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91억 6,400만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액 1,070억 6,300만원 대비 21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예산안 부문별 내역

가. 세 입

(단위: 백만원)

관	항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	비고
11 재산수입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	1	-	-	
12 경상이전수입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0	1,000	-	-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5 면허료 및 수수료	20	9	△11	△55	
	69 잡수입	5	5	-	-	
소관 합계		**1,026**	**1,015**	**△11**	**△1.1**	

나. 세 출

1) 성질별 · 사업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1. 인 건 비	10,214	10,898	684	6.7
2. 기본경비	5,856	6,329	473	8.1
3. 사 업 비	90,993	91,937	944	1.0
- 계속사업(19건)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452	377	△75	△16.6
동포간담회 개최	1,750	1,799	49	2.8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22,652	23,175	523	2.3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7,757	23,778	△3,979	△14.3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582	582	-	-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6,133	5,916	△217	△3.5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1,340	1,445	105	7.8
재외동포·국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2,649	1,732	△917	△34.6
재외동포 소통플랫폼 구축	2,350	334	△2,016	△85.8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10,069	8,570	△1,499	△14.9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	7,656	7,656	순증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917	1,569	△348	△18.2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6,253	6,358	105	1.7
재외동포 글로벌 서비스 강화	1,538	1,593	55	3.6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1,045	1,045	-	-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51	51	-	-
공보·홍보 역량강화	1,859	1,296	△563	△30.3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696	60	△636	△91.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900	4,601	2,701	142.2

2) 프로그램·단위사업별 분류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소관 합계	107,063	109,164	2,101	2.0
5000 **재외동포 지원**	**86,538**	**85,980**	**△558**	**△0.6**
5031 (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2,202	2,176	△26	△1.2
5032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50,409	46,953	△3,456	△6.9
5033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582	582	-	-
5034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교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2,472	9,427	△3,045	△24.4
5035 (재외동포 보듬기)	10,069	16,226	6,157	61.1
5036 (편리한 동포 생활)	9,708	9,520	△188	△1.9
5037 (국내동포 정착지원)	1,096	1,096	-	-
7100 **재외동포 행정지원**	**20,525**	**23,184**	**2,659**	**12.9**
7101 (인건비)	10,214	10,898	684	6.7
7111 (기본경비)	5,856	6,329	473	8.1
7121 (재외동포청 업무지원)	4,455	5,957	1,502	33.7

3) 국고보조금 사업

< 국고보조금 예산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총 계	867	2,303	1,436	165.6	
민간경상보조	181	181	-	-	■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지자체경상보조	686	2,122	1,436	209.3	■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예산안의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2026년도 예산안 총액은 23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2026년부터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예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되었기 때문임.

□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는 다문화동포 지원 및 국내 동포 관련 단체 지원으로 구성되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음.

< 민간경상보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전년대비(B-A)		비 고
			증감	%	
총 계	**181**	**181**	**-**	**-**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다문화동포 지원)	130	130	-	-	■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국적 자녀 지원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	51	51	-	-	■ 국내동포 관련 민간단체 지원

□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는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의 내역사업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시설운영비 지원과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인 지역별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사업이며, 2026년도 예산안은 21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자체경상보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전년대비(B-A)		비 고
			증감	%	
총 계	**686**	**2,122**	1,436	209.3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시설운영비 지원)	-	1,436	순증	순증	■ 보건복지부 이관 ■ 인천사할린동포회관, 경북 대창양로원 시설운영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지역별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686	686	-	-	■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별 맞춤형 정착 지원

3. 세입 · 세출 예산안의 주요 특징

가. 세 입

< 2026년도 재외동포청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관	항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비 고
합 계		1,026	1,015	△11	△1.1	
재산수입	기타이자수입 및재산수입	1	1	-	-	금융기관 이자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 이전수입	1,000	1,000	-	-	재외동포단체 보조금 반납금 등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20	9	△11	△55	증명서 등 영사 민원 발급 수수료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잡수입	5	5	-	-	물품 매각 등 수입금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10억 2,600만원 대비 1.1%에 해당하는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206]

206) 2026년도 정부 총(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세입예산안은 674.2조원이 편성되어, 이 중 재외동포청 소관 10억 1,500만원의 비중은 0.000152%임.

나. 세 출

1) 예산안 총괄

< 2026년도 재외동포청 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7,063**	**109,164**	**2,101**	**2.0**
일반지출	**107,063**	**109,164**	**2,101**	**2.0**
인 건 비	10,214	10,898	684	6.7
기본경비	5,856	6,329	473	8.1
주요사업비	90,993	91,937	944	1.0

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21억 100만원(2.0%) 증액된 1,091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207] 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77억원), 입양동포단체 지원사업(1억원)과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구축 예산 등 주요사업비는 9억 4,400만원이 소폭 증액(1.0%)되는 한편, 재외공관 직무파견 등을 위한 인건비(6.7%) 및 기본경비(8.1%)가 증액 편성됨에 기인하는 것임.

207) 2026년도 정부 총 세출예산안은 728.0조로, 전년대비 54.7조(8.1%) 증액되었음. 이 중 재외동포청 소관 1,091억원의 비중은 0.014%임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정부 총 세출예산은 673.3조원이며, 재외동포청 1,071억원 비중은 0.016%임)

2) 재외동포청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재외동포청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①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편익 증진, ② 부처별로 산재된 동포 관련 업무와 예산의 일원화, ③ 동포 청년의 국내 정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확보, ④ 디지털 행정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

재외동포청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한글·문화·역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전 세계 한글학교의 역량 강화 예산을 9억원(5%) 증액하였고, 재외동포 민원 등 서비스 편익 증진을 위해 온라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전년대비 1억원(1.7%) 증액하였음.

부처별로 분산된 동포 업무 및 관련 예산을 일원화하여 동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예산을 세부사업으로 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입양 동포들의 권익 신장 강화를 위한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예산을 1억원(11.9%) 증액하였음.

우리나라의 지방소멸과 인구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청년의 국내 학업 장려와 취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동포 인재를 육성하고 국내로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 교육사업

예산 3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한편,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 구현을 위해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신설 예산 2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3) 세출예산안의 구성 및 특징

가) 개 요

세출 예산안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6.7% 증액된 109억원, 기본경비는 8.1% 증액된 63.3억원, 주요사업비는 1.0% 증액된 919.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량적 편성이 어려운 인건비, 기본경비는 전체예산의 15.8%에 해당하는 172억원임.

나) 2026년도 프로그램별 예산안 변동내역

2026년도 재외동포청 프로그램별 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21억원(2.0%)이 증액되었음.

< 프로그램별 예산안 변동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소관 합계	107,063	109,164	2,101	2.0
재외동포 지원	86,538	85,980	△558	△0.6
재외동포 행정지원	20,525	23,184	2,659	12.9

전년 대비 증액된 프로그램의 내역을 보면,

① ‘재외동포 지원’은 전년 대비 5.6억원(△0.6%)이 감액되었고, ② ‘재외동포 행정지원’은 26.6억원(12.9%)이 증액되었음.

프로그램별로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은 △한인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 편익증진, △동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등 주요 정책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5.2억원,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1억원,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76.6억원이 순증되었음.

‘재외동포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법정 의무사항인 보안관제센터 구축 예산이 반영되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사업비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 4.7억원, 인건비 6.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Ⅱ.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 재외동포 지원

가. 프로그램 개요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맞춤형 동포지원 및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증진을 통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7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6년도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년 예·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본예산	추경	결산		
[5000]재외동포 지원			82,394	82,394	79,248	86,538	85,980
	[5031]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782	782	490	2,202	2,176
		[301]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782	782	490	452	377
		[302]동포간담회 개최	-	-	-	1,750	1,799
	[5032]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45,948	45,948	44,161	50,409	46,953
		[301]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22,194	22,194	21,289	22,652	23,175
		[302]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3,754	23,754	22,872	27,757	23,778
	[5033]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728	728	645	582	582
		[301]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728	728	645	582	582
	[5034]재외동포와 모국간의 교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0,617	10,617	9,596	12,472	9,427
		[301]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6,549	6,549	6,018	6,133	5,916
		[302]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1,610	1,610	1,571	1,340	1,445
		[303]재외동포·국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2,458	2,458	2,007	2,649	1,732
		[304]재외동포 소통플랫폼 구축	-	-	-	2,350	334
	[5035]재외동포 보듬기		8,932	8,932	8,975	10,069	16,226
		[301]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8,932	8,932	8,975	10,069	8,570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년 예·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본예산	추경	결산		
		[302]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	-	-	-	7,656
	[5036]편리한 동포 생활		15,387	15,387	15,381	9,708	9,520
		[301]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159	2,159	2,073	1,917	1,569
		[302]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657	11,657	11,751	6,253	6,358
		[303]재외동포 글로벌 서비스 강화	1,571	1,571	1,557	1,538	1,593
	[5037]국내동포 정착지원		-	-	-	1,096	1,096
		[301]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	-	-	1,045	1,045
		[302]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	-	-	51	51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한글학교 역량강화 9억원, 재외동포 교육사업 31억원,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1억원, 온라인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77억원이 순증되었음.

나.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동 사업은 재외동포정책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민 여론, 동포사회 분위기 등을 조사·수렴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7,500만원이 감액된 3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490**	**452**	**507**	**377**	**△75**	**△16.6**
-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144	199	213	208	9	4.5
- 재외동포정책의 이해 및 관심 제고	346	253	194	169	△84	△33.2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사업의 체계적 확대 및 내실화 필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사업은 내역사업 「재외동포정책의 이해 및 관심 제고」의 내내역사업으로, 재외동포청이 국내 초·중·고교 및 대학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의 역사, 정책, 정체성, 그리고 모국과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임. 동 사업은 재외동포정책의 직접적 수혜대상이 아닌 국내 일반 국민, 특히 학령기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에 비해 다소 증액된 4,1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3,00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사업추진비 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20	35	66	41	6	17.1

동 사업의 교육 대상은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되며, 학교별 요청 주제에 따라 강연자를 배정하고 있으며, 강연은 재외동포청 직원과 외부전문가가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음. 2024년에는 22개교를 대상으로 총 27회 교육이 시행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63개교 70회 시행(44회 완료)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사업 시행 세부내역 >

구 분	2024년		2025년	
	학교 수	교육 수	학교 수	교육 수
대학교	5개교	9회	14개교	20회
고등학교	5개교	6회	5개교	5회
중학교	3개교	3회	15개교	15회
초등학교	9개교	9회	29개교	30회
계	**22개교**	**27회**	**63개교**	**70회**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은 2026년도에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총 90회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강의자료를 정비·보완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 교육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또한, 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 교육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협력하여 직무교육용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국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시민대상 교육을 추진 중임.

현재 동 사업은 교육 주제와 강연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학교에 한정된 일회성 강연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 인식 제고의 실효성이 낮은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교육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공무원·일반 국민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교육 대상을 확장하는 한편, 오프라인 중심의 현장 강의 외에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교육 및 상시 학습

체계를 병행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 확산이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교육성과를 단순 시행 횟수가 아닌 교육의 질적 수준과 인식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강의 방식에 대한 평가체계 및 피드백 시스템을 정립하고, 강의별 만족도 조사·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됨.

한편, 2025년 상반기 교육 시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35회 중 20회가 재외동포청 소속 직원에 의해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경험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음.

이에 따라 향후에도 동포청 소속 직원을 적극적으로 강연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동포청 내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강사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주제별 맞춤형 강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다. 동포간담회 개최

동 사업은 정상 및 총리의 해외 방문 계기에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포사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임.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동포간담회 개최	-	1,750	1,750	1,799	49	2.8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외교부의 「정상·총리 외교」 사업비 일부를 이관하여 재외동포청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며, 2026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4,900만원이 증액된 17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해외순방 연계 동포간담회 예산 집행체계 개선 필요

「동포간담회 개최」 사업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일정에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동 사업은 2025년도부터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어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정상 동포간담회 11회, 총리 동포간담회 4회 개최를 기준으로 총 17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동포간담회 개최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동포간담회 개최	-	1,750	1,799	49	2.8
정상 동포간담회	-	1,523	1,569	46	3.0
총리 동포간담회	-	227	230	3	1.3

재외동포청은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연계된 행사의 특성상, 안보 및 외교상 기밀이 포함된 항목의 공개 예산 집행에 따른 제약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설명하고 있음.

실제 정상 동포간담회는 대통령 및 수행원의 이동 동선, 숙소 정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공개 예산 방식으로는 기밀 유지에 한계가 있어 행사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보안 유지와 신속한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동포간담회 개최 예산 비목별 비교 >

(단위: 백만원)

사업 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동포간담회 개최	**1,750**	**1,799**
-일반수용비(210-01)	233	239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4	4
-임차료(210-07)	1,060	1,103
-일반용역비(210-14)	230	230
-국외업무여비(210-02)	153	153
-업무추진비(240-01)	70	70

(자료: 재외동포청)

동 사업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기 이전인 외교부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은 Ⅲ급 비밀 예산으로 편성·집행되어 왔으며, 정상 해외순방 계기 동포간담회라는 동일한 행사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공개 예산으로 전환되어 예산 집행의 일관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간 동일한 행사 성격을 고려하여, 보안이 유지되는 비공개 예산 또는 제한공개 형태의 집행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재외동포청은 향후 동포간담회가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안 유지가 가능한 예산 집행체계를 마련하여 행사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라.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동 사업은 재외 한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 한글학교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5억 2,300만원이 증액된 23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21,289**	**22,652**	**22,852**	**23,175**	**523**	**2.3**
-한글학교 역량 강화	17,520	18,619	18,641	19,546	927	5.0
-한글학교 교사 육성	2,258	2,685	2,641	2,641	△44	△1.6
-스터디코리안 운영	502	277	159	159	△118	△42.6
-교육자료 지원	352	432	432	432	-	-
-모국문화 보급사업	261	242	380	-	△242	△100.0
-코리안 페스티벌	317	329	331	329	-	-
-언론인 초청 연수	79	68	68	68	-	-

□ 포상금 지급근거의 명확화 및 제도적 정비 필요

‘재외동포 문학상’은 내역사업인 「코리안 페스티벌」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재외동포의 한글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재외동포와 내국인 간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음.

동 문학상은 시, 단편소설, 수필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공고 기준으로 총 13명 내외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대상 500만원, 우수상 250만원, 가작 100만원 등으로 시상하며, 상금 총액은 약 2,950만원 수준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포상금 규모 또한 동일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임.

< 2025년 재외동포문학상 시상 내역 >

구 분	시상인원			수상자별 상금
	시	단편소설	수필	
대 상	1명	1명	1명	500만원
우수상	1명	1명	1명	250만원
가 작	2명	2명	2명	100만원

(자료: 2025년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문)

동 사업은 2022년까지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였으나, 2023년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부터는 재외동포청이 직접 주최·주관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08]에 근거하여 작품 공모, 접수, 심사, 시상,

홍보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상금 및 격려금은 '포상금(310-03목)' 항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금을 포상금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 비목 측면에서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시 그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절차 및 금액 기준은 하위규정으로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시상금은 공익적 성격의 포상임에도 지급근거와 지급한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현재 재외동포청의 내부 규정인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3조 및 제8조[209]는 포상과 시상의 요건 및 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

---

208)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209)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3조(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포상의 요건
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재외동포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재외동포 정책 수행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나. 국정과제 및 재외동포청 핵심과제 추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다.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화합 도모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2. 시상의 요건
가.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나.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다. 재외동포청이 후원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이 경우 사전에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외동포청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하에 시상을 결정한다.

급 한도나 환수기준 등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또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210]는 부정행위 적발 시 상금 환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집행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향후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재외동포 문학상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심사기준, 지급한도 및 환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8조(표창장의 기록) ①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장은 이 예규에 따라 제작되는 표창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210)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마.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동 사업은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9억 7,900만원이 감액된 237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출연금 51억 2,400만원과 사업출연금 186억 5,4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2,872	27,757	20,554	23,778	△3,979	△14.3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사업은 차세대 육성사업, 재외동포 교육사업, 동포지원사업, 민족교육 육성, 기록전시운영,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통합네트워크 지원,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9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6년도 재외동포협력센터 세출예산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비고
			(B-A)	%	
계	**27,757**	**23,778**	**△3,979**	**△14.3**	
1. 인건비	3,821	3,955	134	3.5	
2. 경상운영비	1,169	1,169	-	-	
3. 사업비	22,767	18,654	△4,113	△18.1	
① 차세대육성사업	9,166	9,166	-	-	
-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8,826	8,826	-	-	
-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340	340	-	-	
② 재외동포 교육사업	4,074	7,164	3,090	75.8	
-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3,864	6,109	2,245	58.1	
- 해외 동포청년 취업 지원	-	845	845	순증	신규
- 중국CIS 현지 장학금 지원	210	210	-	-	
③ 동포지원사업	630	630	-	-	
- 세계한인정치인포럼	580	580	-	-	
-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	50	50	-	-	
④ 민족교육육성	339	339	-	-	
-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119	119	-	-	
- CIS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220	220	-	-	
⑤ 기록전시운영	154	154	-	-	
-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수집)	100	100	-	-	
- 자료실 운영	54	54	-	-	
⑥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7,203	-	△7,203	△100	
⑦ 통합네트워크 지원	1,201	1,201	-	-	
- 기획홍보	150	150	-	-	
- 통합네트워크 지원시스템 운영	1,051	1,051	-	-	

□ 재외동포 교육사업의 면밀한 사업설계 및 추진관리 강화 필요

「재외동포 교육사업」은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수행하는 주요 단위사업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임.

2026년도 예산안은 총 71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외동포 우수 인재의 학업 및 취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26년도 재외동포 교육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재외동포 교육사업	**3,664**	**4,074**	**7,164**	**3,090**	**75.8**
-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3,149	3,864	6,109	2,245	58.1
- 해외 동포청년 취업 지원	-	-	845	845	순증
- 중국CIS 현지 장학금 지원	515	210	210	-	-

동 사업은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해외 동포청년 취업지원」, 「중국·CIS 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은 해외의 우수 동포 학생을 선발하여 한국 내 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어학연수비, 생활지원금,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해외 동포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정착비를 지원하여 국내 기업 취업과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며, 「중국·CIS 지역 현지 장학

금 지원」사업은 현지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동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수학을 돕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중 '국내 정착형 초청 장학사업'과 신규로 추진되는 '해외 동포청년 취업 지원' 사업이 핵심 증액·신규 편성 항목으로 반영되었음.

국내 정착형 초청 장학사업은 단기 연수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국내 대학(원) 진학과 장기 체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으며, 총 150명을 대상으로 22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업지원 내용은 어학연수비,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신규사업인 해외 동포청년 취업 지원 사업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25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비, 항공료, 자격증 취득비, 초기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정주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됨.

< 재외동포 교육사업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재외동포 교육사업 : 4,074백만원 가.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3,864백만원) • 초청 장학지원 : 253명x15.138백만원= 3,830백만원 (생활지원금, 어학연수, 항공료, 보험료 등) • 현지·국내 재학생, 졸업생 사후관리 : 253명x0.134백만원= 34백만원	**○ 재외동포 교육사업 : 7,164백만원 (+3,090백만원)** 가.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6,109백만원, +2,245백만원) • 초청 장학지원(계속) : 253명x15.138백만원= 3,830백만원 (생활지원금, 어학연수, 항공료, 보험료 등) • 현지·국내 재학생, 졸업생 사후관리(계속) : 253명x0.134백만원= 34백만원 • 국내 정착 장학지원(신규) : 150명×14.967백만원= 2,245백만원 (등록금, 생활지원금, 어학연수, 항공료 등)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나. 중국·CIS 현지 장학금 지원 (210백만원) • 장학금 지원 : 140명x1.36백만원= 190백만원 • 현지 재학생, 졸업생 사후관리 : 5개 재외공관x20명x0.2백만원= 20백만원	나. 해외 동포청년 취업 지원 (845백만원, 신규) • 취업 지원(국내 정착) : 250명×3.38백만원 = 845백만원 (직업 교육 훈련비, 초기 정착금, 항공료 등) 다. 중국·CIS 현지 장학금 지원 (210백만원) • 장학금 지원 : 140명x1.36백만원= 190백만원 • 현지 재학생, 졸업생 사후관리 : 5개 재외공관x20명x0.2백만원= 20백만원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대학 및 기업 등의 산업 수요나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제 수요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학업 및 취업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발기준 또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와 같이 학업 및 취업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줌. 실제로 재외동포 사회의 유학·취업 수요, 국내 대학 및 산업계의 수용 여건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없이 예산이 산출되어, 편성규모와 실제 수요 간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에 앞서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지원대상 및 선발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의 합목적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지연 해소와 예산집행 효율화 대책 마련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구 재외동포재단이 중앙정부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 상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임. 2025년도에는 공사비 명목으로 72억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78억 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150억 1,200만원이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액 순감으로 편성됨.

< 2026년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이월]	- [7,809]	7,203 [7,473]	653	-	△7,203	순감

※ 2025년 이월금 중 설계비로 3억 3,600만원 집행

동 사업은 재외동포청이 주관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시행기관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299억 7,400만원으로 국고 252억 5,300만원과 재외동포 사회의 기부금 47억 2,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사업비 현황 >

(단위: 억원)

사업 기간	2021년까지 기투자액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투자계획	계
2021 ~ 2025	40.37	71.86	-	-	72.03	115.48	299.74
	12.70 27.67	71.86 -	- -	- -	72.03 -	95.94 19.54	정부 252.53 기부금 47.21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그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경과를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에 편성된 설계비 및 건축비 84억 5,6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2024년까지의 누적 집행액은 2023년도에 설계용역비로 사용된 6억 4,700만원에 불과하여 전체 집행률이 약 7.6% 수준에 그치고 있음.

당초 2021년 부지 선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후보부지 매입 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고, 부지 재검토 및 협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정이 2년 이상 지연되었음. 이후 2023년 9월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사업 주체가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되었고, 2024년 7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설계 절차가 재개되었음. 그러나 행정 절차 및 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해 2025년 현재까지 기본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2026년 착공 및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

현재 사업은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를 기존 299억 7,400만원에서 374억원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승인 후 2026년 2월 실시설계 완료, 2026년 6월 착공,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이후 설계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일부는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등 사업 추진의 실행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2025년 내 총사업비 확정과 실시설계 착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2026년 착공 및 2028년 준공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됨.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조기 종결,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발주 일정 관리,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예산집행계획 구체화 등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 착공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2026년 이후 공사비 증가 및 설계 변경에 대비하여 재정소요를 사전에 예측·관리함으로써, 2028년 9월 준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 >

구분	주요내용
’18. 12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최우선 핵심과제
’19.~’20.	「센터 건립 기본구상」,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
’21.	총사업비 대상사업 선정 및 설계비 12.7억원 교부, 舊 재외동포재단-서울대-시흥시 MOU 체결
’22.	1차 건축비 71.86억원 교부
’22. 9월	舊 재단-서울대, 「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부속 합의」 체결
’23.	설계용역 착수(2월), 일시정지(4월), 사업이관(동포청→협력센터) 및 설계용역 재개(9월)
’23. 10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선금(526백만원) 지급
’24.	설계용역 일시정지(1월), 서울대 건축심의 승인(5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7월)
’24.	서울대 이사회 승인(9월), 계획설계 적정성검토(11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승인(12월)
’24.	2차 건축비 72.03억원 편성(‘25. 정부예산안)
’25. 현재	설계용역 재개(1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심의 조건부승인(3월)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완료(9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9월)
’26. 초	실시설계 완료(2월), 조달청 적정성 검토(3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4월)
’26. 상반기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발주(5월), 공사 착공(6월)
’28. 하반기	공사 완료

바.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동 사업은 모국 초청 및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차세대 인재 발굴, 주류사회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재외동포와 모국 간 유대 강화 및 분야별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재외동포 청년인턴사업」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4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 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1,571	1,340	2,038	1,445	105	7.8
-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455	400	400	400	-	-
-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867	883	883	988	105	11.9
-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249	57	355	57	-	-

□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의 운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은 재외동포 청년 대상 재외공관 단기 인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정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거주국과 모국 간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재외동포 청년인턴	249	57	57	-	-

동 사업은 2024년도에 2억 5,7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약 2억원이 감액된 5,700만원만 반영되면서 인턴 채용 규모도 25명에서 약 5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음. 2026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 규모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정책효과 달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2025년도 재외공관별 청년인턴 선발 현황을 보면, 당초 선정된 5개 공관 중 주일본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태국대사관 등 4개 공관에서만 인턴이 선발되었으며, 주남아공대사관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공고를 거친 상태로, 선발절차가 완료되

더라도 단기간의 인턴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파악됨.

< 2025년 재외공관별 재외동포 청년인턴 선발 현황 >

재외공관	선발(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일본(대)	1	5~12월	영사부 민원 안내
주오사카(총)	1	6~12월	영사 및 동포행사 홍보
주캐나다(대)	1	8~12월	캐나다 한인 이민사 자료 조사 정리 및 기념행사 준비 등
주태국(대)	1	6~12월	영사 및 공관 행사 지원
주남아공(대)	2차 공고 완료		

(자료: 재외동포청)

이처럼 예산 축소와 일부 공관의 선발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의 실질적 운영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책목표였던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층의 국정참여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또한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재외동포청은 동 사업의 운영 안정성과 내실화를 위해 2024년도 시범사업 수준으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업의 추진체계와 운영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거나 사업의 추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사.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동 사업은 원폭 피해 동포, 사할린동포, 고려인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을 통해 국격에 걸맞게 동포를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일민단 지원」,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다문화 동포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취약동포 보듬기」, 「해외위난동포 지원」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동 사업은 2025년 예산 대비 14억 9,900만원이 감액된 85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8,975**	**10,069**	**9,069**	**8,570**	**△1,499**	**△14.9**
- 재일민단 지원	7,880	8,000	7,000	7,000	△1,000	△12.5
-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343	663	502	314	△349	△52.6
- 다문화동포 지원	167	146	146	146	-	-
- 사할린동포 지원	570	520	449	390	△130	△25.0
- 취약동포 보듬기	-	640	672	620	△20	△3.1
- 해외위난동포 지원	15	100	300	100	-	-

□ 해외위난동포 지원 사업의 예산구조 개선 및 집행체계 합리화

「해외위난동포 지원」은 해외에서 전쟁·자연재해·감염병 확산 등으로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재외동포 사회의 위기 극복을 돕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2026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수용비(210-01) 1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해외위난동포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해외위난동포 지원	15	100	100	-	-

동 사업 예산의 경우 일반수용비로만 편성되어 있음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품목 중 일부가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일반수용비는 통상 소모성 물품 구입 등 단기적 운영경비 성격으로 제한되는데, 재난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발전기, 취사도구, 난방기기 등은 내구연한이 존재하는 자산성 물품에 해당하므로 비목상 집행이 불가하거나 회계처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 2024년도에는 재외동포단체인 쿠바한글학교의 요청에 따라 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물품과 선풍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일반수용비 1,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발전기는 자산취득의 성격을 갖는 물품으로서 이를 일

반수용비로 처리한 것은 예산편성 목적과 상이하여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로 지적된 바 있음.

또한, 2025년에는 미얀마 대지진 발생으로 현지 동포단체가 발전기 등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일반수용비로는 즉시 집행이 불가능하여 현장 대응에 지연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안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211]으로 일반수용비의 집행범위 확대를 상정하여 찬성 의결을 통해 구호품·취사용품·유류 등을 긴급 지원하였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예산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 2025년 해외위난동포 지원 관련 신청 현황 >

신청자	일 시	신청내역
재미얀마한인회	2025. 4. 7.	구호품(식수, 침구, 생필품 등), 취사용품, 유류 등
재과테말라 한인회	2025. 7. 14.	헬멧, 응급처치 키트 등

(자료: 재외동포청)

이처럼 현행 예산 편성체계는 사업의 목적에 비해 비목 설정이 적정하지 않아, 실제 긴급상황에서 즉각적인 지원을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2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①「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사업의 성격과 실제 집행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일반수용비 외에 보다 적정한 예산 비목으로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해외 거주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현금·물품 지원 등 이전지출 성격의 사업 특성을 감안할 때, 해외경상이전(340-01) 등 관련 비목의 적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예산구조의 적정성과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가 요구됨.

타.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동 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고통 받은 사할린한인들이 모국으로 영주귀국 시 초기 정착비 및 입소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26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	-	7,656	7,656	7,656	순증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사업비를 이관하여 재외동포청 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요구한 76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예산 현실화 필요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후 귀국하지 못한 동포들의 국내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12]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한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76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관련 연도별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사업비	9,104	8,162	8,122	7,656	7,656

※2025년 이전은 보건복지부 담당 예산임
(자료: 재외동포청)

주요 지원내용은 특별생계비(월 7만 5천원), 항공료(1인 45만원) 및 집기비품비(140만원), 임대주택 보증금(1인당 885만원), 안산시 부담금(5억

21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9,800만원), 대한적십자사 사무국 경비(3억 6,300만원),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및 경북 대창양로원 시설운영비(14억 3,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귀국자에 대한 항공편 제공, 초기 정착용 생활물품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사업 상세 지원내용 >

구 분	지원내용
특별생계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중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아파트 관리비 지원을 통해 정착 지원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영주귀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내에 입국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원을 통해 영주귀국 및 초기 정착 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규 영주귀국자 대상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안산시 부담금 지원	안산에 대규모 사할린한인 거주지를 조성하는 대신 국가가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의 안산시 부담금 지원
사무국 경비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의 사업비,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안정적 정착 지원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및 대창양로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중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입소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노후를 안정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 지원

(자료: 재외동포청)

그러나 동 사업은 장기간 동결된 지원단가로 인해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항공료, 임대보증금, 특별생계비 등 주요 지원 항목은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 구매력과 지원 수준이 크게 낮아진 상태임. 특히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지원하는 특별생계비의 경

우 2000년 이후 25년간 7만 5천원 수준에서 인상되지 않아, 물가 상승률과 고령층의 생활비 증가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임.

또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2024.7.17.)으로 영주귀국 지원대상이 기존 직계비속 1명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2024년 452명에서 2025년 722명으로 약 6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액으로 인해 실제 영주귀국 지원 인원은 270명에서 23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할린동포 사회의 영주귀국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연도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신청인원 및 선정인원>

연도	신청인원(명)	선정인원(명)	선정률(%)	비고
2021	1,079	350	32.4	재외동포청 개청 전
2022	685	350	51.1	
2023	506	270	53.3	개청 후
2024	452	270	59.7	
2025	722	234	32.4	

(자료: 재외동포청)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역사적 책임 이행과 인도적 차원의 국가 책무를 실현하는 상징적 사업으로서, 지원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재외동포청은 장기간 동결된 특별생계비·항공료·보증금 단가를 물가상승

률 및 실제 비용 수준에 맞게 보다 실질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할린 동포법 개정에 따른 영주귀국 희망자 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예산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 재외동포 행정지원

가. 프로그램 개요

「재외동포 행정지원」프로그램은 인건비, 기본경비 및 청 내 업무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6년 재외동포 행정지원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년 예·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본예산	추경	결산		
[7100]재외동포 행정지원			22,725	22,725	18,345	20,525	23,184
	[7101]인건비		12,721	12,721	8,451	10,214	10,898
		[101]인건비	12,721	12,721	8,451	10,214	10,898
	[7111]기본경비		5,683	5,683	5,122	5,856	6,329
		[201]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1,270	1,270	927	1,240	1,272
		[202]대변인실 기본경비(총액)	3	3	3	5	5
		[203]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18	18	12	18	17
		[204]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11	11	10	18	17
		[205]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총액)	13	13	12	21	20
		[206]교류협력국 기본경비(총액)	12	12	12	20	19
		[251]기관운영 기본경비	2,777	2,777	2,274	2,374	2,824
		[252]대변인실 기본경비	33	33	30	33	32
		[253]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188	188	149	188	173
		[254]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	1,264	1,264	1,608	1,752	1,747
		[255]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	47	47	43	140	147
		[256]교류협력국 기본경비	47	47	42	47	56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년 예·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본예산	추경	결산		
	[7121]재외동포청 업무지원		4,321	4,321	4,772	4,455	5,957
		[301]공보·홍보 역량강화	1,687	1,687	1,695	1,859	1,296
		[302]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300	300	790	696	60
		[303]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334	2,334	2,287	1,900	4,601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 중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구축 예산이 27억원 증액되었으며, 재외공관 직무파견 및 청사 임차료 소요 등이 반영되어 인건비 6.8억원, 기본경비 4.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나. 인건비

2026년도 재외동포청 인건비 예산은 재외공관 직무파견 소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억 8,400만원이 증액된 108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인건비	8,451	10,214	10,929	10,898	684	6.7

□ 재외공관 동포업무 전담체계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2026년도 인건비 예산안에는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청 소속 인력 3명을 직무파견하기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2억 7,500만원, 기본경비 5,000만원을 포함한 3억 2,500만원이 반영되었음.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재외공관에는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전무한 상황임.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에는 LA(총), 일본(대), 중국(대), 뉴욕(총), 시드니(총), 알마티(총), 호치민(총) 등 7개 주요 공관에 동포전담 인력(직무파견 형태)을 파견하여 현지 동포사회와의 정책 소통, 민원 대응, 교류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재외동포청이 출범 후 해당 인원이 순차적으로 철수하여 현재 재외공관에는 재외동포 전담 인력이 전무한 상황임.

< 재외동포재단 당시 직무파견 현황 >

공관명	주LA(총)	주일본(대)	주중국(대)	주뉴욕(총)	주알마티(총)	주시드니(총)	주호치민(총)
최초 파견일	'16.10월	'18.10월	'08.8월	'14.2월	'16.3월	'19.12월	'19.12월

이로 인해 동포사회에서는 정부와의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재외동포청 또한 정책 고객인 동포사회와의 직접 접점을 상실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동포 관련 업무를 타 업무와 병행하게 되면서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외동포 분야 전담 주재관 직위 신설 또는 비별도정원에 의한 직무파견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음. 현재 주재관 신설 요청은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인사혁신처 및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LA총영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등 주요 거점 공관에 재외동포청 소속 인력을 정원 내 직무파견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임.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내 동포업무 전담체계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직무파견을 신속히 시행하여 현장 소통 기반을 복원하는 한편, 현행 직무파견 형식이 한시적 성격의 임시조치에 불과하여 장기적·안정적인 동포정책 수행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

후에는 재외공관 내 재외동포 전담인력 제도를 정식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안정적 반영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동 사업은 재외동포청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공격에 예방·대응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27억 100만원이 증액된 46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287**	**1,900**	**5,220**	**4,601**	**2,701**	**142.2**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53	1,803	1,803	1,803	-	-
- 행정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	97	97	97	-	-
- 동포청 관제센터 구축	-	-	3,120	2,701	2,701	순증
- 정보보안 체계 강화	-	-	-	-	-	-
- 업무포털 기능개선	446	-	-	-	-	-
-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650	-	-	-	-	-
- 동포청-재외공관 간 문서유통 개선	638	-	-	-	-	-

□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동 사업은 재외동포청의 보안관제센터를 신설하여 법령[213]을 준수하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동포청 본청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 산하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을 포괄하는 통합 보안관제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으로 27억 1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동포청 관제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동포청 관제센터 구축	-	-	3,120	2,701	2,701	순증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안전센터 인프라 구축비로 자산취득비 14억 3,600만원과 공사비 4억 7,600만원 등 총 27억 1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보안관제 용역비 7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세종시에 위치한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입주를 전제로, 재외동포청의 자체 보안관제시스템 구축과 보안장비 구매, 상시관제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사이버 보안관제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예산으로 파악됨.

---

213)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통합보안관제)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 동포청 관제센터 구축 사업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비목	금액
사이버안전센터 공사 및 보안장비 구매	자산취득비	1,436 (1회성)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476 (1회성)
보안관제 외부용역	일반용역비	789 (연간)
합 계		2,701

(자료: 재외동포청)

현재 재외동포청은 독립적인 보안관제시스템이 부재함에 따라 본청은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일부 의존하고,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민간용역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분산된 체계는 침해사고 대응 및 보안위협 식별 과정에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해외 접속 비중이 높은 재외공관 관련 시스템의 특성상 사이버공격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통합적 보안관제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재외동포 관련 운영시스템별 보안관제 현황 >

소관	운영시스템	보안관제
재외동포청	코리안넷, 한상넷, 스터디코리안	재외동포협력센터 (산하기관 재 위탁)
	영사민원시스템(G4K)	미 관제 (2024년까지 외교부 담당)
	업무포털, 홈페이지,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e-아포스티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외동포협력센터	대표 홈페이지	보안관제 업체 원격관제 수행
	재외동포 자료실	
	사업지원시스템	
	단체관리시스템	

(자료: 재외동포청)

정부는 이러한 중소규모 기관의 보안관제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인력·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청도 해당 센터에 입주하여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보안관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차단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입주 및 관제센터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역할 조정과 네트워크 연계방식·인력운영계획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함.

재외동포청은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입주를 통한 예산 효율성과 보안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 및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의 단계별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실질적 사이버안전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Ⅳ. 소수의견의 요지

1. 외교부 소관

○ 없음.

2. 통일부 소관

○ 없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없음.

4. 재외동포청 소관

○ 없음.

Ⅴ. 부대의견

1. 외교부

○ 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본부 인건비 사업의 최근 3개년 결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불용액 및 예산현액 대비 낮은 집행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운용 계획·직제변경·발령 일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외교부는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내 한시조직인‘국제인공지능외교과’의 기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과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AI 규범·기술경쟁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국제사회 내 AI 외교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

2. 통일부

○ 통일부는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통일부는 제2하나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통일부는 통일정책추진 사업과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수행 시 통일부 본연의 임무인 통일 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경상비 증액분은 본래 용도에 부합하도록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에만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등 내부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하며 통일부가 이를 관리·감독한다.

○ 현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관리·감독 등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통일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업무를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통일부는 「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일반 통일교육 자료 개발」, 「영상 통일교육 자료 개발」, 「북한실상 알리기 콘텐츠 제작」 중 「북한실상 알리기 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을 「일반 통일교육 자료 개발」, 「영상 통일교육 자료 개발」 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한다.

※ 별 첨

2026년도 예산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안 등 예비심사결과

Ⅰ.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명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일반회계	-	-	-
	통일부	일반회계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회계	-	-	-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	-	-
	합 계		-	-	-

2.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일반회계	208,705	△27	208,678
	통일부	일반회계	19,648	△11,183	8,46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회계	1,358	-	1,358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22,530	-	22,530
	합 계		252,241	△11,210	241,031

3.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1) 수입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제교류기금	-	-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	-	-
	합 계		-	-	-

(2) 지출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제교류기금	3,264	-	3,264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2,991	-	2,991
	합 계		6,255		6,255

Ⅱ.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가. 외교부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1131-401)	988	988	919	973	54	○ 내역사업인 '북핵문제 관련 협의' (4억 2,2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5,400만원 감액)는 한미간 대북 관여 의지 강화에 따라 주요국 간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바, 전년 수준의 확보를 위해 5,400만원 증액	
2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1132-402)	834	834	792	1,219	427	○ 내역사업인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5억 7,3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3,000만원 감액)은 제주포럼 참가비 현실화, 참가기관의 행사운영비 부담 상향조정, 후원기관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사무국의 자체수입 추가 확충을 추진하기 위해 4억 2,700만원 증액	
3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332-401)	1,508	1,508	1,430	1,573	△7	○ 내역사업인 '남동유럽·흑해경제권과의 실질협력 강화' (4,600만원, 전년동) 내 내내역사업인 '남동유럽·흑해연안국 인사교류' (700만원, 전년동)는 최근 5년간 집행 실적이 전무하여 700만원 감액	
						150	○ 내역사업인 '한-러 상호이해증진' (3억 100만원, 전년동)에서 한-러 정부간 정례협의회 및 외교활동 강화와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000만원 증액	
4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5,133	5,133	7,500	7,924	424	○ 내역사업인 '동맹기반 강화' (35억 8,9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2억 900만원 증액)는 한미 조선협력 등 주요 현안 특화 자문회사 및 정책홍보 자문회사 추가 고용을 위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특별협력관계 강화 (1133-401)						해 4억 2,400만원 증액	
5	아시아 · 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135-401)	3,420	4,420	2,847	3,054	180	○ 내역사업인 ‘서남아태평양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2억 9,2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3,000만원 감액)는 서남아태평양 24개국과의 고위급 협의 및 정례협의체 개최 소요가 확대되고 있어 출장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1억 8,000만원 증액	
						27	○ 내역사업인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3,000만원, 전년 동)는 인도 주정부 유력인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초청 횟수 2회 추가를 위해 2,700만원 증액	
6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331-401)	2,908	2,908	2,525	3,125	300	○ 내역사업인 ‘한-해양동남아 협력’(3억 7,6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4,500만원 감액) 에서 한-인도네시아 간 실질 협력 확대 · 심화와 공관 주도 동남아 지역 지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3억원 증액	
						100	○ 내역사업인 ‘한-대륙동남아 협력’(5억 3,2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6,100만원 증액)에서 베트남의 중요성 및 한-베트남 간 주요 인사 교류 및 협의 소요가 상당할 것인바, 1억원 증액	
						200	○ 내역사업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8억 9,7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7,100만원 감액) ’ 내 국내 기술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아세안과 공학인력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카이스트 아세안공학기술원 설립 연구용역비 2억원 증액	
7	대러 전략외교 강화 (1332-402)	264	264	319	384	65	○ 내역사업인 '대러 전략외교 기반 강화' (2억 7,7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5,500만원 증액)관련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을 감안하여 6,500만원 증액	
8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431-401)	3,337	3,337	3,579	3,858	△20	○ 내역사업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운영' (3억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1,400만원 증액)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을 일반용역비(1억원)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행사 규모 및 전문성이 외부 전문업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한바, 2,000만원 감액	
						299	○ 내역사업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운영' (3억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1,400만원 증액)은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 향후 한-중남미재단 설립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직 및 사업 확대(연구원 2인 추가 고용 등)를 위해 2억 9,900만원 증액	
9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432-401)	3,515	3,515	6,727	7,637	910	○ 내역사업 '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의 내내역사업인 '중동지역 외교지평 확대 사업' (10억 9,0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9,000만원 증액)은 한-아랍소사이어티(KAS)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중동 간 우리 기업 진출 및 문화교류를 위해 9억 1,000만원 증액	
10	한 · 아프리카	4,649	4,649	4,420	6,420	200	○ 인건비(17억 2,1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3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재단 출연 (1432-402)						는 조직운영의 필수업무 인원 부족 및 정원에 따른 인원 충원을 위해 2억원 증액	
						100	○ 경상운영비(5억 8,200만원, 전년동)는 채용 관련 예산 및 신규 직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1억원 증액	
						700	○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협의체 운영) - 아프리카 주요 경제포럼 참석 및 개최, 양측 고위급 경제인사 간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7억원 증액	
						1,000	○ (지역연구 활성화 지원) - 국내에 부족한 아프리카 연구 기반 활성화, 연구자 현지 직무파견 및 전문가 초청을 통해 재단의 연구 전문성 제고를 위해 10억원 증액	
11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2131-404)	383,253	383,253	207,156	265,012	12,196	○ 'NATO 신탁기금' (231억 3,2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99억 8,800만원 감액)은 NATO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121억 9,600만원 증액	
						4,902	○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지원' (152억 9,8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26억 8,200만원 감액)은 GGGI 기구 및 사업 규모 확대, 인건비 등 운영비 소요 증가, 환율 상승 및 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관련 예산 49억 200만원 증액	
						1,630	○ '한-카리브공동체(CARICOM) 협력기금' (17억 6,100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전년 본예산 대비 19억 2,000만원 감액)은 카리브 지역 대상 우리 정부의 유일한 다자 기금으로, 대카리브 외교의 필수적 협력 기금인바 16억 3,000만원 증액	
						18	○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5,1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200만원 감액)는 2011년부터 매년 5만불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온바, 동 수준을 지속하기 위하여 1,800만원 증액	
						4,830	○ ‘유엔개발계획 정규재원 기여금’(103억 5,0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22억 7,600만원 감액)은 UNDP 내 우리 영향력 유지를 통한 우리 국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48억 3,000만원 증액	
						180	○ ‘유엔난민기구(UNHCR)’(122억 4,0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09억 900만원 감액) 분담금은 우리 정부의 5대 UN 중점협력기구이자 UNHCR 내 우리 국민 고위직 진출 등 기반 확대를 위하여 1억 8,000만원 증액	
						2,600	○ ‘세계식량계획(WFP)’(106억 9,5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41억 9,000만원 감액) 분담금은 예산 감액으로 식량 위기 심화 속 한국의 리더십 약화 우려가 있으므로 26억원 증액	
						500	○ ‘유엔인권사무소(OHCHR)’(32억 2,6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26억 2,400만원 감액) 분담금은 한국의 인권이사회 활동 및 한국인 인권 전문가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하여 5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30,000	○ ‘글로벌 보건기여’(552억원, 전년 본예산 대비 70억 4,900만원 증액) 예산은 Global Fund, GAVI 등 글로벌 보건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의 K-보건외교 및 국제 보건안보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내 한국인 진출 기반 확충에도 중요하므로 300억원 증액	
						1,000	○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21억 7,4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30억 3,000만원 감액) 분담금은 중동지역 정세 안정, 아랍권 외교 기반 확대, 국제사회 인도주의 리더십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하므로 10억원 증액	
12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 (ODA) (2131-405)	-	-	73,569	76,569	3,000	○ ‘한-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협정(AfCFTA) 협력기금’(41억 9,0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23억 1,000만원 감액)은 2026년에 총액 510만불 규모가 예상되는 5개 사업을 추진 예정인바, 30억원 증액 * 2025년에는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에 편성	
13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751	3,751	1,635	2,372	737	○ 내역사업인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사무국 지원’(5억 3,200만원, 전년동)은 2026년 제13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해 7억 3,7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231-403)							
14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331-401)	3,005	3,005	3,005	3,475	470	○ 내역사업인 '신기술 규범 논의 대응 강화'(신규)는 AI 등 새롭게 생성된 신기술 안보 관련 국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군사 분야 AI, 우주안보, 드론, 바이오 등 신기술 안보 규범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위해 4억 7,000만원 증액	
15	우즈베키스탄 (ODA) (2434-401)	22,020	22,020	20,528	31,903	2,851	○ '우즈베키스탄 질병부담 경감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사업'(32억원, 전년 대비 3억 4,400만원 증액)은 2024년 착수 이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실험실 기자재 조달 등 후속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8억 5,100만원 증액	
						901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소아의과대학교 교육 연구 역량 강화사업'(10억원, 전년 대비 4억 2,000만원 증액)은 당초 계획 대비 2025년 예산 제약으로 예정된 과업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9억 100만원 증액	
						7,623	○ '우즈베키스탄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상·하원 국회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회와의 연계기반 개선사업'(33억 800만원, 전년 대비 14억 9,400만원 증액)은 2026년 9월 현지 국회 개정 시기에 맞춘 신규 국회 방송 시스템 활용을 위해 기자재 구축 및 시스템 개발 등에 76억 2,300만원 증액	
16	키르기스스탄	12,653	12,653	11,636	12,669	1,033	○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9억 6,700만원, 전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ODA) (2434-403)						년 대비 12억 3,300만원 감액)은 2026년 1월부터 지문 인식을 통한 본회의장 디지털 투표가 현지에서 의무화 될 예정인바, 동 사업의 본회의장 시스템 구축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억 3,300만원 증액	
17	협력사업 지원 (ODA) (2436-401)	61,390	61,390	91,576	95,980	783	○ '사업조사관리비(舊 사업효과성제고비)' (337억 9,900만원, 전년 추경예산 대비 7억 8,300만원 감액)는 ODA 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 6개 세부사업에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던 사업조사관리비가 동 사업에 통합 편성되는 과정에서 7억 8,300만원이 감액된바,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7억 8,300만원 증액	
18	ODA 선진화 (ODA) (2438-401)	1,271	1,271	1,066	3,941	2,875	○ 재외공관 중심 ODA 모니터링 강화 추세에 따라, 주요 ODA 수원국 내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개발협력전문관(나급)' 파견을 통해 현지 ODA 사업 모니터링, ODA 사업 발굴/연계 지원, 현지 ODA 정책 분석 등을 추진하고자 28억 7,500만원 증액	
19	인도적지원 (ODA) (2438-402)	677,503	677,503	331,503	401,503	70,000	○ 내역사업인 '해외긴급구호' (3,253억 1,6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3,447억원 감액)는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 예방 및 대응을 통하여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에 동참하기 위하여 700억원 증액	
20	민관협력사업 (ODA) (2438-403)	65,000	65,000	49,518	62,540	200	○ 개발도상국 현지 시민사회단체(CSO)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년 1억원에서 전액 감액된바, 전액 삭감 시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2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2,822	○ NGO, 대학 등 시민사회에 대한 공모를 통해 ODA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소수민족,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전년도 수준 예산 편성을 위하여 128억 2,200만원 증액	
21	공공외교 역량강화 (2631-403)	15,754	15,754	18,857	19,857	1,000	○ 내역사업인 '국민 공공외교'의 내내역사업 '한·중 우호 카라반' 사업을 신설하여 중국 내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탐방하고 한·중 청년간 교류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10억원 증액	
22	재외국민 보호 (2731-401)	13,959	13,959	13,920	16,737	1,457	○ 내역사업인 '재외공관 영사조력 제공 역량강화'(44억 7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9,100만원 증액) 관련 공관 비상주 지역이나 원격지에 재외국민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영사협력원 30명 증원 및 월 평균 활동비(300달러→700달러) 인상 필요에 따라 14억 5,700만원 증액	
						587	○ 내역사업인 '재외공관 영사조력 제공역량 강화'(44억 7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9,100만원 증액)내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기술 TF 운영비용 등 마련을 위해 5억 8,700만원 증액	
						118	○ 내역사업인 '재외공관 영사조력 제공역량 강화'(44억 7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9,100만원 증액)내 해외 안전 담당인력 지원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고위험군 국내진료지원, 상담사 추가 추입에 필요한 예산 1억 1,8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6,737	300	○ 내역사업인 ‘재외공관 영사조력 제공역량 강화’(44억 7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9,100만원 증액)내 무자력자 긴급지원예산 적정수준 예산 확보를 위해 3억원 증액	
						345	○ 내역사업인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 운영’(56억 5,1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2,900만원 감액)관련 STT(Speech to Text)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신고 접수 및 전파 기능 강화를 위해 3억 4,500만원 증액	
						10	○ 내역사업인 ‘영사조력 및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13억 7,0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4,700만원 감액)내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의 상금을 포상금 관련 집행지침에 따르기 위해 포상금 항목으로 별도 편성하기 위해 1,000만원 증액	
23	영사서비스 지원 (2731-402)	720	720	870	1,046	176	○ 내역사업인 ‘양·다자 영사외교 강화’(7,300만원, 전년 동) 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TF 관련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1억 7,600만원 증액	
24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수입대체경비) (2931-651)	123,893	123,893	139,077	139,450	373	○ 내역사업인 ‘국내외여권민원실 운영’(76억 6,6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5,400만원 증액)은 대국민 여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업임 ○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설을 위해 3억 7,3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5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3031-401)	1,557	1,557	1,147	1,217	70	○ 내역사업인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2억 4,2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6,200만원 감액)은 2025년 의장국 수임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수행하는 사업임 ○ 정상급 별도 성과문서에 우리 주도 'APEC 인구정책포럼' 개최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당초 실무 차원 회의였던 것을 확대 개최하기 위하여 7,000만원 증액	
26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3031-402)	870	870	1,507	1,757	250	○ 2028년에 우리나라에서 G20을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	
27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3032-401)	6,549	6,459	6,982	8,012	1,030	○ 내역사업인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 (19억 8,500만원)은 경제안보외교센터 관련 사업 예산으로, 전문연구원 공무직 3명 증원(1억 9,700만원),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3명 증원(2억 3,000만원), 유사입장국 협의체 운영 강화(6억 300만원) 등 총 10억 3,000만원 증액	
28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3032-402)	2,760	2,760	3,236	4,209	473	○ 내역사업인 '미국 경제동향 대응' (14억 2,7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7,600만원 증액)은 미국 경제 동향 파악 및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을 위하여 미국 자문회사를 고용하는 사업임 ○ 2개社에 각 7억원 상당의 자문료를 집행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조선협력 관련 아웃리치 등 과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1개社 당 9억 5,000만원으로 자문료를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집행하기 위하여 4억 7,300만원 증액	
						500	○ ‘한-미 비자 워킹그룹 협력’ 등 미국 진출 우리 국민의 비자 문제 해결을 포함한 애로 사항 해소 지원을 위하여 ‘미국 진출 기업지원’ 내역사업 신설 예산 5억원 증액	
29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3131-401)	2,698	2,698	2,721	8,391	2,000	○ 내역사업인 ‘기후변화 외교강화’(9억 2,200만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00만원 증액) 중, 신규 내내역사업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개도국 협력형 One-Stop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20억원 증액	
						2,000	○ 내역사업인 ‘과학기술 외교강화’(13억 700만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원 감액) 중, 내내역사업인 ‘과학기술 거점공관 과학기술외교 사업’ 예산(4억 8,900만원)에 과기외교·AI전문관 채용을 위해 20억원 증액	
						300	○ 내역사업인 ‘과학기술 외교강화’ 중, 신규 내내역사업인 ‘신흥·첨단기술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3억원 증액	
						820	○ 내역사업인 ‘과학기술 외교강화’ 중, 신규 내내역사업인 ‘글로벌 AI 외교 플랫폼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8억 2천만원 증액	
						150	○ 내역사업인 ‘과학기술 외교강화’ 중, 신규 내내역사업인 ‘AI 외교정책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위해 1억 5,000만원 증액	
						200	○ 내역사업인 ‘과학기술 외교강화’ 중, 내내역사업 ‘과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학기술외교 전략·정책 연구용역 및 자문' 에 2억원 증액	
						200	○ 내역사업인 '북극 국제협력 강화' (1억 1400만원,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은 북극항로 등 북극권 진출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므로 북극 관련 다자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위해 2억원 증액	
30	재외공관 인건비 (4001-101)	299,243	299,243	309,353	312,287	2,934	○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의 해외 안전 담당 영사(3, 4등급) 영사 16명과 경찰직 주재관 6명 등 총 22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인건비 29억 3,400만원 증액 필요	
3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4011-251)	148,954	148,954	150,454	152,144	1,690	○ 재외공관 해외 안전 담당 영사 인력 증원*에 따라 직원 주택 임차료 14억 5,6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공관을 위한 운영경비 2억 3,400만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총 16억 9,000만원 증액 필요 * 재외공관 인건비(4001-101) 사업	
32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4012-251)	18,042	18,042	18,842	19,193	351	○ 재외공관 해외 안전 담당 영사 인력 증원*에 따라 재외공관 직원 부임 시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을 증액하고, 차량보험료 및 실손보험료를 지원하며, 전지휴양 및 의료검진 비용을 증액하기 위하여 3억 5,100만원 증액 * 재외공관 인건비(4001-101) 사업	
33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224,367	224,367	234,582	238,030	3,448	○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건사고 지원 행정직원 50명* 증원(31억 5,700만원) 및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4021-401)						사건사고 지원 행정직원을 위한 수당을 신설**하기 위하여 34억 4,800만원 증액 * 2025. 11. 현재 사건사고 지원 행정직원은 215명 수준 ** (재외공관 사건사고 특수직무 수당) 현장 출장 등 업무 조치 건수에 따라 1회당 5불씩 최대 월 70불 지급	
34	재외공관 안전강화 (4031-402)	25,082	25,082	25,261	27,287	2,026	○ 내역사업인 '대테러 보안시설' (43억 3,000만원, 전년 대비 1억 7,900만원 증액)은 재외공관의 보안시설 유지, 구입 및 방탄차량 구입을 위한 것으로, 국가간 분쟁 및 주재국 내전 및 치안 불안이 있는 공관에 대하여 방탄차량 10대 추가 구입 및 교체를 위하여 20억 2,600만원 증액	
35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27,266	27,266	27,339	27,865	526	○ 내역사업인 '기관운영 기본경비' (273억 3,900만원)는 외교부 본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지원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부임 직원 교체여비 및 생필품 파우치 지원을 위해 5억 2,600만원 증액	
36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7031-502)	9,916	9,916	11,644	13,288	1,419	○ 내역사업인 '재외공관 비상위성통신 장비교체' (1,5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1,300만원 감액)는 재외공관 비상위성통신 장비 제조사의 서비스 종료 및 심각한 노후화 등으로 위성서비스 접속이 불가함에 따라 조속한 교체를 위해 14억 1,900만원 증액	
						225	○ 내역사업인 '대도청보안시스템 확대·구축 및 운영'(8억 1,8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7,800만원 감액)은 핵심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공관 주요 사무실에 도청탐지장비 15대 추가 구축을 위해 2억 2,500만원 증액	
37	외교 정보화 (7031)	47,020	47,020	49,283	61,283	12,000	○ ‘외교정보자원 관리 및 안전 강화’는 화재 등 재해·재난 상황 발생 시 주요 외교정보시스템에 대해 신속한 복구 및 본부-재외공관 간 외교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120억원 증액(신규)	
38	외교정보화 (7031)	47,020	47,020	49,283	51,183	1,900	○ ‘외교정보 DB 2단계 확장’은 외교부 원천 데이터(부내정보, 재외공관 수집정보, 공개정보 등) 통합 및 목적지향적 분류를 진행하고, 유관 법령상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타 부처와의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19억원 증액(신규)	
39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7033-403)	1,617	1,617	1,957	5,497	3,400	○ 내역사업인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4억 8,5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1,800만원 증액)의 내내역사업인 ‘국제청년포럼(IFWY) 개최(신규)’는 글로벌 의제 설정을 위한 국제청년포럼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사업임 ○ 청년주도 글로벌 정책플랫폼 운영 및 거버넌스 구축 등 K-이니셔티브 비전 실현 위한 국제청년포럼(IFWY) 개최를 위한 비용 34억원 증액	
						140	○ 내역사업인 ’외교역량 강화 정책연구’(1,000만원, 전년동)는 중장기 외교 역량 강화 목적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외교 인력 확충을 위한 조직진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1억 4,000만원 증액	

3.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해당사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한국학 기반확대 (2632-401)	14,773	15,187	13,505	14,505	1,000	○ 내역사업인 '한국학강좌운영'(113억 1,400만원, 전년 대비 15억 4,900만원 감액)의 내내역사업 'KF글로벌 e-스쿨 사업' 고도화 필요성에 따라 10억원 증액	
2	글로벌 인적교류 (2633-401)	2,200	2,567	2,090	4,104	1,164	○ 내역사업인 'KF글로벌챌린저'(5억 7,600만원, 전년 대비 6,700만원 감액)는 우리 청년들의 국제사회 참여·기여 확대 필요성에 따라 11억 6,400만원 증액	
						850	○ 내역사업인 '차세대지도자교류'(6억 2,400만원, 전년 대비 1억 6,700만원 감액)는 각 국가별 권역별로 향후 지도층으로 성장할 차세대 인사 및 청년들을 방한 초청 파견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양국 차세대 지도자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 최근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복원되는 등 교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예산은 동결된바, 미래지향적 한·중관계를 위해 8억 5,000만원 증액	
3	글로벌 협력강화 (2633-404)	4,454	3,385	3,933	4,183	250	○ 내역사업인 ‘지역전략사업’(14억 4,400만원, 전년 대비 7억 500만원 감액)의 내내역사업 ‘美 교사 교육자료 개발 및 연수’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따라 2억 5,000만원 증액	

4.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또는 기금명	목명 또는 세부사업명 (00-000/0000-000)	2025		2026(안)	수정내용	수정이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	일반회계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431-401)	3,337	3,337	3,579	비목변경	○ 내역사업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운영'(3억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1,400만원 증액)은 일반용역비로 증액 편성한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을 적절한 비목으로 재편성하여 직접 수행

나. 통일부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본예산	추경				
1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2135-303)	964	964	875	705	△170	○ 내역사업인 **'조사결과 활용'**(2억 1,400만원, 전년 동)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발간하다가 2023년과 2024년 「북한인권보고서」로 발간하였으나, 정부안 편성 이후 공개 발간을 하지 않기로 결정된 바, 해당 사업비 1억 7,000만원) 감액
2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31-304)	2,490	2,490	2,410	2,360	△50	○ 내역사업인 **'통일교육 원내과정'**(13억 4,6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9,000만원 증액)의 내내역사업인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2억 6,7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은 교육단가가 최근 3년간 실시한 단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고, 재교육 대상의 숫자도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액 예산 5,000만원 감액
3	통일교육 자료개발 (5031-310)	2,288	2,288	2,436	2,424	△12	○ 동 사업(24억 3,6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4,800만원 증액)은 교육 수단으로 뉴미디어, 메타버스 등 다양한 채널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 만큼, 메타버스 콘텐츠 홍보 비용인 1,200만원 감액
4	총액인건비 대상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7011-207)	76	76	84	-	△84	○ 동 사업은 인권인도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권인도실이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 등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8,4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본예산	추경				
5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10)	95	95	102	-	△102	○ 동 사업은 통일협력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일협력국이 폐지되고 통일정책실 등으로 업무가 이관된 점을 고려하여 1억 200만원 감액
6	총액인건비 비대상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7011-257)	350	350	372	-	△372	○ 동 사업은 인권인도실 사업추진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권인도실이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 등으로 업무가 이관된 점을 고려하여 3억 7,200만원 감액
7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60)	286	286	288	-	△288	○ 동 사업은 통일협력국 사업추진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일협력국이 폐지되고 통일정책실 등으로 업무가 이관된 점을 고려하여 2억 8,800만원 감액
8	총액인건비 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 (7018-216)	480	480	516	-	△516	○ 동 사업은 남북관계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인해 남북관계관리단이 폐지되고 남북회담본부 등으로 업무가 이관된 점을 고려하여 5억 1,600만원 감액
9	총액인건비 비대상	2,345	2,345	2,365	-	△2,365	○ 동 사업은 남북관계관리단 사업추진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본예산	추경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 (7018-266)						○ 조직개편으로 인해 남북관계관리단이 폐지되고 남북회담본부 등으로 업무가 이관된 점을 고려하여 23억 6,500만원 감액
10	**국내통일기반 조성 (1031-301)**	8,741	8,741	11,078	13,175	△403	○ 내역사업인 **'국민 평화통일문화 체험'**(14억 300만원, 신규)은 지역 주민들 속으로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두 국가론'을 지향하는 통일부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므로 관련 사업비 4억 300만원 감액
						2,000	○ **'2026 통일 라이프 스타일 축제'** 사업은 통일 미래주역인 MZ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체험·참여 기반의 통일문화콘텐츠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체험 프로그램·콘텐츠 제작 등 핵심기반 조성을 위해 20억원 증액**(신규 내역사업으로 신설 의견)**
						△500	○ 내역사업인 **'사회적 대화 활성화'**(25억원, 신규)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의 사업으로,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통일국민협약의 2탄이라 할 수 있고, 당시 통일국민협약은 대표성 없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바, 이를 확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은 5억 감액
						1,000	○ 내역사업인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10억 1,0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5억원 증액)은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좀더 친숙하게 통일 논의에 참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본예산	추경				
							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한 보조(10억 1,000만원) 외에 민간통일단체 중 보수와 진보를 전국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민족통일협의회 및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지정’ 보조할 수 있도록 10억원 증액
11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12,442	12,182	8,554	1,330	△8,176	○ 내역사업인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81억 7,6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25억 600만원 감액)은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로서의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북한인권센터는 현 정부의 한반도평화공존 정책기조에 부합하지 않고, 정부가 신규 추진하는 ‘(가칭)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과도 모순되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81억 7,600만원(공사비 71억 5,100만원, 시설부대경비 10억 2,500만원) 전액 감액
						952	○ 내역사업인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3억 2,400만원, 전년 추경 대비 10억 5,300만원 감액)은 국제사회·민간·정부간 역할 분담 및 소통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9억 5,200만원 증액 ※북한인권 민관협력 강화 9,000만원 + 북한인권 국제회의 7억 9,300만원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6,900만원
12	국제통일기반 조성 (1031-302)	3,077	3,077	2,860	3,660	800	○ 내역사업인 **‘해외 북한·통일학분야 학술교류 지원’**(5,000만원)은 한반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한파 신진학자 육성을 위해 2020년부터 ①학위과정 지원 ②펠로우십 ③연구지원으로 추진되었으나, 2024년 폐지 결정에 따라 ②·③사업이 이미 중단되었고 ①사업도 2026년에 종료되는 바, 국제사회의 협력 확보, 지한파 인재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본예산	추경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8억원 증액 ※①학위과정 지원 1억 3,900만원(8,900만원 증액) + ②펠로우십 2억 5,600만원(신규) + ③연구지원 4억 5,500만원(신규)
13	납북피해자 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133-306)	601	601	732	1,233	501	○ 내역사업인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1,9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000만원 감액)은 표류 등으로 월선한 북한주민(사체 포함)을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예산은 북한주민 사체 처리를 위한 최소 예산 편성이며, 2025년 사례(2건, 6명)와 같이 남북간 연락채널 중단 등에 따른 북한주민의 장기체류 시 이에 필요한 시설 마련, 보호 및 생활지원을 위한 예산이 요구되므로, 5억 100만원 증액 ※보호시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2억 5,400만원 + CCTV공사비 500만원 + 시설관리 인건비 3,400만원 + 보호인원 급식 및 생활물품 2,500만원 + 특수경비 관리용역 1억 2,000만원 + 보호근무자 지원비(여비 등) 6,300만원
14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16,945	16,945	16,993	19,293	920	○ 내역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2억 1,4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및 기획·조정을 하는 사업으로, 고령탈북민의 위기가구전환 및 사회적 고립 가능성 방지를 위한 '탈북민 고령자 쉼터'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9억 2,000만원 증액
						1,000	○ 내역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3억원)은 북한이탈주민과 사회통합을 위한 기념행사 개최 등을 위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 및 통일준비에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본예산	추경				
							기여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10억원 증액
						380	○ 내역사업인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30억 2,7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이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여 남북주민간 소통·통합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 대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센터 홍보 및 센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8,000만원 증액
15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2331-302)	35,086	35,086	36,625	37,394	137	○ 내역사업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366억 2,5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 수행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예산으로, 재단은 임대차 재계약으로 인해 임차료 및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바, 정착지원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기관 운영을 위해 경상비(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의 적정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1억 3,700만원 증액
						332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출연금 사업 **'지역사회 정착지원'**(16억 3,700만원)은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지역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지역적응센터 4개소가 추가 지정되었으나 운영비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추가 지정된 4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 3,200만원 증액
						200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출연금 사업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42억 7,400만원)은 의료지원, 생계안정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본예산	추경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임. ○ 이 중 '의료지원'(18억 4,300만원)은 고령자 및 만성·중증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의료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연례적 예산 부족이 반복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2억원 증액
						100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출연금 사업 **'자립·자활 지원'**(47억 9,7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 정보검색 및 인터넷, PC 등 디지털 활용과 기초 회계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 및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 및 전산회계 기초교육' 등의 교육 신설이 필요하므로 1억원 증액
16	**남북경제협력 지구 운영·관리 (3032-303)**	563	563	386	536	150	○ 내역사업인 **'평화경제특구 운영·지원'**(2억원)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운영함으로써 남북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보완성 증대 및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2026년부터 각 시·도의 개발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바, 권역별 평화경제특구 사업 모델 연구·공유를 통해 각 시·도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증액
17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199	199	159	3,359	3,200	○ 남북교류 및 한반도 평화공존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0원, 신규)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신설함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본예산	추경				
	지원 (3036-312)						○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1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비, 용역비, 설계비 등 총 32억 증액 - 계약비 24억 - 용역비 2억 - 설계비: 6억
18	접경지역 평화 기반 구축 (신규)	-	-	-	250	250	○ 현 정부의 국정과제(접경지역 평화 및 주민 안전 지원, 114-3)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 미반영되어 충실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 - 접경지역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3,000만원 - 접경지역 평화 워크숍: 1억원 - 전문가 자문단 운영: 2,000만원 - 중장기 계획수립 등 정책개발: 6,000만원 - 접경지역 주민-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4,000만원
19	학교 통일교육 강화 (5031-308)	5,191	5,191	4,913	5,756	540	○ 내내역사업인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북한학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감액된 예산을 회복하고, 선도대학 확대(3개교)를 위해 5억 4,000만원 증액
						135	○ 내내역사업인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0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3,500만원 감액)은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사·홍보성 경비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폐지되었으나, 2024년에는 경연대회 일부 콘텐츠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학습자료로 활용되는 등 통일교육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진 필요 ○ 2014년 이후 추진된 대표적인 체험형 통일교육 형태의 경연대회로 미래세대 평화·통일 인식 확산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1억 3,5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본예산	추경				
						168	○ 내내역사업인 **'통일부 어린이·중학생 기자단 운영'**(0원,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400만원 감액)은 2012년부터 어린이들의 평화 통일인식을 높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음. ○ 동 사업은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행사·홍보성 경비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폐지되었으나, 기자단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학교와 학부모의 평화통일 인식 및 관심도까지 제고하는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확실한 사업으로, 2025년 14기 기자단까지 그 성과를 축적해 온 만큼 지속적 추진을 위해 1억 6,800만원 증액
20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5031-309)	3,644	3,644	3,957	4,290	333	○ 내역사업인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12억 9,1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3,200만원 감액)은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정상적인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과 통일 교육위원 위촉 및 지원에 대한 비용이 미반영되어 3억 3,300만원 증액 - 중앙통일교육센터 자체사업: 1억원 - 지역통일교육센터 간사 증원 6명: 2억 1,300만원 - 신규 통일교육위원 위촉: 2,000만원
21	사이버통일 교육센터 운영 (5031-507)	484	484	484	984	500	○ 동 사업(4억 8,400만원, 전년동)은 공공, 국민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통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려는 것임 ○ 국정과제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효과적 확산을 위해 2015년 개발 이후 10년간 노후화된 시스템을 모바일앱 중심으로 통합·개편하고자 5억원 증액 - 모바일앱 개선: 4억 1,600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본예산	추경				
							- 시스템 소프트웨어(3식) 구입: 1,800만원 - 서버(3식) 구입: 6,600만원
22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1,719	1,719	2,907	2,953	46	○ 통일부는 중앙(11개사) 및 경제(6개사) 일간지 라이선스를 보유하여 스크랩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언론대응 및 오보 대응을 위하여 MBC 등 방송뉴스까지 확대하여 스크랩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4,600만원 증액
23	총액인건비 비대상 한반도미래센터 기본경비 (7018-262)	71	71	71	171	100	○ 동 사업(7,100만원)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유치를 위해 기본구상 용역비 1억원 증액
24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7011-201)	76	76	79	117	38	○ 동 사업은 통일정책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무직 소속 변경을 고려하여 3,800만원 증액
25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7011-251)	411	411	413	503	90	○ 동 사업은 통일정책실 사업추진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일협력국의 업무를 이관받은 점을 고려하여 9,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본예산	추경				
26	총액인건비 대상 평화교류실 기본경비 (신규)	-	-	-	129	129	○ 동 사업은 평화교류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존 공무직 소속 변경 등을 고려하여 1억 2,900만원 증액
27	총액인건비 비대상 평화교류실 기본경비 (신규)	-	-	-	294	294	○ 동 사업은 평화교류실 사업추진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평화교류실(1실 1관 6과)이 신설됨에 따라 2억 9,400만원 증액
28	총액인건비 대상 사회문화협력 국 기본경비 (신규)	-	-	-	83	83	○ 동 사업은 사회문화협력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무직 소속 변경을 고려하여 8,300만원 증액
29	총액인건비 비대상 사회문화협력 국 기본경비 (신규)	-	-	-	327	327	○ 동 사업은 사회문화협력국 사업추진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기존 인권인도실이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1국 5과 1팀)이 신설됨에 따라 3억 2,700만원 증액
30	총액인건비 대상 한반도평화	-	-	-	13	13	○ 동 사업은 한반도평화경청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본예산	추경				
	경청단 기본경비 (신규)						○ 조직개편으로 인해 한반도평화경청단(1국 1과 2팀)이 신설됨에 따라 1,300만원 증액
31	총액인건비 비대상 한반도 평화경청단 기본경비 (신규)	-	-	-	171	171	○ 동 사업은 한반도평화경청단 사업추진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인해 한반도평화경청단(1국 1과 2팀)이 신설됨에 따라 1억 7,100만원 증액
32	총액인건비 대상 평화협력지구 추진단 기본경비 (신규)	-	-	-	10	10	○ 동 사업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인해 평화협력지구추진단(1국 2과)이 신설됨에 따라 1,000만원 증액
33	총액인건비 비대상 평화협력지구 추진단 기본경비 (신규)	-		-	92	92	○ 동 사업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사업추진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인해 평화협력지구추진단(1국 2과)이 신설됨에 따라 9,200만원 증액
34	총액인건비 대상 남북회담본부	-		-	452	452	○ 동 사업은 남북회담본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남북관계관리단의 공무직 소속 변경 및 업무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본예산	추경				
	기본경비 (신규)						이관 등을 고려하여 4억 5,200만원 증액
35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회담본부 기본경비 (신규)	-		-	2,314	2,314	○ 동 사업은 남북회담본부 사업추진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을 위한 것임 ○ 조직개편으로 기존 남북관계관리단이 폐지되고 남북회담본부(1실 1국 5과)가 신설됨에 따라 23억 1,400만원 증액
36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7001-100)	44,763	44,763	46,254	50,000	3,746	○ 동 사업(462억 5,400만원)은 통일부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려는 것으로, 통일부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025.11.4. 시행)를 개정하여 정원을 600명으로 조정하였음. ○ 그러나 2026년도 통일부 인건비는 조직개편 이전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37억 4,600만원 증액 - 정원 600명 현원 561명으로, 충원 예정 인원 39명 ※ 1인당 평균 인건비 96,056,953원 * 39명 = 3,746,221,167원

3.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해당사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당초	수정				
1	이산가족 교류지원 (2140-403)	13,408	13,408	13,408	13,608	200	○ 동 사업은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산가족 교류대비 사업 및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내역사업인 **'이산가족교류 활성화 기반 조성'**(12억 9,300만원, 전년 대비 2억원 증액) 중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사업에 2억원 편성 ○ 이산가족 1세대의 자연수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고려하여 생애기록물 수집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록물 수집 목표 건수를 2,500건에서 5,000건(2,500건 추가)으로 확대하기 위해 2억원 증액 ※[생애기록물 수집(6만원)+디지털화(2만원)] × 2,500건 = 2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당초	수정				
2	경협기반 (무상) (3040-401)	102,649	51,324	221,107	221,758	651	○ 내역사업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2억 200만원, 전년동)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업무인 당국 간 연락·협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임 - 2020년 6월 북측에 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업무는 불가능한 상태임. 2024년 관련 예산 3억 1,100만원 전액 불용되었고 2025년 예산 2억 200만원도 불용 예정임. 2026년에도 불용이 예상되므로, 남북간 합의 이행 차원에서 반영된 사무소 기본 운영 및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2억 200만원 전액 감액 ○ 내역사업인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40억 6,800만원, 전년 대비 8,500만원 증액)은 남북교역·경협에 대한 정부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 기존 예산은 전년 대비 위탁기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처우개선비 반영 외 동일한 금액이나, 남북교류협력의 민간생태계 보호와 평화경제특구의 원활한 조성, 위탁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공공기관)의 전산 보안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8억 5,300만원 증액 - '평화경제특구지원센터' 운영(2억 5,100만원) - 개성 및 경협기업 경영 안정화지원(3억원) - 사무실 임대료 등 인상분 반영 및 추가 사무공간 임차(1억 2,800만원) -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등(1억 7,400만원)
3	DMZ 평화적 이용	6,140	6,140	6,214	7,014	800	○ 내역사업인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0원, 신규)은 한반도 DMZ가 갖는 희소성과 의미를 부각하여 세계인들이 찾는 '한

연번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당초	수정				
	(3040-405)						반도 평화관광’ 명소화, 남북 공동 협력지구로 확대 조성을 추진하려는 것임. ○ 이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6년은 사업 준비단계로써 사업 추진 가능성 및 필수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8억원 증액 -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 5,000만원 -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 2억 5,000만원 - 해외사례연구・실태조사: 1억원 - DMZ연구・실태조사: 3억원 - 협력지구 개발 계획수립 용역: 1억원
4	개성공단 기반조성 (3041-405)	2,145	2,145	3,485	4,825	1,340	○ 내역사업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무상)’**(8억 4,700만원)은 북측 자산관리・채무관리 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해산 후 청산법인)의 사업비・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기능 복원에 따른 필수경비 13억 4,000만원 증액

4.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또는 기금명	목명 또는 세부사업명	2025		2026(안)	수정내용	수정 의견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1	일반회계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5002-100)	6,936	6,936	7,639	사업명 변경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내용 반영하여 세부사업명 변경 필요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5002-100)
2	일반회계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5018-200)	267	267	277	사업명 변경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내용 반영하여 세부사업명 변경 필요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5018-200)
3	일반회계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5018-250)	1,155	1,155	1,157	사업명 변경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내용 반영하여 세부사업명 변경 필요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5018-250)
4	일반회계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5033-308)	1,512	1,512	1,804	사업명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내용 반영하여 세부사업명 변경 필요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설운영 (5033-308)
5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09)	136	136	146	사업명 변경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내용 반영하여 세부사업명 변경 필요 - 총액인건비 대상 정세분석국 기본경비 (7011-209)
6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292	292	296	사업명 변경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내용 반영하여 세부사업명 변경 필요 -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세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7	일반회계	통일업무정보화 (정보화) (7034-501)	1,955	1,955	1,959	사업명 변경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내용 반영하여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 및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내역사업명 변경 필요 - 남북회담 홈페이지 및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1111-250)	1,349	1,349	1,348	1,368	20	○ 내역사업인 '기획관리'(8,700만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백만원 감액)는 기관의 유지·운영을 위한 것임 ○ 민주평통 전용 교육·회의 청사 마련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횟수 확대(1회 → 2회)를 위해 2,000만원 증액	
2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2,359	2,359	2,380	3,050	670	○ 내역사업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5억 9,100만원, 전년동)은 청년 자문위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통일 미래세대의 통일공감 확산과 역량을 결집하려는 것임 ○ '청년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확대를 통해 미래세대의 평화·통일 분야 참여 의지를 견인하기 위하여 6억 7,000만원 증액 - 국내 청년위원 역량강화 기획사업 확대(5개 권역 → 18개 시·도): 3억 2,000만원 증액 - '글로벌 청년 평화·통일 회의' 신규 추진: 3억 5,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3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131-302)**	6,174	6,174	6,005	6,673	668	○ 내역사업인 '해외 통일정책 강연회'(2억 100만원, 전년동)는 해외 주요 거점지역에서 자문위원, 재외동포, 현지인 대상으로 정부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해 강연하려는 것임 ○ 동 내역사업을 확대 편성하여 자문회의 기수마다 해외 모든 협의회에서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 확보 및 대면 강연을 위한 국외출장 예산 1억 9,100만원 증액 - 강연회 16회 → 24회(9,200만원 증액) - 국외출장 3회 → 6회(9,900만원 증액) ○ 내역사업인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11억 4,4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0억 500만원 증액)는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민주평통이 함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정과제인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등 민주평통의 충실한 기능 수행을 위해 시·군·구 단위 생활권 지역으로까지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 4억 7,700만원 증액 - 국내 34개 지역 → 51 지역으로 개최 횟수 확대: 4억 1,900만원 증액 - 해외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원활한 추진: 5,800만원 증액	

라. 재외동포청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5032-301)	22,652	22,652	23,175	27,055	3,880	○ 내역사업인 '한글학교 역량강화' (195억 4,6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9억 2,700만원 증액)는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세계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 증액을 통한 교사 수당 현실화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38억 8,000만원 증액	
2	재외동포협력 센터 출연 (5032-302)	27,757	27,757	23,778	27,351	2,910	○ '재외동포 교육사업(학업지원-국내정착, 해외 동포청년 취업지원)' (30억 9,000만원, 순증)은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학업 및 취업·정착까지 연계 지원하여 지역 특화 정주형 인재 양성하는 신규 사업임 ○ 동포청년 유치에 필수적인 운영비 및 사업 홍보비 등 미반영, 대학(원) 등록금 및 직업 교육·훈련비 등 과소편성됨에 따라 29억 1,000만원 증액	
						663	○ '재외동포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신규)은 재외동포사회의 급격한 세대교체로 소실위기에 있는 역사·문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자료의 보존·교육·전시·대국민 서비스 활용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 6억 6,3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3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5033-301)	582	582	582	1,082	500	○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5억 8,200만원, 전년동)은 동포청-재외공관-동포사회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현지 이슈 대응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동포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5억원 증액	
4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5034-301)	6,133	6,133	5,916	7,616	1,200	○ 내역사업인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 지원’(8억 1,3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8,000만원 감액)은 거주국 내 동포사회의 위상강화 등을 위한 한인회·관련단체 등의 공공외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포청과 동포사회 협력사업 시행, 지속 가능한 공공외교 실행 등을 위해 12억원 증액	
						500	○ 내역사업인 ‘세계한인회장대회’(10억 600만원, 전년동)’는 전 세계 한인회장을 모국으로 초청하여 동포사회와 모국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한인대회, 대륙별 한인회장대회 및 대륙별 차세대대회를 함께 개최하기 위해 5억원 증액	
5	재외동포 소통플랫폼 구축 (5034-304)	2,350	2,350	334	2,350	2,016	○ ‘재외동포 소통플랫폼 구축’(3억 3,4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20억 1,600만원 감액)은 동포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24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양질의 모국 관련 콘텐츠 제공을 위해 20억 1,6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6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5035-301)	10,069	10,069	8,570	11,601	2,531	○ 내역사업인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3억 1,4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4,900만원 감액)은 고려인동포 권익증진 및 민족정체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5억 3,100만원 증액	
						400	○ 내역사업인 '사할린 동포지원'(3억 90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3,000만원 감액)은 사할린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것으로 4억원 증액	
						100	○ 내역사업인 '해외위난동포 지원'(1억원, 전년동)은 재외동포 사회의 위난 극복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억원 증액	
7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5035-302)	-	-	7,656	10,573	2,917	○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사업'(76억 5,600만원, 신규)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되어 사할린동포의 국내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의 지속적 확대와 10년 이상 동결된 특별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29억 1,700만원 증액	
8	재외동포 글로벌 서비스 강화 (5036-303)	1,538	1,538	1,593	2,093	500	○ 내역사업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10억 6,1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5,500만원 증액)은 공관 영사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영사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가하는 순회영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9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5037-301)	1,045	1,045	1,045	3,471	1,926	○ 내역사업인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6억 9,000만원, 전년동)은 지자체 협업으로 국내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실수요 충족, 열악한 지자체 재정 보강,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국내 동포 관련 통계 구축 등을 위해 19억 2,600만원 증액	
						500	○ 내역사업인 '거점형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센터 건립'(신규)은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및 돌봄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설계비 5억원 증액(신규)	
10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5037-302)	51	51	51	788	737	○ 내역사업인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5,100만원, 전년동)은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국내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국내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舊 재외동포재단 시절 국내동포 관련 단체에 지원했던 수준으로 지원액을 원복하고, 아울러 공교육 부적응 청소년 동포 대상 보완교육을 시행하는 대안학교(민간단체 위탁) 지원 등을 위해 7억 3,700만원 증액	
11	인건비 (7101-101)	10,214	10,214	10,898	11,214	316	○ '인건비'(108억 9,8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8,400만원 증액)는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증원이 예상되는 인력(4명)에 대한 인건비 반영을 위해 3억 1,6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2	공보·홍보 역량강화 (7121-301)	1,859	1,859	1,296	1,880	576	○ 내역사업인 '기획홍보'(10억 1,1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5억7,600만원 감액)는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홍보 및 광고 등을 확대하기 위해 5억 7,600만원 증액	
						8	○ 내역사업인 '공보서비스강화'(2억 8,5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300만원 증액)는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이해 제고를 통해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인 공보 활동 전개를 위해 예산 800만원 증액	
1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121-303)	1,900	1,900	4,601	4,951	350	○ 내역사업인 '재외동포 DB 정보화전략계획'(신규)은 AI 기반 재외동포 DB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외동포 관련 정보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립 지원 및 대국민 정보 제공, 재외동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해 3억 5,000만원 증액(신규)	

Ⅲ.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조정내역

해당사항 없음

Ⅳ. 부대의견

가. 외교부

○ 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본부 인건비의 최근 3개년 결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불용액 및 예산현액 대비 낮은 집행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 운용 계획, 직제변경, 발령 일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외교부는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내 한시조직인 '국제인공지능외교과'의 기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과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AI 규범·기술경쟁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국제사회 내 AI 외교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

○ 외교부는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에 따른 공공외교 재원 감소로 공공외교 사업의 차질이 발생하는바, 국제교류기여금의 원상복구를 유관부처와 조속히 협의한다.

나. 통일부

○ 통일부는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통일부는 제2하나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통일부는 통일정책추진 사업과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수행 시 통일부 본연의 임무인 통일 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경상비 증액분은 본래 용도에 부합하도록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에만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등 내부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하며 통일부가 이를 관리·감독한다.

○ 현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관리·감독 등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통일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업무를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통일부는 「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일반 통일교육 자료 개발」, 「영상 통일교육 자료 개발」, 「북한실상 알리기 콘텐츠 제작」 중 「북한실상 알리기 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을 「일반 통일교육 자료 개발」, 「영상 통일교육 자료 개발」 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한다.

○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과 관련하여 기금 사용 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적시에 보고한다.